

통일과정연구 94-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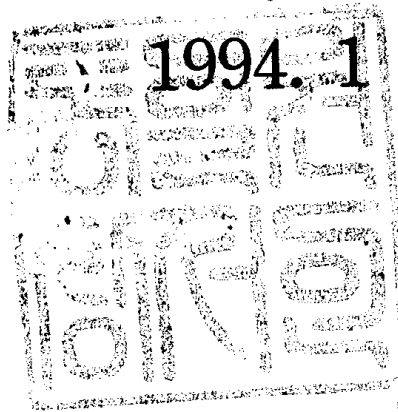
14-1-6

3882.2

(220,920)

독일통일 3년 현황과 전망

김한진



독일통일
" 1994
독일통일
" 1994
" 1994
" 1994
" 1994

통 일 원

○ 이 책자는 주독한국대사관이 송부한 자료를 통일원이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복제·발간한 것입니다.

○ 통일원은 주독대사관에 파견된 통일연구원으로부터 통독관련 연구자료 및 양독간 교류협력 실태 자료를 송부받고 있으며,

당실은 분단국 통일사례연구의 일환으로 독일 통일관련 자료를 매년 시리즈로 발간·배포하고 있습니다.

○ 본 책자가 독일통일과 남북간 통일문제 해결에 관심있는 분들이나 관계전문가들의 연구에 적극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통 일 정 책 실

- 책을 펴내면서 -

제2차 세계대전 패전후 40여년간 독일 민족의 숙원이었던 통일의 성취는 독일인 모두를 환희로 들뜨게 하고 그들에게 장미빛 기대속에 통일독일의 장래를 꿈꾸게 하였습니다. 이제 독일의 통일이 이룩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3년간 독일인들은 통일 직후의 환희의 기간이 잠시였고 장미빛 미래도 쉽사리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여 왔습니다. 특히 최근 2년간의 독일 경제의 침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킴으로써 마치 그러한 모든 것이 통일이 가져온 결과라는 식의 인식을 갖도록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독일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통일이 가져온 큰 과제들, 즉, 구동독의 경제수준을 가능한 한 조속히 구서독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일, 장기간 상반된 체제하에 있어온 두 독일을 모든 면에서 하나로 묶는, 즉 소위 “내적통합”을 이룩하는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며,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독일인 모두가 시련과 고통을 이기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오늘의 고통은 장래의 “더욱 부강해진 독일”을 가져오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독일인들은 차츰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독일정부와 관계기관 그리고 독일인들은 통일후의 제반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동안 행하여 온 일들을 평가하면서 과업수행 노력의 향상과 발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국토 통일후 어쩌면 더욱 어렵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소위 “내적 통합” 달성을 위하여 독일 정부와 국민이 행하고 있는 제반 노력과 거기에서 나오는 경험은 당연히 우리에게 귀중한 참고가 되는 것입니다.

주독대사관은 이번에 「독일통일 3년 현황과 전망」을 펴내지만, 이 책자는 그간 독일정부와 국민들이 “내적 통합”을 위하여 취한 제반 노력과 조치의 내용, 배경 및 문제점 등을 22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정리하고 있으며, 당관으로서의 평가 및 전망도 곁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통독 3주년에 즈음한 연방공보처의 보고서와, 각 여론조사 결과, 통독 이후 3년간 ('90.10.4~'93.10.3)의 주요 약사도 첨부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조야에서 통일문제에 전문적 관심을 가진 분들의 연구등 목적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1993. 12.

주독대사

김기영

목 차

I. 분야별 통합 현황

1.	정치분야 통합 -----	1
1-1.	정치체제 개편 -----	1
1-1-1.	통일방식 -----	1
1-1-2.	동독내 민주정당제도의 도입 및 정당 통합 -----	15
1-1-3.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이양 -----	25
1-2.	행정체제 개편 -----	34
1-3.	사법체제 개편 -----	41
1-4.	구동독의 대외관계 처리 -----	47
1-5.	과거 청산 -----	52
2.	군사분야 통합 -----	67
3.	경제분야 통합 -----	80
3-1.	구동독의 경제재건 -----	80
3-1-1.	구동독 산업의 붕괴 -----	80
3-1-2.	적극적인 구동독 경제재건 대책 추진 -----	83
3-1-3.	구동독지역 경제현황 -----	100
3-2.	통독과 관련한 재정문제 -----	106
3-2-1.	동독지역 재건에 필요한 재정지출 수요 증가 -----	106
3-2-2.	신설주에 대한 재정이전 -----	107
3-2-3.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	114
3-3.	소유·재산권 문제 -----	126
3-4.	과학기술 및 연구분야 -----	135

4 . 사회분야 통합 -----	141
4-1. 노동현황 -----	141
4-2. 소득·생활수준 -----	151
4-3. 사회보장제도 확립 -----	159
4-4. 주택문제 -----	164
4-5. 환경분야 -----	175
4-6. 의료·보건 분야 -----	182
5 . 내적·심리적 분야 통합 -----	190
5-1. 교육 통합 -----	190
5-2. 문화 통합 -----	200
5-3. 체육 통합 -----	207
5-4. 방송·언론분야 통합 -----	211
5-5. 청소년들의 공동성장 -----	216
5-6. 심리적인 이질성 극복을 위한 정치교육 -----	222
6 . 평가 및 전망 -----	226
II . 연방공보처의 통독 3주년 보고서(번역) -----	244
III . 통독 3주년을 즈음한 여론조사 결과 -----	263
IV . 통독 이후 3년간 주요 약사 -----	304

1. 정치분야 통합

1-1. 정치체제 개편

1-1-1. 통일방식

가. 국가체제

- 베를린장벽의 붕괴 이후 자유총선이 실시될 때까지 동·서독에서는 양독일 국가의 통합형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음.
- ‘조약공동체’ (Vertragsgemeinschaft), ‘국가연합’ (Konfoederation, 혹은 Staatenbund), ‘연방’ (Foederation) 등의 형식이 거론되었으나, 크게 2개의 완전한 독립국가의 존속을 전제로한 국가통합형태와 기존 서독의 모형에 따른 연방국가형태의 완전통일형태로 크게 나누어졌음.
- 연방형태 국가와 국가연합형태(조약공동체 포함) 국가의 차이점
 - 연방의 경우, 주권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분리·행사되나, 국제법적으로 외교권만은 중앙연방정부가 행사하며,
 - 국가연합의 경우는 대외적으로 통일된 형태이나, 지방국가가 완전한 외교권을 행사하며, 단지 합의에 의해 구성된 공동의 기구에 일부 사무를 위임하는 형식을 띠며.
- 동·서독이 기존 내독관계를 넘어선 통합된 형태를 지향하되, 동독이란 국가의 독자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 동·서독의 군사동맹 가입문제, 유럽의 평화질서 구축문제 등에 대한 입장의 차이때문에 논란이 있었지만, 동독 총선거 이전까지는 신중하고 점진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국가연합 형태의 주장이 주류를 이루었음.

- 0 논의된 주요제안과 형태들을 동독체제의 독자성을 어느정도 인정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차례대로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음.
- Hans Modrow 동독수상의 ‘조약공동체’ 창설 제의(1989.11.17자 정부 성명)는 최종적인 통일국가의 형태, 즉, 연방이나 국가연합이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없이 동독의 독자성이 강조되는 협력체임.
 - Modrow는 동독이 개혁을 통해 사회주의 주권국가로서의 정통성을 회복한다는 것을 전제로, 동독주민들의 권익에 배치되는 비현실적인 통일형태 논의에 대해 경계함.
 - Modrow는 동·서독 체제간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역사에 기초하여, 기존의 기본조약 및 후속협정에 의한 협력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차원 높은 선린관계 구축을 위해 ‘유럽 공동의 집’ 구상과 연계하여 서독정부와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조약공동체 창설을 제의함.
 - 동·서독간의 주요협력분야는 평화보장, 군축, 경제협력, 과학기술 분야라고 구체적으로 언급되었음.
 - 동독 민권운동단체들의 공동성명(1989.12.12자)
 - 이들 단체의 제안은 Modrow의 제안보다 더 구체적으로 통일국가를 지향하되, 동독주민의 조속한 통일열망이 환상임을 지적하면서, 통일을 장기적인 과정으로 파악하는 가운데, 양독간 조약공동체의 형성과 국가연합의 창설을 우선적으로 제안함.
 - 이 단체가 제시한 국가연합 창설의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음.
 - … 통일독일의 영토는 1945년 국경선을 기준으로 함.
 - … 동·서독은 동등한 권한을 가지되, 다만 동독내에 민주적이고 정통성을 가진 정부의 탄생이 선행되어야 함.

- .. 동독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서독에도 경제적으로도 유리한 협력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 양독간의 통합도 유럽통합의 틀안에서 이루어져야 함.
 - .. 국가연합형태의 통일국가는 유럽내 평화질서 창출을 지향해야 함.
(구체적으로 군사블록 해체, 과감한 군비에산 삭감, 방어적 전략에 기초한 군 구조 개편)
 - 이 단체는 동독 경제구조 재편에 최소한 5~10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며, 통합작업의 시한을 구체적으로 언급함.
- 서독 사민당의 베를린성명(1989.12. 전당대회시)
- 서독 사민당은 앞의 2가지 주장과 달리 구체적으로(서독과 같은) 연방국가 형태의 통일을 지향하되, 그 중간단계로 기존 기본조약의 기초위에 조약공동체와 국가연합을 지향함을 분명히 했음.
 - .. 다만 구체적으로 통합형태와 속도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동·서독 주민들의 결정에 위임함.
 - 서독 사민당은 동·서독 주민들의 소망을 반영하되, 실현가능한 헌법질서의 창출을 통해 국가연합을 즉각적으로 창설할 것을 제안함.
 - .. 이러한 국가연합내에서 경제, 사회복지, 환경, 교통, 에너지, 우편·통신, 문화분야에 관한 공동의 정책모색과 입법활동을 위해 동·서독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를 제안함.
 - 서독 사민당은 국가연합에 이르는 중간단계로서 조약공동체에 동·서독이 합의할 것을 제안하고, 이 조약공동체는 각 분야에 걸쳐 양독간 주민들의 생활수준 격차해소를 목표로 공동기구 설치를 통해 협력하는 형태라고 규정함.

- Hans Modrow 동독 수상의 구체적인 독일통일 제안(1990.2.2자 성명)
 - Modrow는 1989.11.17자 성명내용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독일통일을 구체적인 목표로 상정한, 단계적인 통일방안과 이와 같은 통일 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단계적인 통일방안의 구체적인 내용
 - 국가연합적 구조 및 형태를 띠는 화폐·경제·교통·법률 동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약공동체 창설을 위한 동·서독간 국가조약 체결
 - 공동위원회와 집행기구 설치를 통한 동·서독간 국가연합체 구성
 - 동·서독 주권의 국가연합체 기구에 이양
 - 단일 헌법·의회·정부를 구성하여 독일연방('deutsche Foederation' 혹은 'Deutscher Bund') 형태의 통일독일 국가 형성
 - 통일방안 실현의 전제조건
 - 양독일 국가의 주변국에 대한 의무와 책임 완수
 - 전승4개국의 이해관계 고려, 유럽 제민족의 평화와 주권, 국경 보장
 - 동·서독의 군사적 중립화
- Kohl 서독 수상의 10대 통일방안(1989.11.28 성명)
 - 이 방안은 앞의 제안들과 비교하여 볼때 비교적 장기적으로 통일의 목표로 설정하면서 단계적·점진적으로 통일을 추진코자 했던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결코 중간단계로 국가연합형태를 상정하지 않고, '국가연합적 구조' (Konfoederative Struktur)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통일된 형태내에서 동독의 독자성을 강조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구체적 통일방안
 - .. 동독주민에 대한 응급지원조치 : 인도적인 의료지원, 서독여행을 위한 여행기금 설치
 - .. 기존 내독관계의 심화, 발전 : 환경, 교통, 경제, 과학·기술, 문화 분야
 - .. 동독체제의 개혁을 조건으로 동독경제 지원 및 협력 강화
 - .. 조약공동체 형성
 - .. 동·서독간 국가연합적 구조 형성 : 공동기구(공동각료회의, 공동전문위원회, 공동의회 구성)
 - .. 서독형태의 연방국가 형성
- Modrow의 최종방안이 동·서독의 중립화와 군사블록 탈피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반면, Kohl 수상의 방안은 국제관계와 안보 정책적인 면에서 CSCE 과정의 지속, EC의 강화, NATO의 지원을 언급하고 있는 점이 다름.

나. 기본법 23조 혹은 146조 적용문제

- 양독간 국가의 헌법적 통일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서독의 기본법 제23조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기본법 146조에 따라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것인가가 논란이 되었음.
 - 기본법 제23조에 의하면 동독이 전체 또는 새로 형성된 5개주가 연방에 가입하는 형식을 취함.
 - 기본법 제146조에 의하면 헌법제정위원회가 새로운 통일헌법을 기초하고, 이를 국민투표에 부쳐 확정하는 형식을 취함.

- 그러나 146조에 의해 헌법이 새로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이 두가지 방법 모두 기존 서독 기본법의 이념과 헌법정신을 기본골격으로 함을 전제로 논란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이 논란은 동독의 절차 및 속도의 완급문제와 관련한 논쟁이었지 통일후 체제의 성격을 규정하는 통일의 원칙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아니었음.
- 다만, 23조의 적용을 찬성하는 측은, 통일을 조속히 그리고 안전한 방법으로 달성하려는 정치집단(기민당·기사당)이 선호하였고, 146조의 적용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측(사민당)의 주장이었음.
 - 23조에 의한 통일을 찬성하는 측은 동·서독간 경제적인 격차의 조속한 해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동독으로부터의 이주민 유입 억제, 소련의 불안정한 국내사정 등 대내·외 정책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23조 방식이 146조 방식에 비해 예기치 못할 국내·외적 상황 전개를 조속히 배제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음.
 - 아울러 23조에 의하더라도 동독의 연방 가입후에도 기존헌법의 미비점은 점진적으로 헌법개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보았음.
 - 그러나 23조에 의할 경우, 국민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통일헌법의 확정과 통일과정에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제한되고, 또한 기본법 제정당시의 146조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비난이 제기되었음.
 - 기본법을 기초한 헌법제정위원회는 당시 분단을 더욱 고착화 시키지 않기 위해 ‘헌법’이라 하지 않고, ‘기본법’이라 칭하여 제정헌법의 잠정성을 강조했다.
 - 아울러 이 ‘기본법’은 국민투표로 확정하지 않는데 반해, 146조에 의한 통일은 국민투표로 새로운 헌법을 결정키로 한 바 있기 때문임.

o 기본법 23조에 의한 통일절차를 찬성하는 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 기존 기본법이 서독내에서 민주제도 정착과 사회적 시장경제체제 유지에 기능을 잘 발휘하여 운용되어 왔으므로, 그것을 개정할만한 이유가 없음.
- 통일의 절차가 보다 간소해짐.
 - 특히 동독에 시장경제적인 법적질서를 조속히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23조에 의한 방식이 효과적임.
 - 헌법내용에 관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내정치적 안정에 해를 끼칠 수 있음.
-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서독의 국제법적인 의무 또는 권리사항과 관련하여 별도로 국제기구나 외국과 협의하는 복잡한 절차를 피할 수 있음.
 - 23조를 적용함으로써 동독은 별 어려움 없이 기존 서독의 국제적인 의무와 권리체계에 편입될 수 있으며, 통일독일은 국제사회로부터 신속하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음.

o 기본법 146조에 의한 통일절차를 찬성하는 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 새로이 형성될 통일국가는 새로운 헌법제정 절차를 거침으로써, 민주적인 정통성을 획득하게 됨.
- 146조 방식은 독일통일 국가 형성을 위한 법적인 구체화 작업에서 동독측의 기여와 협조를 더욱 담보해 줄 수 있음.
- 분단의 상이한 발전과정과 경제·사회적 격차로 인해 동·서독간에 발생될 수 있는 이해의 상충 문제를 고려할 때, 23조를 적용하는 간단한 가입방식을 통해서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 통독헌법을 제정하면서 서독의 헌법학자와 정치가들이 제기한 기존 서독 기본법의 미비점을 보충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새로운 국가정책목표 설정(환경오염 방지 등), 더 많은 직접민주주의 요소(국민투표) 도입, 노동에 대한 권리보장 등
- o 기민당/기사당과 자민당의 일부 정치가들이 선호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된 23조에 의한 방식이 독일통일 과정에서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았음.
 - 기민당에게는 23조 방식이 Adenauer 수상이 독일정책 추진시 표방하던 서독의 전독일 단독대표권(Alleinvertretungsanspruch) 행사 요구가 드디어 실현됨을 의미했음.
 - 23조에 의한 동독의 서독연방 가입과 더불어 동독이란 나라는 국제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게되며, 통일과정에서 새로운 제3의 독일 연방이 아닌 기존 서독의 연방이 모든 국제법적인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행사하는 것을 뜻함.
 - 달리 규정하지 않는한 연방정부의 권한이 동독지역까지 자동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함.
 - 제23조에 의해 가입절차가 끝나면, 기존의 서독연방정부 기관의 대표가 그대로 통일독일을 대표하게 됨.
 - 새로이 전독의회 총선 등 요구되는 선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현 서독수상과 대통령을 포함한 3부 요인이 그대로 그 직을 유지하며, 통일독일의 헌법기관을 그대로 승계하게 됨.
 - 동독(신설5개주)의 가입효력이 발생하면, 동독은 서독연방 헌법체계 내에서 단지 주정부에게만 허용된 입법권을 행사하게 됨.

- 동독주민들은 연방차원의 법에 관한 한, 특히 동독주민들의 권리와 의무와 관계되더라도 기존 서독의 법을 그대로 따르든가, 아니면 지역인구 비례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동·서독의 인구비는 1:4)을 통해 제한적으로만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함.
- 가입방식에 의한 통합은 동독에 서독 기본 법률체계의 전반적인 도입과 과도기적인 예외규정의 제정이 필수적인 바, 이에 따라 서독 법체계에 능통한 서독 기술관료들의 동독체제 장악이란 결과를 낳음.
- 자유총선에 의해 선출된 동독 인민의회 의원들은 서독 법체계에 익숙치 않아 결국 서독 기술관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아울러 동독공산당에 충실했던 동독 관료세력도 그 정치적인 기반을 상실하게 됨을 의미함.

다. 통일의 속도 문제 (조기 통합 대 단계적 통합)

- o 통일의 속도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서독 정부의 주도에 의한 조속한 양독간 화폐·경제·사회통합인 바, 서독 정부는 당시 통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전 정리 작업이라 할 수 있는 이 통합을 조속히 추진키로 결정하였음.
- 베를린장벽의 개방은 동독에서 자본과 인력의 서독 유출, 마르크 가치의 폭락, 상품시장의 붕괴, 재정파탄 등을 초래하여, 동독경제 전반이 붕괴되는 위기를 막을 획기적 조치가 필요했음.
- 특히 드매지어 동독 수상은 동독마르크의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유리한 환율로 교환함으로써, 동독국민들이 보유한 거의 유일한 재산인 저축액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도 신속한 화폐통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함.

- 또한 '89.10~'90.1월까지 4개월 동안에 30만명이 넘는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이주, 이들을 수용할 주택의 부족과 실업자 증가, 동독경제의 공동화 등의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야기, 서독으로의 이주를 막을 모종의 조치가 필요했음.
- 서독의 정치인들은 소속정당을 가릴것 없이 화폐·경제통합을 최선의 해결책으로 제시, 서독 DM의 높은 구매력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대한 동독주민의 기대를 충족시켜 이주물결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 ... '90.2.11 동독 월요대모에서“ 서독마르크(DM)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곳으로 간다”(“Kommt die DM nicht nach hier, gehen wir zu ihr”)는 구호 등장
- 그 당시 열띤 논쟁의 대상이던 단계적 통일방안으로는 사회주의체제의 정치, 경제 역량에 대한 동독주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름.
- ... 단계적 통합안에 따르면, 일정기간 동안 동·서독 마르크화를 공존시켜 환율조정을 통해 동독 산업에의 초기충격을 완화하여, 단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임금의 점진적 조정, 사회보장 및 각종 사회제도 변경, 자산 및 부채의 단계적 전환 등으로 과도기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감.
- 국내정치적 측면에서는 일시적인 화폐통합으로 서독수준으로의 복지향상을 이룩할 수 있게 된다는 동독주민들(유권자)의 기대와 이를 정권유지에 이용하려는 폴수상 등 여당 정치가들의 의지도 큰 요인으로 작용함.

- 동독 기민당의 유세지원에 나섰던 서독기민당 정치인들은 화폐통합을 총선 승리를 위한 호재로 생각함.
- 특히, '90.3.18 구동독 최초의 자유 총선거를 앞두고 콜 수상이 1:1 교환비율에 의한 동·서독 화폐통합을 시사하여, 동독 독일연합당의 압승(48% 득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침.
- 소련에서 반대하고 있지 않는 현재의 유리한 국제정치적 호기를 놓치지 않고 독일의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는 대외적 요인도 작용함.
- 서독정부는 동독주민의 계속적인 서독 이주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자 경제적인 문제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통합을 정치적으로 결정하고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대규모 항의시위와 서독으로의 끊임없는 이주로 인해 동독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음.
 - 화폐통합은 동독에 대한 서방부자를 활성화시키는 선결조건임.
 - 화폐통합은 정치적 통일을 가속화시켜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업 성취에 기여할 것임.
- 한편, 야당인 사민당 (SPD)은 자체내에서 상반된 견해를 보임.
 - 사민당 재정정책 대변인은 연방정부의 주장과 같이 동독경제의 위기와 서독으로의 이주불결을 이유로 일시적 화폐통합을 지지함.
 - 반면, 사민당 수상후보자 라폰테인은 화폐통합이 초래할 동독의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며, 우선 사회보험제도, 임금협약체계, 재무행정제도부터 완비한 후, 동독마크를 태환 가능한 통화로 만들어, 대외경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o 단계적 통합 방안의 주장 및 근거

- 연방 경제성과 경제자문위원회(경제5현) 등은 우선 동독에서 시장경제 체제로의 경제개혁이 실시되고, 동독 마르크가 완전태환이 가능해졌을 때, 화폐를 통합시켜야 한다는 단계적 통합모델을 제시함.

· '93년 2월 하우스만 경제성장관은 화폐통합에 앞서 확고부동한 시장 경제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서독 화폐·경제 통합을 EC 단일시장이 시작되는 1993.1.1까지 완결시키는 3단계 화폐통합 모델을 제시함.

.. 1단계 : 서독으로부터의 저리 신용대출 지원과 경제안정 대책용 장기융자 등의 방법을 통해 동독경제의 시장개혁 추진과 동독마르크의 제한적 태환성 도입

.. 2단계 : 전 제품에 대한 가격자유화 및 동독마르크의 완전 태환화 추진

.. 3단계 : 공동통화로서 D-마르크를 동독에 도입

· 경제자문위원회(Sachverstaendigenrat)는 폴 수상앞으로 보낸 '90.2.9일자 공개서한에서 조속한 화폐통합을 반대하면서, 우선 동독의 통화 과잉공급의 흡수, 가격 구조 개혁(가격 자유화), 시장 경제 조건에 맞는 금융제도 구축 등 개혁방안들을 단계적으로 추진, 빠른 시일 내에 동독마르크의 완전태환을 가능케 한 후에 화폐통합을 실시할 것을 건의함.

.. DM의 도입으로 양독간의 소득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면, 동독주민들은 생산성 증가율 이상으로 명목임금 인상을 요구해 와, 결국 동독의 산업입지가 약화되고 서방으로부터의 투자도 위축될 것임.

- 화폐통합시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압력이 가중, 연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되고, 그 결과 세금인상이 불가피해지고, 재정이전마저 투자성이 아닌 소비성 용도에 지출되어 동독경제에 악영향을 초래
 - DM을 취득한 동독주민들이 서독 및 서구제품을 선호하게 되어 동독 기업들의 수익이 감소하고, 제품생산량과 생산성이 더욱 낮아져 결국 소득과 취업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 동독 경제 체제의 근본적 개혁에 앞서 화폐통합을 우선 추진하는 정책은 자율적인 경제기반 구축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금만 낭비하고, 결국 이주물결을 장기적으로 억제해 나갈 수 없을 것임.
- 즉, 단계적 통합론자들은 시장경제체제로의 개혁을 통해 서독과의 생산성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한편, 환율이란 완충 장치를 통해 국제 경쟁시장에서 단련을 겪게 한 후에 동독지역에 서독 DM을 도입할 것을 제안함.
 - 경제이론적 측면에서는 단계적 모델이 합리적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이를 채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반론이 제기되었음.
 - 우선, 국경이 개방된 상태에서 동독마크의 태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환율이 보장되어야 하나, 동독주민들이 동독체제와 통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인위적으로 보장하는 비용이 막대함.
 - 거대한 구조전환상의 어려움에 처한 동독이 필수불가결한 변혁을 정치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해 개혁이 지연되고, 그 결과 서독의 대동독 재정원조가 장기화될 우려가 큼.
 - 서독에서의 임금의 동독에서 일할 경우에 비해 몇 배 이상 높기 때문에 우수인력이 서독으로 대거 이주할 것임.

두 통합방안의 파급효과

	단 계 적 통 합	조 기 통 합
경제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적용 과정에서 경제에 대한 충격 완화 - 가격, 품질면에서 열세인 동독 산업의 구조조정애 유리 - 환율을 통한 국내산업보호로 국제경쟁력 약화를 방지 - 대량실업사태 방지 - 경제개혁과정의 지연 - 서독으로의 우수인력 이주 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자유화 등 개혁의 즉각적인 실시 - 준비·조정과정없이 국제 경쟁시장에 돌입 - 동독경제의 전반적 붕괴 위험 - COMECON 판매시장의 상실 - 대량 실업 발생 우려 - 기업들의 대량 도산 우려
정치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 스스로 문제 해결 - 동독의 경제정책상의 주권 유지 - 서독으로부터의 장기간에 걸친 지원 필요 - 완만한 정치적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력한 급진적 파급 효과 - 동독의 통화 및 경제정책 운용상의 자율권 포기 - 독자적인 정책수립 포기 - 서독의 즉각적인 대규모 지원 필요
분배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진적인 소득향상 - 초반 임금수준은 낮으나 긍정적 경제발전시 급속한 소득향상 가능 - 연대적 고통 분담: 저소득층을 위한 고소득층의 상대적 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연금, 예금 등의 실질 가치 인상에 따른 즉각적인 소득 상승 - 저렴한 가격으로 서구제품 구입 용이 - 빈민층, 실업자층의 소득 저하, 고소득층의 소득향상

1-1-2. 동독내 민주정당제도의 도입 및 정당통합

가. 구동독 민권운동단체들의 정치세력화

○ 동독 공산당의 일당독재에 반대하는 재야세력 대두

- 1989년 5월 동독 지방자치선거에서 있었던 득표조작사건을 계기로 하여 민권운동단체들이 공산당 집권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 처음으로 반체제 정치세력으로 부상하였으며, 1989년 여름 동독주민들의 집단 탈출사태 이후 정치적으로 조직화되기 시작했음.
- 그 전까지 이들은 교회산하 사회운동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었음.
- 이들 교회단체에서의 활동자 수는 1989년 봄까지만해도 약 2천 5백 여명에 불과하였음.
- 1985년 창설된 평화·인권단체(IFM : 'Initiative Frieden und Menschenrechte')가 최초로 동독 사회 및 국가체제 개혁을 요구하고 나섬.
- IFM 외의 주요 민권운동단체로서 1987년 IFM 에서 독립·결성된 'Demokratie Jetzt' ('89.9.16 결성), 'Neues Forum' ('89.9.13 결성), 'Demokratischer Aufbruch' ('89.10.2)를 들 수 있음.

○ 원탁회의(Runder Tisch) 내에서 이들 단체들의 활동

- 구동독의 원탁회의는 라이프치히 등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한창이던 '89.10.9 드레스덴에서부터 준비되었으며, '89.12.7 첫 회의를 개최함.
- 준비과정에서 어떤 정당사회단체가 참가하며, 의결권의 지분을 어떻게 나누며 국민들로부터 대표권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신교연합회(EKD)가 민권운동단체와 SED(구동독 공산당) 지도부간의 중재역할을 잘 수행하여 구성이 완료됨.

- 원탁회의 참가단체
 - 구동독의 공산당 및 제휴 정당측(5) : SED, CDU, DBD, LDPD, NDPD
 - 민권운동단체측(7) : 'Demokratischer Aufbruch' , 'Demokratie Jetzt' , 'Gruene Partei' , 'Initiative Frieden Menschenrechte' , 'Neues Forum' , 'Sozialdemokratische Partei' , 'Vereinigte Linke'

- 의결권 지분은 양측이 15석씩 동수로 하며, 이 원칙은 후에 다른 4개 정당·사회 단체가 가입했을 때도 늘 50%씩 형평을 유지토록 하였음.
 - 공산당과 제휴정당측은 5개 당이 각각 3석씩 차지했으며
 - 민권운동단체의 6개 단체는 2석씩, 'Neues Forum' 만 3석을 차지함.

- 국민으로부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되어 구성된 기관은 아니었지만,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첫 소집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변혁기의 위기상황 극복 방안 모색을 위해 결성된 '공적인 감시기구' (Bestandteil der oeffentlichen Kontrolle)라고 할 수 있음.

- 이 원탁회의는 2가지 요인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기구의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음.
 - 이 회의에 참가한 인사나 단체들이 동독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었음.
 - 회의체가 해결하고자 하는 효과적인 목표 설정(조속한 자유·비밀 선거, 새로운 헌법 초안 마련, Stasi 해체)이 국민에게 공감을 일으킴.

- 원탁회의는 총 16회가 개최되었으며, 활동시기 구분에 따라 동독내각에 참여하는 '91.2.5을 기점으로 활동내용과 양상이 크게 달라짐.
- 진반기에는 주로 하나의 'Veto 집단' 으로서 공산당의 활동을 감시하며, 공산당의 일당 독재에 제동을 걸고 국정 참여를 주장함.
- .. 마침내 '91.1.15 모드로 수상은 인민의회에서 원탁회의가 직접적이고 책임감있게 국정에 참여하여, 폴 수상과의 회동에 원탁회의 대표로 참석하며, 각료회의에서 주요 법령을 입안할때 공동결정권을 갖도록 양보함.
- 국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후반기부터는 원탁회의 참가 그룹내에서 선거를 둘러싸고 권력투쟁이 일어나게 됨.
- .. 서독의 제 정당을 모델로 하여 정당을 결성, 정치권력을 획득코자 하는 제도권 그룹과 민권운동단체 본래의 전통과 정체성에 충실하여 '권력쟁취에의 무의지' ('Unwille zur Macht')를 표방하는 운동권 그룹 사이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함.
- .. 동독으로부터 대규모 이주민의 증가로 서독은 동서독지역 조기 자유총선 방침을 결정하고 평화적인 선거를 통한 공산당 정권의 종식을 도모하는 바, 이에 많은 동독지역 자매정당들 특히 CDU, SPD, 'Demokratischer Aufbruch' 등이 동조하게 되어 원탁회의 활동을 등한시하게 됨.
- .. 원탁회의 활동이 국민들에게 TV에 중계되는 가운데 민권운동 단체들은 동독 사회구조 개편에 있어서 근본적이고(basis-demokratisch) 급진적인 주장을 펴으로써 일반국민들로부터 너무 좌편향(linke-orientiert)이라는 인식을 갖게 함.

- 원탁회의는 국정에 공식으로 참여하는동안 선거법 제정에 참여하였고, Modrow의 서독 방문시 동행하여 입장표명을 통해 동독에 대한 '연대 부조금' (Solidarbeitrag)을 신청하였고, 헌법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으나, 민권운동단체가 주로 활동한 후반기에는 활동가들의 정치적 미숙성(Naivitaet) 때문에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했음.
- 원탁회의는 민주적인 대의기구가 동독에 창출되기 이전에 동독에서 평화혁명으로 분출된 정치사회 등 제 분야 개혁에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수렴하여 대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이를 통해 정치변혁기에 대중의 폭력성이 순치되어 문명사회 정치발전의 척도인 대의제 확립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음.
- o 이 시민운동 단체들은 동독의 대변혁 기간 동안 시위의 구심점으로서, 동독 공산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데 기여했으나, 그 이후 통독과정에서는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동독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함.
 - 'Demokratischer Aufbruch' 를 제외한 단체들은 정당구성을 거부하고 사회운동권 형태로 남기를 희망했음.
 - 동독주민들은 서독에의 조속한 편입을 원했으나, 이 단체들은 동독 체제의 고유성이나 사회주의 체제의 장점이 유지되길 바랐고, 또한 정치현실과 맞지 않는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주장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지지를 상실해 갔음.
 - 이 단체들은 선거연합체(Buendnis '90)를 결성하여 '90.3.18 선거에 참여했으나, 동독주민들의 지지도는 2.9%에 불과했음.

나. 동독 공산당(SED)의 변신

- SED는 당명 개정, 당 강령 수정, 지도부 개편 등의 자체 개혁조치를 통해 민주적 다원주의 질서하에서 사회주의 지향 정당으로 변신코자 시도
 - 당명을 PDS(민주사회주의당)로 개칭하고, SED의 재산을 인수
 - 공산당의 권력독점 조항 폐기 및 당내 파벌 인정
 - 스탈린주의와 결별하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제3의 길' 모색
 - 구동독 공산당 지도자 축출을 통해 공산당의 부정적 이미지 쇄신

- 통일이후 구동독 주민들이 SED를 외면, SED는 통일 이후에는 구동독지역에서 일부의 지지만을 받고 있는 지역정당으로 전략
 - 당원수가 분단시 232만('88 현재)이었으나, 통독 이후 23만('91.6월 현재)으로 감소
 - 통독 이후 당원 중 97%가 구 SED 출신이며, 신규가입 당원은 3%에 불과
 - 여성 당원이 40% 이상이며, 연금수령연령에 달한 당원이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30세 이하의 청년 당원은 10% 미만임.
 - 통독 과정에서 주요 선거시 PDS의 득표율
 - 동독 자유총선('90.3.8) : 16.3%
 - 동독 지방자치단체 선거('90.5.6) : 14.5%
 - 주 의회 선거('90.10.14)
 - .. 브란덴부르크 주 : 13.4%
 - .. 작센안할트 주 : 12.0%
 - .. 메클렌부르크 포퍼메른 주 : 15.7%
 - .. 튀링엔 주 : 9.7%
 - .. 작센 주 : 10.2%
 - .. 베를린 주 : 9.2%
 - 연방의회 선거('90.12.2) : 2.4%(연방 전체), 11.1%(구동독지역)

○ 통독 이후 최초로 실시된 브란덴부르크 주 지방자치단체 선거('93.12.5)에서 PDS는 21.2%를 획득하여, 기민당의 득표율(20.5%)을 능가하는 지지도를 보였음.

- 비록 지방자치단체 선거이기는 하나, 실업과 경제재건지연에 따른 동독지역 주민들의 경제·사회적인 불안심리와 기존 대중정당에 대한 불신을 반영한 이 선거결과는 앞으로 주 의회 선거나, 연방 의회 선거에서도 PDS의 지지도가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 동독지역에서의 PDS의 지지도는 제도적인 동·서독 정치통합 내지는 서독의 모형에 의한 급속한 통일에 대한 성공여부를 가늠케 하는 척도가 될 수도 있음.

· 이번 선거에서 PDS는 구서독지역에서의 극우파 정당인 Republikaner의 선거전략과 마찬가지로, 기존 대중 정당이 통독 이후 문제해결에 무능한 점을 극화하여 부각시켰음.

· 이번 선거에서도 PDS의 주요 지지자는 대부분 60세 이상으로, 과거 동독체제에서 특권을 누렸거나, 새로운 체제에서는 적용하지 못하는 계층으로, 근본적으로 서독식 정치·경제·사회 질서에 의한 통일을 반대하는 그룹이었음.

· 그러나 '90년 당시의 선거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서도 PDS는 노동자 계층으로부터는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94년 연방 의회 선거에서는 PDS의 연방 의회 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최초 전독선거와는 달리 동·서독 분리집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PDS가 의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전체 투표자의 5% 이상을 획득해야 하는 바, 서독지역에서 지지도가 과거 서독 공산당(DKP)의 지지수준인 2.5%를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아무리 동독지역에서 PDS의 지지도가 상승한다 해도, 독일 전체 지지도 5%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독지역에서만 24% 이상의 지지를 획득해야 하는데, 현재 여론조사 결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PDS의 지지계층이 많은 동베를린 지역과 브란덴부르크 주에서 직선의원 3명을 배출할 경우, 의회진출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음.

다. 동독 위성정당, 민주정당으로 전환

○ 동독은 공산당인 사회주의통일당(SED)의 사실상 일당독재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SED 이외에도 정치적 동원, 사회적 통합 및 사회적 통제를 위해 특정 계층을 당원으로 겨냥한 4개의 위성정당이 존재했음.

- 동독 기민당(CDU)은 1945.6.26 창당되었으며 분단후에도 서독 기민당과 같은 이름을 계속 사용했으며 동독내에서 신교·구교신자층(800~900만 추정)을 주요 지지자로 겨냥했음.

- 동독 공산당 지도부로서는 이 기독교 신자들을 현존하는 사회주의 체제 내에 흡수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기 때문에 SED로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위성정당이었음.
- 당원은 분단 직후인 1948년 21만이었으나, 통독전인 1987년에는 14만이었음.

- 동독 자민당(LDPD)은 1945.7.5 창당되었으며, 동독내에서는 중·소 제조업자와 자영수공업자층, 공산주의적인 교조주의를 거부하는 문화인·지식인층을 주요 지지자로 겨냥했음.

- 경제활동의 비중이 커지고, 사회가 국제적으로 다원화되자 SED는 사회적인 통합을 위해 이 LDPD의 역할에 대해 많은 기대를 했는데, 가장 지지층이 다양한 위성정당이었음.
- 당원은 1948년 20만이었으나, 1987년에는 10만으로 줄어 들었음.

- 독일민족민주당 (NDPD)은 1948.4.21 창당되었으며, 과거 나찌 청산의 대상이 되었던 나찌잔당과 퇴역장교들을 새로운 사회주의 질서내에 통합시키기 위해 SED의 주도하에 결성되었음.
 - NDPD는 이들 과거청산 대상들이 연로해집에 따라 이들의 자녀들을 당원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중·소제조업자나 자영수공업자층이 주요 대상이었음.
 - 정강정책면에서 보면 어떤 특징이 없는 지지층이 가장 취약한 정당이었음.
 - 당원은 1948년에는 1만 명이었으나, 1987년에는 11만 명 정도였음.
 - 독일민주농민당 (DBD)는 1948.4.29 SED의 주로 농민층을 노동자와 함께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동맹자로 흡수하기 위해 창당되었음.
 - DBD는 SED의 농업정책을 추종하며 1960년대 농업집단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섰음.
 - 당원은 창당 당시 1만 2천 명이었으나, 1987년에는 11만 5천명 이었음.
- o 총 47만의 당원(1987년 현재)을 보유했던 4개의 위성정당은(동독 성인의 4%), 230만의 당원(1987년 현재)을 거느렸던 SED(동독 성인의 20%)의 지시와 감독을 받았음.
- 4개 위성정당 모두는 창당 당시의 그들의 독자적인 정관을 폐기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의 영도적인 역할을 영원히 인정' 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정관을 채택했음.
 - 위성정당의 당원들은 위성정당이 그들에게 정치적인 보호와 특혜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았음.

- 특히 지방에서는 이러한 위성정당이 직업상, 개인사교생활에 있어 특정정보를 제공해주는 중심적인 역할을 했음.
 - 공산주의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적지않은 동독 주민들은 그들이 마르크스-레닌주의적인 국가에서 살면서 직업상의 일정한 경력을 쌓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위성정당을 활용했는데, 동독 기민당과 동독 자민당 당원의 경우가 특히 그러했음.
- 0 동독에서 대변혁 이후 공산당과의 협조관계에서 벗어난 이들 위성정당들은 당 지도부의 쇄신과 당 강령 수정을 통해 개혁을 추진하며 민주정당으로 발전을 모색함.
- 1990.2.14 독일 통일과 관련된 대외문제 해결을 위한 '2+4' (양독 및 미·영·소·불) 회담개최 합의 후, 서독 정당들은 새로운 동독 정당구조 형성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음.
 - 서독의 주요 정당들은 동독자매정당과 제휴를 통해 새로운 정당구조를 형성하도록 물질·인적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했음.
 - 1990년 1월 31일에 있었던 양 정당 간의 공식 협상 이후 동독 사민당 (SDP)은 서독 사민당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 시작했으며, 당 명칭도 서독과 같이 SPD로 개칭하였음.
 - 서독 기민당은 처음에는 수십년간 SED 정권을 지지한 동독 기민당과의 합당을 망설였으나, 당수인 콜 수상의 주도 하에 CDU, DA 및 DSU는 '독일 연맹' (Allianz fuer Deutschland)이라는 이름으로 선거동맹을 구축하고, 서독 기민당의 지원을 받음.
 - 독일 연맹과 마찬가지로 FDP, LDP 및 DFP 등도 서독의 자매당 FDP의 압력에 의해 자유민주연합(BFD : Bund Freier Demokraten)을 결성함.

- 동독 민권운동단체들은 '90년 2월 선거동맹체인 동맹 90(Buendnis '90)으로 결속됨.
- 이 밖에 서독 녹색당이 지원한 녹색당은 독립여성단체(UFV)와 선거연합체를 형성함.

- 동독 최초의 자유총선('90.3.18)시 서독 정당들은, 동독내 자매정당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동독내 자매정당과의 통합여건을 마련함.

- 각 자매주 및 지구당별로 선거운동을 지원했으며, 각 정당의 유명 정치인들이 지원유세를 벌였음.

- 1990.12.2로 정해진 전체 독일 선거에 앞서 기민당, 사민당 그리고 자민당은 1990년 가을 각각 통일 전당대회를 개최, 동·서독 자매 정당들이 합당함.

- 기민당('90.10.1), 사민당('90.9.26), 자민당('90.8.11)
- 양독 자매정당 간의 결합과 함께 당조직 역시 확장·개편되었으며, 요직 인사개편이 실시됨.
 - 이 때 당수, 사무총장, 재무간사 같은 주요직은 서부 독일 정치가들이 주관하게 되었으며, 동독 정치가들은 부당수 및 중앙위 간사로 선출되었음.
 - 상대적으로 서독 정치가들이 우위를 점했던 이유는 서독 유권자 수가 더 많은데 기인했음.

- 동·서독 정당들의 당원수 역시 의원직 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 새로 창설된 동독 사민당 당원 수는 서독에 비해 현저히 적었음.
- 반면 기민당과 자민당의 경우, 과거 재휴 정당들과의 합류로 인해 동독 당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었음.

통독 이후 주요 정당별 당원수

(단위 : 천명)

연 도	기민당 (CDU)	기사당 (CSU)	사민당 (SPD)	자민당 (FDP)	녹색당 (Grüne)	민사당 (PDS)
1989 서독	679	185.8	921	65	41.1	2,320 (1)
1990 통독후	800	186.1	943	179	42	230
증 감	+ 121	+ 0.3	+ 22	+ 114	0.9	- 2,090
증 감 율	18%	0.17%	0.24%	175%	0.2%	- 90%

(1)은 1988년 동독 SED 당원수임.

- 연방 차원의 정당구조 변천과정에서 동독의 정당들은 이렇다 할만한 영향력을 행사치 못했음.

1-1-3.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 이양

가. '90.3.18 동독 인민의회 선거(Volkskammerwahl) : 동독 최초의 자유 선거

- 동독 인민의회는 동독 국민들의 자유화 열망을 반영하여 조기 총선을 실시키로 하고, '90.2.21 이를 법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인민의회 선거법' (Gesetz ueber die Wahl zur Volkskammer)을 제정함.
 - 정치단체 및 정당간의 연합을 허용하되, 정당법(Parteigesetz)에 의거, 극우정당들의 참여를 금지함.
 - 18세 이상의 동독 주민(당시 1천 2백만 명)은 비밀투표로 한 정당 또는 정당 및 정치단체와 연합한 연합 정당(Listenverbindung)을 선택할 수 있게 됨.
 - 15개 선거구에서 총 400명의 의원을 선출함.

○ 서독 자매정당의 지원 속에 24개 정당이 참여하여 93%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선거를 치른 결과, 동독 기민당이 중심이 된 '독일 연맹' 이 다수(48.1%)를 획득, 서독 기본법 23조에 의한 조속한 통일추진에의 기쁨이 마련됨.

- 사전에 실시된 여론 조사 결과와 전문가들의 예상은 사민당이 우세할 것으로 보았으나, 사민당은 22%, 공산당의 후신인 PDS는 16%, 민권운동 단체연합('B.90)은 3% 미만의 득표에 그침.

- 총선시 주요 정파 공약, 득표율

	독일연맹 (CDU, DA, DSU)	사 민 당 (SPD)	민 사 당 (PDS)	자유민주연합 (LDP, FDP)	B. '90 (민권운동단체)
서독의 우호 정당	기민당, 기사당	사민당	독일공산당	자민당	녹색당
정치 성향	기독교 보 수	사회민주주의	스탈린주의와 결별 및 민주 사회주의	중 도	직접민주주의 실현
통일에 대한 추진방법	조속한 통일, 기본법 23조 에 의한 통일	신중한 통일, 기본법 146조 에 의한 통일	국가연합에 의한 통일의 단계적 추진	점진적 통일, 국민투표에 의한 통일	양독 국가의 정치·사회적 개혁을 전제 로 한 통일
통일독일의 국제적 위상	통독의 NATO 가입	CSCE를 축으 로 한 장기적 인 군사동맹 해체	NATO와 바르 샤바조약기구 동시 해체	유럽의 신 평 화 질서 구축	양독 국가의 NATO와 바르 샤바조약기구 로부터 탈퇴
득 표 율 (%)	48.1	21.8	16.3	5.2	2.9

○ 선거결과 분석(선거 직후 1만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함. 연방정치교육센터 간행 자료 참조)

- 유권자들의 정치 성향

· 연령별 차이

· 기민당에 대한 지지는 젊은층보다 노년층이 높으나, 서독에서와 같은 정도의 편차는 나지 않았음.

- .. 사민당의 경우에도 노년층으로부터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음.
- .. 민권운동단체연합(B.'90)과 PDS는 주로 40세 이하의 유권자들로 부터 지지를 받았음.

· 지역별 차이

- .. 주민수가 많은 선거지역일수록 기민당의 지지율이 저조했던 반면, 사민당, PDS 그리고 B.'90에 대한 지지도는 높았음.
- .. 등베를린 및 메클렌부르크, 브란덴부르크 등 북부 농업지역에서는 사민당과 PDS가 우세를 보인 반면, 작센과 튀링겐 등 남부 산업 지역에서는 기민당이 50% 이상의 지지를 얻음.

· 종교별 차이

- .. 서독의 경우 주민의 90%가 신교 내지 구교신자로 등록되어 있는 반면, 동독의 경우, 구교신자는 6%, 신교신자는 주민의 1/3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무신론자로 나타남.
- .. 동독 구교신자의 2/3와 절반 이상의 신교신자가 기민당을 지지한 반면, PDS 지지자 중 4/5는 무신론자 들이었음.
- .. 'B.90 지지자 중 2/3가 신교신자였음.
- .. 이로써 동독에서 종교가 투표 성향을 결정하는데 갖는 의미는 서독에서와는 약간 다른 것으로 나타남.

· 직종별 차이

- .. 50%의 근로자들이 기민당을 지지하였음.
- .. 자영업자들은 주로 기민당과 자민당을 지지하였음.
- .. PDS 지지자들은 주로 동독공산당 집권시 당간부, 지식인, 고급 관리 및 학생들로 구성됨.
- .. 사민당은 사회 계층 전반으로부터 고른 지지를 받았음.

- 기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게 된 원인

· 기민당이 예상과 달리 근로자들의 지지를 획득하면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통일의 시기, DM의 도입, 사회주의체제 고수 여부 등 주요 정치쟁점 사안에서 투표자들의 지지를 획득하였기 때문임.

.. 통일의 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설문에 응한 유권자 90% 이상이 서독과의 통일을 원하였음.

.. 동독주민들의 50% 정도가 서독의 민주주의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25%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음.

.. 조속한 통일과 DM의 즉각적인 도입을 요구하는 자들은 기민당을 지지한 반면, PDS 지지자들은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음.

.. 점진적이면서 신중한 통일을 원하는 자들은 사민당을 지지하였음.

· 대부분의 동독 근로자들은 조속한 통일과 DM의 즉각적인 도입을 원하였으며, 사무직 종사자나 지식인들과는 달리 사회주의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았음.

.. 기민당이 내걸은 선거공약은 바로 이같은 근로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었음.

.. 따라서 기민당은 하루라도 빨리 동독과 결별하기를 원하는 자들의 정당이 될 수 있었음.

- 서독의 정상급 정치인들의 지원선거유세가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분명하지 않으나, 서독 정치가들 중에서는 당시 동독출신 외무장관 겐셔가 가장 높은 인기를 얻었으며, 동독 정치인들 중에서는 기민당 대표 로타 드메지어가 사민당 대표 이브라힘 뢰메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았음.

나. '90.5.6 동독 지방자치단체 선거(Kommunalwahl)

- 동독 인민의회 선거의 결과에 따라 로타 드메지어를 수상으로 하는 독일 연맹과 사민당 그리고 자유민주연합이 연립정부를 구성하였으며, 이어 열린 5.6 의 동독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이 연립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선거 결과

- 현저한 득표손실에도 불구하고, 기민당이 재차 승리하였음.
 - 기민당(CDU) 30.4%, 독일사회연합(DSU) 3.4%로 3.18 총선당시 독일연맹이 획득한 48.1%에 훨씬 못미침.
- 사민당은 튜링엔 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존 지지율을 거의 확보함.
- 민권운동단체, PDS 및 자유민주연합 역시 3월 동독 인민의회선거에서의 위치를 고수할 수 있었음.

다. '90.10 신설 5개주(구동독지역) 주의회 선거(Landtagswahl)

- 동독 인민의회는 구동독지역에 신설 5개주 설립과 10.14 주의회 선거를 실시키로 결정함.
 - '90.9 통일조약이 체결되고, 10.3 동독의 편입에 의한 독일 통일이 추진됨으로써, 신설 5개주 주의회 선거에서는 서독 선거법이 적용됨.
 - 제 1투표권(직선의원 투표권) 및 제 2투표권(정당 투표권) 제도 도입
 - 5% 제한 조항(5% Klausel : 5% 이상 득표한 정당에 대해서만 의회 진출을 허용하는 규정) 적용
 - 동베를린은 서베를린과 통합한 후 '90.12.2 전독총선과 동시에 베를린 시의회 선거를 치름.

0 선거 결과

- 10.14 주의회 선거

- 신설 5개주 중 4개주(브란덴부르크주 제외)에서 기민당이 다수 의석을 획득, 집권당이 됨.
- 사민당은 1개 주에서만 승리했으나, 3.18 인민의회 선거에서보다 구동독 전체유권자로부터 10%나 더 많은 지지율을 확보함.

- 12.2 베를린 시의회 선거 :

- 동베를린에서의 기민당 득표율은 25%에 불과했으나 베를린 전체 지지율 면에서 승리하여 사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함.
- PDS와 'B.90은 전체 구동독지역 중 동베를린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확보함.

라. '90.12.2 전독 총선(Bundestagswahl)

- 0 신설 5개주 의회 선거 6주 후에 실시된 전독 총선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서독간 선거협약(Wahlvertrag)에 의해 서독의 선거법이 적용되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구동독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 규정이 적용됨 :

- 종전의 5% 제한 조항 적용과 지역별 비경쟁 정당들에 대해서만 인정토록 하는 연합 정당 구성권(Listenverbindung)이 연방 헌법재판소로부터 구동독 신생 군소정당들에게 불리하며 균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위헌 판결을 받음.
- 이에 따라 구동·서독 지역을 구분하여 득표수를 집계, 5% 제한 조항을 적용시키는 수정안이 채택됨.

- 정당투표권(Zweitstimme)의 개표 결과, 동·서독 지역 중 어느 한 지역에서 5% 이상을 획득하였거나, 선거구에서 3명의 직선의원을 배출한 정당은 연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음.
- 이 밖에도 구동독지역에 한해서만 정당 및 정치단체들간의 연합정당 구성이 허용됨.
- DSU(구동독 독일사회연합)와 CSU(구서독 기사당) 같은 비경쟁 정당들간의 동·서독 연합 정당 구성은 연방 헌법 재판소에 의해 금지됨.

o 선거결과 및 분석

- 각 정당별 득표 현황

	기민당·기사당	사민당	자민당	녹색당·B.'90	민사당	공화당	기 타
지지율(%)	43.8	33.5	11.0	5.1	2.4	2.1	2.1
의석수(명)	319	239	79	8	17	0	0

- 기독교민주연합(기민당/기사당)이 통독 연방의회 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둠.
 - .. 이들에 대한 구서독지역 지지율은 구동독지역보다는 약간 높았으나, 구동독지역에서 지지율은 3.18 동독 인민의회 선거에서보다는 약간 상승하였음.
- 사민당은 구서독지역에서는 35.7% 지지를 얻었으나, 구동독지역에서는 24.3%에 그침.
- 반면, 구서독지역에서 PDS 득표율은 0.3%에 불과하였으며, 동베를린에서도 11.9%의 지지밖에 얻지 못함.

- 94년 총선시부터는 5% 득표율의 의회진출이 좌절되는 조항이 전국적으로 적용되므로 동독 공산당의 후신인 PDS의 연방의회 진출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0 선거에 나타난 유권자들의 정치 성향

- 지역별 차이

- 기민당은 구동독 남부 산업지역에서 재차 우세를 보였으며, 북부의 메클렌부르크-포어머른주에서도 처음으로 40% 선을 상회함.
- 자민당은 작센-안할트 주에서 겐서의 도움으로 20%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1957년 서독에서의 선거 이후 가장 좋은 선거결과를 올림.
- 사민당은 구동독지역에서 브란덴부르크주와 동베를린에서만 좋은 성과를 올렸음.
- PDS는 동베를린에서 25%의 높은 득표율을 올렸으며, 메클렌부르크-포어머른주에서도 두 자리 수의 득표율을 기록하였으나, 동남부 독일에서 처음으로 10% 선을 넘지 못함.
- 동맹 90 역시 동베를린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올렸으며, 신설 5개주에서도 5% 이상의 고비를 무사히 넘김.

- 사회 계층별 정치 성향 분석 결과 동독 인민의회 선거에서의 비슷한 양상이 나타남.

- 60세 이상의 유권자 중 기민당 지지자가 약간 늘어남(49%) (주의회 선거에서는 44% 였음).
- 직업별로는 3월 동독 인민의회 선거에서의 거의 차이가 없음 : 즉, 주로 근로자들이 기민당을 지지함.
 - 서독 근로자는 50%가 사민당을 지지한 반면, 동독 근로자는 25%만이 사민당을 지지함.

- 동맹 90 지지자는 젊은층, 특히 학생층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음.
 - PDS는 사회계층 전반에 걸쳐 동독인민의회 선거시에 비해 1/3에 달하는 지지자들을 상실함.
- o 통독 이전 구동독에서 실시된 총 4차례의 선거에서는 4차례 모두 보수당인 기민당이 승리하였음.
- 구동독지역의 경우 시민사회적인 정당구조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선거가 치루어져, 특정 정당에 대한 반대 내지 지지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한 선호, 각 정당 후보에 의한 선호에 의해 크게 좌우되었음.
 - 조속한 통일론자, 이에 따라 단시간 내에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자, 통일과정이 무리없이 진전될 것이라고 보았던 자, 사회주의 이념보다는 자유 민주주의를 지지한 자들이 기민당을 지지하였음.
 - 독일 전체 국민들의 헬무트 콜 연방수상에 대한 지지는 1990년 3월에서 12월까지 급증하였음.
 - 기독교 민주 연합측이 주요 정치 쟁점과 후보자 개인적 지지에 있어서 사민당과 비교하여 우위를 점했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기민당은 자영업자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로부터도 대폭적인 지지를 얻었음.
 - 구동독 유권자들의 지지 정당 교체율이 구서독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 바, 그 이유는 사회계층별·사회 구조에 따른 정당 지지 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데 기인함.
 - 주요 정치 사안과 인기 정치인들에 의해 좌우되는 이같은 구동독지역 유권자들의 선거태도는 과거 50~60년대 서독의 해바라기성 민주주의(Schoenwetterdemokratie)와 비교할 수 있음.

1-2. 행정체제 개편

가. 행정조직 재편

- 통일조약에 따라 구동독의 행정조직은 5개주로 개편되어 독일연방공화국에 편입됨.
- 구동독 공공기관 종사자 처리
 - 통일조약 제20조에 따라 구동독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전원 재심사를 받은후 재임용토록 되었는데, 서독체제의 신속한 이식과 과다인력의 감축을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적으로 감축
 - Stasi 등 국가보위기구에 종사한 자
 - 구동독 공산당(SED)과 대중 외곽기구에서 체제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한 자
 - 시민적, 정치적 재권리에 관한 국제협약('66.12.19)에 보장된 인권과 인권에 관한 일반선언('48.12.10)에 규정된 기본원칙에 위배된 행정 행위를 하였던 자
 - 전문적 지식의 부족이나 개인적성의 부적합으로 업무 요청에 부응하지 못한자
 - 통독후에는 더 이상 행정수요가 존재하지 않아 업무할당을 받지 못한 자
 -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과도기적 경과기간(50세 이하는 6개월, 50세 이상은 9개월)동안 과거 급여의 70%를 받으며 전직 준비, 그 이후에는 자동 실직됨.
 - 실직자 300여명은 헌법재판소에 이러한 조치의 위헌 여부를 제소했으나 패소('92.3.12 결정)
 - 과거 200만의 구동독 공무원중 140만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추계

- 잔류공무원중 앞으로 몇명이 정식공무원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될지는 각 연방부처, 주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와 예산운용의 가능 범위내에서 결정될 것이나, 임명전 반드시“ Gauck Behoerde” (Stasi 자료 관리 관청)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추후 결격요건이 발견되면 자동해고됨.

· 계속 근무가 확정되는 자들은 공무원 법에 의한 제자격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일정한 유예기간을 갖고, 구체제와 관련된 과거 경력이 없는지, 전문지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받음.

- 통독이후 공공기관 종사자(공무원, 판사, 군인) 현황('92.6.30 현재)

단위 : 천명

	독 일 전 체	구서독지역	구동독지역
o 정규 공무원 전체	6,298	4,678	1,620
- 전업 종사자	5,255	3,782	1,472
- 시간제 종사자	1,043	896	148

출처 : 연방통계청, '93 통계 연감, Page 552.

o 공무원 법(Beamtenrecht) 등 관계법령 제정

- 통일조약(Einigungsvertrag)에 따라 우선 연방 공무원법이 신설5개주에 도입됨. 각 신설 5개주는 '92.12.31까지 주공무원법(Landesbeamtenrecht)을 제정해야하며, 제정시까지 과도기간 동안 연방공무원법의 규정과 통합 조약에서 합의된 별도 규정이 적용됨.

- '91.1.9 연방내무성에 의해 제정된“ 구동독 공무원중 해고되지 않고 인수되는 자들에 요구되는 유예기간에 관한 규정” (Verordnung Ueber die Bewahrungsforderungen fuer die Einstellung von Bewerbungen aus der oeffentlichen Verwaltung im Beitrittgebiet in ein Bundesbeamtenverhaeltnis)이 신설5개주에도 그대로 적용됨.

- 이 규정에 의하면 새로이 공무원으로 임명되고자 하는 자들은 등급에 따라 유예기간(Bewahrungszeit)을 갖기로 되어 있는바, 고위직(hoehere Dienst)은 4년, 고급직(gehobene Dienst)은 3년, 중급직(mittlere Dienst)은 2년, 단순직(einfache Dienst)은 1년임.
- 유예기간중 과거 전력이나 자질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면 그 직급에 임명됨.

o 잔류 구동독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법적인 고용관계

- '91.1.1을 기해 주요한 고용관계 제 법규는 거의 그대로 신설5개주에도 도입되어, 과거 서독지역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적용되던 제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고용계약 관계가 형성됨.
 - 다만 능력에 상응하는 보수체계 확립을 위해 '91.3.5 임금협상을 통해 91.7.1부터 구동독지역 보수수준은 구서독지역의 60%선 합의
 - '92초 노·사 협상에 의거 구서독지역 수준으로 단계적인 봉급인상 예정 : '92(70%), '93(80%), '94(100%) 수준

나. 신설 5개주 공무원들에 대한 재교육, 직업교육

- o 능률적인 행정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연방, 주, 각 지방자치단체에 해고되지 않고 인수되는 과거 동독지역 공무원에 대해 연방 및 각 자매주 공무원 연수원 주관으로 필수적인 교육 실시
 - 특히,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각종 전문지식 뿐만 아니라, 법치 국가적 질서에 대한 신념고취등 정신교육도 중요
 - 행정법, 헌법, 재정학, 행정학(인사, 재무관리) 등이 주요 과목

- '90말 현재 15,000명, '91말 현재 30,000명(누계)에 대해 재교육 완료
 - 이와 별도로 35,000명의 체신공무원, 1,360명의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
 - 특히 각주 세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그 시급성을 감안하여 연방 재무성에서 직접 23개 교육 프로그램은을 작성, 실시
- 연방정부는 신설 5개주에 대해 공무원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 조치를 취함.

- 각 주의 공공행정 전문학교와 연방행정청(Bundesverwaltungsamt)에 더 많은 공무원 예비자를 양성
- 연방 중앙공무원교육원(Bundesakademie fuer oeffentliche Verwaltung)의 교육계획에 신설5개주 공무원 교육 포함
 - 특별반 운영(민주법치국가 질서와 전문 지식 제고를 위한 목적)

다. 구서독지역 공무원의 신설 5개주 파견·전보 장려 조치

○ 봉급상의 혜택

- 만약 파견되는 공무원이 신설 5개주에서 현재의 직급보다 훨씬 높은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그 직급에 상응하는 보조금(Zulage)을 지급
- 또한 '91.4.9 연방 내각 결의로 구동독 행정체계 구축에 참여한 구서독 공무원에게 그 근무기간이 지속적으로 1년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연금 산정시 각 근무기간에 대해 2배의 근무기간 산정을 배려

- o 이전에 따르는 생활비용 보상(Aufwandsentschaedigung)
 - 구서독지역으로부터 생활근거지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생활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91.3.20 연방하원의 결의(내무성 건의)에 따라 각 직급에 따라 매월 1,500~2,500 DM을 지급

- o 여행경비, 별거수당 지급
 - 파견일 경우 기혼자는 한달에 2번, 미혼자는 한달에 1번의 귀향에 따른 여행경비와 별거수당(14일까지 직급에 상응하는 여비와 같은 액수)을 받음.

- o 승진상의 혜택 부여
 - '91.4월말 연방인사위원회(Bundesperssonalausschuss)는 구동독지역 파견 공무원에게 경력 평정에 있어서 예외를 인정하도록 결정함.
 - '91년말까지 파견되는 공무원으로서 최소한 구동독지역에서 3년이상 근무하게 되는 자는 경력 평정시 유리한 점수를 받도록 함.
 - 또한 유경험자를 확보하기 위해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력상 더이상 승진할 기회가 없는 구서독 공무원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선발심사, 교육, 경력에 필요한 자격 확정 등 인사상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구동독 지역에 전보 조치함.

- o 퇴직한 공무원 파견
 - 이미 퇴직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공무원도 '9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구동독지역 행정체계 재건에 참여토록 함.
 - 이 경우 과거 퇴직시와 상응하는 직급에서 임금 계약에 따라 일정액을 받으며 근무하게 되는데 연금 신청권은 계속 보장 받음.
 - 아울러 구동독지역에서 근무한만큼 연금년도 산정에 가산 (최고 75% 까지)

0 구서독에서 구동독지역 공무원으로 전보·파견된 현황('92년 4월 현재)

단위 : 명

	총 인 원	전 보	파 견
0 연방정부기관(서) ⇒연방정부기관(동)	13,679	4,637	9,042
0 연방정부기관 ⇒주정부기관	1,322	299	1,023
0 (서독)주정부기관 ⇒(동독)주정부기관	8,375	2,995	5,380
총 계	23,376	7,931	15,445

라. 지방자치 행정체계 구축

0 통독과 더불어 구동독지역에는 1950년대에 없어졌던 신설 5개주가 부활되고 구서독지역의 행정단위 기준(Gemeinde, Staedte, Kreise)에 따라 새로운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함.

- 연방내무성과 구서독의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력·물자·재정 지원 등을 통해 구동독의 지방행정체계 구축을 지원
- 한편, 구서독의 각 지방행정기관 연합회는 행정의 연방주의에 의거 각 지방 행정기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구동독에 신설된 각 Staedte(중·대도시에 해당), Gemeinde(소도시·읍에 해당), Landkreise(군에 해당)의 회원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선에서 서독으로부터의 행정지원을 총괄함.

0 통독이전인 '90년초부터 구서독측은 구동독지역의 지방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각종 형태의 행정지원을 제공해 왔음.

- 이미 동·서독간 교류협력기간중 맺어졌던 도시간 자매결연(Staedtepartnerschaft) 통로를 통해 주로 초기에는 통신수단(전화, 팩시밀리), 각종 정보유인물 등 물자지원을 제공
- '90년대 중반부터는 자문, 세미나 강사 파견, 행정인력 파견 등 인적 지원이 증가하였고, 건축자재, 자동차, 사무용 집기 등의 지원도 병행함.
- 통독이후에는 통일조약 제15조("연방정부와 구서독의 주정부는 신설 5개주 행정체계 확립을 위하여 행정지원함")에 따라 체계적인 행정 지원이 이루어짐.
 - 행정자문단의 조직·파견
 - 상주 전문인력 파견 : 연방내무성은 "인력파견에 따른 보조기금"을 '91.'92 각각 1억 DM씩 계상
 - 구동독지역 공무원에 대한 재교육, 직업교육 지원
- 상기 행정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방내무성, 각주내무성, 각지방행정기관 연합회측이 서로 긴밀히 협조
 - 내독관계성의 해체와 함께 내무성이 그 인력을 흡수하여 "동독 재건 실무단"을 편성, 각 주 내무성과 긴밀히 협조하여 행정 자문
 - '90.7.29 서독지역 각 주 내무장관 회의에서는 기존의 동·서독간 도시 자매결연 형태로는 구동독의 중·소도시가 망라되어 있지 않아 (구동독의 5만 이상 도시는 거의 서독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었음) 서독측으로부터 충분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또 서로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어떤 서독의 주가 구동독의 어느지역을 관할하여 행정지원할 것인가를 새로 결정함.

1-3. 사법체제 개편

가. 사법조직의 개편

○ 최고재판소와 대검찰청의 폐지

- '90.10.3을 기하여 동독의 헌법기관이었던 최고재판소와 대검찰청은 폐지되고, 그 청산작업은 연방법무부와 연방재판소 또는 연방검찰청이 분담하여 수행
- 최고재판소에 상고 또는 항소종심으로 계속중이던 사건은 연방의 최고재판소들로 이송되며, 제1심으로 계속중이던 사건은 주정부 소재 지구재판소의 특별부에서 심리 계속
- 대검찰청에서 담당하던 사건은 연방검찰청 또는 각 주의 검찰청에서 인수

○ 동독 법무성의 해체

- 동독법무성은 해체되어 각 주정부 산하의 주법무성으로 재편됨.
- 연방법무성은 동베를린의 구법무성 청사에 과도적으로 외청을 설치하고 법무부 해체, 각 주 법무부 창설, 통일적인 입법작업 등을 통괄

○ 주 헌법재판소의 신설

- 구동독에서는 사법부가 헌법적 규제기능을 갖지 않았으며, 국가권력기관인 국가평의회 또는 인민의회에서 법령의 헌법위반 여부를 심사
- 서독 기존의 각 주는 연방의 모델에 따라 각 주의 헌법규범을 척도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국가이념의 보장기능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를 설치, 운용
- 헌법규범의 정치적 통제는 더 이상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았고, 구동독 지역에는 주별 헌법재판소 제도가 없었으므로 연방주의에 의거, 동독 신설 5개주에 헌법재판소를 새로이 설치하였음.

0 재판소 및 검찰청의 관할과 조직 개편

- 신설 각 주에 서독과 같은 심급의 법원조직(구재판소 - 주재판소 - 주고등재판소)을 정비
- 검찰도 서독체제와 동일하게 정비(주검찰청 - 주고등검찰청으로)
- 소위 일반적 적법성 감독의 권한, 민사·가사·노동사건 소송절차에 대한 광범위한 관여권 등 종전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폐지되고, 그 직무상 감독도 과거의 대검찰청 대신 각 주 법무부에서 행사

0 행정·재정·노동·사회재판소 등 특별법원의 설치

- 동독에는 행정·재정·노동·사회사건 등을 독자 관할하는 재판소는 존재치 않았으며 특히 행정사건, 사회사건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관념도 없었음.
- 사회복지국가와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통일이념상 서독의 모델에 따라 각 특별법원을 설치

0 변호, 공증기능의 한시적 존속

- 서독 현행의 연방변호사법, 연방공증인법이 연방단일법으로 정비될 때까지 과도적으로 구동독 변호사와 공증인에 대한 관계법령을 일부 수정하여 계속 적용.
 - 구동독법에 의하여 인가된 변호사, 공증인은 서독의 변호사, 공증인과 동등한 지위 내지 권한 부여
 - 다만, 구동독 인가 변호사의 서독지역으로의 인가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
 - 종전에 법무부에서 행하였던 직무감독권은 각 주 법무부로 이관, 징계법원 등의 최종심은 연방 법원의 변호사건부, 공증사건부에서 관할
 - 기존의 변호사회 또는 공증인회는 연방변호사회 또는 연방공증인회로 소속

- 변호사 활동에 대한 재심사

- 국가공안부 요원 등 불법정권에 가담한 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은 신설주 법치국가 수립의 장애요인인 동시에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기 때문에 변호사 활동에 대한 재심사문제 대두
- 구동독 판·검사 출신에 대한 변호사 활동 금지
 - .. Klaus Kinkel 연방법무성장관은 '91.8.1 불법정권 유지의 하수인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되어 신설주의 사법체계 확립시 재임용되지 못한 판·검사들의 변호사활동 금지방침 발표
 - .. 각 주 법무부는 개별 사례를 다시 검토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
 - .. 구동독 변호사법은 「신청자가 과거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일을 했을 경우, 그 변호사 활동허가는 취소된다」고 규정
- 변호사 심사와 관련된 독일변호사협회 입장
 - .. 원칙적으로 관할 주 법무부와 변호사협회에 의한 변호사들의 국가공안부를 위한 활동협약에 대한 심사에 대해 찬성
 - .. 다만, 변호사 활동의 특수성에 비추어 변호사 심사가 변호사의 사생활이나 비밀을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노출시키게 될 것을 경고
- 1992년 연방하원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변호사 허가 및 공증인 임명 심사를 위한 법률」 (초안) 의결
 - .. 구동독 변호사법에 의해 부여된 허가에 대한 지원자의 적합성 여부 심사

나. 구동독 판·검사 심사 및 재임용

- o 동독의 사회주의체제 수호와 불법정권 유지를 위한 하수인 역할을 하였던 판·검사들을 사법부로부터 배제하여야 한다는 것은 자유법치국가 수립을 위한 통일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로 대두

○ 각 신설 5개주와 베를린주는 구동독에서 '90.7.22 공포한 법관선출위원회법에 의거 6명의 의원(주정부 및 지방의회 의원)과 4명의 판사(또는 검사)로 구성된 법관선출위원회와 검사임용위원회를 설치하여 적격자를 심사 선발

- 심사기준(각 주마다 조금씩 다름)

- 구체제의 과거전력과 관련한 정치적·도덕적 하자 유무, 법치국가에 맞는 법률전문지식 소지 유무, 객관적·독립적 판결능력 유무, 재교육에 대한 준비자세

- 법관선출위원회를 통과한 법관들도 3~5년의 시보기간을 거친후 종신 법관으로 임명 예정

○ 재임용 심사자료

- 서독의 Salzgitter 소재 중앙기록보존소에 수집되어 있던 구동독 판·검사들에 대한 각종 자료(90.6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자료입력건 수는 총 41,390이며, 명부에 수록된 관련자 총 수는 약 8만명으로 그중 6,500명이 구동독 판·검사였음)

- 구동독 국가보위부(Stasi)의 제반 관련 문서

- 재임용 신청자가 작성하는 질문서 등

○ 재임용 절차 진행상황

- 통일전후 구동독 판사 1,400명과 검사 1,000명중 약 1/3 사퇴, 잔존 인원에 대하여 각 주별로 과거 경력이나 행적여하에 따라 재임용 여부 심사(도표 참조)

- 현재 신설주에 있어서 판·검사의 재임용 심사 거의 완료

-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우 판사 250명, 검사 170명이 재임용 심사 신청, 이중 판사 54%, 검사 67%가 재임용됨으로써 심사 완료

- 베를린주의 경우 371명의 판·검사가 재임용 심사 신청, 이중 판사 33명, 검사 10명이 재임용됨으로써 심사 완료

- 판사의 경우 형사법원에는 발령하지 않고 민사법원에만 발령한 후 각 그룹별로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 실시
- 검사의 경우 시보기간중 단독수사권·기소권·항소권 불부여
- 재임용 심사의 탈락자중 일부는 변호사 개업 또는 산업체 경제변호사로 근무, 일부는 행정소송 제기

구동독 사법체계 구축현황

93.1.1 현재, 단위 : 명

구		분	판 사	검 사	법무행정직	사법보조관
총 근 무 인 원			2,273	941	141	2,227
총 원 방 법	재임용	구동독 출신자	628	378	8	520
		구서독 퇴임자	61	8	2	20
	신규임용	사법시험 합격자	842	312	13	97
		법과대학 졸업자	28	5	11	
		기 타	3	-	4	
	구출 독신	파견 명령	511	173	18	478
		전보 발령	195	52	83	127
심사 중인 자		5	13	-		
근 무 부 원	법 원	통상 법원	1,677	-	-	1,925
		행정 법원	168	-	-	
		재정 법원	20	-	1	
		노동 법원	149	-	-	
		사회 법원	52	1	-	
처	검 찰		102	868	136	186
	주 법 무 부		103	57	-	62
	구서독주 파견		11	17	-	-
신규 채용 예정			1,944	745	275	2,160

다. 구동독지역 법조인력 부족과 연방정부 지원 조치

0 법조인력 소요현황

단위 : 명

	총소요인원	선발가능 구동독인력	추가 소요인원
법 관	5,000	600 - 700 (1,200)	4,000 이상
검 사	1,200	400 - 450 (900)	700 이상
사법보조관 (Rechtspfleger)	3,000	.	3,000

0 부족한 법조인력의 충원

- 서독 판·검사의 파견
 - 신설주와 자매결연을 맺은 서독주의 재조법조인 파견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우 판사 100여명, 검사 50여명 파견)
 - 면세조치, 상여금·별거수당·교통비 지급 등 재정지원으로 파견 희망자 확보(판·검사 파견시 대상자의 의견 절대존중)
- 판·검사 신규채용, 퇴임변호사 등의 재임용
 - 베를린주의 경우 지난 10년동안 임용한 판·검사의 수보다 통독후 신규임용한 수가 더 많음(판사 1,300명, 검사 370명중 통독후 430명 신규임용)
- 구동독 판·검사에 대한 심사후 선별 재임용

0 구동독지역 법관에 대한 재교육

- 구동독내 모든 판사에 대한 민법, 상법, 법원조직법 등을 12 과점으로 나누어 1년간 재교육 실시
- 특별재판부 판사에 대하여는 특별교육 실시
- 법관의 임무에 속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주의 파트너인 서독주가 주도권을 가지고 재교육 시행

1-4. 구 동독의 대외관계 처리

가. 동독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 또는 협정처리

- 과거 동독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협정은 다자간 542건, 양자간 2,551건으로 총 3,093여건에 이룸.
 - 과거 동독정부는 서독과의 외교경쟁에서 독자적인 국가승인을 최대의 외교목표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외국과 될수 있으면 많은 조약·협정을 체결하려 하였음.
 - 정치·군사, 경제·무역, 환경, 문화·과학, 보건, 영사, 노동·사회(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 분야 등에 이르는 협정중 서방제국과는 다자간 협정을 주로 맺고 있어 별 문제가 없으나, 과거 동구권 및 제3세계 국가와는 양자간 협정이 많아 그 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
- 동독이 통독전에 맺은 국제법상 조약 및 합의사항의 처리에 대해서는 통일조약 제1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 양자간 조약·협정의 경우는 통일독일이 조약체결 당사자들과의 협의(Konsultation)를 거쳐 계속 유효(Fortgeltung)·조정(Anpassung) 또는 효력상실(Erloeschen) 여부를 결정함.
 - 이 작업은 5가지 기준에 의해 진행됨.
 - 신뢰보호
 - 관련 당사국들의 이해
 - 서독측의 계약상 의무
 - 자유·민주·법치국가적 기본원칙의 존중
 - EC의 관할권을 존중
 - 서독은 가입되어 있지 않고 동독만 가입되어 있는 국제기구나 다자간 조약에 통일독일이 가입하려고 할때 모든 당사국 또는 EC와 협의를 함.

0 그러나 통일조약은 단지 조약체결 당사국들과 협상을 거쳐 처리할때의 기준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90.10.3 통독시점까지 동독이 맺은 조약과 협정으로 확정된 기존권리는 과거 서독이 맺은 조약과 관련하여 어느 것이 더 우선권을 갖는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음.

- 여기에는 통일조약 8조와 9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의 등화 (Rechtsangleichung)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봄.

· 즉 기본적으로 서독이 맺은 조약과 협상이 우선하여 동독지역에까지 확정 적용됨.

· 다만 동독이 맺은 조약·협상 내용의 계속 유효성 여부는 통합조약 제9조의 계속 적용되는 동독의 법령 규정을 준용하여 서독의 법령에 의해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만 유효한 것으로 볼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물론 통일된 독일과 새로운 조정된 형태의 협정을 체결해야 함.

0 현재 연방외무성은 상기 원칙에 의거해 각국과 협의중이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각 주무부처와 협조, 구체적인 협약내용을 확정할 계획임.

- 국경문제와 관련된 구동독의 조약들은 통독후 체결한 독·소간, 독·폴간 우호·협력 조약을 통해 그 내용이 계속 유효함.

- 대외경제관계와 관련된 조약·협정 등은 '90.10.3을 기준으로 수지결산 잔액(Saldo)을 확정하여 새로운 의무이행과 권리행사에 관한 내용을 조정하여 새로운 조약·협정을 체결할 예정임.

- UN 및 그 산하기구, CSCE 등 동·서독이 동시에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 국제기구나 다자간 협정의 경우는 통일독일이 단독대표권을 행사한다고 통지를 하였음.

- 동독은 가입되어 있었으나 서독은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통일독일이 더이상 가입할 의사가 없는 국제기구나 다자간 조약의 경우는 관련 당사국 또는 EC와 협의할 의무가 없어, 통독과 더불어 구동독의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봄.
- 양자간 조약·협정의 경우 베트남, 라오스와는 이미 협의(Konsultation)를 끝냈으며, 소연방의 CIS 국가와 협의가 개별적으로 진행중임.

나. 통독과 제3국간 외교 및 영사관계 종식 통보

- o 10.3 통독과 동시에 외국이 동독과 맺고 있는 외교 및 영사관계가 소멸됨을 통보
- o 통독이후 잠정조치로 3개월간 동베를린 주재 외교관에게 외교특권 부여

다. 통독 외교관 처리

- o 4,000여명의 구동독 외무성 직원중 외교직은 통독과 동시에 거의 해임되고, 주로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약 250명이 임시 고용계약 형태로 잔류
 - 이들 대부분은 재외공관 관리, 문서이관, 건물유지 및 자료입력 등에 소요되는 인력으로 청산작업이 끝날 때까지만 근무
 - 250명중 몇명이 앞으로 계속 정식공무원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남게될지는 연방외무성의 실행정수요와 예산운용의 가능범위(재무성과 협의) 내에서 결정
 - 해고된 외교직 공무원중 극소수(수명)는 외무성내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용 절차중에 있음.
- o 통일조약에 따른 구동독 외무성 직원 해고 기준(일반공무원 해고 기준과 동일)
 - Stasi 등 국가보위기구에 종사한 자

- 구동독 공산당과 대중외곽기구에서 체제수호를 위해 적극 활동한 자
- 「시민적, 정치적 재권리에 관한 국제협약」('60.12.19)과 「인권에 관한 일반선언」('48.12.10)에 규정된 기본원칙에 위배된 행정행위를 하였던 자
- 전문적 지식의 결핍이나 개인 적성상의 부적합으로 업무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
 - * 대표성, 신뢰성, 과거 국제무대에서의 대결 등 외교업무의 특이성에 비추어 타부처보다 해고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

라. 동독 재외공관 처리

- o 동독과 더불어 연방재산으로 귀속
- o 독일 외무성은 재외공관에 동독공관을 인수케 하고 계속 사용가능 여부 파악을 지시
 - 현지공관이 계속 사용 필요성을 보고하고 외무성도 동의한 경우
 - 문화원 등 타기관 건물로 사용
 - 건물 개축비용 산정을 위해 연방건설성에 전문감정 의뢰
 - 건축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연방재무성에 신청하여 개축
 - 계속 사용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해외 국유재산 매각절차에 의해 공매 처분
 - * 원만한 공관인수 등 건설적인 청산을 위해 서독 외무성은 90.3 동독 선거직후 서독 재외공관에 훈령을 하달, 동독 공관원과 인간적인 접촉을 갖고, 상호 협력하라고 지시

마. 동독 주재 외국공관 처리

- o 동독과 더불어 베를린에는 1개의 공관만 허용
 - 본 주재 대사관의 베를린 사무소 또는 영사관으로 변경

바. 통독의 대외채무 및 채권 처리

- '90.7.1(화폐·경제·사회통합 발효시)까지 서독 및 제3국에 대해 통독이 지니고 있던 채권과 채무는 통독시까지 계속 유효한 경우 연방재무장관의 지시와 감독하에 청산됨.
 - 1990년 7월 2일 현재 구동독의 채권과 채무는 모두 DM으로 환산할때 채권액은 74억 DM, 채무액을 386억 DM 이었음.
 - 총 채권액중 40억 DM은 국가별 내역이 밝혀졌으며, 34억 DM은 구동독 대외무역회사(KOKO)가 갖고 있던 채권으로 아직 국가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채무는 대외무역회사의 경우 신탁청을 통해, 은행채무는 독일수출입은행(DABA)를 통해 변제되고 있으나, 은행들이 거래비밀을 이유로 국별 채무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 통독이후 체결될 각 당사자국과의 채무 및 채권이전 협정 체결시에는 구동독의 조약·협정처리에 있어서 적용한 통일조약 12조의 기본원칙이 적용됨.
 - DM으로의 환산비율이 2:1로 책정되어 채권과 채무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재무성은 차액 보상기금을 조성하여 그 차액을 보상해 줄 방침임.
 - 해당 채권은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한 재무성의 지시로 신탁청에 의해 신탁관리되거나 연방재산으로 이양됨.
- 통독이 회원국으로 있던 국제기구나 다자간 조약기구 특히 과거 COMECON에 대해서 지고 있던 채권과 채무는 통독이후 특별관리 대상이 됨.
 - 구 COMECON 국가들과의 대외경제관계는 참가국들의 시장경제질서로의 개혁과정과 해당국가들의 이해관계를 고려, EC와 긴밀히 협의하여 계속 발전시켜 나갈.

1-5. 과거청산

가. 구동독 정권하의 피해자에 대한 복권·보상문제

- 지난 40년동안 공산정권 하에서 자행되었던 불법청산작업에 있어서는 정치적 이유로 인해 구동독 정권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 즉 '정치적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Rechtsbehelfe)가 주요과제로 부각되는 바, 법적구제의 대상으로 거론된 구동독 정치적 피해자 유형은 다음과 같음.
 -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 및 인권에 반하여 소추되었거나 형사상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헌법상 복권의 대상) 및 법률의 중대한 위반 등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파기의 대상)
 - 구동독 관청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행정법상 복권의 대상)
 - 구동독 기업의 결정으로 인하여 직업상 불이익을 받은 자(직업상 복권의 대상)
- 피해자 법적구제를 위한 입법추진 경위
 - 90.3.18 자유선거를 통해 집권한 구동독 민주정부는 파기대상자와 관련하여 90.6.29 구동독 형사소송법상 파기규정을 개정하고, 복권 대상자와 관련하여 90.9.6 복권법을 제정, 동년 9.18 발효
 - 통일작업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정치적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 문제는 통일독일에 이관, 이의 실시를 위해 양독간 교섭 진행
 - 양독간 교섭결과 90.9.6 제정된 복권법중 형법상 복권에 관한 규정과 90.6.29 개정된 구동독 형사소송법중 파기규정을 기초로 새로운 법적 구제제도를 보충하여 90.8.31 통일조약 및 부속의정서와 90.9.18 추가 협정에 의한 법적 구제제도 마련

- 통일조약에 따른 법적 구제제도는 통독교섭과정에서의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서독 법체계와의 조화문제를 포함하여 법규상 많은 부족한 점이 있어, 새로운 불법청산법 제정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과도적 입법 체제로 출발
- 이의 보완을 목적으로 통일독일에서는 형법상 복권 및 파기를 규율하는 불법청산법의 제정작업 진행, 그 결과 92.9.25 '독일사회주의통일당 불법청산을 위한 제1차 법률(das Erste Gesetz zur Bereinigung von SED-Unrecht)' 제정, 동년 11.4 발효
- 또한 연방정부는 93.2 기존법률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직업상의 복권 및 행정처분에 대한 복권 등을 규율하기 위하여 '독일사회주의통일당 불법청산을 위한 제2차 법률 초안' 을 연방의회에 제출, 현재 입법작업 진행중

o 과도적 복권·파기제도에 의한 법적 구제

- 통일조약에 따른 복권·파기제도는 통일조약 발효후인 90.10.3부터 제1차 불법청산법 발효전인 92.11.3까지만 잠정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과도적 성격을 띤.
- 복권 및 파기간의 관계
 - 복권(Rehabilitierung)은 구동독 개혁정권이 불법정권에 의한 정치적 피해자의 법적 구제를 위하여 복권법의 제정작업에 착수하였던 90년 이후에 법적 개념으로 정립
 - 파기(kassation)는 소련 등 사회주의국가의 법제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정의의 실현과 사법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최초로 입안된 것으로 구동독 형사소송법상 파기규정에서 비롯하였으나, 90.6 이후 법적 구제수단으로 변용

- 복권과 파기제도 간에는 절차의 대상, 요건, 불복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모두 구동독 정권의 사법적 불법의 심사와 제거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제도임.

- 복권의 대상

- 형사상 유죄판결이나 압수 및 수색 등 그 밖의 형사소추처분 또는 국가보위부나 내무부와 같은 비사법적 기관에 의해 개시된 수사절차로 인한 피해자
- 법치국가에 반하는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명령으로 인한 피해자

- 복권청구의 요건

- 49.10.7~90.6.30 기간중 내려진 형사상 유죄판결
-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의 행사로 인한 형사상 유죄판결
- 복권법 제3조 제2항에 명기된 구동독 형법규정 및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인한 유죄판결
 - 평화적 시위·집회를 통해 구두나 문서로 정치적 항의 표명
 - 비폭력적 저항
- 제6차 개정법상의 첩보나 간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구동독지역 밖의 기관, 조직, 사람들과 접촉한 경우
 -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자의 경우 당사자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소추처분이나 법치국가에 반하거나 위헌적인 재판의 피해자일 것

- 복권청구가 배제되는 행위

- 90.6.29 제6차 개정형법 발효 이후에도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 폭력을 수반하거나 폭력의 위협하에 행해진 행위
- 전쟁의 도발이나 선전, 민족사회주의적이거나 군사적인 선전 및 민족이나 인종의 선동을 표현한 행위

- 복권의 신청
 - 신청권자는 당사자나 그의 법률상 대리인 또는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 검사도 신청 가능,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한 신청 불가
 - 복권신청은 원칙적으로 복권법 시행후 2년내인 92.9.18까지 제출, 검사의 복권신청에는 기간 제한 없음.
 - 복권신청은 조서로 진술하거나 서면을 제출, 그 이유 설시
 - 복권 및 파기신청의 동시제출 불허용

- 복권법원의 관할 및 재판
 - 복권법원의 관할
 - .. 제1심 형사소송절차나 수사절차가 행하여졌던 구역의 지구법원이 관할, 제1심에서 구동독 최고법원이 재판한 경우에도 지구법원이 관할
 - .. 베를린의 경우 베를린 지방법원이 지구법원 대신 재판
 - 복권법원의 재판
 - .. 복권신청에 대하여는 신속한 재판 요구, 신청인은 법원 요구에 따라 재판에 필요한 증거자료·증거방법 제출의무 부담
 - .. 검사는 직접 복권신청을 제출한 경우가 아닌 한 의견진술기회 보유, 제3자는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복권절차 참여
 - .. 원칙적으로 구두변론 없이 결정으로 재판
 - .. 복권요건은 성립되지 않지만 파기요건의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을 관할있는 파기법원으로 이송
 - 불복방법
 - .. 복권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제기 가능
 - .. 지구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주정부가 소재하는 지역의 지구법원 특별부가 재판하고, 베를린의 경우 베를린고등법원이 항고사건 재판

4-4. 주택문제

가. 동·서독 지역 주거실태 및 임대료 부담 현황

0 주택의 양적 현황

'90말 기준

구 분	독 일 전 체	서 독 지 역	동 독 지 역
총 주택수 (백만호)	33.6	26.6(79.2%)	7.0(20.8%)
주택보급률 (%)	99.1	97.4	106.1
주택수 / 100명	42.5	42.4	42.7

- 통일독일의 총 주택수는 3,360만호이며, 주택보급율은 99.1%로 매우 높음.
- 구동독지역의 주택은 총 700만호로, 양적인 측면에서의 주택보급율 및 100인당 주택수는 오히려 서독지역을 능가하고 있음.

0 주택의 질적수준

'90말 기준

구 분	서 독 지 역	동 독 지 역
- 호당 평균 주거면적(㎡)	86	64
- 1인당 평균 주거면적(㎡)	37	26
- 건축연도별 주택비율(%)		
· 1919년 이전	19	37
· 1919~1948	14	15
· 1949~1968	35	20
· 1968~1978	19	17
· 1979년 이후	13	11
- 주택내 신설 설비현황(%)		
· 목욕탕, 샤워시설 있음	99	80
· 실내화장실 있음	98	73
· 상·하수도 시설 있음	93	73
· 정화조 있음	89	58

출처 : 연방정치교육센터,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P.768

- 파기신청 및 관할
 - 파기신청권자는 가급적 서면형식으로 사실 및 법적 측면에서 이유를 실시하여 권한있는 사법기관에 파기신청 제출
 - 파기신청은 재판의 특정된 일부로 제한할 수 있고, 파기신청의 확대나 철회는 모두 공판이 진행중인 한 최종진술시까지 가능
 - 파기신청의 관할
 - 지구법원이 항상 직무관할을 가지고 동베를린의 경우 베를린 지방법원이 관할
 - 지구법원이 상소심으로서 그 기초가 된 형사소송절차와 관계가 있거나, 지구법원의 제1심 재판이 파기신청의 대상인 경우 주내의 다른 지구법원이 재판

- 파기준비와 파기절차
 - 파기법원의 파기절차의 준비단계로서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 및 그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의 파기신청은 의견개진을 구하기 위하여 검찰에 송달할 의무 부담
 - 또한 파기법원의 공판 참여권의 보장을 위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 그의 변호인,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소년의 부모나 그 밖의 친권자에 대해 공판기일을 통지할 의무 부담
 - 파기법원의 불복이 제기된 판결에 관한 서면상의 모든 절차적 증거와 그 형사절차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다른기관의 수사증거 등을 조사하고 채택할 권한 보유

- 파기재판
 - 파기신청에 대해서는 공판절차에서의 변론을 통한 판결로 재판함이 원칙이나 변론없이 결정으로 재판 가능
 - 파기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복이 제기된 확정력이 발생한 재판은 취소·변경되거나 환송·이송됨.

- 파기절차에서는 보다 불리한 형사책임에 관한 처분이나 보다 무거운 유죄선고 불가
- 파기법원은 취소된 판결이 이전에 공시되었던 경우 무죄판결의 공시를 선고하고, 무죄선고로 취소된 판결에 근거한 구동독 형벌등록부상의 기록으로써 서독 연방중앙등록부에 등록된 기록 말소
- 파기절차의 결과 취소되거나 변경된 판결이 공동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경우 이러한 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판결 취소 또는 변경

보 상

- 구동독 사법기관에서 행해진 형사상 유죄판결, 보안처분, 부수처분, 자유박탈적이거나 일시적인 형사소추 처분의 결과에 대한 보상의 요건, 종류 및 정도에 대하여는 구동독 형사소송법 제369조 이하의 보상규정 적용
- 파기시 보상금부는 형법상 복권의 경우에 인정되는 범위 초과 금지

0 제1차 불법청산법에 의한 법적 규제

제1차 불법청산법의 특징

- 통일조약에 따른 복권법 및 파기규정은 동독교섭과정에서의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통일조약 발효이후 서독법 체계와의 조화문제를 포함하여 법규상 흠결 및 불명확성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적 흠결의 보정을 위해 새로운 법률제정 불가피
- 종전까지 정치적 피해자의 법적구제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던 파기절차를 폐지, 단일의 복권절차에 흡수·통합
- 복권에 따른 보상문제가 더욱 절실하다는 현실에 비추어 피해자의 보상문제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는 한편, 피해자의 유족을 위한 원호 제공

- 통일조약에 따른 복권·파기절차의 실시와 관련하여 준용하도록 한 여러 관련법규의 조문을 단일의 불법청산법에 의해 개정함으로써 관련법규간의 통일 지향
- 현재 계류중인 복권·파기절차에 대해 '제1차 불법청산법' 적용
- 제1차 불법청산법에 의한 복권
 - 복권대상 확대
 - .. 45.5.8부터 90.10.2까지 구동독내에서 자유법치 국가질서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형사재판을 받은 자와 반법치국가적 치료감호 시설에의 수용명령을 받은 자로 규정
 - 복권의 효과
 - .. 정치적 소추에 이용된 재판 또는 범죄사실과 현저한 불균형을 이룬 재판은 취소되며, 동 재판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그 집행 중지
 - .. 취소된 재판에 근거한 구동독 형벌등록부상의 기록은 연방중앙 등록부에 기재되지 아니하고, 기재된 것은 말소
 - .. 복권된 자는 불법적 자유박탈에 대한 금전보상 수령
 - 복권재판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통일조약에 따른 복권법 규정에 기초
- 제1차 불법청산법에 의한 보상 및 원호
 - 복권의 일차적 목적이 당사자의 정치적·도덕적 명예회복에 있지만, 피해자단체의 조사결과 정치적 피해자의 70% 정도가 65세 이상의 연로자로서 구금에 따른 후유증을 겪고 있어, 복권에 따른 보상문제가 더욱 현안으로 대두
 - 금전보상액의 상향 조정
 - .. 일시적 금전보상과 관련,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구금된 1월에 대하여 300 DM 지급

- 89.11.9까지 구동독지역에 거주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구금된 1월에 대하여 250 DM의 추가보상금 지급
- 특히 고령이나 근로능력의 결여로 인한 생활무능력자에 대해서는 과거 정치적 구금자 후원재단의 지원아래 구금된 1월에 대해 다시 150 DM까지 원조급부 지급
- 피해자의 유족을 위한 원호제도의 실시, 연방원호법 준용

0 행정법상 및 직업상 피해자 법적 구제

- 현재 법무성이 '93.2 국회에 제출한 제2차 불법행위 청산법은 제1차 불법행위 청산법에서 재정적 이유 등으로 인해 제외된 불법적인 행정행위로 재산상 손실을 당한 경우, 체제에 저항하다가 직업상 받은 처벌에 대한 법적인 구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불법적인 행정행위의 대표적인 경우는 내독간 국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강제이주 조치로 재산상 손실을 받은 경우임.
 - 체제 반대자에 대한 직업상 차별은 직장에서 감등, 직업교육 방해, 승진기회 박탈, SED·FDJ·FDGB 등으로부터 축출, 서방과의 편지왕래 금지, 교수직 박탈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음.
 - 피해자들은 피해자의 고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형사상 처벌과 같은 정도의 피해라고 광범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피해자측의 피해입증과정이 복잡하고 재정상 많은 부담이 예상되어, 실제보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임.
- 행정법상의 복권 및 급부
 - 동 법안에 의하면 중대한 불법조치가 정치적 소추에 기여하였거나 구체적 사건에서 자의적 행위였음이 입증된 경우 및 이러한 조치의 결과 현재도 심각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불법조치를 취소하고 보상토록 제안

- 재산가치가 몰수된 경우 재산법 또는 보상법에 의한 반환이나 보상, 건강을 손상당한 경우 연방원호법에 의한 원호급부 제안

- 직업상의 복권 및 급부

- 동 법안에 의하면 정치적 소추를 이유로 직장 또는 직업관련 교육에서 현저하게 권리를 침해받았던 자는 연금의 산정시 이러한 불이익에 대한 조정을 받도록 제안
- 조정급부의 대상을 직업관련 교육에서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로 제한한 것은 정치적 이유로 인한 학교의 징계나 고등교육의 불허 등은 복권 신청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의미
- 정치적 소추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소년의 경우 직업상 훈련, 재교육 및 교육에 있어 우선적 배려를 하도록 제안

o 법적 구제절차 관련 기록열람 및 정보청구권

- 기록열람 및 정보청구권 보장의 필요성

- 복권·파기 등 법적구제 신청시 그 근거를 제시할 것이 요구되는 바,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 자신 및 그 유족에게 피해자가 당한 형사절차 등과 관련된 기록에 접근할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법적구제의 실효성 확보
- 정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공식적인 형사기록 이외에 구동독 국가보위부 문서 등 비사법적 기관의 관련문서에 대한 열람 필요

- 기록열람 및 정보청구권

- 구동독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나 그 유족이 복권이나 파기신청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서독형사소송법 제147조에 따라 변호인을 통하여 관련 형사기록 열람 가능
- 복권 및 파기신청인은 구동독의 형법등록부를 인도받은 연방중앙 등록부에 대해 관련정보 청구 가능

· 법적 구제절차의 수행을 위해 구동독 국가보위부(Stasi)의 개인관련 자료가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에게 이에 관한 열람 및 정보청구권 인정

· 91.12.20 제정된 ‘구동독 국가보위부 문서에 관한 법률(Stasi-Unterlagen-Gesetz)’ 제3장에서는 국가보위부 문서의 이용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

- 피해자 대표들은 물질적 보상에 앞서 우선 자신들이 실질적으로는 죄가 없었고, 단지 분단상황하에서 정치적 동기로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명예회복을 요청함에 따라, 연방하원은 '92.6.17 이들의 개인적인 희생이 분단극복과 통일에 기여했다는 요지의 명예부여 선언을 함.

나. 구체제 청산을 위한 가해자들의 처벌

- 구체제하에서 반법치국가적으로 행해진 정치적 폭행사태에 대해서는 구체적 증거가 확보되는대로 형사소추중임.
 - 구동독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범죄행위는 동독 중앙정부 소재지인 베를린 주검찰에서, 지방단위에서 행해진 범죄는 각 주정부 검찰이 담당
 - 각 주중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아 가장 빨리 사법체계를 확립한 베를린주에서는 고등검찰청이 “정권적 범죄행위” 조사부(Arbeitsgruppe der Regierungskriminalitaet : 연방지원인원 60여명 포함, 총 150명 근무)를 설치, 구동독 고위간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음.
 - 호네커가 지난 3월 소련으로 탈출한 이후 베를린주 검찰은 밀케 전 국가보위부(Stasi) 부장 등 5명의 고위인사를 베를린장벽에서 국경탈출자에 대한 ‘공동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함.
 - 이들 5명은 '74.5.3 당시 Honecker가 의장으로 있던 국가안보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동 회의에 참가하여 국경 탈출자에 대해서 사격명령(Schiessbefehl)을 구체화한 결정에 동의한 혐의를 받고 있음.

- 전동독 공산당 서기장 호네커는 고르바초프 실각후 '91.12 러시아 정부가 모스크바를 떠날 것을 요구하자, 모스크바 주재 칠레 대사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가 '92.7.29 독일로 강제 송환되어, 베를린 Moabit 형무소에 수감되고 재판이 열렸으나, 건강악화로 재판진행이 불가, '93.1.12 석방됨(칠레 체류중).

- 독일검찰은 공동살인 및 살인교사죄('61년 베를린장벽 구축이후 49건 총 200명 이상의 사상자 발생)를 적용, 정치적인 재판이 아닌 '법률에 의거한 공정한 재판'에 회부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법적인 청산보다 정치적·역사적 청산에 맡겨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음.

- 이들 구동독 공산당 지도부에 대한 소송은 피고인들이 74년 회의에서 사격명령을 구체화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검찰관들이 국경탈출 사망자들의 소송사건과 국가안보위원회 결정사실과의 법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국경상에서의 사살행위가 그당시로 볼때 형사처벌의 대상이였는가 라는 점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음.

- '93.9 전동독 수상 슈토프, 국방장관 케슬러 등 3명에 대한 장벽사살 관련 재판에서는 유죄판결(징역 4년 6개월~7년 6개월)이 내려졌으나, 이들은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처분을 받고 풀려남.

- 한편, 베를린 지방법원은 92.1.20 베를린장벽 탈출자를 사살한 4명의 구동독 국경수비대원에 대해 유죄판결(2명은 무죄)을 내림.

- 판결 이유에서 국가의 법률이 공공연히 불법적 성격을 띠고 있을때 이에 대한 복종은 유죄라고 밝힘.

-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생명에 관한 인간의 권리는 전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자연법적인 정의가 실정법적인 법적 안정성보다 훨씬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탈출자 사살 관련해 병사는 투옥된 반면, 명령을 내린 지도자들은
이유야 어떻든 석방되어 법적인 불공평성 문제 대두

- 테러조직인 적군파 (RAF)에 대한 방조·지원 혐의, 장벽사살관련,
바이마르공화국 시절 경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 Stasi 부장
밀케에 대한 재판은 건강상 이유로 재판이 지연되어 왔으나, '93.10.26
우선 1931.8 당시 2명의 경관 살해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6년형을
선고받음.

- 구서독을 대상으로 한 구동독 Stasi 간첩은 서독인, 동독인을 모두 합쳐
5,000~6,000명으로 추산되며, '92년말 현재 이중 3,500여건을 수사
했으며, 그중 150여건이 기소되었으나, 이들에 대한 처벌은 법적용상
논란을 일으키며 진행중임.

· 검찰측은 형식적으로는 같은 스파이활동이었지만 통일된 독일연방
공화국이 과거 서독의 정체성(Identitaet)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서독 스파이들은 서독정부의 비호하에 활동을 한 반면,
동독 스파이들은 당시 서독의 내적·외적인 안보를 해할 목적으로
위해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격적인' (offensiv) 동독스파이 활동과,
'방어적인' (defensiv) 서독스파이(BND) 활동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반면, 변호인측은 스파이활동은 양방국가간 활동으로 오래전부터
통용되던 관행이었으며, 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부터는
동독의 국가성이 광범위하게 국제적으로 인정되었음을 감안하면,
동독이란 특수한 상황이지만 과거 서독의 법을 적용, 이를 소급해서
처벌하는 것은 기본법 3조의 평등권 조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함.

- 연방대법원은 '91.5 Stasi 대외정찰총국(HVA) 소속 국장 Schuett에 대한 항소심에서 국가반역행위 방조죄(서독형법 적용)를 적용한 바이에른주 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며, 변호인측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으나, 베를린 주법원은 전 HVA 총국장 Grossmann에 대한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최종입장 결정시까지 유보하고 있음.
- 한편, 92.9.24 연방검찰청은 33년간 Stasi 대외정찰총국장을 역임하며 대서독 스파이 활동을 지휘한 마르쿠스 볼프를 12명의 대서독 스파이 조정을 통한 간첩활동 등 국가모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함.
 - .. '93.12.6 뒤셀도르프 주 고등법원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6년 징역을 선고했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형무소에 수감되지는 않았음.
 - .. 볼프의 유죄인정 부분은 분단시 특히 서독체제에 위협을 가했다고 판단되는 서독수상실 침투 간첩 기음, NATO 침투 간첩 루프, BND 침투 간첩 스플러에 대해 간첩활동을 지시하고 지휘한 국가 모반 공범죄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밝힘.
- 현재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인 처벌문제는 통일조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조직적으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를 총체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행위가 저질러졌던 당시의 일반형법을 적용하여 각 개별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음.
- 과거 동독의 체제가 상이한 가치와 법률에 근거하고 있었고 동독 체제가 서독의 법치국가적 기준으로부터 전적으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불법' (Un-Rechts)을 규정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고

- 또한, 형법은 현 법적질서에 대한 반사회적인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그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정권과 체제유지를 위해 저질러진 집단적인 범죄의 경우 개별화하여야만 범죄구성 요건이 성립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연방정부는 구동독 공산당 불법행위에 대한 공소 소멸시효 연장법을 마련함. ('93.9.29)

- 구동독 시절에 소추되지 않았던 SED 불법행위의 소멸시효를 연장해서라도 과거를 청산, 법치국가적 기틀을 마련할 방침임.
- 1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법행위의 시효는 95년말까지, 징역 1~5년 정도의 범법행위는 97년말까지 연장
- 연장 이유는 이들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가 신설주내 사법체계 구축의 미비와 구동독 지도자 재판 등 중대한 사건처리 때문에 진행되지 못했고, 한편으로 Stasi 문서 처리 작업을 통해 앞으로 많은 범죄행위와 피해자가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임.

○ 연방하원에 SED 독재체제 잔재청산 특별위원회(Enquete-Kommission) 설치 ('93.3.12), 공청회 개최중

- 구 성 : 국회의원 32명, 관계전문가 11명 등 총 43명
- 임 무 : 구동독 체제의 정치적·역사적 평가 및 청산작업
 - 구동독 억압체제에 대한 조사와 책임소재 규명
 - 체제반대자에 대한 탄압 및 자의적인 권력행사 사례 조사
 - 내독관계 및 국제적인 상황 평가
 - 반체제 운동, '89년 평화혁명, 독일통일 문제 조명
- '94말까지 최종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예정

2. 군사분야 통합

가. 군사통합 주요과정

- 통독에 대비한 병력감축 및 군비축소 노력
 - 서독, 의무복무기간 연장실시 계획 연기('89.6.5)
 - 서독, 연방군 병력감축 계획 발표('89.11.24)
 - 동독, 동독군 의무복무기간 단축 결정(18 - 12개월)('90.1.4)
 - 동독, 동독인민군 대폭 감축 시사('90.4.20)
 - 서독, 복무기간 15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90.7.4)
 - 양독, 동독군 병력수 확정('94까지 37만명)('90.8.31)

- 동독 인민군의 와해
 - 베를린장벽 개방 및 동독주민 대규모 이주(89년 34만 탈출 및 이주)('89.11.9)
 - 동독, 인민군의 해체 위기 동향 발표('90.3.5)
 - '89.11월 양독 국경 개방이후 병역 기피

- 군사교류 확대
 - 서독, 동독군에 연방군 활용방안 발표('90.3.22)
 - 동독 인민군의 3년 미만 근무한 지원병
 - 동·서독군간 상호 친선방문 및 교류 실시 결정('90.5.7)
 - 동독군 장교(280명), 연방군 장교학교 과정 최초 참여

- 군사통합 준비
 - 동독 인민군 5만여명 연방군 편입계획 발표('90.8.3)
 - 동부지역 사령관 임명(서독 육군중장 J. Schoenbohn)
 - 서독 연방군 일부부대 동독 파견('90.8.28)
 - 동독의 감축 및 국방부의 임무를 인수
 - 양독, “ 동독 인민군의 법적 지위와 급료관계 ” 발표

- 서독, 베를린에 통독연방군 주둔계획 발표('90.8.29)
- 통일조약 서명 : 통독군 병력수 총 37만명 유지('90.8.31)
- 서독, 동독 인민군 재교육 실시 계획 발표('90.9.10)
- 독일통일, 동·서독군 통합('90.10.3)
 - 양독 국방장관, 동독 인민군 명령권 인수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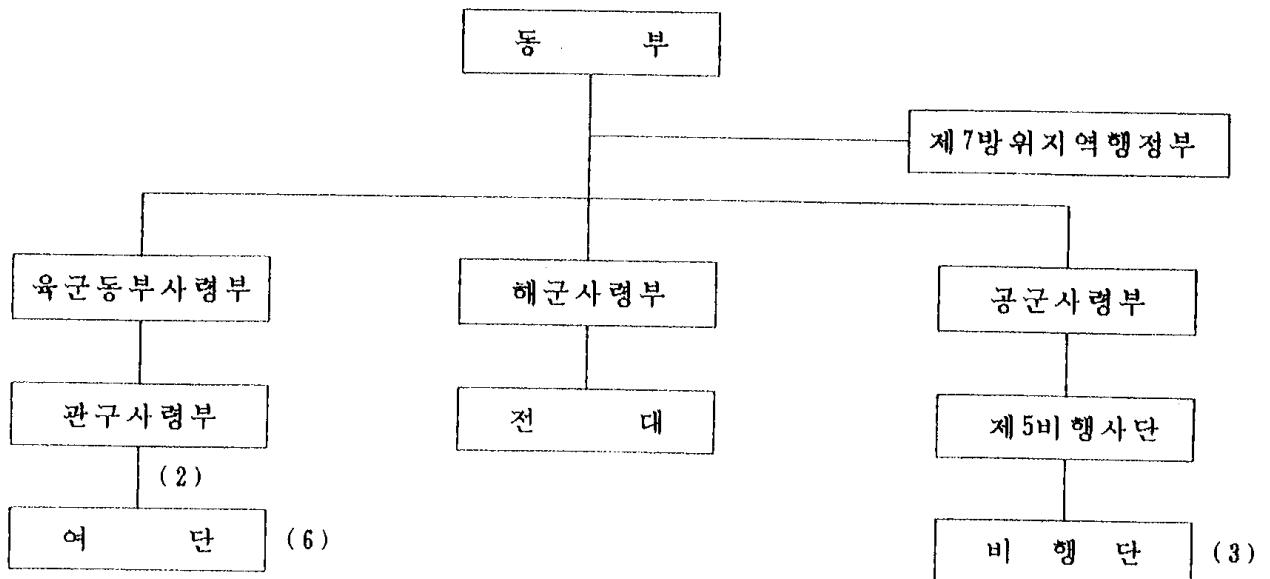
나. 편 성

0 구동독군의 연방군 편입

- '90.8.25 구동독지역에 서독연방군 동부사령부를 설치
- '90.10.3부로 동독인민군의 지휘권 인수, 동부사령부에 예속 전환 국경수비대 해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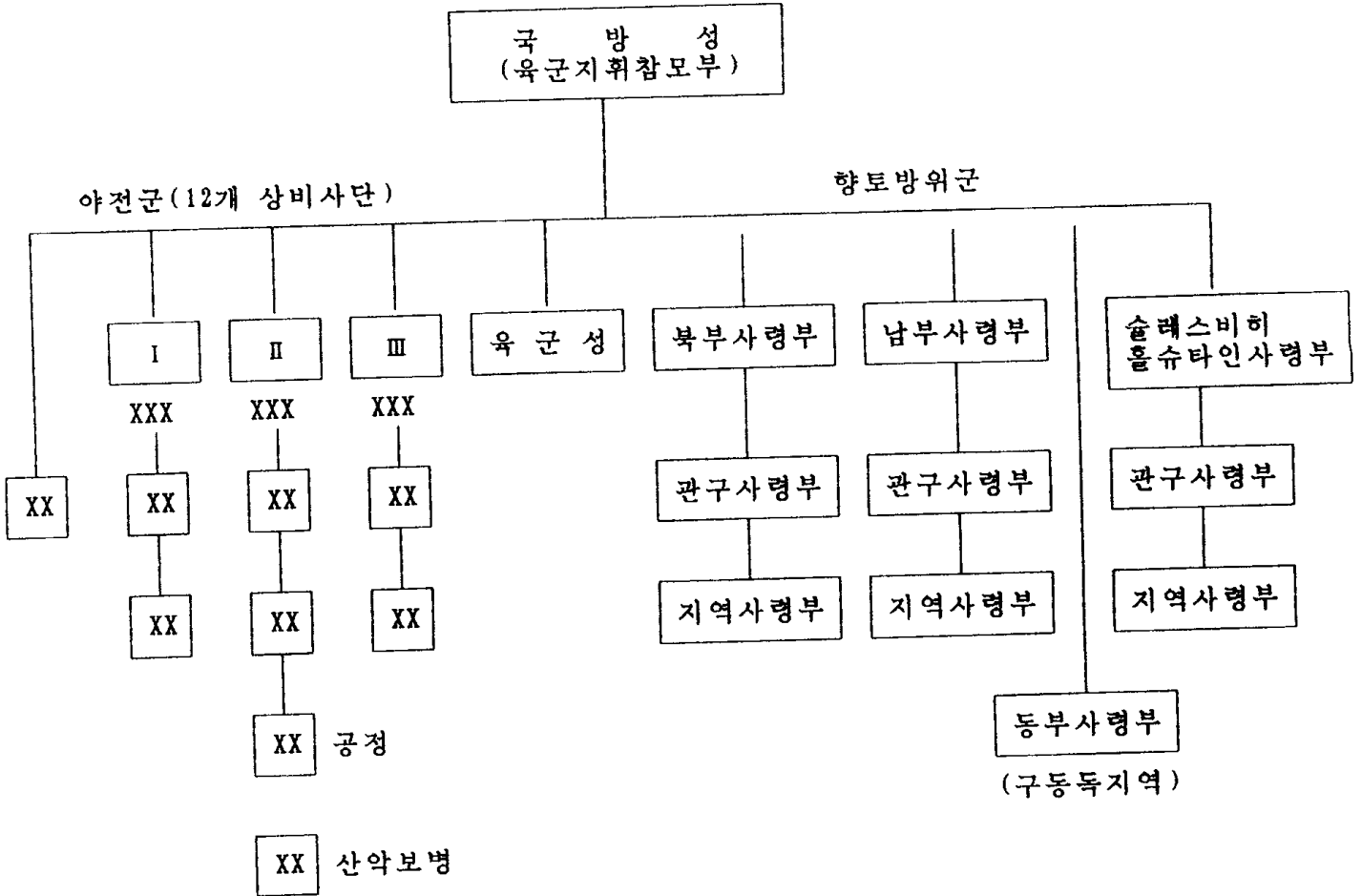
0 독일 연방군 동부사령부 설치

- 임 무
 - 동·서독 군사통합 과도기에 전 동독지역 군행정 관할
 - 구동독 인민군 해체 및 개편(감축, 개혁, 조직)
 - 구동독 인민군 사용장비, 탄약, 시설 등 관리 및 평가
 - 주독 소련군의 증계 및 철수 지원
- 지휘체계(과도기 잠정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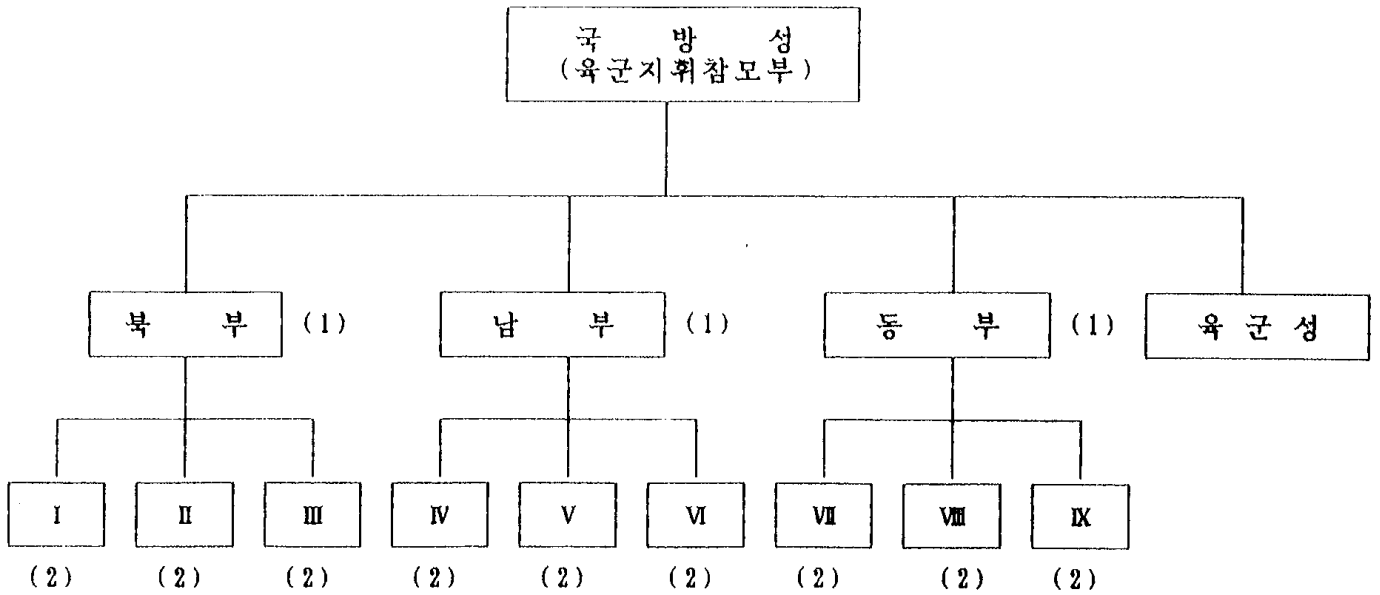
○ 육 군

- 통독전 군구조



* 제5군 구조개편시 해체대상 부대 : 3,1 공정, 2,12 사단, 3군단 및
향토방위군 관구급 이상 사령부

0 통독후 군구조



(1) 야전군의 군단과 전구사령부가 통합된 군단급 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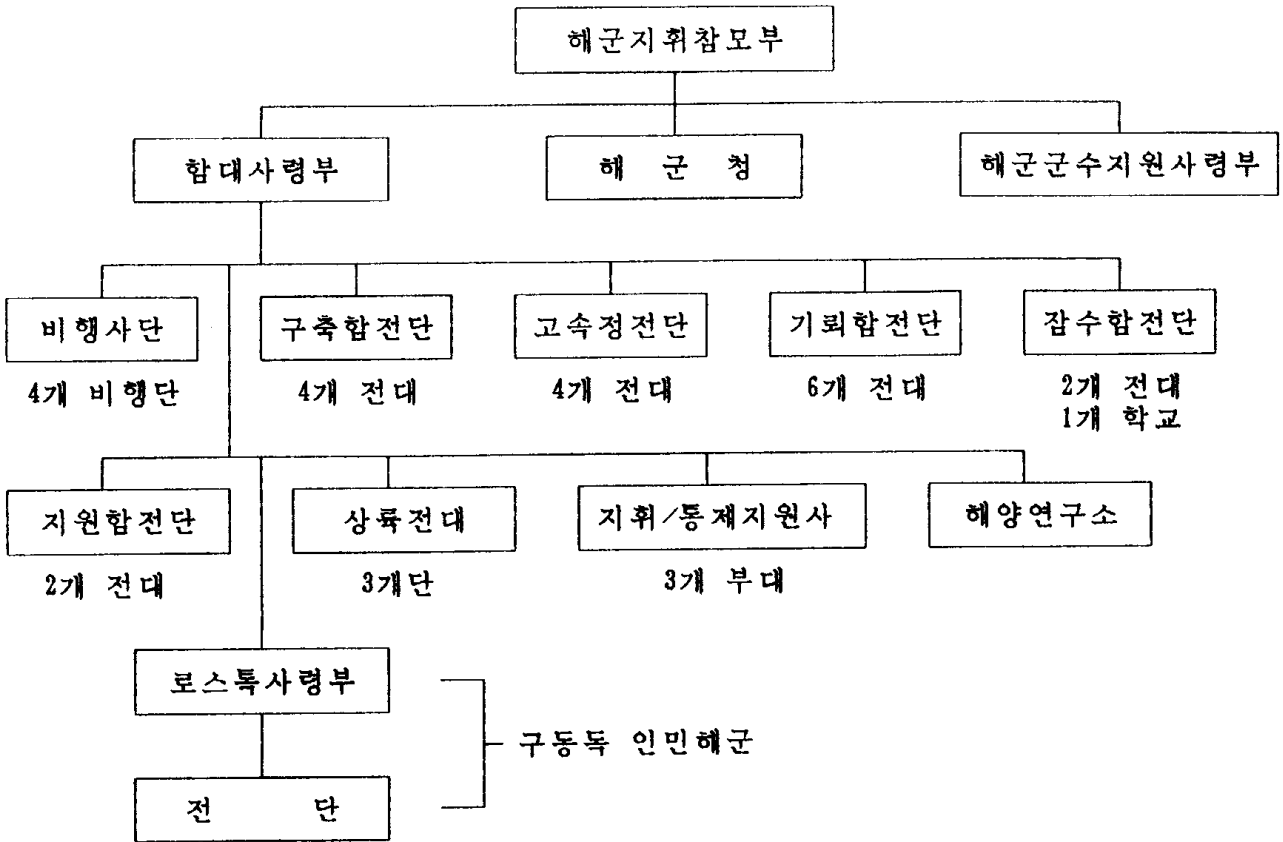
(2) 야전군의 사단과 관구사령부가 통합된 사단급 제대

0 해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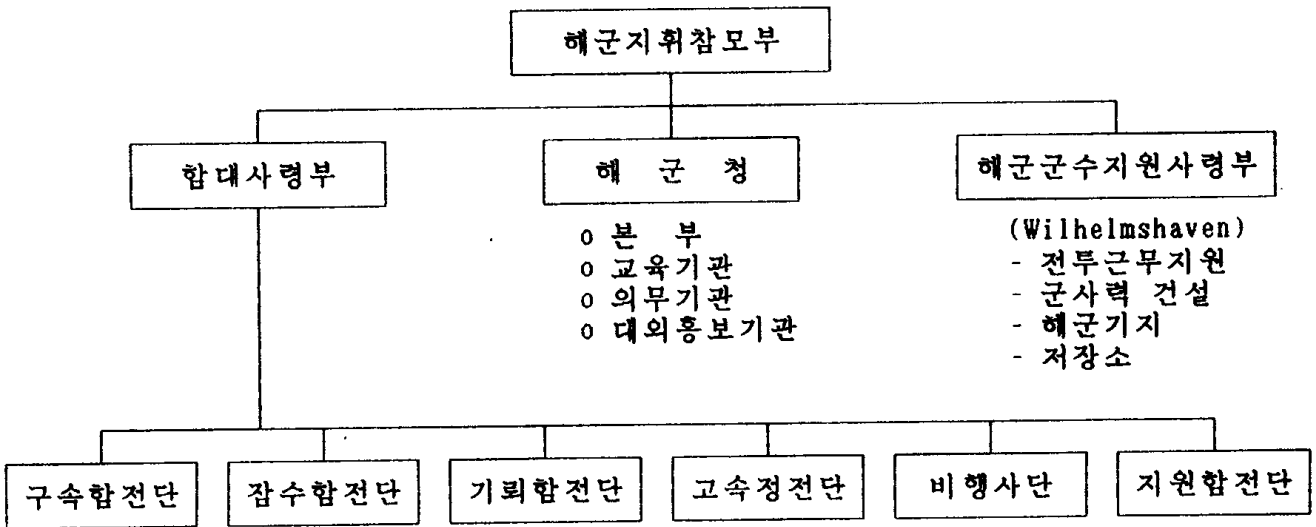
- 개 요

- 통독후 “군구조 2005년” 계획을 수립, 미래환경에 대처
- 적의 침공으로부터 독일영해의 방위임무는 불변
- 동맹국의 일원으로 위기의 관리와 극복에 기여해야하는 제2의 임무 추가
- 제한사항
 - .. 병 력 : 32,200명
 - .. 2005년까지 해상전력의 약 50%, 항공기의 35% 감축, 특히 전투함, 기뢰설치 또는 제거함의 50% 감축(구동독 인민군 장비 우선적 폐기)

통독전 군구조



통독후 군구조 ('94.12.31까지 개편)



○ 총 10개 전대, 2개 비행단, 3개 통신전대 운용 예정

○ 공 군

- 개 요

· 미래 공군의 역할과 과업

- .. 최단시간 경고하 분쟁의 억제 및 위기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
- .. 증대된 독일의 국제안보에 있어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력한
공군력으로 뒷받침
- .. 통일로 인해 확대된 영토에 적합하도록 개편 융통성 있는 군으로
육성

- 상황 및 여건

· 고려사항

· 제한사항

○ 연방군 : 37만명
○ 공 군 : 82,400명
(94.12.31까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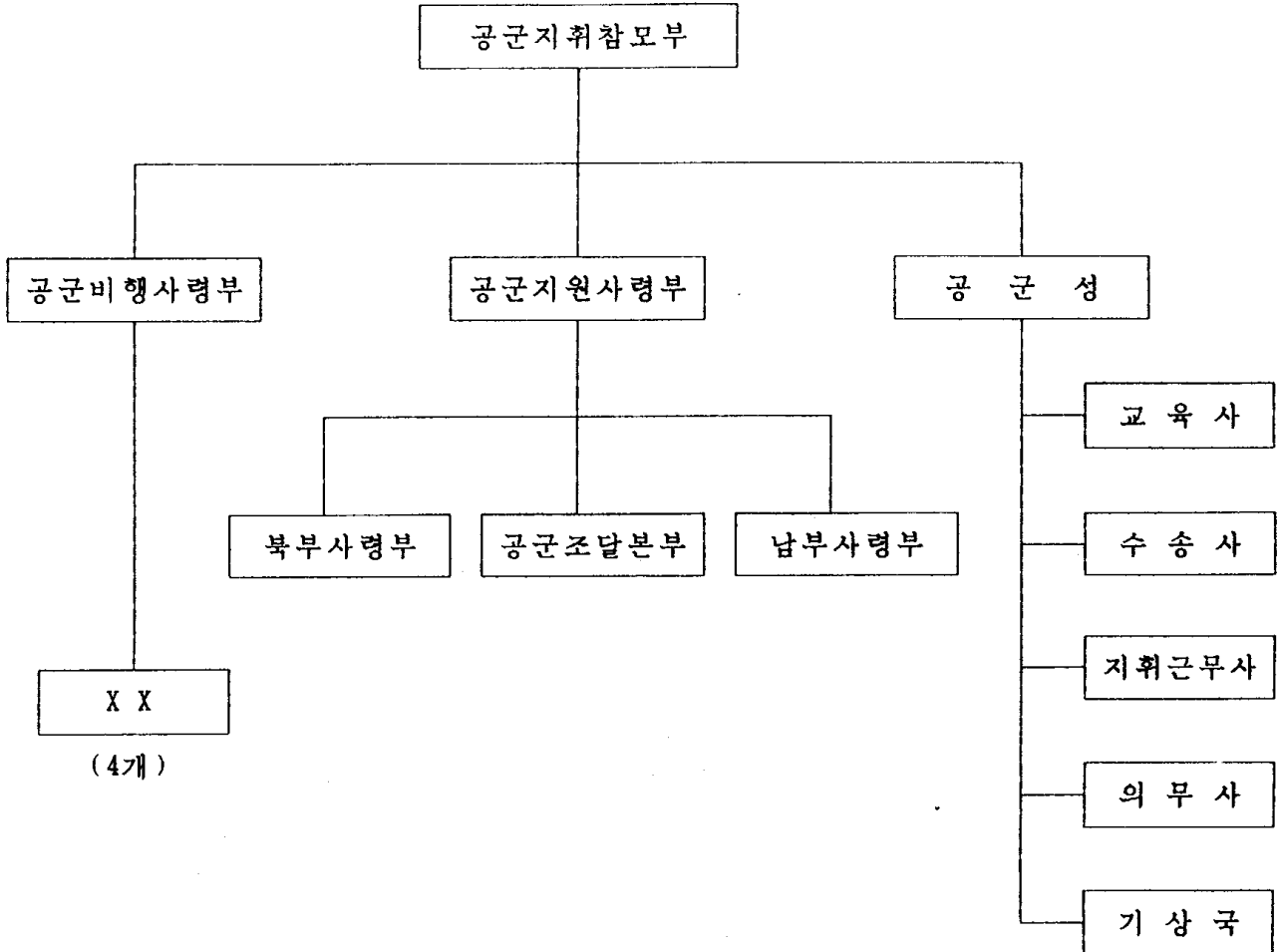
○ 안보적 환경변화
○ 조약국의견해
○ 공군의 임무 및 과업
○ 인력운용(질적·양적)
○ 가용시간
○ 실현가능성
○ 예 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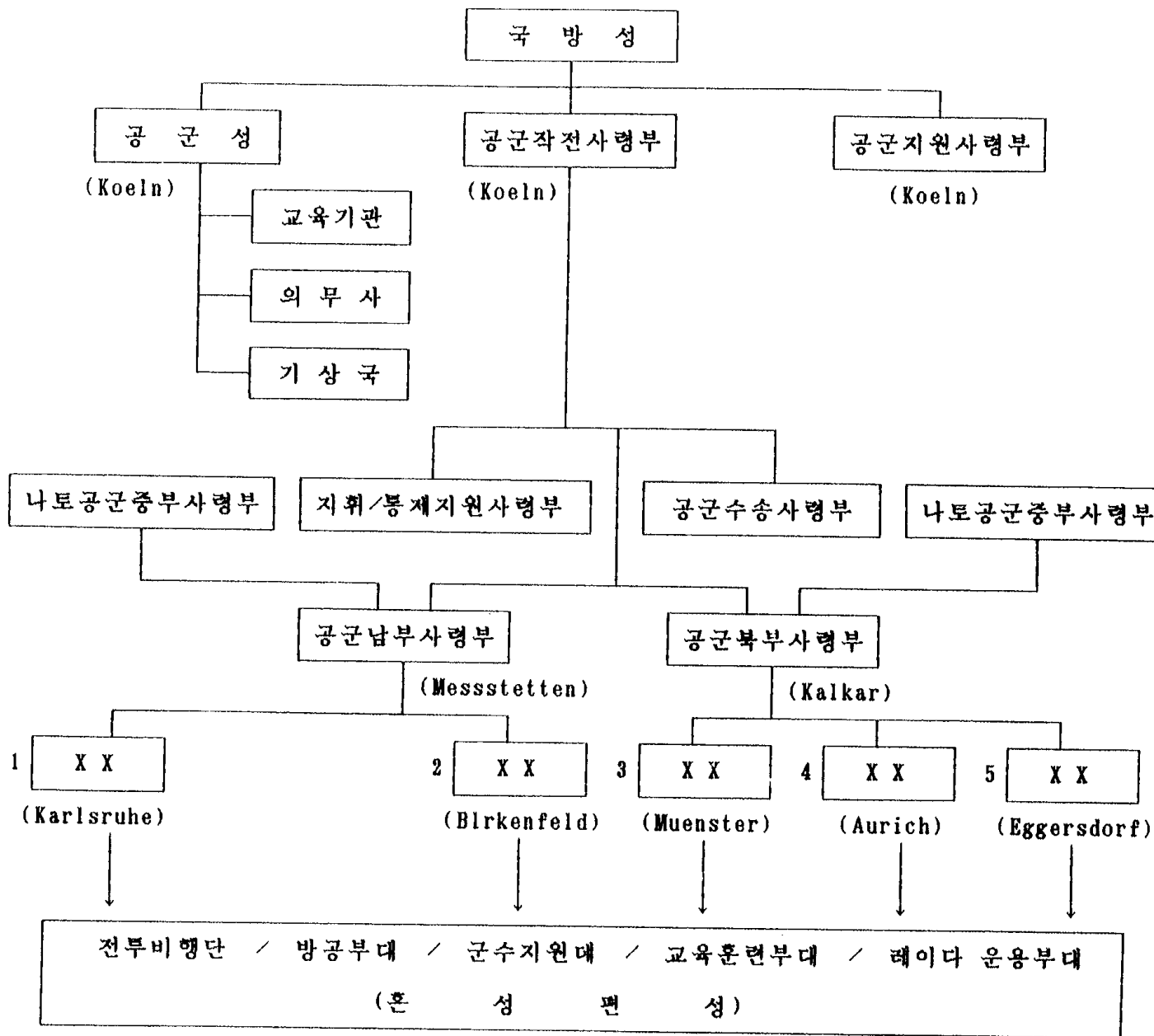
· 목 표

융통성 있는 공군
(Runde Luft-Waffe)

통독전 군구조



- 통독후 군구조



* 공군 군수지원사령부

- 군수지원과 군사력 건설에 관한 중앙기관
- 과거 각 비행사단별로 있었던 공군 전투근무 지원 사령부를 통합

0 병력 운영계획

구 분	구서독군	'90.12 현재 (인수 동독군)	'94년 병력	장기운영병력
총인원(명)	488,000	524,900 (88,000)	370,000	370,000
육 군	340,000	359,300 (57,300)	255,400	260,000
해 군	110,000	120,700 (22,700)	82,400	83,800
공 군	38,000	44,900 (8,700)	32,200	26,200

※ 국방 인원중 민간인 군속과 예비군은 별도

0 제한사항(인력구조 모델 370, PSM 370)

분 류	육 군	공 군	해 군	계
장기복무자	132,025	57,775	24,200	214,000
단기복무자	119,375	24,025	7,600	151,000
훈련장 관리요원	4,000	600	400	5,000
계	255,400	82,400	32,200	370,000
비 율 (%)	69	22	9	100

다. 장 비

o 구서독군 주요장비 현황

육 군	해 군	공 군
전 차 : 4,227대	잠 수 함 : 24척	전 투 기 : 486대
장 갑 차 : 6,201대	구 축 함 : 7척	정 찰 기 : 60대
야 포 : 2,488문	고속공격함 : 38척	헬 기 : 96대
대전차포 : 3,363대	소 해 정 : 57척	수 송 기 : 162대
헬 기 : 697대	전 투 기 : 123대	
	무장헬기 : 12대	

o 구동독군 인수장비

- 현 황

육 군	해 군	공 군
전 차 : 3,250대	전 투 함 : 19척	전 투 기 : 275대 (MIG-29기 : 24대)
장 갑 차 : 6,400대	경 비 정 : 38척	헬 기 : 140대
포병화기 : 2,500문	기 퇴 정 : 42척	수 송 기 : 32대
SA계열 미사일 : 300기	지 원 함 : 15척	미 사 일 : 205기
중단거리 미사일 : 60기	헬 기 : 12대	기타 훈련기
총 기 류 : 약 170만정	기타 선박	

- CFE 협정에 의거 전차, 전투기, 대포, 함정, 미사일 등 5대 무기체계에 대한 NATO 16개국의 무기감축협정에 따라, MIG-29기(성능검사에서 우수비행기로 평가되었고, 상당한 부속품 재고량이 있어서 10~15년 사용 예정)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장비를 폐기 또는 판매 계획
- 구동독 인민군 보유 탄약 27만톤 인수, 해체실험과 함께 대다수를 폐기할 계획이며, 구매자가 나타날 것에 대비 항공기와 선박을 운행
- 탄약 폐기에 10~15년 소요, 막대한 비용 소모

o CFE 협정(1990.11.19)에 따른 주요장비 보유 상한선

전 차	4,166대
장 갑 차	3,446대
야 포	2,705대
전 투 기	900대
무 장 헬 기	306대

라. 시 설

o 개 요

- 구동독 당시 존재했던 60개의 훈련소를 12개만 사용하게 되며, 당시 소련군 및 동독군 650,000명이 사용했던 370,000 ha 면적의 훈련장은 향후 50,000명의 연방군이 50,000 ha 정도만 사용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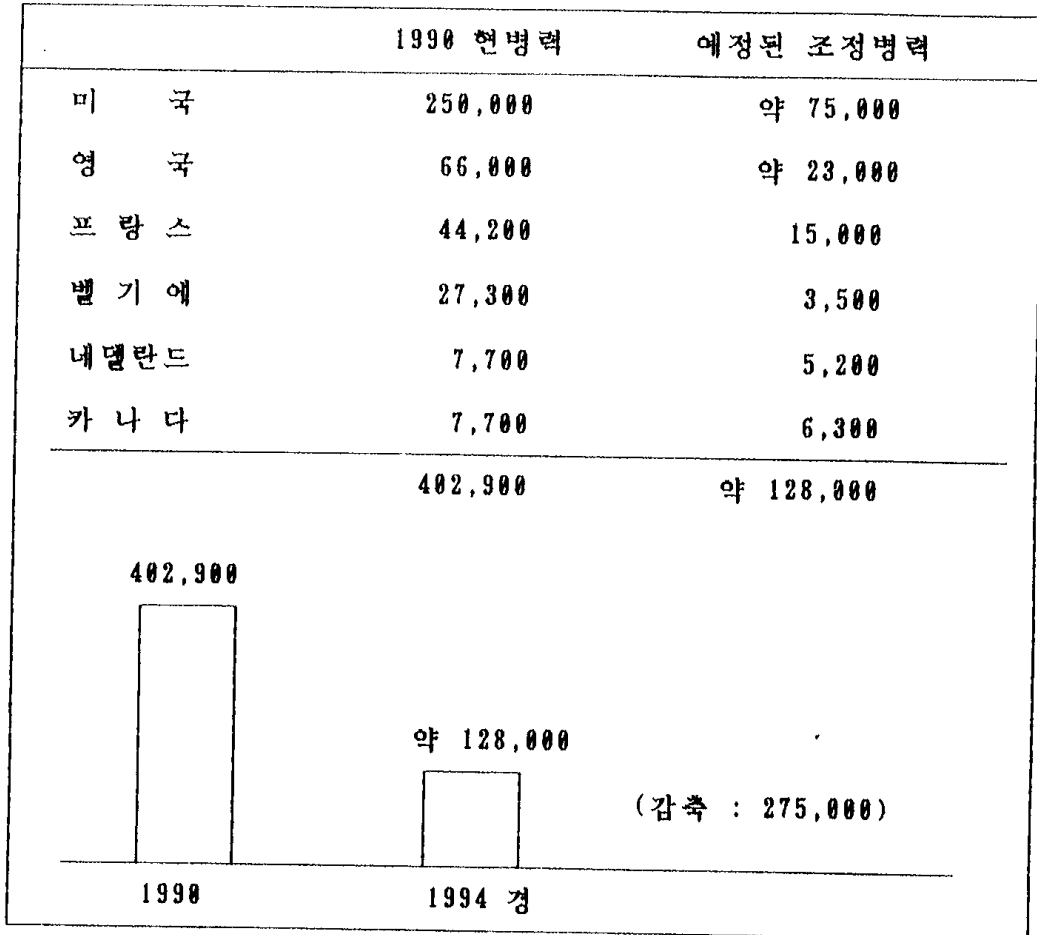
o 동부독일 군사훈련소 현황

구동독지역 훈련소 상황	현 재 면 적	향 후 면 적
Altengrabow	9,600 ha	8,000 ha
Jaegerbrueck	6,400 ha	6,000 ha
Jueterbog	10,400 ha	9,400 ha
Klietz	12,000 ha	10,000 ha
Koenigsbruck	7,700 ha	4,000 ha
Lehnin	7,000 ha	6,000 ha
Lieberose	15,000 ha	12,000 ha
Luebtheen	6,000 ha	5,000 ha
Magdeburg	23,200 ha	20,000 ha
Nochten	20,500 ha	10,000 ha
Ohrdruf	4,800 ha	3,500 ha
Wittstock	14,200 ha	11,000 ha
Wuensdorf	6,200 ha	6,200 ha

마. 외국군 주둔 및 철수

0 주둔 나토군

단위 : 명



- 불탄서군은 최초 전면 철수가 예정되었으나,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독·불 혼성편성군단 창설계획에 따라 1개사단이 계속 주둔할 것으로 추측됨.
- 독·불 혼성군단은 사령부만 창설되고, 예하사단은 각국의 기존군단에 예속된 상태에서 작전 지휘권만 유사시 이전될 계획임.

0 주독 소련군

- 통독당시 소련인은 군인 34만명과 민간인 21만 등 총 55만명 이었으며, 소련군이 점령하고 있던 병영·훈련장 등의 부동산 가치는 1,000억 DM으로 추정
 - '93년 말까지 약 90%가 철수하며, 나머지는 예정보다 4개월 빠른 '94.8.31 까지 철수를 완료할 계획임.
 - 잔류 소련군의 탈영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바, 소련군대의 기강 해이와 독일의 경제·사회적 매력 때문에 귀향을 거부하고 현재도 250명의 소련군이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고 있음.
- 0 통독과 더불어 동독인민군이 보유하고 있던 군사기밀 서류 2만 6천건이 독일연방군에 의해 인수되었는데 다수의 바르샤바조약기구, 군사활동에 관한 서류가 포함되어 있음.

바. 제기된 문제점

- 0 과거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던 분단상태의 의식을 극복하고 “하나의 군대”로서 공동체의식을 갖도록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
- 구동독 인민군중 50세 이상과 대령이상의 현역들은 모두 전역시켰기 때문에 구체제와 관련된 주요 권력기반은 제거되었다고 볼수 있음.
 - 근무환경(특히 내무반, 위생시설, 취사장 등 군시설), 보수, 의료혜택, 전·퇴역금 등의 사회보장제도상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존재
 - 군인도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서독수준의 70%에 해당하는 봉급(점차 생산성의 향상에 따라 격차를 줄어갈 계획이지만)을 받고 있는 바, 직업군인이 아닌 의무병에 대해서는 점차 격차를 해소할 방침임.
 - 잔류 구동독 인민군들중 5천명의 장교와 3천명의 하사관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체제하의 민주군대에 적응하도록 2주에 걸친 교육과정을 이미 이수케 하였음.

3. 경제분야 통합

3-1. 구동독지역 경제재건

3-1-1. 구동독 산업의 붕괴

- 40여년간 부실운영 되어온 동독경제는 화폐통합 이후 새로운 가격체계 및 생산방식 도입 등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더욱 침체상태로 빠짐.
 - GDP 규모면(1991년도 가격 기준)에서 1990년 하반기 1,052억 DM에서 1991년 상·하반기에 각각 850억 DM 및 959억 DM으로 감소(표 3-2 참조)
 - 1990년 12월 산업생산량은 1989년 평균 생산량의 46% 정도로 격감함.
 - 제조업 분야에서 '92년 4/4분기 전체생산량이 '90년 2/4분기의 3/1수준으로 감소
 - 그러나 건설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통독이후 꾸준히 성장을 보이고 있음(표 3-1 참조).
- 이러한 통합초기의 산업붕괴의 원인을 대별하면 다음과 같음.
 - 구동독의 낮은 기술수준과 노후화 되고 현대화 되지 못한 시설·장비로 인해 동독제품의 질이 서구제품에 비해 현격히 떨어져 이들과의 경쟁을 이길 수 없었음.
 - 산업 전분야에 걸쳐서 경쟁력 있는 업종이 거의 없는 상태였음.
 - 더구나 보다 엄격한 환경기준의 적용으로 상당수 산업시설의 가동이 불가능해 졌음.
 - 화폐통합시 1:1 교환비율에 의한 임금의 과대평가(약 300%)와 화폐통합후 노동생산성과 연계시키기 보다는 서독수준으로의 균평화를 목표로한 과도한 임금상승으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됨.

구동독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및 생산성(1990~1992)

단위 : DM/시간당

	1990		1991		1992
	상 반 기	하 반 기	상 반 기	하 반 기	상 반 기
임 금 ①	10.86	12.22	16.04	22.72	21.11
생산성 ②	19.16	18.66	17.81	20.39	19.18

① 노동자 1인 기준 시간당 임금(전체임금을 총 노동자수로 나눈 액수)

② 국내총생산(GDP)을 총 노동시간으로 나눈 액수

출처 : 독일경제연구소(DIW) 1992년 9월 24일자 보고서

- 동독소비자 및 생산자들이 서구제품을 선호함으로써 동독산 소비재와 투자재에 대한 수요가 격감하여 기업들이 심각한 판매부진을 겪게됨.
- 구동독 대외무역의 70%를 차지하는 COMECON 국가들의 경기침체와 화폐 통합에 따른 동독수출품의 가격인상으로 동구판매시장을 상실함.
- 생산수단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관계의 미확정, 각종 인·허가 및 증명서 발급 관련 행정체계 미흡, 사회간접자본 시설 미비 등으로 서방 기업의 투자가 부진함.
- 환경오염 잔재 처리 비용, 막대한 구채무 등으로 구동독 국유기업의 민영화 추진이 지연됨.

〈표 3-1〉 동부독일 산업분야별 총 부가가치 생산 · GDP(1990~1993)

(1991년도 가격 기준)

단위 : 십억 DM

	1990				1991				1992				1993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0 농림수산업	1.0	1.0	1.4	1.1	-1.0	-0.7	4.1	-0.1	-0.6	-0.5	3.5	0.5	-0.3
0 공업전체	34.9	34.7	24.4	22.5	16.7	16.9	17.3	18.4	18.2	19.6	20.2	21.1	18.9	21.9
- 에너지 · 광업	2.9	2.6	2.4	2.7	6.1	4.6	4.8	5.5	4.9	4.2	4.7	5.1	4.5	4.0
- 제조업	27.2	26.0	16.6	15.1	5.6	6.3	6.4	7.3	7.0	7.9	7.7	8.8	7.4	8.7
- 건설업	4.8	6.0	5.3	4.7	5.0	6.0	6.1	5.6	6.3	7.6	7.9	7.2	7.1	9.2
0 무역 및 교통	16.8	16.3	9.9	10.0	7.1	7.1	7.3	8.0	6.6	7.1	7.0	7.7	6.7	7.4
0 서비스업	12.4	12.1	12.6	12.1	10.4	11.4	11.9	12.3	12.6	13.5	13.9	13.6	13.1	13.9
0 국가 · 가계활동	14.4	14.3	14.1	12.6	12.2	11.4	11.4	11.4	11.4	11.5	11.6	11.7	11.6	11.7
0 전체경제 총 부가가치 생산	79.5	78.4	62.2	58.2	45.2	46.0	52.1	50.1	48.2	51.3	56.2	54.6	49.9	54.6
0 GDP (국내총생산)	80.4	79.6	60.2	56.8	42.0	42.9	49.0	47.0	44.7	48.2	53.3	52.3	46.9	51.8

※ 총 부가가치 생산에 판매세와 관세를 합해서 GDP가 됨.

출처 : 독일경제연구소(DIW) '92.9.24 및 '93.10.14일자 보고서

<표 3-2> 동부독일지역 반기별 국내총생산(GDP) 비교

	1991년 가격 기준	경상가격 기준	전체경제대비(%)
	(단위 : 10억 DM)		(경상가격 기준)
'90.하반기	105.2	95.2	7.0
'91.상반기	85.0	77.4	5.7
'91.하반기	95.9	103.5	7.1
'92.상반기	92.8	104.6	7.2
'92.하반기	105.6	128.9	8.2
'93.상반기	98.6	124.2	8.3
	(전년 동기 대비)		
'91.하반기	-8.8	8.7	0.1
'92.상반기	9.3	35.2	1.5
'92.하반기	10.1	24.5	1.1
'93.상반기	6.2	18.8	1.1

출처 : 연방통계청, 신설주 경제·사회 현황, 1993년 1월호

3-1-2. 적극적인 구동독 경제 재건 대책 추진

o 구동독 경기부양을 위한 공동대응책(Gemeinschaftswerk Aufschwung Ost)

마련('92.3.8)

-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많은 투자를 통해 구조적인 침체상태에 빠진 동독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 동독지역 경제, 사회 안정화 시책을 마련함.
 - 고용촉진대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노동자들의 자질향상 도모
 - 도로 및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 기존주택의 현대화·보수 및 도시정비
 - 환경분야 및 구동독 대학 지원
- 1991년과 1992년에 총 244억 DM을 구동독지역에 투입함.
 - 1993년도부터는 사업별로 해당부처 예산에 반영하여 계속 추진해 나갈.

<표 3-3> 구동독 경기부양 공동 대응책

(연방 분담액)

단위 : 백만 DM

	부 서	1991		1992
		현금지출	청산단위(VE)	현금지출
1. 지방자치단체 투자방안	연방 재무성	5,000	-	.
2. 고용 창출 조치(ABM)	연방 노동성	2,500	3,000	3,000
그 중:				
- 임금비용 보조		1,600	1,950	1,950
- 시설비용 보조		900	1,050	1,050
3. 교 통	연방 교통성	1,600	4,700	4,890
그 중:				
- 국 도		400	1,500	1,490
- 근거리 대중교통수단		400	400	400
- 지역도로 건설		800	1,200	1,400
- 독일 재국철도의 투자계획		-	1,600	1,600
4. 주택 및 도시건축 사업	연방 건설성	1,100	1,100	1,300**
그 중:				
- 현대화/보수		700	700	900**
- 지자체 소유 주택의 민영화		200	200	200
- 도시건축사업 장려		200	200	200
5. 사기업 투자 촉진	연방 재무성	388	-	650
그 중:				
- 투자보조금 연장		-	-	250
- 조세상의 특별 감가상각을 통한 투자보조금 축적		388	-	400

	부 서	1991		1992
		현금지출	청산단위(VE)	현금지출
6. '지역 경제 육성' 특별방안	연방 경제성	600	600	600
7. 구동독 조선업 지원	연방 경제성	130	700	600
8. 긴급환경보호방안	연방 환경성	412	400	400
9. 대 학		200	200	499.3
그 중:				
- 개혁 방안	연방 교육성	-	-	73.0
	연방과학연구성	-	-	226.3
- 보 수	연방 교육성	204	200	200
10. 정부 소유 건물 보수	연방 국방성	120	20	20
	연방 재무성	120	20	90
	연방 내무성	20	5	5
	연방 교통성	10	5	35
11. 교회 건축 사업	연방 내무성	-	-	80
12. 선박업체 보조	연방 교통성	-	-	25
13. 중앙난방시설 정비	연방 경제성	-	-	150
14. 경제연구단체 프로젝트 장려	연방 경제성	-	-	100
	연방과학연구성	-	-	80
15. 농·임업 관련 시설	연방 농림성	-	-	4
16. 기타 조치				
그 중:				
Frankfurt/Oder 국경지역	연방 재무성	-	-	11.7
	연방 교통성	-	-	10
합 계		12,200*	10,750	12,200**

* 1991년도 추경 예산 포함

** 1992년도 추경 예산 포함

출처 : 연방수상실, Leistungsbilanz der Bundesregierung fuer die neuen Bundeslaender('93.4.30)

<표 3-4> 신설주를 위한 투자촉진 프로그램

판 단 기 준	투 자 보 조 금	특 수 감 가 상 각	지 역 촉 진 보 조 금
촉 진 대 상	마모성 유등 자본재의 구입/생산	마모성 고정자산의 구입/생산 유동자산의 구입/생산	마모성 고정자산의 구입/생산 및 유동자산의 구입/생산
촉진대상자(1)	a) 농업, 임업, 제조업, 제조업, 임업, 제조업, 농업, 임업, 전기, 자영업으로부터 수입이 있는 납세의무자 b) 은행, 보험회사, 상업, 전기, 가스업 제외 c) 수공업과 제조업의 중소기업	농업, 임업, 제조업, 자영업으로부터 수입이 있는 납세의무자	투자를 통해 지역내에서 추가적인 수입원천을 조성하는 기업체 (제1차적 효과)
촉진액	a) 8%(투자개시 : 1993.1.1이전 종료 : 1994.12.31까지) b) 8%(개시 : 1994.7.1부터 종료 : 1996.12.31까지) c) 5%(개시 : 1994.7.1부터 종료 : 1996.12.31까지) d) 20%(개시 : 1993.1.1부터 종료 : 1996.12.31까지) 최초의 100만 DM 투자에 대하여)	1996.12.31까지 투자후 5년 동안 50%(산입입지 안정범에 따라)	설비투자를 위한 구매비용 및 생산비용 최고 23% 확장투자를 위한 구매비용 및 생산비용 최고 20% 합리화투자를 위한 구매비용 및 생산비용 최고 15% 양질의 일자리인 경우 5%의 촉진 증액. 특히 실업률이 높은 지역일 경우, 또는 국가보조금을 감한 다 있음. EC 촉진 최고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증액시킴 (투자 장소에 따라 35%, 32%, 27%)

법적 신청 권한	있 음	있 음	없 음
납 세 의 무	없 음	—	있 음
신 청 절 차	소 득 세 신 고	소 득 세 신 고	경제촉진기관에 신청
촉 진 지 역	신설주, 부분적으로 서베를린	신설주, 부분적으로 서베를린	신설주(서베를린 제외), 지역적으로 중요하고 투자에 국한 의미가 있는 투자에 국한
촉진의 전제조건	투 자		일차리를 보장하는 투자
촉 진 의 방 법	소득세법 과세표준에서 제외		소득세법 과세표준에서 제외

(1) 촉진대상자를 a, b, c로 구분함.

출처 : Lichtblau, 1992 인용, iw-trends, 20/93. P.19

0 투자촉진대책 마련

- 특별감가상각, 투자보조금 지급 등 투자유인조치를 종래 1994년에서 1996년까지 연장 시행함으로써 개인투자 유치(표 3-4 참조)
 - 기계설비 구입 초년부터 5년간 50%의 특별감가상각 허용
 - 지역 장려금으로 주정부가 총 투자액의 23%에 해당하는 투자보조금을 지급
 - 투자용 기계설비 등 실물자산 매입시에는 '94.7.1 이전 투자시에는 투자액의 8%, '94.7.1 이후의 경우 5%에 해당하는 투자보조금 지급
- 투자촉진을 위한 관련 입법제정 및 정비
 - '기업사유화에 있어서 장애제거와 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91.3)
 - 미해결 재산의 원소유주 반환원칙을 유지하면서 투자촉진을 위한 중대한 예외조치를 규정
 - '제2차 재산법 개정법률' ('92.7) 제정을 통해 반환원칙에 대한 예외 확대
 - 투자 우선순위 법률 통해 반환청구 대상인 토지, 건물, 기업을 특별한 투자목적(고용유지 및 창출, 주거공간 창출,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권리자에게 보상을 하는 규정을 마련
 - 반환청구 신고기간을 '92.12.31까지 원칙적으로 제한
 - 타인 소유 토지에 주택 또는 영업·영농 목적의 건물과 시설을 건축한 경우 유예기간을 도입, 등 기간동안 토지에 대한 반환청구를 배제

0 신설주 지역에 대한 투자현황

- 구동독지역에 대한 자본재, 생산설비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를 포함한 민간 및 공공투자 총액은 '91년 845억 DM, '92년 1,128억 DM, '93년 1,352억 DM, '94년 1,500억 DM(예정)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음.
- 구동독지역에서의 주민 1인당 기업투자액이 1993년부터 서독수준을 초과함(서독대비 106%).
 - 공공투자는 '92년에 이미 서독대비 118.2%에 도달함.
- 투자 주체별로 보면 1992년의 경우 서독기업이 총 투자액의 31.3%로 가장 많이 투자함.

<표 3-5> 신설주내 분야별 투자동향

1993.4월 현재

분 야	투 자 (단위 10억 DM)		
	1991	1992	1993
0 경제분야 전체(1)	84.5	112.8	135.2
· 농·임업	1.5	1.5	2.0
· 제조업(2)	28.4	36.9	46.4
· 상 업	4.5	5.2	6.5
· 교통/통신 교환	15.7	22.0	24.0
· 서비스업(3)	20.4	28.2	34.3
· 국가/단체	14.0	19.0	22.0
- 전체기업	70.5	93.8	113.2
- 주택업체를 제외한 기업	58.0	75.8	89.7

- (1) ifo-Institut 추정 1991 및 1992년도 수치는 정부통계 기준수치를 약간 상회함.
 (2) 이는 에너지/상수, 광산, 가공업, 건설업 등을 포함하고 있음.
 (3) 부동산 소기업 포함.

출처 : 연방경제성, Ausgewahlte Wirtschaftsdaten zur Lage in den neuen Bundeslaendern('93.6.17)

<표 3-6> 서독대비 주민 1인당 개인설비투자 및 공공설비투자 동향(1)

	1991	1992	1993
총 투자	58.9	75.4	93
- 개인투자	55.1	70.1	88
· 기업(주택건설 제외)	63.7	81.5	106
· 주택건설업	34.8	45.9	54
- 공공투자	90.6	118.2	136

(1) 서독을 100으로 기준

출처 : 연방경제성, Ausgewahlte Wirtschaftsdaten zur Lage in den neuen Bundeslaendern('93.6.17)

<표 3-7> 투자주체별 구동독 투자비율(1992년)

투자주체	비율
서독기업	31.3 %
동독 및 외국기업	20.9 %
연방·주·자치단체	15.7 %
연방철도	11.3 %
개인투자가	11.3 %
연방통신공사	9.5 %

o 사회간접자본시설 구축 - 교통·통신

- '91.4 연방정부는 '독일통일 교통사업' 을 확정, 총 560억 DM을 투자하기로 함.

· 동·서독간 경제중심지를 연결하는 교통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긴급대책

- 중부유럽 교통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동구권 및 스칸디나비아 제국과의 국제교통망 연결
- 환경보호적 교통수단인 철도망의 신설 및 개량을 위해 총연장 2,145 km에 약 290억 DM 투입
- 북해 주요항구와 동독 공업단지와의 내륙수로 연결 등 수로개선에 40억 DM 투자
- 동·서독 연결 고속도로 건설, 북부독일 해안과 내륙연결망 건설 등 도로건설에 총 230억 DM 투자
 - .. 신설주 지역 연방 장거리 도로망의 약 1/3을 개축 또는 증축
 - .. 신설주 연방고속도로에 중앙분리대 및 비상전화 설치
- 독일전체 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연방예산의 약 57%를 동독지역에 투입

※ 연도별 연방의 신설주 교통개선 지원액

단위 : 억 DM

연 도	1990년후반	1991	1992	1993	'93~'97
지 원 액	56	96	137	132(1)	580(1)

(1)은 지원예정액

출처 : 연방공보처, '통독3주년 보고서'

- '93.12 연방각의는 독일철도 개혁방안 의결
 - '94.1.1부로 독일연방철도와 독일제국철도를 3개의 철도 주식회사와 1개의 특별재산으로 인수토록 함.
 - .. 약 700억 DM의 부채를 특별재산이 인수, 향후 30년 동안에 걸쳐 청산해 나감.
 - .. 연방정부가 주식의 100% 소유, 점차로 주식을 민영화해 나감.
- 통신분야 통합 추진
 - 시장지향적 사업체로의 전환, 통신시장 개방,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목표로 통신분야 통합을 추진함.

- 구동독의 체신관련 조직(통신총국, 우편서비스총국, 우편금융·재무 담당 총국)을 서독의 3개 공사에 편입하고, 체신분야 인력 4만명을 흡수함.
- 기술적 통합 추진
 - '91.7.1부로 동·서독 전화요금을 단일화 함.
 - 동·서독지역간 중계선 증설 : 동·서독 국제관문국 간의 중계선 증설(1단계), 서독 중앙교환국과 동독국제관문국 간의 중계선 증설(2단계), 동·서독 주교환국 간의 중계선 증설(3단계)
 - 동독내에 디지털 오버레이망 건설
 - '92.7 외국에서 동독으로 전화시 국번을 서독과 통일(49), '93.12까지 독일전역에 단일번호체계 완성
- 신설주에 세계 최신행 통신망 구축을 위해 1997년까지 총 600억 DM, 1993~2000년간(추가계획기간) 290억 DM을 투자하는 통신망 고도화 사업“ Telekom 2000” 을 추진함.
- 구동독의 통신수준을 구서독 수준으로 향상시킬 목적으로 1997년 까지 총 9백만 전화회선 설치

<표 3-8> 통신시설 개선 목표

구 분	'89년도 시설수	'97년까지 증가수	'97년도 총시설수
전화회선수	1,826,000	7,200,000	9,026,000
팩스밀리	2,000	360,000	362,000
데이터통신	4,000	96,000	100,000
Datex-P	0	49,000	49,000
텔레кс	17,700	6,000	23,700
비디오텍스	0	100,000	100,000
공중전화	21,000	68,000	89,000
이동통신(C-Net)	0	300,000	300,000
광대역 분산 통신망	0	2,200,000	2,200,000
GCA/GGA	3,300,000	400,000	3,700,000

- .. 2000년까지 총 900억 DM의 재원확보를 위해 민영화, 요금인상, 연방예산 지원, 공채발행 등의 방안 강구중
- .. 최신형 통신망을 운용할 전문기술인력 확보 및 교육·훈련문제 대두

0 국유기업의 사유화 추진

- 자유총선에 의해 구성된 인민의회가 제정한 신탁법(Treuhandgesetz)에 의거, '90.6.17 수상감독하의 공법기관으로 신탁청을 설립함.
 - 원래 신탁청은 '90.3.1 모드로 총리 시절 구동독 내각결정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그 당시는 사유화 보다는 인민공유기업(VEB)을 계속 유지하고자 했음.
 - 신탁청의 활동시한은 1994년말 까지이나, 그 이후에도 계약사항 준수여부 감독은 계속해 나갈 예정임.
- 신탁청은 신탁받은 국유재산의 신속한 사유화, 가능한한 다수 기업체의 경쟁력 조성을 통한 기존직장 안정화 및 새로운 고용창출, 경제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토지마련 등을 목적으로 함.
- 신탁청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임무를 수행함.
 - 신속한 사유화(매각)을 우선적으로 추진
 - .. 매각시 투자가와 희망자는 기업운영방안, 구매가격, 일자리 보장, 투자보장액을 제시해야 함.
 - .. 매각 협상시에는 초과인원 해고에 따르는 사회복지비용 문제, 기업 구부채 인수문제, 재산소유권 해결문제 등을 협의함.
 - 투자가가 없거나, 신속한 사유화는 불가능하나, 생존가능한 기업은 Management KG 합작회사로 설립, 서독출신 경영자를 책임자로 세워서(Management Buy-In) 매각이 가능하도록 정비함.

- 신탁청에 의한 정비보다는 기업가 자신에 의한 정비를 우선적으로 추진
- 회생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은 폐쇄함으로써 재원낭비를 방지
- '90.7.1~'93.10.31간 총 13,429개 기업을 사유화하여 1,105개 기업이 남아있으며, 청산중이거나 청산된 기업체 수는 3,125개임.
- 사유화를 통해 약 450억 DM의 수익을 올렸으며, 1,831억 DM의 투자 보장을 받았으며, 150만명의 일자리가 보장됨.
- 한편, 1994년 해체시까지 신탁청의 수익은 680억 DM, 지출은 3,430억 DM으로 약 2,750억 DM의 적자가 예상됨. 이는 구채무 변제기금에서 인수, 연방예산에서 상환해 나갈 계획임.

<표 3-9> 신탁청 사유화 실적('93.10.31 현재)

구	분	업 체 수
○ 신탁청 관리 기업체		13,331
○ 합병, 기업분할을 통한 해체 기업체		309
○ 신탁청 소유로 이전 기업체(임야 포함)		282
○ 신탁청 소유로 검토중인 기업체		83
○ 광산 소유권으로의 이전 기업체		412
○ 기타 단체 소유로 이전된 기업체		49
○ 사유화된 기업체		
- 완전 사유화		5,714
- 대부분 사유화		365
- 일부 사유화		6,938
○ (원주인에게) 재사유화된 기업체		
- 완전 재사유화		1,536

구분	업체수
○ 지방행정기관 이양 기업체	
- 완전 이양	261
○ 현 소유자에게 권리 인정	90
○ 청산기업체	
- 청산 진행중	3,053
- 청산 완료	72

※ 앞으로 사유화 되어야 할 기업수는 1,105개이며, 신탁청 관리 기업체 수는 총 13,331개로 증가. 사유화된 13,429개 기업체중 5,714개는 완전 사유화, 7,303개는 부분 사유화, 412개는 광산 소유권화됨.

○ 농업의 구조전환 추진

- 1990.7.1부로 구동독지역 농업을 EC 농업시장에 통합시킴.
 - 새로운 판로를 확보한 반면, EC 공동의 농업정책 조정과 UR 협상 등이 구동독지역 농업구조 개편에 불안정 요소로 작용
- 농업생산협동조합(LPG)의 구조 개편 추진
 - 1991.7.7 농업구조 조정법(Landwirtschafts-anpassungsgesetz)을 통과, 생산수단의 소유권 확정 및 농업생산협동조합 구조개편 추진
 - 농업생산협동조합은 1991년말까지 해산되어 협동조합, 개인자영농, 기업농(유한회사, 합자회사) 형태로 다시 등록됨.
 - 방대한 농경지와 목장의 규모가 축소되고, 법인체가 줄어드는 반면에 개별농과 협업농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표 3-10> 구동독지역 농업생산협동조합의 개편 현황(1992년 가을 현재)

형 태	개 수	총 농경지중 경작 비율 (%)	평균 영농규모 (ha)
0 자 연 인	19,073	28.4	78
- 개 별 농	17,820	18.4	54
· 자 영 농 (전 업 농)	14,138 (5,958)	17.9 (15.2)	67 (134)
· 원 예 농	2,561	0.1	2.6
· 기 타	1,121	0.3	12
- 협 업 농(1)	1,253	10.1	423
0 법 인 체	3,041	71.6	1,235
- 새로 등록된 협동조합	1,433	41.6	1,522
- 다른 법인 형태(2)	1,608	30.0	980
전 체	22,114	100.0	237

(1) 민법상의 형업농업.

(2) 합자회사와 유한회사임.

- 구동독 전체 농경지의 85%를 차지하던 4,500여개의 협동조합중 75%가 협업농이나 조합 및 유한회사와 합자회사로 개편됨.
- 새로 설립되었거나 개편된 기업농의 규모는 서독지역 주보다 더 큼.
- 전업농의 평균 영농규모는 134 ha 이나,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임.
- 과대한 부채를 안고 있고, 생산성이 저조하며, 환경오염 잔재가 심각하여 인수자를 찾지 못한 농업생산협동조합은 정리됨.
- 농업 종사 인력은 '89년 85만명에서 '92년말 17만 4,000명으로 감소함(100 ha당 3.4명, 서독은 5.8명).

'91년말 농업생산협동조합의 해체에 이어, 현재 시장경제적 조건에 알맞는 기업경영적 적응과정과, 특히 가격경쟁력 있는 생산에로의 적응과정이 추진되고 있음. 적응상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농지소유권 관계의 미해결 문제와 농경기업의 구채무이며, 자영농가 정착을 위해서는 농민들에게 현대적인 영농기법, 시장경제에 대한 경험 등이 요구되고 있음.

- 농업지원 대책 추진

- 연방정부는 1990~1993년간 신설주 농업분야 시장적응 부담 경감용 긴급대책, 적응지원, 농업구조개편 등을 위해 총 145억 DM을 지원함.
- 1992년에는 농경기업 재개자를 위한 지원조건을 개선함.
 - .. 최고 23,500 DM의 착수금 지원(연령제한 55세)
 - .. 기업당 최고 400,000 DM까지 최고 이자 5%(열세지역 6%) 조건의 자본 융자
 - .. 건물과 농경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공공융자
 - ... 매 기업당 최고 160,000 DM의 농경기업 재개 융자(개별사안에 따라 최고 400,000 DM까지 가능)
 - ... 매 기업당 최고 50,000 DM의 현대화 융자(개별사안에 따라 최고 130,000 DM까지 가능)
 - ... 매 기업당 최고 50,000 DM의 녹지관련 동물사육에 대한 투자보조금
- 농업생산협동조합에서 개편된 법인이 경쟁력 있고 환경보호적인 기업체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92.6.1부로 투자시설 규모를 전일 노동자 1인에 대해 최고 143,000 DM, 매 기업당 최고 350만 DM까지로 확대
- 동구권 출신 이주민의 경우 공익과 관련된 개발대책(진입로 건설, 폐수처리 등)의 보조금으로 비용의 최고 25%까지(최고 100,000 DM) 지원함.

특히 다음과 같은 부자가 지원됨.

- .. 환경부담의 제거 또는 완화
- .. 노동생산성의 증가 및 생산비 절감
- .. 수확손실 및 저장손실의 절감
- .. 동물보호의 개선 및 식품위생 개선

- 농경지 사유화 추진

- 신탁청은 농경지 190만 ha를 소유하고 있음.
 - .. 이중 60만 ha는 주, 지방자치단체 또는 원 소유주에게 반환해야 하며, 1945~49년 사이에 토지개혁으로 몰수된 약 130만 ha는 사유화 되어야 함.
- 신설주의 농업의 구조적 변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유화는 3단계를 거쳐 진행되어야 함.
 - .. 농경지의 매각에는 사전에 일정한 임대기간(Verpachtungsphase)이 꼭 필요함. 왜냐하면 자기자본이 부족한 농경인은 우선 우수한 기술을 배운다음 적당한 농경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토지매입을 위한 지출은 최종적인 것이어야 하기 때문임.

제1단계 - 장기적 임대계약(Langfristige Verpachtung)

- .. 기업의 장기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통산 12년 단위로 농경지를 임대
- .. 임대료의 입찰가격이 동일할 경우 우선 순위는
 - ① 농경제개인(토지개혁 희생자, 과거의 자영농경인과 그 상속인) 및 '90.10.30 현재 해당지역 거주 농경신설인
 - ② 농업생산협동조합 승계 기업체
 - ③ 대변혁 이전에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던 농경 신설인
- .. 임대자는 원칙적으로 자영할 의무가 있으며, 제2단계에 참여할시 구매 우선권을 가짐.

신탁청 산하 농지의 임대현상(1993년 3월 31일 현재)

	계 약 건 수	면 적 총 계 - ha -
장기적 임대계획에 대한 전단계(1)로서의 경작 통보	8,300	1,265,000
단기적 임대계약 (1~2년간)	3,487	453,000
장기적 임대계약 (통상 12년간)	750	54,000

- .. 장기적 임대계약 체결시 다음과 같은 일련의 어려움이 있음.
 - ... 신탁청 소유 농지의 원소유권자에 의한 반환청구권(1949년 이후 국유화 된 것)
 - ...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산권 이양시 귀속여부의 불확정
 - ... 신탁청 산하 농지의 위치가 지적서투나 등기서투의 부재로 인하여 경계가 불확실하거나, 경계표식의 부재로 인하여 일목요연하지 않은 상태
 - ... 주정부 기관이나 토지매각·관리회사가 기업경영방안을 현실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태. 그 이유는 장부기록 결과가 정연하지 않고 기업경영자의 능력이 불확실하기 때문임.
- .. 미해결 재산관리청(Vermögensamt)이 반환신청 처리로 막중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토지매각·관리회사(BVVG)는 장기적 임대계약의 경우, 반환청구권자에게 유리하도록 특별해약권(ausserordentliches Kuendigungsrecht)을 마련함.
 - ... 동 해약권은 미해결 재산 관리청으로부터 반환청구권이 합법적인 것으로 확정될 경우, 적용되며, 이로써 장기적 임대계약 체결시 중요한 장애요인이 배제될 수 있으며, 임대의 속도가 더욱 가속될 수 있음.

제2단계 - 토지매입계획 및 촌락구성 계획

- 1995/96년 경부터 실시 예정
- 토지개혁 희생자는 토지매입 개혁과 촌락구성 계획에 의거 적법한 보상금으로 신탁청 산하 농지 또는 이에 들어설 건물을 우선 매입할 수 있음.
- 과거 소유 부동산이나 농지구입 가격이 보상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배려

제3단계 - 시가에 의한 매각

- 토지매입 계획과 촌락구성 계획에 의한 매각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아 있는 농경지는 시가로 매각될 수 있음.

3-1-3. 구동독지역 경제현황

- 구동독지역 경제는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볼때 1991년 하반기부터 회복국면에 들어섬.
 - '91년 -31.4% 경제성장율이, '92년 5.8%, '93년 5.5%(DIW 추정, 여타 경제5단체는 6.0%로 추정)에 달함.
 - 반기별 성장면에서도 '93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6.2% 성장을 보임.
 - 그러나 실질 GDP 성장은 주로 건설 및 서비스 분야의 성장에 의한 것이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은 계속 침체 상태임.
 - 산업부문별 생산량은 <표 3-1>에서 보듯이 '91년 2/4분기에 들어 통독후 처음으로 전부분에 걸쳐 증가함.

- '91년 1/4분기까지 감소하던 서비스업은 그 이후 꾸준히 생산증가를 보여 '92년 부터는 통일이전 수준을 초과하기 시작함.
 - .. 이는 통일이후 인적·물적 왕래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보험업, 요식업, 숙박업 등이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서비스업 다음으로 구조조정기의 침체상태에서 벗어나, 활성화된 분야는 건설업임.
 - .. 신설주와 지자단체로의 막대한 재정이전에 힘입은 공공기관의 발주증가('91년 5월의 경우 '90년 월평균치보다 2배 가량 증가)가 건설업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함.
- 특히, 통독후 구조전환 과정에서 가장 타격이 심했던 제조업 분야의 '93년 2/4분기 수주와 생산이 전년대비 각각 13.5%, 9.5% 증가함으로써 구동독 경제가 자체성장 역동성을 보이기 시작함.
 - .. 이는 구동독 기업들이 생산라인 재건에 진척을 보임에 따라 동독 소비자의 신설주 상품 소비가 늘어나고, 서독기업들의 동독제품 주문이 증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임.
 - .. 그러나 '93년 2/4분기 생산량은 아직도 통독당시의 1/2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 이는 구조적응 과정의 기업들이 과다인력, 높은 임금비용, 불안정한 매출, 시장진입난, 노후화된 설비, 투자재원 부족 등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임.
 - .. 건설분야로부터 수요가 많은 암석 및 토양 채굴·가공업, 철강 및 경금속, 구동독 시절부터 경쟁력을 갖고 있으면서 통일후 선전 광고의 덕을 보는 인쇄업 등은 생산증가를 보이거나, 구동독 산업의 핵심인 기계공업은 동구시장의 붕괴와 서방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로 진통을 겪고 있음.

- 구서독지역 대비 구동독지역의 취업자 1인당 생산성은 '91년 28.7%에서 '92년 39.4%로 증가함.
- 생산성 증가와 고용감소에도 불구하고 임금비용이 상승(임금과 생산성 격차가 서독을 100으로 할때 '91년 55.3%에서 '92년 60.3%로 증가)하여,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침.

※ 구동독지역 제조업 분야의 분기별 노동생산성 향상 추이
(1991년 1/4분기 = 100)

	1991			1992			
	2/4	3/4	4/4	1/4	2/4	3/4	4/4
제조업 전체	108.1	126.7	150.8	147.7	160.6	180.3	203.5

출처 : 연방통계청 DIW, DIW Wochenbericht 13/93.

- o 구동독 경제재건은 서독지역 경제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부진과 ('91~'92년 과도한 임금인상 및 독일마르크화 강제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전후 최악의 침체상태에 빠져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형편임.
- 서독지역 GDP는 '93년도 -1.5~-2.0% 성장에 이어 '94년도에는 0%~-1%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표 3-11> 1992년도 동·서독 경제규모 비교

구 분	독 일			서부독일 대비 신설주비율	전체독일 대비 신설주비율
	서 부	동 부	전 체		
1. 국민 총생산 (단위 10억 DM)	2,774.9	246.9	3,021.8	8.9	8.2
2. 국내 총수요 (단위 10억 DM)	2,582.3	431.3	3,013.6	16.7	14.3
3. 국내 총생산 (단위 10억 DM)	2,772.0	235.3	3,007.3	8.5	7.8
4. 인 구(백만)	64.8	15.7	80.5	24.2	19.5
5. 1인당 국민 총생산 (1/4)(DM)	42,823	15,727	37,538	36.7	.
6. 취업자(자국민) (1천명)	29,115	6,701	35,816	23.0	18.7
7. 취업자(국내) (1천명)	29,450	6,341	35,791	21.5	17.7
8. 자영업자 등 (1천명)	3,051	564	3,615	18.5	15.6
9. 1인당 생산성(3/7) (DM)	94,126	37,108	84,024	39.4	.
10. 명목임금 및 명목봉급 (자국민)(10억 DM)	1,223.6	184.8	1,408.4	15.1	13.1
11. 명목임금 및 명목봉급 (국내)(10억 DM)	1,235.6	170.9	1,406.6	13.8	12.2
12. 1인당 월평균 임금 (자국민)(DM)	3,912	2,509	3,645	64.1	.
13. 1인당 월평균 임금 국내(DM)	3,901	2,466	3,643	63.2	.
				(서부독일 대비 신설주비율)	
14. 임금-생산성 격차 (13/9) 서부독일 = 100	100	160.3	104.6	+60.3	.
15. 설비투자					
- 취업자 일인당 국내(DM)	20,248	17,174	19,703	84.8	.
- 취업인 일인당 국내(DM)	19,077	14,498	18,190	76.0	.

구 분	독 일			서부독일 대비 신설주비율	전체독일 대비 신설주비율
	서 부	동 부	전 체		
16. 개인당 임금비용(DM) 총명목임금및명목봉급 100 DM×국내총생산	44.58	72.64	46.77	+ 63.0	.
17. 가계 가치분 소득 (10억DM)	1,709.4	245.4	1,954.8	14.4	.
18. 개인 가계내 주민 1인(월별) 가치분 소득(DM)	2,198	1,303	2,024	59.3	.
추가사항 : 완전 고용상태를 기준으로 계산(1)					
19. (6) 취업자(자국민) (1천명)	29,045	6,511	35,556	22.4	18.3
20. (7) 취업자(국내) (1천명)	29,380	6,151	35,531	20.9	17.3
21. (9) 1인당 생산성 (3/20) (DM)	94,350	38,254	84,639	40.5	.
22. (12) 1인당 월평균 임금(자국민) (DM)	3,923	2,589	3,674	66.0	.
23. (13) 1인당 월평균 임금(국내) (DM)	3,911	2,550	3,673	65.2	.
24. (14) 임금-생산성 격차(21/19) 서부독일 = 100	100	160.8	104.7	+ 60.8	.
25. (25) 시설투자					
- 취업자(국내) (DM)	20,296	17,704	19,847	87.2	.
- 취업인(국내) (DM)	19,120	14,875	18,312	77.8	.

(1) 51%의 작업 결손율을 동반하는 37만명 동부독일 단축근로자 = 19만명의 취업자/종사자 감소 : 25%의 작업 결손율을 동반하는 28만 3천명의 서부독일 단축근로자 = 취업자/종사자 7만명 감소

출처 : 연방통계청, Ausgewahlte Wirtschaftsdaten zur Lage in den neuen Bundeslaendern('93.6.17)

<표 3-12> 동·서독 지역 주요 경제지표 비교

	구 서독 지역			구 동독 지역			독 일 전 체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G N P (십억DM)	2,631	2,775	2,832	195.4	246.9	292.5	2,826	3,022	3,125
경제성장율 (%)	3.7	1.5	-2.0	-31.4	6.8	5.5	0.6	2.0	-1.5
취업인구 (천명)	29,219	29,450	28,975	7,179	6,341	6,100	36,398	35,791	35,075
실업자 (천명)	1,689	1,808	2,300	913	1,170	1,250	2,602	2,978	3,550
실업율 (%)	5.5	5.8	7.5	10.9	14.9	16.5	6.7	7.7	9.2
소비자물가 상승율(%)	3.8	4.1	4.0	12.8	9.9	8.5	4.8	4.7	4.5

출처 : 독일경제연구소(DIW) 제공자료, 1993년은 추정치임.

3-2. 통독과 관련한 재정문제

3-2-1. 동독지역 재건에 필요한 재정지출수요 증가

서기 2,000년까지 통일비용 내역

단위 : DM

0 통일달성에 필수 불가결한 직접 경비	약 3,700억
- 신탁청 관리기업으로 인한 부담액	2,500억
- 동독의 대·내외 부채, 화폐통합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채무 차액 보전	1,000억
- 구동독 체제 희생자·복권 보상	157억
· 형사처벌자 보상 : 7억, 미반환 재산 보상 : 150억	
- 소련군 철수비용	130억
0 동독재건 및 생활수준 격차 해소 비용 (과거 서독지역의 못사는 주와 같은 수준으로 격상)	약 6,400억
- 환경정화시설 투자	2,000억
- 교통망 개선	1,270억
· 철도 480억, 도로 700억, 하운 80억, 공항 10억	
- 에너지산업 설비 현대화	1,000억
- 교육환경 격차 해소	700억
- 우편·통신분야 시설 투자	550억
- 주택분야 보수·유지, 현대화	500억
- 의료시설 확충	300억
- 농업구조 재편을 위한 지원금	70억
* 구동독지역의 실업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 적자분은 각 기금에서 각출금 요율 조정으로 지원	
0 구동독지역 노동자(750만 기준) 노동생산성을 서독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자본 현대화 또는 신규투자	약 1조
- '92년말 현재 구동독지역 생산성은 서독지역의 39.4% ('94년은 28.7%)	
총 계	약 2조

* 대사관 추정치(각종자료 참고 자체 작성)

- 통일독일의 재정정책조치의 장기적 목표는 구동·서독 지역간의 생활수준을 동질화하는 것임.
 - 구동독지역의 경제재건 및 생활수준 향상은 통일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또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드러남.
- 통독시부터 2000년까지 10년동안 소요되는 소위 통일비용은 약 2조 DM으로 추정됨.
 - 구동독 부채 인수 등 통일달성과 직접 관련된 비용 : 3,700억 DM(18%)
 - 그러나 기업사유화 비용 증대로 신탁청 부채는 '94년말까지 2,750억 DM으로 증가 예상
 - 몰수재산에 대한 보상액도 보상법률 수정안('93.11)에서 180억 DM으로 상향 조정
 -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 구동독 재건 비용 : 1조 6,400 DM(82%)

3-2-2. 신설주에 대한 재정이전

가. 구동독지역 주정부·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취약

- 동독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이 지역의 담세력을 제고함으로써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는 당초계획은 동독경제의 급속한 붕괴 및 이로 인한 실업자 증가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음.
- 교통·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환경오염 잔재 해소 및 사회보장 지출 등을 위한 공공분야의 재정지출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신설주 지역의 세입은 그만큼 증가하지 않아 재정난이 가중됨.

<표 3-13> 구동독 주 및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현황

단위 : 십억 DM

구 분	주 정 부				지 방 자 치 단 체			
	91	92	93	94	91	92	93	94
세 입	66.1	65.6	68.4	66.2	44.8	44.0	45.6	46.6
세 출	76.9	77.7	84.7	92.6	43.4	47.6	53.2	58.3
재정수지	-10.8	-12.1	-16.3	-26.4	1.4	-5.6	-7.6	-11.7
	(전년대비 증가율, %)							
세 입	-0.8	4.3	-3.2	-26.0	-1.8	3.6	2.2	-5.2
세 출	1.0	9.0	9.3	1.6	9.7	11.8	9.6	8.7

(1) '91년은 실제액, '92~'94년은 추정치임.

(2) 구동독지역의 재정수요에 대한 연방으로부터의 지출은 제외

출처 : 연방통계청, 연방재무성, DIW 추산

0 구동독지역의 세입부진 이유

- 구동독지역 기업의 도산으로 법인세 부문 세수부진
- 구서독지역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고 실업자가 급증하여 개인소득세 세수 부진
- 국유재산의 사유화 부진으로 재산세 부문 세수부진
- 세무행정체계의 미확립으로 세원포착 미흡

0 조세수입 현황(DIW 연구소 추정)

- '92년 구동독지역 각주는 구서독지역의 1/3, 지방자치단체는 1/5 수준
- '95년까지 구동독지역 경제재건으로 그 격차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나, 1/2 수준 유지 추정

주민 1인당 조세 징수액

단위 : DM

	'91	'92	'95(1)
구서독 지역주	3,300	3,500	4,300
구동독 지역주	1,150	1,300	2,100
구서독 지자체	1,300	1,374	1,650
구동독 지자체	150	277	800

(1) 추정치

출처 : DIW, Wochenbericht 24/1991, 30/1993.

나. 공공부문의 대동독지역 재정이전액

- 통독이후 매년 연방예산의 약 25%, GNP의 5%에 상당하는 자금이 구동독 지역으로 재정이전 되어옴.
- 연방수상실과 연방재무성이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연방예산, 사회보험기관 이전액, 독일통일기금, 채무청산기금을 포함한 대동독지역 공공분야 총 이전지출액은 '91년 1,423억 DM, '92년 1,673억 DM, '93년 1,899억 DM임.
 - 이 중 '92년도 연방예산 지출은 890억 DM (세부내역 : 표 3-15)
 - 사회보험분야 이전액 (일부 연방예산에서 지출)은 총 818억 DM
 - 연금보험기관 : 50억 DM
 - 연방고용청 이전액 (실업수당, 고용창출조치, 단축조업수당, 직업전환교육 등) : 380억 DM
 - 연방예산 항목 <표 3-15>중 2) 주민들에 대한 지출 (358억 DM)과 1)항의 주거보조비, 학자금보조, 전쟁희생자 복지, 자녀양육비 등 (30억) : 총 388억 DM
 - ※ 의료보험분야는 1990년 신설주 의료보험제도 구축시 출발지원금 (Anschubfinanzierung) 7억 5천만 DM 이외에는 의료보험기관을 통한 이전액이 전혀 없음.
 - '92년도 독일통일기금과 채무청산기금은 각각 339억 DM, 153억 DM 임.

- 구동독지역으로부터의 유입액을 공제한 '92년도 순이전액은 1,303억 DM 임.
- 참고로, 독일 6대 경제연구소는 '92년도 대동독지역 공공부문 이전지출액을 1,503억 DM으로 추계함(표 3-16).
- 신탁청의 기업사유화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를 이전액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약 1,800억 DM이 됨.

〈표 3-14〉 연방정부 추계 이전지출액

단위 : 십억 DM

내역	1991	1992	1993	1994(1)
I. 총 이전액				
연방예산	75	89	117	119
'독일통일기금' (2)	31	24	15	5
E C	4	5	5	6
연금보험	-	5	11	12
연방고용청	25	38	36	29
구서독지역주/자치단체 예산	5	5	10(4)	14(4)
소 계(3)	140	152	177	174
※ 채무청산기금	2.3	15.3	12.9	12
II. 구동독지역으로부터의 유입액(Rueckfluesse)				
추가 조세수입(연방)	31	35	37	40
추가 행정수입(연방)	2	2	2	2
소 계	33	37	39	42
III. 순 이전액	109.3	130.3	150.9	144

※ 출처 : 연방수상실, Leistungsbilanz der Bundesregierung fuer die neuen Bundeslaendern, pp.8~9.

연방재무성 제공 채무청산기금 현황

- (1) '92년 추정집행액, '93년 추경예산포함 예상액, '94년 정부예산안
- (2) 중복계산을 피하기 위해 연방으로부터의 독일통일기금 보조금 <도표 2>은 제외
- (3) 소계는 연방예산 중 연방고용청에 대한 보조금의 중복계산을 공제했기 때문에 I. 총이전액 내역 합계와 차이가 있음.
- (4) 「연방재정건실화방안」에 의거한 독일통일기금 지원도 포함.

<표 3-15> 신설 5개주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 내역

	'91	'92	'93 *)
	(단위 : 10억 DM)		
1) 주 정부 및 지자체 재정을 위한 지출 사항 **)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괄 투자금 (GAO)	5.3	-	1.5
· '경제' 과제	2.3	3.1	3.3
· 중앙 난방 시설 보수	-	0.1	0.2
· '농업' 과제	0.7	1.2	1.3
· 농업 차액 조정	-	-	0.4
· 긴급 환경보호 대책	0.4	0.4	0.1
· 지방도로 건설 / 근거리 대중교통 수단	1.8	3.1	1.9
· 도시 건설	0.8	0.4	0.3
· 대학건축 / 대학 개혁	0.4	0.7	0.8
· 저소득층 임대주택 건설	0.7	1.4	0.6
· 문화 간접시설 육성	1.1	0.6	0.6
· 주거 보조비	0.4	1.7	1.6
· 학자금 보조	0.5	0.6	0.6
· 전쟁 희생자 복지 후생	0.1	0.1	0.2
· 주 및 지자체 종사자들을 위한 자녀양육비	0.4	0.6	0.9
· '독일 통일' 기금 (연방 보조비)	4.0	9.9	14.2
· 기 타	1.0	1.4	0.5
소 계***)	21.5	25.3	29.3

2) 주민들에 대한 지출사항 **)

· 전쟁희생자 부양	0.3	1.0	1.5
· 실업자 부조금 / 고용창출대책 등등	2.8	4.7	5.0
· 연방고용청 보조금	-	8.9	18.0
· 조기 퇴직금 / 퇴직 과도기 보조금	5.7	5.1	4.8

· 사회보장보험	9.5	10.2	11.7
· 신생아 양육비	0.6	0.7	1.2
· 자녀 양육비	5.3	5.1	3.5
· 유공 연금	0.2	0.1	0.2
· 청소년 정책	0.1	-	-
소 계***)	24.5	35.8	45.9

3) 연방의 기타 지출**)

· 연방 수로	0.4	0.4	0.6
· 도로 건설	2.1	4.0	3.8
· 독일 제국 철도	7.7	9.5	10.1
· 환경보호 투자	0.1	-	-
· SDAG Wismut 회사에 대한 지원	1.1	1.1	0.8
· 연방재산관리 / 건축사업계획	1.0	0.9	0.8
· 조선업 지원	0.1	0.2	0.2
· 자기자본마련 지원방안	0.1	0.4	0.7
· 광유 가격 인하	0.2	0.2	0.3
· 연구 및 기술개발	0.5	1.4	1.5
· 국 방	4.2	3.2	5.4
· 방위병 (Zivildienstleistende)	0.4	0.2	0.3
· 주요 인건비	0.5	0.5	0.8
· 보 장	-	0.2	4.5
· 베를린시에 대한 연방 지원	1.3	2.0	1.0
· 동베를린 토지 구입	-	0.5	0.5
· 기 타	9.4	3.0	10.1
소 계	29.1	27.7	41.4
총 계	75.1	88.8	116.6

*) 추경예산 포함

**) 구동독 경기부양 공동 대응책 포함

***) 일부 반올림에 의한 차이 있음

<표 3-16 > 독일 6대 경제연구소 추계 공공부문 이전 지출액

단위 : 10억 DM

	1990	1991	1992	1993①	1994①
공공기관 이전 지출액②	43.5	108.3	118.3	125.9	130.0
- 독일통일기금	22.0	35.0	36.1	35.2	34.6
- 통독관련 연방예산	19.2	59.2	65.1	72.2	76.0
- 주정부간 매상세 차액 보전	1.3	10.8	11.5	12.0	12.5
- 서독지역주 재정이전	1.0	2.0	2.5	3.0	3.0
- 투자촉진 관련 세수 감소③	-	1.3	3.0	3.5	3.9
사회보험기관 이전지출액	2.7	20.9	32.1	37.0	35.5
- 실업보험 보조금	1.9	20.9	30.6	32.1	28.5
- 연금보험 보조금	0.8	-	1.5	4.9	7.0
이전 지출 총액	46.2	129.2	150.3	162.3	165.5
.....					
※ 신탁청 신용 차입	-	19.9	29.6	37.0	44.0

※ 출처 : 독일 6대 경제연구소 '93 추계 경제전망 보고서

① 추정치

② 유럽부흥계획차관에 대한 이자보조금은 제외

③ 서독기업의 구동독지역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서독 정부의
세수는 그만큼 감소

3-2-3.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가. 독일통일기금

- '90.5 제1차 국가조약 체결시 연방과 서독 주 정부는 신설주에 대한 재정행평의 원칙적용을 1994년까지 유보하는 대신 독일통일기금을 마련, 지원키로 합의
 - 독일통일기금 1,150억 DM 중 200억 DM은 연방예산절감을 통해, 나머지 950억 DM은 자본시장에서 조달, 연방과 서독주가 반반씩 상환 부담
 - 1994년말까지 총차입액 950억 DM은 연방과 서독주가 연간 21억 DM씩 부담, 향후 20년에 걸쳐서 상환
 - 지방자치단체도 주정부 채무변제금의 40% 부담
 - 당초 1,150억 DM에서 '92년 3월 1,463억 DM으로 수정하였다가 '93.5월 연대협약에 의거 1,607억 DM으로 증액 지원 결정

※ 독일통일기금 증액 내역

단위 : 십억 DM

연 도	'90 하반기	'91	'92	'93	'94	총액
당초 조성액	22	35	28	20	10	115
1차 수정액	-	-	99.9	31.5	23.9	146.3
2차 수정액	-	-	-	35.2	34.6	160.7

- 동 기금은 주민수에 비례하여 각 주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
 - 15%를 연방정부에 할당, 구동독 재건사업에 직접 사용
 - 85%는 신설주에 할당, 이 중 40%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표 3-17> 독일통일기금 조성내역

단위 : 백만 DM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0 기금 규모	22,000	35,000	33,900	35,205	34,600	0
0 재정차입에 의한 조성						
- 차입액	20,000	31,000	24,000	15,000	5,000	0
- 부채상환(10%)	0	2,000	5,100	7,500	9,000	9,500
이 중 :						
연방부담	0	1,000	2,550	3,750	4,500	2,650
서독지역 주 부담	0	1,000	2,550	3,750	4,500	6,850
· 이 중 : 서베를린 부담		35	88	129	157	228
0 연방예산에 의한 조달						
- 총 계	2,000	4,000	9,900	20,205	29,600	0
이 중 :						
연방부담						
- 통일로 절감된 비용	2,000	4,000	4,000	5,000	5,000	0
- 기타 직접 지원	0	0	5,900	1,775	6,350	0
- 부가가치세 분	0	0	0	6,615	8,127	0
- 이율결정에 의한 분	0	0	0	855	0	0
<u>연방합계</u>	2,000	4,000	9,900	14,245	19,477	0
서독지역 주						
- 직접 지원	0	0	0	775	5,350	0
- 부가가치세 분	0	0	0	3,016	3,705	0
- 이자소득세 분	0	0	0	1,300	0	0
신설지역 주						
- 부가가치세 분(1)	0	0	0	869	1,068	0
<u>주 합 계</u>	0	0	0	5,960	10,123	0

단위 : 백만 DM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 전체 재정 염출에 대한 개관						
연 방	2,000	5,000	12,450	17,995	23,977	2,650
서독지역 주	0	965	2,462	8,712	13,398	6,622
신설 주(1)	0	35(2)	88(2)	998	1,225	228(2)
합 계	2,000	6,000	15,000	27,705	38,600	9,500
	- 비 율 (%) -					
연 방	100	83	83	65	62	28
서독지역 주	0	16	16	31	35	70
신설 주(1)	0	1	1	4	3	2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 연방재무성 제공 자료 (Fonds "Deutsche Einheit" - Finanzierung, '93.6.21)

(1) 전체 베를린 포함

(2) 서베를린만 포함

나. 채무청산기금

○ 통일조약 제23조에 따라 채무청산기금 (Kreditabwicklungsfond)이라는 특별재산계정 (Sondervermoegen)을 설정하여 구동독의 대내외 채무와 화폐통합으로 인해 발생한 은행 및 국영기업체 대차대조표상의 차액 보전부담액을 인수함.

- 화폐·경제·사회통합에 관한 양독간 국가조약에서 동·서독은 통일시까지의 동독의 국가채무를 신탁재산 (Treuhandvermoegen) 계정으로 이전하여, 신탁관리재산을 처분한 수익으로 일단 변제해 가기로 함.

- 그래도 변제가 안 되는 재산분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와 신설주 (구동독지역 주)가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통일이 급속히 진행되고, 짧은 기간 동안 신탁청이 관리 재산을 사유화하여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추정할 수 없어, 통일조약 협약시 양독정부는 신탁재산계정에 의한 부채 변제를 '94.1.1 이후로 연기하는 한편, 1993년 말까지 채무청산기금 (Kreditabwicklungsfond)을 연방특별재산계정으로 설치, 이자별 지변케 함.
 - 이자는 연방정부와 신탁청이 반반씩 부담함.
 - 이로써 1994년까지 이자로 인하여 부채총액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함.
- 화폐통합으로 인하여 1991년 1월 1일부터 은행저축액의 교환비율(일정 금액까지는 연령별로 1:1, 그 이상은 2:1로 교환하여 총액 평균 1.8:1 정도)과 기타 채권·채무액의 교환비율(2:1)이 달라짐으로써 각 은행과 기업체에서 발생된 손실차액을 차액보전기금(Ausgleichsfond)을 설치하여 보전키로 하였는데, 통일조약으로 동 기금이 채무청산기금 계정에 이전됨.
- 채무청산기금에 의한 전체 부채 총액(추정액)

· 구동독 국가채무	:	280억 DM
· 차액보전기금	:	800억 DM
· 구동독의 대외채무청산	:	300억 DM
총 계		약 1,380억 DM
- 현재 은행과 기업들의 차액보전청구를 심사 중인 바, '94년 말까지 차액보전기금이 약 1,100억 DM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
- 채무청산기금은 구동독 대외채무의 이자와 행정처리비용을 부담 (매년 약 10~20억 DM)

- o '93.5 연방상원이 통과시킨 연방재정건실화법안에 의거 채무청산기금을 '94년 말까지 1년 더 연장운용하고, '95.1.1부터는 신설되는 구채무변제기금(Erblastentilgungsfonds)으로 이전키로 함.

<표 3-18> '91~'94년 채무청산기금 지출액

단위 : 백만 DM

	1991	1992	1993	1994
연 방	1,135	7,648	6,450	6,000
신 탁 청	1,135	7,648	6,450	6,000
계	2,270	15,296	12,900	12,000

출처 : 연방재무성 Herr Unger 제공 자료

다. 재정적자 및 재정차입

- o '80년대 긴축재정노력으로 통일 당시 서독의 공공재정은 양호했음.
 - 일반정부 (연방정부·주정부·지방자치단체, 기금 및 사회보장) 재정은 '82년 GDP 의 3.3% 적자, '89년 0.2% 흑자
 - 공공부채는 GDP 대비 총부채 43.2%, 순부채 22.7%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며, GDP 중 정부지출비중은 감소 추세
- o 통일 이후 막대한 통일비용 소요로 사태는 반전되어 재정수지가 악화됨.
 - 조세인상과 재정지출 절감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독지역의 경기침체로 인한 조세수입 증가 부진, 구동독지역 재건을 위한 투자비 증가, 실업수당 등 사회보장비 증가 등으로 공공부문 적자가 지속됨.
 - GNP 대비 공공부문 재정적자는 '91년, '92년 각각 4.3%, 4%에서 '93년에는 5.1%로 악화

(1)

<표 3-19> 경제 5현 공공부문 재정적자 현황

단위 : 십억 DM

	1991	1992	1993
연방 정부	60	41	73
주 정부	25	29.5	42.5
- 서독	(19)	(14)	(24.5)
- 동독	(6)	(15.5)	(18)
지방자치단체	11	14.5	20.5
- 서독	(5)	(8)	(13)
- 동독	(6)	(6.5)	(7.5)
예산 적자	96	85	136
독일통일기금	31	24	14
채무청산기금	1	1	0.5
유럽부흥특별기금 부담조정기금	7	10	9.5
재정 적자	135	120	160
GNP 대비율(%)	4.3	4	5.1

(1) 연방재무성 자료를 토대로 경제 5현이 추산

출처 : 경제자문위원회 (경제5현) 연례감정서 1991/92, 1992/93, 1993/94

- o 지속적 적자재정 운용은 공공부문의 자본시장 차입으로 금융시장에 부담을 초래함으로써 이자율을 부추겨 투자환경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부담을 가증시켜 경제활동 위축을 가져옴으로써 장기적으로 동독지역의 재건을 더욱 어렵게 할 것임.

- 방만한 팽창예산 운용은 장기적으로 마르크화의 신뢰문제와도 관련되어 상당한 비판이 대두되었는 바, 1993년도에는 재정지출 감축을 위한 조치가 취해짐.

※ 연도별 공공부문 부채 누계액 (연방정부, 주정부, 신탁청, 각 특별회계, 연방철도, 연방우편 적자 포함)

단위 : 10억 DM

연 도	'88	'89	'90	'91	'92	'93	'94	'95
누계액	1,000	1,039	1,310	1,457.6	1,624.7	1,780	1,900	2,256

※ '93~'95년 추정치

출처 : 연방재무성

<표 3-20> 통독을 전후한 공공부문 부채 누계액

단위 : 10억 DM

	1990	1991	1992	1995(추정)
연방정부	542.2	585.5	620.5	721
주정부(동독 포함)	326.4	353.5	386.0	516
지방자치단체(동독 포함)	114.4	126.0	136.5	186
E R P	9.5	16.4	26.0	52
독일통일기금	20.0	51.0	75.0	95
채무청산기금	28.3	28.6	29.0	100
소 계	1,049.8	1,169.0	1,273.0	—
연방 철도·체신	121.2	126	155.2	254
신탁관리기금	96	116	146	270
공공주택분야	38.5	42.5	46.7	62
관광지원기금	4.3	4.1	3.8	—
공공부채 총계	1,310	1,457.6	1,624.7	2,256

- 1989년 말 9,290억 DM (GNP 대비 41%) 이었던 전체공공부문의 부채 총액은 1994년 말까지 약 1조 9,000억 DM (GNP 대비 58%), 1995년 말까지 약 2조 2,560억 DM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 이러한 GNP 대비 부채비율은 주변 선진국 (벨기에 GDP 대비 134%, 이탈리아 108%)에 비하면 높은 편이 아니고, 부채의 대부분이 해외 부채가 아니라 채권자가 대부분 내국인이라는 점에서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님.
- 그러나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
 - 구동독지역의 경우 재정이전액의 약 2/3가 소비성으로 지출되어 투자부문에 투입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장래의 수익성과 연결되지 못함.
 - 국가부채 증가는 자본시장에서 이자율의 상승을 초래, 국민경제적 지출을 위한 외부재원조달을 값비싸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
- 연방정부의 연도별 신규부채 (순재정 차입)는 '89년 192억 DM에서 '93년 676억 DM을 넘어설 전망이다.

단위 : 10억 DM

연 도	'89	'90	'91	'92	'93
신규 부채	19.2	56.7	52.0	38.6	67.6

라. 조세 인상

- 통일전 콜 수상은 통일로 인한 조세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재정정책상 우선 순위를 재정차입에 의한 조달에 두었으나, 통일후 통일 비용의 증대로 각종 조세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었음.

<표 3-21> 통일 이후 조세인상 현황

단위 : 10억 DM

시 기	내 용	세 수 증 대	
		'91	'92
'91.1.1	유류세 리터당 3페니히 인상 (1페니히=1/100 DM)		
'91.4.1	사회보장보험료 인상		
	· 실업보험료: 2.5% 인상	20.2	22.1
	· 연금보험료: 1.0% 인상	-8.1	-11.0
'91.7.1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7.5% 추가연대부과금 (1년간 한시적 적용)	11.25	10.65
∥	석유세 인상	5.8	14.0
	· 유연휘발유: 25 페니히 (1페니히=1/100 DM)		
	· 무연휘발유: 22 페니히		
	· 디젤유 : 10 페니히		
	· 경유 : 2.3 페니히		
∥	보험세 3% (7%→10%) 인상	0.7	2.0
'92.3.1	연초세 1개피당 1페니히 인상	—	1.6
'93.1.1	부가가치세 14%에서 15%로 인상	연 140억 DM	
	<연대협약에 의한 조세인상>		
'93.7.1	보험세 12%로 2% 인상		
'94.1.1	석유세 인상		
'94.1.1	외국인 투자소득을 이자세 징수대상에 포함		
'95.	7.5% 연대부과금 제도입	연 280억 DM	
∥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0.5%→1%로 인상		
∥	각종 세금 인상 계획 (집권 여당안)		

마. 연대협약

- 구동독 재건을 위한 비용(통일비용)을 사회계층간에 공정하게 분담하기 위해 연대협약을 체결함.
 - 통일조약에서 유보한 주 정부간 재정균형화원칙이 '95년부터 신설주에도 적용되기 시작하고, 1994년말 통일비용의 주요 재원인 '독일통일기금'이 소진되고 '신탁청'이 해체되어 이를 대체할 재정조달수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 통일비용이 당초보다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위한 재원조달 방법으로 '강제 공채' 발행(CDU), '독일 공채' 발행(CSU),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과세 등이 제기되어 왔음.
- 연대협약은 독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통일비용조달과 구동독 경제제건을 위한 모든 경제행위 주체간의 자기절제와 연대의식을 통한 비용과 고통분담 방안임.
 - 기본원칙은 연방과 주 정부·자치단체의 지출삭감, 기업가의 구동독 지역 투자확대, 노동자측의 임금인상 자제에 있음.
- '93.3.13, 연방 정부, 16개 주 정부 및 여야 정당대표들 간에 연방재정건실화 방안(연대협약) 10개 원칙에 합의함.
 - '91.7.1부터 1년간 실시한 바 있는 임금·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7.5% 추가 연대부과금(Solidaritätszuschlag)을 '95.1.1부터 재도입 : 280억 DM 조달

- '구채무변제기금'을 설치, 약 4,200억 DM의 부채(신탁청 2,500억 DM, 채무청산기금 1,400억 DM, 주택분야 구채 300억 DM)를 인수함.
 - '94년 이자지급액 약 120억 DM은 연방정부와 신탁청이 반씩 부담.
 - 원리금은 전액 연방정부가 약 30년간에 걸쳐 상환해 나감.
 - 사회보장혜택의 남용 방지 및 정부보조금 삭감을 통해 정부지출 절감
 - '95년부터 구동독지역 신설5개주에 대한 주 정부간 재정균형원칙의 확대 적용을 위해 연방과 서독지역 주로부터 매년 558억 DM 이전
 - 연방과 주 정부간 매상세 분배율을 56:44로 조정
 - 구동독 주택건설업체의 과거 부채 중 1평방 미터당 150 DM 이상에 대해 연방이 '구채무변제기금'을 통해 상환
 - '독일통일기금'을 '93년 37억 DM, '94년 107억 DM 추가 증액
 - 구동독 기간산업육성, 고용창출조치 (ABM) 확대를 위해 20억 DM 추가 보조
- o '93.5.27 연방 상원은 연방재정건실화방안 (연대협약) 실천을 위한 법률을 통과시킴.
- 정부지출 삭감 관련 법률 개정
 - 세제 관련 법률 개정
 - 연방·주간 재정균형화 및 구동독 부채청산 관련 법률 개정 및 제정
 - 신설주내 경제력 격차 해소 및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법률 (구동독 재건 투자 촉진법) 제정
 - 독일통일기금법 개정
 - 구채무변제기금법 제정
 - 지방주택업체 및 주택조합, 개인 임대자에 대한 부채지원법 제정

바. 정부예산 절감

- o '93.7 연방 정부는 긴축 및 예산절감방안 (Sparpaket)을 마련함.
 - 구조적 정부재정적자를 줄이고, 국내·외 자본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며, 통일로 인한 도전을 극복하고,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긴축재정을 운용키로 함.
 - 경기부진을 이유로 긴축재정운용을 반대하는 주장도 있으나 공공재정에 대한 신뢰유지 및 이자지급 부담률(총 지출 중 이자지급률이 '89년 11%에서 '94년 16%, '97년 23%로 증가 예상) 등을 고려, 정부지출 삭감을 결정함.
 - 주요 내용 :
 - '94년 210억 DM, 그 이후 매년 280억 DM의 예산을 절감
 - .. 공공분야 지출증가율을 GNP 명목증가율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
 - 공무원 봉급 동결, 국가보조금 감축
 - 실업수당, 실업보조금, 자녀수당 등 사회보장비 지출 삭감 ('94년 160억 DM 절감)
 - 탈세 및 조세 악용 방지

3-3. 소유 · 재산권 문제

가. 공권력에 의해 몰수된 과거재산권의 반환 및 보상

- '45-'49(소련점령하) 토지개혁에 의한 몰수재산은 원상회복(반환)을 배제
 - 약 320만 ha로서 구동독지역 토지의 1/3에 해당
 - “2+4” 회담에서 소련측에 양해사항으로 통일조약에서 동·서독이 미반환에 합의
 - 소련정부는 그들의 점령권에 입각한 입법행위에 대한 이의제기에 반대
 - 드 메지어 동독 총리는 몰수토지를 인수함으로써 재산권과 소유권을 이미 취득한 동독주민을 고려하여 반환에 반대
 - 서독 협상자는 과거의 부당성이 반환이후 제기될 또 다른 부당성과 상충,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을 원치 않았음.
 - 이전 소유권자들은 상기 통일조약의 규정들이 기본법(헌법) 제3조(평등권), 제14조(재산권), 제79조(기본법 개정불가 사유)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했으나 재판부는 합헌 판결을 내림.
 - 통일조약 제4조 제5항에 의해 기본법 제143조 3항에 삽입된 상기 몰수재산의 원상회복 배제 방침은, 제79조 기본법 개정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함.
 - “당시 서독의 국가권력이 사실상 그리고 법률적으로 동독지역에 미치고 있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마치 외국의 국가권력작용에 의한 제반조치에 대해 그 어떤 책임을 질수 없듯이 당시 소련점령군이 행한 몰수조치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수 없으므로” 기본법 제14조(재산권)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함.
 - 다만 기본법 제3조(평등권)에 의거 입법권자는 사후 보상에 관한 적절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판시함.

- '49.10.7 이후에 반법치국가적 방법으로 몰수된 재산권은 재산법 (Vermögensgesetz)에 의하여 이전 소유자가 반환신청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반환(보상선택도 가능)
- 당시 서독측 정책담당자는 반환 우선원칙이 추후 구동독지역 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알고 있었으나, 반환을 배제할 경우 서독 거주 재산몰수 소송자들의 거센 반발을 야기함으로써 재산소유권 문제로 통일과정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결정함.
- 담당부서인 연방 미해결 재산 관리청(Bundesamt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 BAROV) 산하 6개주 관리청과, 216개 지방사무소에서 반환청구권을 심사·처리하고 있으나, 막대한 시간과 행정인력이 소요됨.
- 각 주별 미해결 재산권 처리 현황(1993년 9월말 현재)

단위 : 천

주 별	신 청 자 수	해당재산건수	처 리 건 수	처리율 (%)
베를린	168	254	71.1	28.0
브란덴부르크	320	727	190.7	26.2
메클렌부르크 포어퍼머른	126	242	66.9	27.6
작센	256	440	155.0	35.1
작센-안할트	148	480	158.4	33.0
튀링겐	199	543	117.6	21.7
BAROV	2	5	1.1	23.4
총 계	1,219	2,692	759.7	28.2

- 총 122만여명이 269만건의 재산에 대해 반환신청을 했으나, 이중 76만건이 처리되어 통독3년이 지난 현재 처리율은 28.2%임.

0 다만 통독이후 2회(1991년 3월, 1992년 7월)에 걸친 법률 개정에 의하여 재산법 제3조는 공공단체(예를 들어 지방행정기관)나 신탁청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일 경우 “반환원칙”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조건하에서는 구동독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예외를 인정하여 반환되지 않고 신탁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직접 임대되거나 매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토지나 건물의 경우

- 고용을 창출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 주민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할때
- 긴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조성에 필요할때

- 기업의 경우

- 고용을 창출, 유지하거나, 경쟁력을 제고시킬 때
- 이전 소유자가 기업을 더 이상 운영한다는 보장이 없을 때

- 이러한 경우에도, 물론 원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주는데, 개인재산권에 대한 중요한 침해로 간주되는 특별예외규정은 ‘제2차 재산법 개정 법률’ (1992.7)에 의해 ‘95.12 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됨.

0 공공단체나 신탁청이 현재 관리하고 있지 않은 토지나 건물의 경우도 투자법 (Investitionsgesetz)에 의해 반환신청에도 불구하고 제3의 투자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음.

- 이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증명서(Investitionsbescheinigung)를 시·군 지방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바, 발급조건은 상기 재산법에서 정한 기준과 동일함.

- 원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재사유화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이전 소유자가 기업을 운영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소유권 관계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임시적으로 소유권리를 지정(Einweisung) 받아 기업을 자기책임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임시적인 권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 소유자가 재산법을 담당하는 해당 주정부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신청권자가 기업을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하며, 다른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 신청권자는 기업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기업운영 방안을 제출해야 함.
 - 원소유자(Alteigentuemer)와 현재의 관리자(Verfuegungsberechtigten, 보통 신탁청)의 법률적 관계는 관리자가 매매의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임대계약(Pachtvertrag)의 제규정에 따라 이루어짐.
 - 이때 임대료나 매매대금 지불은 완전히 소유관계의 확정으로 관리자에게 기업의 이전이 확정될 때까지 유예(gestundet) 됨.
 - 해당관청에 의한 이러한 임시적 권리 지정이외에도 원소유자와 해당 관리자는 언제라도 기업의 잠정적인 이용에 합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의는 해당 관청에 통보되어야 함.

나. 보상의 원칙과 보상재원 마련

- 연방각의는 '93.3.31 소위 과거몰수재산 보상에 관한 법안(Entwurf des Gesetzes ueber die Entschaedigung nach dem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oegensfragen und ueber staatliche Ausgleichsleistungen fuer Enteignungen auf besatzungsrechtlicher oder besatzungshoheitlicher Grundlage)을 의결, 동 법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함.

- 동 법안은 1990.9.29 발효한 ‘미해결 재산문제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보상법(Entschädigungsgesetz); 점령법 또는 점령고권에 기한 몰수재산에 대한 보상을 위한 국가의 부담조정법(Ausgleichsleistungsgesetz), 재산부과금법(Vermögensabgabegesetz), 구동독 거주 과거 실향민에 대한 일시지원금법(Vertriebenenenzuwendungsgesetz) 등으로 구성됨.
- 동 법안은 ‘미해결 재산문제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미해결 재산 반환의 유형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보상액수와 이에 필요한 자원 조달 문제는 규정하지 않아서 이를 위한 법률제정이 필요했음.
 - 특히, 구소련 점령 하에서 몰수된 재산은 반환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정방안이 마련되어야 했음.
- 동 보상법안의 주요 내용

※ 보 상 법

- 재산법에 의거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원소유주가 보상을 선택한 경우 현금으로 보상함.
- 개인의 부동산과 농지·산지의 경우, 보상액은 1935년 기준 시가(분단 이전 토지조사에 의한 과세 표준지가)에 1.3배를 함.
- 영업용 재산의 경우 보상액은 1.3배 없이 1935년 시가만큼 보상
- 금융재산의 경우, 화폐통합 당시의 교환률에 의거 동독마르크로 표시된 액수의 50%를 보상함.
- 나찌 희생자의 경우, 1957년 연방보상법(Bundesrückerstattungsgesetz)의 원칙에 따라 보상함.
- 10,000 DM 이상 고액 보상일 경우, 누진적으로 보상액을 감함.
 - · 보상액이 1만~3만 DM일 경우 20%, 10만~30만 DM은 50%, 1백만~3백만 DM은 95%를 감하고, 천만 DM 이상의 경우는 최고 95만 DM까지만 보상함.

※ 구소련 점령법 또는 점령고권에 기한 몰수재산에 대한 국가조정법
(Ausgleichsleistungsgesetz)

- 1945년~1949년간 몰수된 재산은 1949년 이후 몰수된 재산의 경우와 같이 보상함. 단, 법인에 대해서는 보상을 아니 하되, 법인에 출연한 자연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보상함.
- 1948년 화폐개혁에 의해 몰수된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최고 10,000 DM까지 보상함.
- 동산의 경우, 반환을 원칙으로 하되, 동산의 성질상 자연인이나, 종교단체, 재단 등이 선의에 의한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나, 반환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예: 문화재)에는 반환하지 않고, 재산몰수당시 시가로 보상함.

※ 재산부과금법 (Vermögensabgabegesetz)

- 재산부과금은 재산을 반환받는 사람으로부터 해당 재산 가격의 1/3을 부과함.
 - .. 해당 재산 가격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농지, 산지의 경우 자기 소유일 경우 당시 가격의 4배, 2세대 이상 임대주택은 6배, 택지가 50% 이상인 대지는 8배, 상업용 부동산 및 2세대 임대주택, 단독주택, 택지 50% 이하 대지는 10배, 건물이 없는 대지의 경우는 27배를 곱해서 산정
 - .. 나찌 희생자의 경우 위 재산가격의 75%를 부과
 - .. 재산부과금은 1996년 1월 20일부터 징수하되, 해당 권리자가 그때까지 재산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그 이후 5년 동안 징수가 유예될 수 있음.

※ 구동독 거주 과거 실향민에 대한 일시지원금 (Vertriebenenenzuwendungs-
gesetz)

- 이들 실향민에 대해 4,000 DM 지원금을 원칙적으로 2,000년까지 지급함.
 - .. 단,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1998년부터, 80세 이상은 1996년부터 지급함.

- ※ 1971.9.3 일자 연방실향민법에 의하면 실향민이란 독일국적 소지자 또는 독일계로서 당시 외국통치하에 있는 독일 동부지역 또는 1937년 12월 31일자 독일제국 국경이외에 거주하던 자로서 제2차 대전과 관련된 추방 및 국적박탈 또는 피난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한 자임.
서독지역 거주 실향민의 경우 서독정착을 위해 부담조정법 (1952)에 의거, 서독 부담조정기금에서 지원해 준 바 있음.

※ 보상기금 (Entschaedigungsfond)

- 통일조약은 보상 및 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가예산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운용되는 보상기금을 통해 충당하도록 명시함('90.6.15 공동성명서 13번, 통일조약 부록 II).

- 다음과 같은 수단을 통해 총 125억 DM의 보상기금을 마련함.
 - .. 1991년 이후 신탁청 기업·부동산 매각 수익의 일부: 40억 DM
 - .. 공공기관 즉 사회보험기관, 연방철도, 연방우편 등이 통일조약에 의거 행정재산으로 인수한 부동산의 고시가격의 1.3배를 기여금으로 출연 : 15억 DM
 - .. 부담조정기금: 31억 DM
 - .. 재산부과금: 34억 DM
 - .. 현 점유권을 인정한 부동산 매각시 대금 일부: 5억 DM

- 보상은 상기 재원들에 의해 보상기금이 조성되고 난 후, 1996년부터 이루어질 예정임.
 - 125억 DM의 보상기금 중 101억 DM은 보상 및 조정에, 나머지 24억 DM은 실향민에 대한 일시지원금에 사용
- 동 법안은 '93.4.16과 5.7 연방상원과 하원에 각각 제출되었으나 의회의 전반적 재고 요구와 반대여론에 부딪힘.
- 특히, 하원의원들은 1935년도 기준가의 1.3배의 보상액이 몰수된 주택 및 토지의 현 시가에 비해 너무 낮아 반환과 보상간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동 법안을 반대함.
 - 상원에서도 보상기금 일부를 반환받는 자들에게 부과하는 재산부과금을 통해 충당하는 방안에 반대함.
 - '93.9월 연방하원 재무위원회가 주최한 보상법 공청회에서 전문가들과 관련단체들은 연방재무성의 보상법 초안은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만장일치로 반대함.
 - 특히 공청회에서는 재산을 몰수당한 자들에 대해 소유물을 다시 구입하거나 약 10년 후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양도가능한 쿠폰을 지급하는 방법이 제시되었음.

다. 집권여당의 보상법률안(수정안)

- '93.11.23. 집권 연정은 새로운 보상 및 조정 법률안을 의결함.
- 구동독지역의 몰수 재산에 대한 총 보상액을 정부 초안의 125억 DM에서 180억 DM으로 상향 조정함.

- 180억 DM 중 110억 DM은 연방예산 (연방지원금)으로, 40억 DM은 베를린 신탁청 재산에서, 15억 DM은 연방재정자산에서 충당하며, 10억 DM은 이미 부담조정금을 받은 서독인으로 동독지역의 재산을 반환받게 되는 자에 대한 세금으로, 나머지 5억 DM은 물권청산법에 의한 수입에서 조달함.
 - 정부 초안에 포함되어 논란의 대상이었던 반환재산에 대한 재산부과금은 취소함.
 - 1945~1949년간 구소련 점령법 또는 구동독 정권에 의한 몰수재산에 대한 조정 및 보상 금액을 126억 DM으로 책정함.
 - 보상금은 당해자에게 채권의 형태로 지급되며, 동 채권은 2004년부터 이자가 계상되며 누진적으로 현금 상환됨.
 - 2004년 이전에 채권을 현금화하고자 하는 자는 상당한 이자 할인을 감수하고 은행에 매각할 수 있음.
 - 구동독 거주 과거 실향민(약 6만 명으로 추정)에 대한 일시 지원금으로 24억 DM을 책정함.
 - 지급시기를 정부 초안보다 2년 앞당김. 따라서 1916년 이전 출생자는 1994년부터 지급함.
 - 구동독지역 나찌 희생자를 위한 보상금으로 20억 DM을 책정함.
 - 구동독지역에 대한 투자 유인 조치로 채권 발급후 3년 이내에 신설주에 투자하는 구 소유자에게는 명목보상금액의 최고 20%까지 투자보너스를 제공함. 다만 동 보너스는 10억 DM을 초과할 수 없음.
 - 동 타협안을 주도한 Bohl 수상실 장관이 제시한 대토(代土)로 보상하는 방식(소위 토지구매모델) 또는 재무위원장이 제안한 쿠폰 모델 등은 입법 절차 과정에서 검토하기로 함.
 - 채권과 사유화대상 공공재산 구매를 위한 조정증서간에 선택권을 부여할 지 여부도 추후 검토해 나감.
- 독일 정부는 동 법률안을 1994년 1월말까지 국회 의결을 마칠 계획임.

3-4. 과학 기술 및 연구 분야

- 연방연구기술성(BMFT)은 통일조약 제38조에 근거하여 통일독일의 공동 연구개발체계를 확립한다는 목표 아래, 서독지역의 기 발전수준과 구동독지역의 가치있는 연구분야를 유지하면서, 지난 40년간 구동독 지역의 중앙집권적인 잔재를 일소하는데 노력해 왔음.
 - 통일조약 제38조는 학술원(Wissenschaftsrat)이 '91.12.31일까지 구동독 과학아카데미 소속 연구기관들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며, 각 기관들의 존립 여부와 종사자의 고용관계는 '91.12.31일까지 유효하도록 규정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전체 독일의 연구체계를 신속히 경쟁력있는 구조로 구축하고, 공공재원으로 촉진되는 연구에 있어 잘못 관리되고 실용성이 없는 연구역량을 폐쇄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었음.
 - 이를 근거로 구동독 연구기관 전체가 폐쇄될 수도 있으며, 기관의 일부가 개편되거나 통합될 수 있음.
- 구동독 과학아카데미 소속 연구기관들(73개소 : 종사자 24,000명)에 대한 평가는 학술원(Wissenschaftsrat)의 9개 전문분야별 평가팀(총 150명으로 구성)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평가업무의 대부분은 '91.6.5일자 권고안으로써 종료되었음.
 - 각 평가팀의 평가대상기관 방문시마다 연방 정부 및 기관 소재지 지방 정부의 대표자 한 명씩이 참여하였는데, 평가된 각 연구기관들의 개편방향은 다음과 같음.
 - 대학연구로 이양
 - 지방 정부 산하기관의 설립

- 연방 및 지방 정부 출연기관화 : Max-Planck 협회 또는 Fraunhofer 협회의 연구소로, 대형 연구기관 또는 “ Blaue Liste” 의 신규 기관으로 설립
- 경제계로 이양시키기 위하여 기관 성격의 연구 종료
- 학술원(Wissenschaftsrat)의 권고안은 아래와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졌음.
 - 과학의 질과 자체적인 결정력을 강화
 - 훌륭한 연구잠재력을 유지
 - 대학, 대학 외부의 산업계의 연구는 정선된 내용에서 수행
 - 과학분야의 경쟁을 장려
- 학술원(Wissenschaftsrat)의 권고사항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기구는 “ 연방-지방 정부 공동위원회” (Bund-Laender-Kommission) 임.
- 학술원(Wissenschaftsrat)은 신설연방지역에 대학 외의 연구기관으로서 약 11,000개의 일자리의 창출과 대학의 연구 및 강의를 새롭게 하기 위해 약 2,000개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도록 권고 하였음.
- o 구동독지역의 새로운 연구체계는 기존 연구역량이 응용연구에 강점이 있음을 감안하여 BMFT는 관할영역에서만 총 106개의 연구기관을 설립하였음.
 - 대형연구기관, 청색목록(Blaue Liste) 연구기관, Fraunhofer 협회 연구기관, Max-Planck 협회 연구기관 등 크게 4가지의 연방 및 지방 정부 출연기관 형태로 설립함.
 - 이 연구기관들은 응용연구분야에서, 고객들의 특정 수요에 공개적으로 응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제공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음.

- 많은 신규 연구기관들은 정밀전자기술, 통신기술, 제품제조기술, 신소재, 재료연구, 생물학기술과 같은 현대적 기술분야에서 응용 지향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93년 현재 대학연구기관 이외의 이러한 신규 연구소들과 분소들은 이미 충분히 연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음.
 - 근무자들의 90% 이상이 구동독지역 출신이며, 이들은 또한 대부분 구동독의 아카데미 소속 출신들임.
 - 인적 그리고 물적(시설) 측면에서 그동안 연구기관들은 기존 서독 지역과 비교할만한 장비들을 갖추었음.
 - 하부시설의 개선을 위해 연방 정부 및 지방 정부들은, 기존의 지역들보다 신규 연구기관에 대하여 직원 1인당으로 볼 때 훨씬 큰 투자자원을 투입하고 있음.
 - 1993년도에 1인당 54,000 DM, 1994년도에는 74,000 DM을 투입할 예정임.
- 신 연구소들은 지역적으로 구동독지역 경제적·학술적 중심지들과 밀접한 연계를 갖도록 소재지를 결정하였음.
 - Dresden과 Leipzig, Jena와 Halle, Berlin과 Postdam, Frankfurt/Oder(구동독지역)과 Rostock 내의 연구소는 이 지역의 대학 그리고 혁신적인 기업들 간의 새로운 제품생산과 공정개발에 있어 체계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도록 함.
 - BMFT는 이러한 관계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o 협력자인 대학의 연구활동

- 구동독지역에서 대학 이외의 연구기관에 대한 구축과 확장 외에도 BMFT는 대학연구의 구조개편과 이들의 경제계와의 협력을 지원하고 있음.

주요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연방 정부 및 신규 지방 정부들의 대학연구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
- 전문 프로젝트 계획의 일환으로 BMFT에 의한 프로젝트 지원
 - 국내·외 공동연구를 포함하여 신규연방지역의 대학에 약 500건의 연구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93년 1억 2,850만 DM을 투입함.
- BMFT에 의해 주도된 기술혁신연구소 (Innovationskolleg) 설립.
 - 1994년도부터 시행될 BMFT의 혁신연구소 설립 촉진 목적은, 또 한편으로 대학과 대학 이외의 연구 그리고 경제계와의 협력 수준을 국내적으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o 산업계의 연구

- 산업계의 연구체계 개편은 아직도 진행 중인 바, 기업연구 종사자 약 1/4이 아직도 신탁청의 운영권 하에서 민영화를 기대하면서 근무하고 있음.
 - 기업들은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연구개발 잠재력을 상실했는데, 통독 당시 통독 경제계에는 약 85,000 명의 연구개발 인력이 있었는데, 현재는 단지 1/4만 남아 있음.
 - 구통독지역 경제계의 연구개발역량 감소는 최근에 둔화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계속될 전망이다.
 - 비록 현재 기업들이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소한 연구잠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 연구유한회사(Forschungs-GmbH)의 설치 재고

- BMFT는 이미 연구유한회사(Forschungs-GmbH)로 기존 기업의 연구개발역량을 분리해 내는 것이 이 지역의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신탁청 또한 기업을 정비하거나 민영화시키는데 있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서는 각 기업에 결집되어 있는 연구개발 부서의 유지를 주요한 계약조건으로 하고 있음.
- 자체 연구개발노력에 의해서만이 구동독지역 기업들이 그에 필요한 제품들을 개발해 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이들 기업들이 소속지역에 대하여, 또한 유럽이나 세계시장에 대하여 그들의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음.

- 연방정부의 산업계 연구지원

-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제계가 자체 연구개발 잠재력을 갖게 하면서, 기업 내에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하게 하기 위해 BMFT(연방연구기술성)와 BMWi(연방경제성)는 다양한 지원조치들을 다각적으로 개발하였음.
 - .. 위탁연구의 촉진
 - .. 연구개발 인건비의 지원
 - .. 기술센터의 설립 촉진
 - .. 기술지향 창업센터의 촉진
 - .. 기술혁신적인 제품 및 공정의 촉진
 - .. 기술혁신 자문
- 전체적으로 BMFT와 BMWi는 구동독지역 경제를 위하여 연구개발 지원의 일환으로 '93년도에 약 7억 DM을 배정하였으며, '94년도에도 계속해서 같은 규모로 계획되어 있음.

- 산업계의 연구는 경제계 자체가 주도하도록 유도함.
- 구동독지역의 산업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다양하고 집중적인 지원대책과는 별도로, 기업자체의 필수적인 연구개발 잠재력의 유지는 특히 해당 기업 자체의 과제이며 동서독 전체 경제가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
- 개별기업이 일련의 자체제품들을 경쟁력있게 하기 위하여 어떤 전문분야에서 어떤 규모로 기업 내의 연구개발역량을 유지할 것인지, 또는 외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를 우선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야만 함.
- 구동독지역의 경제계와 그곳에 마련된 연구개발잠재력과 협력 그리고 다양하고 고도의 응용력이 있는 연구개발 잠재력을 갖춘 서독 경제계가 구동독지역에 대하여 연대책임 하에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현재의 시급한 과제임.

4. 사회분야 통합

4-1 노동현황

가. 통독이후 고용시장 발전추세

o 구동독지역 산업별 취업인구 증감 추세(1989~1992)

단위 : 천명

	1989	1990	1991	1992
o 전 체	1,947	8,820	7,219	6,344
- 농림수산업	975	780	450	282
- 에너지, 광업, 제조업	3,757	3,316	2,386	1,620
- 건설업	627	628	615	701
- 무역, 교통 정보산업	1,512	1,404	1,265	1,163
- 서비스업	618	683	899	990
- 가계, 비영리단체	215	119	129	149
- 국 가	2,040	1,887	1,475	1,439

출처 : 연방통계청, Zur wirtschaftlichen und sozialen Lage in den neuen Bundeslaendern, 3사분기 자료(1993.11), Tabellenanhang P.13

- 과거 사회주의 부실경제의 유산이었던 형식적인 완전고용달성을 위한 생산성이 없는 일자리는 통독이후 시장경제체제로의 구조재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폐기되었음.
 - 1989년도의 974만명이, 1993년도에 634만명으로 340만명이 감소하였음.
- 산업부분별로는 농림수산업과 에너지·광업·제조업 분야의 취업인구 감소가 현저함.
 - 농림수산업 분야는 1992년에 1989년 대비 69만(71%)이 감소하였고, 에너지·광업·제조업 분야는 213만(56%)이 각각 감소하였음.
- 반면, 구동독 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부문으로서 건설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고용이 창출되고 있음.
 - 건설업 분야는 1992년에 1989년 대비 7만 5천명(12%)이 증가하였고,
 - 서비스업 분야는 37만명(60%)이 증가하였음.

0 구동독지역 연도별 고용시장 동향(1989~1993)

단위 : 천명

	1989	1990	1991	1992	1993(1)
	연 평균				
0 거주인구(연말 기준)	16,434	16,028	15,790	15,654	15,570
0 경제활동 인구(15~75세)	12,149	11,859	11,785	11,840	11,936
- 거주인구중 경제활동 인구비율(%)	78.8	77.9	77.5	76.9	74.9
0 잠재적 취업인구	9,571	9,233	9,133	9,106	8,940
- 조기 정년퇴직자	.	200	555	810	770
- 전직 훈련자	.	7	169	425	300
- 등록된 실업자	.	240	913	1,170	1,350
- 거주지 취업인구	9,571	8,788	7,469	6,701	6,520
- Pendler (2)	.	-45	-290	-360	-320
- 직장 취업인구	9,571	8,743	7,179	6,341	6,200
그중 - ABM(고용창출조치 해당자)	.	5	183	388	300
- 단축 조업자	.	758	1,616	370	150
- 그중 예산으로 100%보상받는자	.	380	900	193	75
- Warteschleife (3)	.	100	200	50	.
0 실업(공식적·은폐) 현황					
- 총취업자(4)	9,571	9,028	8,382	7,871	7,870
- 등록된 실업자(공식적 실업)	.	240	913	1,170	1,350
(5) - 고용정책에 의해 구제된자(은폐실업자)	.	690	2,034	1,866	1,445
- 실업상태에 있는자(공식적·은폐)	.	930	2,947	3,036	2,795
- 총취업자중 실업상태에 있는자 비율(%)	.	10.3	35.2	38.6	35.5
- 총취업자중 공식적 실업자 비율(%)	.	2.6	10.9	14.9	17.2

(1) 추정치임.

(2) 주거지는 동독지역에 있으면서 서독지역에 직장을 가지고 출퇴근하는 사람

(3) 공공기관 종사자중 일정경과 기간후 해고된자

(4) 거주지 취업인구 + 등록된 실업자

(5) 조기은퇴자 + 전직훈련자 + ABM + 단축조업자중 예산으로 100% 보상받는자 + Warteschleife

출처 : 쾰른 독일경제연구소(IDW), 분기별 경제연구보고서(W-trends) 2/93. P.28

- 구동독지역의 실업자 수는 통독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92년에는 연평균 117만에, 실업률도 14.9% 였음.
- '93.10 현재 실업자 116만에 실업률은 15.3%임.
-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고용정책에 힘입어 구제된 자들(은폐실업자들) 까지 합한 실업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수는 '92에 연평균 303만으로, 총취업자의 약 38.6%를 차지하고 있음.

○ 동·서독지역 고용시장 발전추세 비교

- 통독이후 3주년간 동·서독 실업추세 비교

	실업자 (천명)		단축조업자 (천명)		실업률 (%)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서독	동독
1990.10 (통독)	1,687	537	39	1,704	6.5	6.1
1991.10 (통독1년)	1,599	1,049	173	1,199	6.0	11.9
1992.10 (통독2년)	1,821	1,169	228	287	6.0	14.4
1993.10 (통독3년)	2,358	1,166	659	135	7.6	15.3

출처 : 연방고용청 Amtliche Nachrichten der Bundesamtstadt fuer Arbeit.
1990~1993. 11월호

- 1993년 최근 동향

	서독		동독	
	'93.7	'93.10	'93.7	'93.10
○ 실업자 (천명)	2,325	2,358	1,166	1,165
○ 실업률 (%)	7.5	7.6	15.3	15.3
○ 단축근로자 (천명)	525	659	155	135
- 평균단축조업률 (%)	25.4	28.2	44.1	44.8
○ 직업훈련 참가자 (천명)	325	3.6	378	311
○ ABM 해당자 (천명)	43	41	223	213

출처 : 연방고용청 Amtliche Nachrichten der Bundesamtstadt fuer Arbeit.
1993년 11월호. P.1979, 1983

- 구서독지역의 실업자는 통독후 1년이 지난 시점까지 통독의 특수으로 인해 줄어들었다가, 그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음.
 - 통독당시 168만(실업률 6.1% 이었으나, '93년 10월말 현재 235만(실업률 7.6%)에 이르고 있음.
- 구동독지역의 실업자는 통독이후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93년도에는 당초 예상(위 도표 참조 : 135만 예상)과 달리 '92년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실업률은 통독당시 6.1%, '92년 통독2주년에 14.4%, '93년 통독3주년에 15.3%임.

o 구동독지역에서 구서독지역으로 이주문제

- 통독이후 연간 동·서독 지역간 이주자 현황

		연 도 별				
		1988	1989	1990	1991	1992
o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자(천명)	43	388	395	249	119
	전년대비(%)	89	796	1	-36	-20
o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주자(천명)	2	5	36	80	111
	전년대비(%)	3	104	605	121	38

출처 : 연방통계청, Zur Wirtschaftlichen und sozialen Lage in den neuen Bundeslaenden. Tabellenanung P.8 참조

- 통독시까지 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 이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가 1991년 이후부터 감소추세에 있으나, 구동독지역 유경험자 및 전문인력이 임금격차, 자녀교육, 문화생활 향유 가능성을 고려, 아직도 많은 동독인들이 이주(생활근거지를 완전히 옮김) 하고 있음.
- 집은 동독지역에 있으면서 서독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Pendelr)도 92년 연평균 36만(위 도표 참조)에 이르고 있음.

나.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대동독 고용촉진정책

○ 구동독지역에 노동행정체계 확립

- 연방고용청(BA) 산하 지방청 설치
 - 38개 지방고용청 및 159개 지소 설치
 - 노동행정요원 27,000명
- 노동행정 연수기관 설치
 - 1개소(Bantikow) 기 설치, 2개소 건립중

○ 고용알선

- '92 한해동안 66만명
- 지방고용청에 고용수급 현황이 입력된 전산자료 비치

○ 전직훈련, 자질향상 훈련 실시

- 기존의 직업교육기관을 활용한 전직훈련에 '91과 '92에 각각 90만명 참가
 - 1992년에 2억 DM을 예산으로 투입
- 고용촉진 및 자질향상 전담회사(Beschaefungs- und Qualifizierungsgesellschaften) 구동독지역에 설립

○ ABM(고용창출조치)의 특별규정 마련

- 고용촉진법(AFG)에 의하면, 기존 ABM 제도는 실업자가 6개월 이상의 실업기간을 거친후,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익기관(교회, 탁아소, 사회복지기관, 공공휴양소)이 국가의 보조를 받아 공익목적 사업수행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면, 이곳에서 보수의 60~80%를 받으며 임시취업을 하고, 그 기간동안 직업교육 또는 직업전환교육을 받아 재취업의 기회를 갖게됨.

- 구동독지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과도기간동안(애초에는 '91.6.30까지였으나, 구동독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92.12.31까지 연장함) 특별규정을 도입하여 연방고용청이 구동독지역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개입함.
- 우선 ABM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은, 그 지역의 실업률이 30%를 상회해야만 하나, 구동독지역에 대해서는 30%에 상관없이 실시함.
- ABM 조치에 의해 취업하는 노동자의 임금이 현저히 낮거나, 시간제 근무자였을 경우, ABM에서 취업하는 동안 기존 보수의 90~100% (기본은 90%까지이나, ABM 해당 노동자의 직능이 다른 직장을 구하기 아주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100% 까지임)을 과도기간동안 적용함.
- 구동독의 ABM 취업자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주택, 도로, 운하, 교통, 통신, 환경오염제거, 농로확장, 사회복지시설)의 복구와 확장에 투입하여, 실업수당 급여와 달리 생산활동을 통해 구동독의 산업입지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독산업 구조조정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함.
 - 특히 연방고용청은 구동독의 환경오염 잔재 제거와 환경미화, 사회복지시설 구축을 위한 24개 대형 ABM용 Projekt를 마련하였음.
- 이러한 ABM 조치를 통해 구동독지역에서만 '91에는 18만명이, '92에는 38만명이 각각 구제되었으며, '93에는 약 30만명으로 예상됨.

o 단축조업수당(Kurzarbeitergeld) 지급 강화

- 기존 단축조업 제도는 대량실업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적인 이유, 또는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조치에 의해 휴업이 불가피할 경우 취업상태를 유지하면서 근무시간을 줄여 근무하되, 6개월에 한해 단축된 시간에 한해서는 기존 봉급액의 63-68%(1명 이상의 부양자녀간 있는 경우 68%임)를 지급받는 제도임.

- 구동독지역 단축노동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특별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실업문제가 심각한 과도기간동안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단축조업 수당액은 단축시간당 구서독에서 적용되었던 비율인 63~68%를 그대로 적용하나, 단축조업이 경기침체에 따른 불가피한 이유에 기인한 경우는 '93.12.31까지 단축조업 가능기간을 18개월로 연장함.
 - 아울러 단축조업이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이유에 기인한 경우는 1995.12.31까지 단축조업 가능 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여 인정해 주도록 하고 있음.
- '92말 현재 단축조업 노동자들의 단축조업율(Arbeitsausfall)은 다음과 같음.

단축조업율	전체 단축노동자중 비율
10~25 %	34.3 %
25~50 %	26.6 %
50~75 %	14.3 %
75~100 %	24.8 %

o 조기정년퇴직(Vorruhestand) 실시

- 고용시장 부담을 덜기 위해 정년퇴직이 가까운 57세에 이른 남성, 55세에 이른 여성에게 준양로 연금(Altersuebergangsgeld)을 일정기간 (남자는 3년, 여자는 5년) 연방고용청과 연방정부가 부담하면서 조기 퇴직시킴.
- 이 조기정년 퇴직제는 구동독의 법률을 통일조약에서 그대로 도입하여 실시했는데, 동독주민들의 생활을 고려 약간의 특별경과규정을 두고 있음.

연 도	주 요 동 향
'92.12. 7	연방하원 법사위는 소추되지 아니한 구동독의 불법행위의 시효가 1949.10.11 부터 1990.10.2일까지 정지된 것으로 의결함.
'92.12. 9	가옥 Stasi 문서담당청은 개인신상확인을 위해 구동독 중앙주민등록처 자료를 1992.12.31 이후에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함.
'92.12.10	연방하원 Koko 조사위원회 (위원장 Friedrich Vogel)는 샬크-골토드롭스키의 구동독 대외무역주식회사 (Koko)가 세계 각처에 (서독,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태리 등) 최소한 148개의 회사를 운영, 외화벌이에 종사해 왔다고 발표함.
'93. 1. 1	'93.1.1 부터 신설주 연금은 '45년 보험가입자 기준으로 월평균 1,188 DM으로 서독 수준의 66%에 달함.
'93. 1. 4	마그데부르그 지방법원은 전 Stasi 요원 4명에 대해 전화 도청 및 우편물 절취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함.
'93. 1. 5	호네커 재판의 Braeutigam 수석 판사가 구 동베를린 지도에 호네커의 사인을 받아 달라는 그의 보좌관의 요청을 호네커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어 재판장직에서 물러 남.
'93. 1. 9	Waigel 재무장관은 사민당 집권 4개주 재무장관과 경제문제에 관해 협의하고, 통독경비조달을 위해 연대부과금을 제도입하기로 합의함.

다. 노조통합

o 분단시 동·서독 노조현황

- 서독에는 정치적으로 독립된, 단체교섭권을 가진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바, 16개 산별노조의 상위기관이자 최대 노조연합체인 독일노총(DGB)과 사무직 중심의 독일사무노조(DAG), 공무원 노조인 독일공무원연맹(DBB), 기독교인·사무직 중심의 기독교노조연맹(CGB), 현직·퇴직 군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독일연방군 연맹(DBV)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 동독에는 동독공산당(SED)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완전히 예속된 동독노총(FDGB)만이 있었음.
- 동·서독 노조회원수 현황(1989년말 기준)

단위 : 천명

노 조	서 독	동 독
o 독일노총	7,861	
o 독일사무노조	504	
o 독일공무원 연맹	794	
o 기독교 노조연맹	305	
o 독일연방군 연맹	265	
o 동독 노총(FDGB)		9,600
계	9,729	9,600

출처 : Soziale Marktwirtschaft im Schaubild. P.55

o 노조의 통합방식은 각 정당 및 사회단체의 통합방식과 같이 동독노조의 구조개편을 전제로 서독노조조직에의 가입을 통해 이루어짐.

- 애초 동독에서 자유총선 이전까지는 동독노조의 아래로부터의 민주화를 전제로 동독노조의 독자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서독과의 노조통합이 논의되었으나, 총선 이후 조속한 화폐·경제·사회통합을 통해 전반적으로 서독의 노동법 체계와 노·사질서가 도입되자 서독노조 중심의 일방적인 통합이 이루어짐.

- 동독노조 지도자들이 새로운 노동질서에 대한 무지와 경험 부족, 정치적인 과거경력 등으로 동독 노조회원들로부터 신임을 잃고, 자체 혁신과 민주화 과정이 디디어진 가운데, 서독노조가 주축이 되어 통합작업을 시작함.
- 우선 동독노총이 특별총회를 열어 1990.9.30 해체를 결의하자, 각 산별 노조별로 서독의 모형에 따라 동독노조가 재조직되고, 각 노조원은 각자 자유의사에 따라 새로 조직된 노조에 가입하는 형식을 취했음.
- 서독 최대노조인 DGB는 1990년 동독노총 해체이후 정권을 개정, 조직의 범위를 동독까지 확장한 후 각 주별로 DGB 주 지부를 결성하였는데, 1991년 초까지 이 주지부 결성작업이 완료되었으며, 주단위 이하의 지방조직은 그 이후 결성되었음.

o 통독이후 노조가입 현황

단위 : 천명

노 조 별	1990	1991			1992		
	(구서독)	서독지역	동독지역	전체	서독지역	동독지역	전체
o 독일노총(DGB)	7,937	7,933 (67%)	3,866 (33%)	11,800	7,632 (69%)	339 (31%)	11,015
o 독일사무노조(DAG)	504(1)			584			578
o 독일공무원연맹(DBB)	799			1,053			1,059

(1) 1989년 통계임.

출처 : 연방통계청 '93 통계연감. P.759

- 독일노총은 구동독지역 노조통합으로 1991년에 1990년에 비해 49%의 회원수가 늘어났으나, 1992년에는 구동독지역의 경제체제 구조전환에 따른 고용감소로 노조가입자가 줄어들었음.

4-2. 소득 · 생활수준

○ 동 · 서독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소득 및 소비수준 비교

단위 : DM

구 분	연 도 별			
	1990년하반기	1991	1992	1993상반기
○ 구동독지역				
- 총소득(1)	1,350	1,820	2,470	2,580
- 가처분소득(2)	860	1,020	1,290	(1,330)
- 소 비(3)	860	940	1,120	(1,180)
○ 구서독지역				
- 총소득(1)	3,710	3,710	3,920	3,770
- 가처분소득(2)	2,080	2,150	2,230	(2,200)
- 소 비(3)	1,790	1,860	1,940	(1,930)
○ 구서독을 100%로 했을때 구동독 수준				
- 총소득	36.4	49.1	63.0	68.4
- 가처분소득	41.3	47.4	57.8	(61)
- 소 비	47.8	50.5	57.7	(61)

- (1) 총 임금액을 노동인구수로 나눈 액수임.
 (2) 국민총가처분소득을 전체국민수로 나눈 액수임.
 (3) 국민총소비를 전체국민수로 나눈 액수임.
 (4) ()은 추정치임.

출처 : 연방통계청, Zur wirtschaftlichen und sozialen Lage in den neuen Bundeslaendern. P.72

- 연방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노동자 1인당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볼때 구동독지역 소득수준은 '90 통독 당시에는 구서독 대비 36.4% 였으나, '93 상반기에는 68.4%에 이르고 있음.
- 구동독지역 노동자 1인당 평균임금 : 2,580 DM('93)
- 구서독지역 노동자 1인당 평균임금 : 3,770 DM('93)

연방정치교육센터 자료에 의해 동·서독지역 노동자 1인당 산업부문별 평균 총 소득('93. 1-4분기 현재)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단위 : DM

산업부문별	서독지역	동독지역	서독을 100으로 했을 때 비율(%)
- 농림수산업	2,927	1,758	60
- 광업	4,793	3,540	74
- 제조업	4,172	2,343	56
- 건설업	3,143	3,230	103
- 무역 및 교통	3,541	2,475	70
- 공공기관 종사	3,865	2,996	78
- 개인 서비스업	3,038	2,392	79
총 평균	3,670	2,632	72

출처 : 연방정치교육센터,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P.756

· 구동독지역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92말 현재 구서독 노동자의 39%)과 무관하게 평균 소득이 상승한 주요원인은 노조에 의한 단체협약 체결을 통한 임금결정에 기인함.

· 통독이후 구동독지역에도 서독지역단체 교섭 규정이 적용되어서 단체협약체결 임금파트너들은 단계적인 임금협약(Stufenabkommen)을 통해 구동독지역 임금수준을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일정년도에 서독과 100% 혹은 그 미만에 도달하도록 합의한 바 있음.

· 단 몇몇 산업은 경제상황변화에 따라 기 합의된 임금협약 내용을 수정키로 하거나, 수정을 위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주요 임금협약 현황

노 조 별	협 약 내 용	비 고
0 일정시한을 정해 서독수준으로 100% 합의한 산업 - 금속업 - 철강, 도자기, 유리, 고무 - 인쇄, 신문, 잡지	- '94.4까지 : 100% 수준 . '91.4 : 71%, '93.4 : 82% - '94.10까지 100% - '95.10까지 100%	'94.12: 80% '96.7: 100% 로 조정 철강: '96.4: 100%로 조정 고무: 2년 연기
0 일정시한을 정해 100% 수준 미만으로 합의한 산업 - 공공서비스, 철도, 우편 -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자동차산업	- '92.5 : 70%, '92.12 : 74%, '93.7 : 80% - '92.4 : 60%, '93.3 : 80%	'94년 동결 예정
0 서독지역 수준을 무시하고 독자적 임금인상을 결정한 산업 - 화학산업 - 에너지, 수자원 관리 - 합성수지	- '92. 1 : 기존임금의 17.9% 인상 '92.10 : 기존임금의 7.7% 인상 '93부터는 매년 협상에 의거 - '92. 1 : 기존임금의 24% 인상 - '92. 7 : 기존임금의 9% 인상 - '92.1 : 기존임금의 12% 인상 - '92.10 : 기존임금의 6% 인상	'93.2: 9% 인상 '93. 5: 5.7% 인상 '93.11: 3.4% 인상

· 이러한 임금협상의 결과 1992년말 현재 임금협약에 의한 구동독 노동자 평균임금 수준은 구서독에 비해 73%임(※ 상기 실제노동자 평균임금 수준 68.4%와 다른이유는, 임금협약에 구속을 받지 않는 구동독 기업이 노동자에게 더 적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임).

특히 연방노동성 발표에 의하면 '92에는 '91에 비해 임금협약에 의한 결정 평균임금 수준액이 무려 25%나 상승하였음.

0 동·서독간 주요 제조업체별 노동시간 및 시간당 임금비교

산 업 별	주 노동 시간 (시간)				시 간 당 임금 (DM)			
	'91		'92		'91		'92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 전기·가스·수도	39.3	39.6	39.3	39.9	24.8	11.4	26.4	15.7
- 광 업	39.2	39.2	39.8	39.2	22.6	11.2	23.8	16.3
- 금속가공	38.7	39.5	38.5	40.4	22.3	10.0	23.3	11.6
- 화 학	39.7	40.4	39.6	40.2	23.0	8.8	24.4	11.9
- 제 지	40.4	40.5	40.0	40.0	22.8	9.1	24.2	11.8
- 기 계	38.9	40.5	38.4	40.6	22.5	9.8	23.8	12.0
- 전 자	38.0	40.2	37.7	40.4	20.3	9.4	21.2	11.7
- 피 혁	41.2	40.0	40.8	40.3	17.2	7.8	18.2	10.3
- 섭 유	39.8	40.0	38.8	40.2	17.3	8.2	18.4	9.8
- 식 료 품	41.6	40.9	41.0	41.6	18.7	9.1	20.3	11.3
총 평 균(1)	39.3	40.7	39.0	40.9	21.4	10.4	22.6	13.4

(1) 총평균액은 여기 기술된 분야 뿐만 아니라, 전체 제조업을 망라한 평균임.

출처 : 연방통계청, '93 통계 연감 P.601-602, 606-608

o 연금생활자들의 생활개선

- 화폐·경제·사회통합당시 구동독지역 연금수준은 구서독의 40% 였으나, 연방정부의 지속적인 연금인상 조치로 인해 '93.1 현재 구서독 수준의 85.9%에 이르고 있음.
- 특히 구동독시절 취업율이 높았던 여성 연금수령자의 경우 월평균 861 DM에 이르러 구서독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
- 구동독지역 월평균 연금액 인상 추이

단위 : DM

시 기 별	전 체 평 균	그 중	
		남 성	여 성
'90. 7	590	739	524
'91. 1	697	870	620
'91. 7	802	992	766
'92. 1	881	1,145	764
'92. 7	956	1,242	826
'93. 1	997	1,295	851
'90.7을 100으로 할때 '93.1 수준	169 %	175 %	164 %
구서독 수준을 100으로 할때 구동독 수준('93.1)	85.9 %	76.6 %	118.2 %

출처 : 연방통계청, Zur wirtschaftlichen und sozialen Lage in den neuen Bundeslaendern. P.26

- o 동·서독 지역간 생활수준의 평준화 문제는 동독지역 임금의 상승, 서독 지역으로부터 동독지역으로의 막대한 재정이전 지출에 힘입어 객관적인 통계상으로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격차는 상존하고 있으며, 동독주민들의 생활조건에 대한 불만 또한 여전히 남아 있음.

조속한 동·서독 지역간 임금수준의 평준화는 내적통일 달성에의 주요 전제조건이기는 하나, 경제정책적 측면에서 불때 딜레마가 존재함.

- 동·서독간 임금수준 격차가 지속될수록 구동독지역의 유경험자와 전문인력이 서독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에 따른 동독지역의 산업입지 조건은 더 악화될 수도 있음.

- 또한 인위적인 임금상승으로 구동독지역내에 수요를 창출하여 구동독 지역 경제의 재건을 앞당길 수도 있음.

- 그러나 구동독지역 노동자들의 생산성과 임금수준의 격차('92말 현재 서독 대비 동독의 임금수준은 63%, 생산성은 39%)가 줄어들지 않는한, 장기적으로 불때 구동독지역의 사업은 그만큼 경쟁력을 잃게 되고, 그에 따라 실업이 불가피해져 결국은 생활수준의 차이는 지속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

- 한 연구 결과('Wohlstandsurvey '93')에 의하면 동독주민들의 통일이후 생활수준에 대한 불만족의 원인은 통계상 나타나는 객관적인 생활조건에 있지 않고, 동독주민들의 높은 기대감 또는 서독주민들과의 비교심리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짐.

- 이러한 분석결과는 불만계층이 소득이 낮은사람, 실업자, 고용조건이 안좋은 사람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많은 동독내에서 상대적인 고속독자들 또한 불만족스럽게 생각한다는데서 더욱 명확해짐.

· “Wohstandssurvey 1993”의 연구분석 결과

.. 동·서독지역 주민의 1993년 생활수준에 대한 평가

동독지역주민		서독지역주민
	10	
	9	
서독주민 평균생활수준(8.5) 공정한 생활수준(8.1)	8	공정한 생활수준(7.9)
희망하는 실현가능한 최상의 생활수준(7.4)	7	희망하는 실현가능한 최상의 생활수준(7.5) 현재 자기 생활수준(7.3)
향후 5년 이후 생활수준(6.8) 현재 자기 생활수준(6.3) 5년전의 생활수준(6.2)	6	서독주민들의 평균생활수준(7.0) 향후 5년이후 생활수준(6.9) 5년전의 생활수준(6.9)
동독주민들의 평균생활수준(5.5)	5	
	4	동독주민들의 평균생활수준(4.9)
	3	
	2	
	1	
	0	

※ 0에서 10까지의 Scala 상으로 볼때 9은 최하의 생활수준, 10은 최고의 생활수준임.
출처 : 연방정치교육센터,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P.446

.. 우선 서독지역 주민의 경우 현 자기생활수준 인지정도(7.3)가
최하의 생활수준(0)보다 최상의 생활수준(10)에 가깝고, 공정한
생활수준(7.9), 희망하는 실현가능한 최상의 생활수준(7.5)과
거의 편차가 없음.

- ... 따라서 서독주민들은 현 생활수준을 스스로 높게 생각하고 있으며, 기대수준 또한 보다 자기현실에 접근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 아울러 현재의 생활수준을 5년전의 생활수준(6.9)이나 서독 지역주민 평균생활수준(7.0) 보다 높게 생각하고 있음.
- ... 다만,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5년 이후의 생활수준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점이 특이함.
- ... 반면, 동독지역 주민의 경우는 서독과 비교해 볼때 현재의 자기 생활수준(6.3)과 희망하는 실현가능한 최상의 생활수준(7.4), 공정한 생활수준(8.1) 등과의 편차가 더욱 심하다는 특징이 있음.
- ... 이와 같이 현재의 생활수준을 넘어선 미래기대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통독이후 현재의 생활수준에 대한 불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 아울러 구서독 주민의 평균생활수준(8.5)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도, 구동독주민들이 구서독주민과의 생활수준 비교에 익숙해져 있어, 생활에 대한 불만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4-3. 사회보장제도 확립

0 구동독지역에 실시할 사회보장의 원칙

- 화폐·경제·사회 통합조약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회보장체제를 도입
 - 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등 각 사회보험은 국가의 법적 감독하에 각각 공적인 자치기구를 두어 실시
 - 각 사회보험은 보험료에 의하여 운영하며 연금, 의료보험 그리고 실업보험의 보험료율은 서독의 부담률로 하고, 피용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
- 연금, 의료, 재해보험 관련 사무를 우선 통합하여 한 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되, 수지결산은 각 보험별로 처리
 - 1991.1.1까지 연금, 의료, 재해의 각 보험기관을 설립하도록 하는데, 이는 서독의 각 보험제도와 동일한 보험기구를 설치하는 것임.
- 동독에서 보험에 반드시 가입토록 하는 의무조항은 잠정적으로 계속 유지
 - 자영업자의 경우 기타 보험에 의한 보장이 있다면 임의로 가입 가능
-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부 한도액은 서독의 사회보험 원칙에 기초하여 별도로 정함.

0 서독식 연금제도 도입

- 화폐·경제·사회 통합조약 제20조에 의거 동독의 연금법이 서독의 연금법과 같아지도록 필요한 조치 시행
 - 동독의 강제가입 연금, 임의연금 등은 서독과 같이 하나의 연금체계로 통합

- 동독지역에서 새로 산정 지급되는 연금(서독마르크로 연금 지급)
수준은 동독의 평균 소득자로서 강제 및 임의연금에 45년동안 가입한 자가 현 동독 평균소득의 70%가 되도록 하고, 보험기간에 따라 가감함.
이때 새로 산정되는 연금액이 종전의 연금액보다 적을 경우 종전의 연금액을 지급
 - 최저연금액('90에 495 마르크)에 미달되는 자에게는 국가예산으로 연금과 최저연금액과의 차액을 사회부조 보조금으로 지급('96말까지)
 - 향후 연금액은 동독지역의 임금상승율에 따라 조정
- 연금 관리기구의 설치 운영
- 지역 연금보험 조직으로서 1991.1. 동독 신설 5개주에 주 보험사무소가 설치됨(임금노동자, 철도노동자, 선원에 대한 연금보험 담당).
 - 붕급생활자, 수공업자, 광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 연방보험기관이 동독 전지역으로 관할권을 확대하여 업무를 추진함.
- 연방정부에 의한 보조금 지원
- 연방정부에서 동독지역의 연금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90년중 20억 DM을 보조
 - 91년중 연방정부의 보조계획은 없는데(연금 기여금에 의해 충당), 92.1.1부터 연금개혁법이 동·서독지역에 동시 발효되어 동독지역의 연금재정에 190억 DM의 적자가 발생

동독지역의 연금보험 보험료 부담내용('91)

구	분	서독지역	동독지역
o 연금보험료율(피용자 및 고용자)		9.35%	9.35%
o 연금적용 최고한도 월수입		6,500 DM	3,000 DM
o 연금 의무가입 최저 월수입		480 DM	220 DM
o 고용자가 피용자의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피고용자의 최고 월수입		610 DM	280 DM
o 91년 전피용자 표준 보수 월액		3,360 DM	1,540 DM

0 서독식 의료보험제도 도입

- 화폐·경제·사회 통합조약 제21조에 의해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정해져 있음.
 - 동독은 서독의 의료보험제도를 도입·실시
 - 동독에서도 서독에서 질병시 6주까지 고용주가 임금을 100% 계속 지급하며, 7주부터 78주까지는 수입의 80% 수준인 질병보조금을 지급함.
 - 연금수급자도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며, 보험료는 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
- 보험료율
 - 동독지역에서는 피고용자 및 사용자 모두에게 6.4%의 보험료율이 각각 적용되고, 의무가입의 최고한도 소득은 '91에 월 2,250 DM(서독의 경우 월 4,875 DM)
 - 연금수급자, 실업보험수급자도 각 보험에서 의료보험료를 부담

0 서독식 실업보험제도 도입

- 구동독에는 공식적인 완전고용에도 불구하고, 경영합리화조치나 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가 있었으나, 사업보험제도가 없어 실업자가 속한 직장이 사회복지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왔음.
- 화폐·경제·사회통합과 더불어 실업보험금과 실업보조금(Arbeitslosenhilfe) 제도가 도입됨.
 - 근로자가 최근 3년동안 최소 1년간 의무실업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 순소득액의 63~68%(최소 자녀가 1명인 경우 68%)를 최소 6개월간(지급기간은 보험료 납부기관과 실업자 연령에 따라 다름) 수령

· 실업자가 실업보험금을 신청한 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실업보험 신청권리가 있는 기간이 지났거나, 실업자가 실업보조금 신청 이전에 최소한 6개월간 취업했을 경우, 순소득액의 56~58%(자녀가 최소 1명인 경우 58%)를 받음.

o 서독식 출산지원, 자녀양육지원 제도

- 구동독에서는 산전·산후 총 26주의 출산휴가가 있었으나, 서독식의 총 14주로 줄어듦.
- 그러나 자녀출생시 동독에서는 없던 15개월동안 월 600 DM의 자녀양육수당(Erziehungsgeld)이 지급됨.
- 동독에서는 취학전 아동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교육과 여성취업인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탁아소와 유치원의 시설이 서독에 비해 훨씬 잘 발달되어 있었는데, 1990.7 이후에도 과도기적으로 종전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다가, 1991년부터 근로자들의 수입증대에 따라 부모의 비용부담분이 서서히 커지도록 하였음.

o 사회부조금(Sozialhilfe)

- 자력이 가족의 협조, 기타 사회복지제도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에 처한 경우 생계비 지원금 형식의 사회부조금이 지급됨.
- '90.7.1부터 동독지역에도 사회부조금이 지급되었는데, 지원액은 독신자와 가장의 경우 월 400 DM의 기본급이 지급되며, 특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자(임산부, 자녀가 있는 독신자, 환자, 장애인, 수입이 빈약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본급의 20% 정도를 추가지급함.
- 이러한 사회부조 대상자에게는 난방비와 연료비가 추가로 지급됨.

o 주택수당(Wohngeld) 지급제도 도입

- 구동독에서는 임대료 보조로 임대료가 극히 낮았으나, 임대료의 현실화와 함께 가족수, 월간임대료, 가족의 수입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주거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구서독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주택수당을 지급함.

o 사회보장 행정체제의 확립 지원

- 인력, 기술 등의 지원
 - 동·서독의 각 주간, 도시간 자매결연을 맺어 행정요원의 상호파견을 통해 동독지역 사회보장분야 담당 공무원에 지도하고, 동독출신 공무원에 대한 교육기회 부여
 - 연방부처, 연방사회보험기관에서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하여 업무지도 및 지원
 - 서독의 자매주나 도시에서 병원 경영자, 사회복지 전문가 등을 동독의 자매주에 파견하여 지도 및 지원
- 사회보장 전문교육 및 홍보
 - 뒤셀도르프, 뮌헨 등 의료관계 전문교육기관에서 동독지역 의사에 대한 서독 사회복지행정 일반 및 전문교육을 실시
 - 연금·질병금고 등 사회복지 공공기관에서도 동독지역 근무자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
 - 연방 노동성·보건성 등에서 동독지역 국민들에게 각 사회보장제도를 설명·홍보하는 책자 및 팸프렛을 제작하여 배포

4-4. 주택문제

가. 동·서독 지역 주거실태 및 임대료 부담 현황

0 주택의 양적 현황

'90말 기준

구 분	독 일 전 체	서 독 지 역	동 독 지 역
총 주택수 (백만호)	33.6	26.6(79.2%)	7.0(20.8%)
주택보급률 (%)	99.1	97.4	106.1
주택수 / 100명	42.5	42.4	42.7

- 통일독일의 총 주택수는 3,360만호이며, 주택보급율은 99.1%로 매우 높음.
- 구동독지역의 주택은 총 700만호로, 양적인 측면에서의 주택보급율 및 100인당 주택수는 오히려 서독지역을 능가하고 있음.

0 주택의 질적수준

'90말 기준

구 분	서 독 지 역	동 독 지 역
- 호당 평균 주거면적(㎡)	86	64
- 1인당 평균 주거면적(㎡)	37	26
- 건축연도별 주택비율(%)		
· 1919년 이전	19	37
· 1919~1948	14	15
· 1949~1968	35	20
· 1968~1978	19	17
· 1979년 이후	13	11
- 주택내 신설 설비현황(%)		
· 목욕탕, 샤워시설 있음	99	80
· 실내화장실 있음	98	73
· 상·하수도 시설 있음	93	73
· 정화조 있음	89	58

출처 : 연방정치교육센터,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P.768

- 주택의 질적수준은 서독지역에 비해 동독지역이 훨씬 열악한 상태임.
 - 동독지역은 서독지역에 비해 호당 평균면적은 74% 수준,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70% 수준임.
 - 동독지역 전체주택의 37%가 1919년 이전에 건축되었으며, 주택내 실내화장실이 없어 외부 공동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주택이 27%에 이르고 있음.

0 구동독지역 임대료 부담현황

- 통일조약에서는 동독지역에 한하여 일정기간동안 낮은 주택임대료가 책정되도록 배려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소득수준 상승에 따라 인상이 고려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동독지역에는 '94말까지 잠정적으로 임대료 상한규정을 두고 있으며, '95 이후부터는 서독과 동일한 임대료 통제법 (Miethoeherrecht)이 적용됨.
- 구동독지역의 주택환경은 너무도 열악하므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고 집주인들이 주택개량과 현대화를 위한 투자의욕을 갖게 하고, 주택시장을 시장경제구조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하여 통독이후 2차에 걸쳐 기본임대료를 인상하였음.
 - 1991년 10월부터 임대료 급격 인상(1차인상)
 - .. 평균 5.25 DM/㎡를 인상함으로써 약 7DM/㎡가 됨(400% 인상)
 - ... 1.9 DM/㎡는 관리비, 토지세, 관리인 봉급 등의 운용비
 - ... 3 DM/㎡는 급수, 쓰레기처리 및 난방비용
 - ... 2.1 DM/㎡는 유지·보수비(Verwaltungskosten)
 - .. 과거 쓰레기처리비, 온수사용료, 일반관리비 및 난방비 등을 동독정부가 부담하던 것을 새로이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전환한 조치

· 1993년 이후 또다시 단계적으로 임대료 인상(2차인상)

.. 1단계 : '93.1.1 발효

... 과소책정 되었던 유지·보수비(2.1 DM/㎡)를 4.8 DM/㎡로
인상(+ 2.7 DM/㎡)

... 주택임대료의 상승추이(주거면적 50㎡ 규모 기준)

84 DM('90) → 432 DM('92) → 552 DM('93)

.. 2단계 : '94.1.1 발효

... 주택의 3가지 질적특성(Beschaffenheiten)을 충족시킬 경우
특성당 60 Pf/㎡씩 최고 1.8 DM/㎡까지 추가인상 가능

... 3가지 해당 특성은 ① 외부절연상태(열손실 방지 정도),
② 각종 설비기기(Geraete)의 질적수준, ③ 복도의 질
등으로서

①, ②, ③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택의 경우,
임대주택 사업자 스스로 보수 또는 현대화 시킨 후 추가
인상할 수 있음.

... 2단계 인상이 적용된 주택의 경우 순소득 대비 20%의 임대료
수준

- 주거비 부담 현황

· 통일이전 순소득대비 주거비의 부담비율은 서독이 평균 20%, 동독이
4% 수준이었음.

.. 통일이후 임대료 상승으로 '93 현재 서독지역은 25%, 동독지역은
1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동독지역에 대한 임대료 상한규정이 폐지되는 '95부터는 동독
지역도 서독과 유사한 2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함.

· m당 동·서독 지역과 임대료(난방비 제외) 현황

단위 : DM

주민수에 따른 지역별 구분	서독 ('92)	동독	
		'92	'93
2천명 미만	6.39	3.61	5.25
1천~2만명	6.65	3.84	5.58
2만~10만명	7.67	3.96	5.73
10만~50만명	8.20	4.03	5.81
50만명 이상	9.23	4.24	6.00
총 평 균	8.15	3.98	5.73

출처 : 연방정치교육센터,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P.768

- 동독지역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경감을 위해 특별주택수당(Sonder-Wohngeld) 지급

- 주택수당특별법(Wohngeldsondergesetz)을 제정하여, '91.10.1부터 '94말까지 기존 주택수당 지급방식에 준하여, 소득과 자녀수, 임대료를 기준으로 동독지역만 특례 부여
 - ..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경우 월평균 수입이 1,700~1,800 DM이고, 임대료를 280~320 DM을 지불할 경우 100 DM의 주택수당을 받음.
 - .. 2인 가족의 경우 월평균 수입이 1,200~1,300 DM이고, 임대료가 240~280 DM인 경우 100 DM의 주택수당을 받음.
- '93 한해동안 180만의 구동독지역 가구가 이 특별주택수당을 지급 받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30억 DM임.
- 독일 세입자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특별주택수당 지급 대상자들이 수당을 수령한 후의 구동독지역 주민의 수입에 대한 평균 주거비 부담율은 21%에 이를 것으로 추정함.

나. 주택분야 소유권의 재정립

○ 통일조약 제22조 4항과 의정서 주석 13항에 의하면 구동독 인민 공유(국유) 재산중 국유기업에 속해 있으면서 주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과 주택협동조합(Wohnungsgenossenschaft)에 의해 주거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에 일단 소유권을 이양하기로 되어 있음.

- 구동독 주택(총 700만호)의 소유형태는 다음과 같음.

- 인민공유(Volkseigentum) : 41.3%
- 주택조합소유(Genossenschaftliche Eigentum) : 17.6%
- 개인소유(Privatigentum) : 25%
- 기타 소유형태 : 16.1%

- 각 지방행정기관(Gemeinde, Städte, Landkreise)은 해당 재산에 대해 직접 처분권이 있는 바, 해당 재산을 시장경제에 기초한 주택경제 구조에 적응하도록 완전 사유화시키던가, 지방행정기관이 지분을 가지면서 회사형태로 전환시킴.

- 다만 재산법에 의해 이전 몰수재산에 대한 반환신청권이 있는 이해 관계인의 해당재산은 상기조치와 관계없이 반환되거나, 보상조치됨.

○ 각 지방행정기관은 시장경제에 기초한 주택건설업의 활성화를 통해 주택의 현대화와 보수유지를 위해 해당재산을 시장경제구조에 맞도록 사유화할 책임이 있고, 각 주정부는 이를 감독하도록 되어 있음.

- 그 사유화 형태는 다음과 같이 예상됨.

- 지방행정기관이 자본지분을 갖는 개인회사형태(유한회사, 주식회사)
- 주택조합의 소유로 대지와 건물 이관
- 제3차(개인 또는 기업에게) 매각
- 주택소유권법(Wohnungseigentumsgesetz)에 의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개인별 주택자산 형성자에게 매각

- 그러나 해당자산의 제3자에게 완전매각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제한을 받음.
 - 그 대지가 사회복지주택(Soziale Wohnung)의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 주택조합이나 개인의 주택자산 형성의 목적에 사용되어 주민들의 주택사정 해소에 이용되는 경우

- o 반환신청권이 있는 이해관계인의 이전 몰수재산은 원칙적으로 원소유자에게 반환되나, 다음의 경우에는 보상만 이루어짐.
 - 재산법 제5조에 따라 해당재산이 공동주택(Complexe Wohnungsban)이나 단지(Siedlungsbau) 조성에 사용될 경우
 - 통일조약 제22조 4항 2절에 의해 해당재산이 주택부양을 위해 구체적으로 건축 시행계획하에 포함된 경우('90.10.3 이후)
 - 재산법 제5조 1항에 따라 해당재산이 공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예를들어 학교, 유치원, 병원 등)

- o 소유권의 등기부 등재를 통한 조속한 주택분야 부동산 소유권의 재정립은 동독지역 노후주택의 보수유지와 현대화를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나 많은 행정상의 장애가 존재하고 있음.
 - 주택시장 투자자들에게는 주택의 개축과 신축시 은행융자를 얻고, 정부로부터 주택지원금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유권의 확정이 가장 시급한 문제임.
 - 아직도 이러한 주택분야 소유권 확정이 많은 장애를 안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지방행정 관서에 경험있는 주택건설 및 관리, 등기업무 담당 행정요원이 절대 부족함.

- 서독지역에서 등기업무 담당 공무원을 파견하여 한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나, 업무량 폭주와 아직 동독지역에는 지방행정 체계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아, 소유권의 개념이 희박했던 동독 지역에 소유권이 재정립 되는데는 어느정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차에 걸친 법개정으로 재산권 반환에 광범한 예외가 인정됨에 따라 재산권 문제에 관한 법률이 복잡해졌고, 행정절차 또한 여러부서를 거치게 되는 등 행정 장애가 존재함.
- 예를들어 주정부 수준에서 소유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거쳐야 할 부서는 경제성 산하 미해결재산권 관리청, 법무성 산하 등기소, 내무성 산하 측량 및 지적관리소, 지방국세청, 신탁청 등임.
- 연방정부는 주택분야 소유권 문제의 조속한 확정(반환 또는 보상)과 절차 간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법률을 개정 또는 입안 추진중임.
 - 2차('91.3.22~92.7.14)에 걸친 재산법 개정(Vermögensrechtsaenderungsgesetz)
 - '93.7.27 주택조합재산법(Wohnungsgenossenschaft-Vermögensgesetz)을 제정하여 110만호의 주택조합 소유 대지와 건물의 이관 및 사유화 촉진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
 - 보상법(Entschaedigungsgesetz)
 - 등기절차 신속화 추진법(Registerverfahrenbeschlenmigungsgesetz)
 - 물권청산법(Sachenrechtsbereingungsgesetz)
- 미해결 재산권중 부동산 및 대지분야 처리 현황('93.9.30 현재, 연방 미해결재산권 처리담당청 발표)

- 통독과 더불어 연방정부는 '93.12.31까지 이러한 구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도록 은행 등 신용기관과 합의한 바 있음.
 - 당시 구채에 대한 원금 및 이자는 주택임대회사의 당시 경영상태로 볼때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부자를 촉진키 위해 지불 유예조치를 취했던 것임.
 - 만약 당시 이 구채무를 자체 해결하도록 했다면 원리금 상환에 따른 임대료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했을 것임.
 - 구채무는 주택에 따라 120 DM~1,200 DM/㎡로 상이하나, 차이의 구체적인 원인은 구동독정부의 행정처리 미흡 때문이라고 보여짐.
 - 동일지역에서 같은 공법으로 동시에 건설된 같은 규모의 2개의 주택 비교시 어느 하나는 360 DM/㎡, 다른 하나는 640 DM/㎡ 등으로 상이한 경우가 있음.
 - 임대료로서 구채를 충당토록 할 경우, 유사주택의 ㎡당 임대료가 서로 다르게 형성되는 모순이 발생했을 것임.
- 지불유예 만료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연방정부는 93.7 연대협약 체결시 주택분야 구채무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함.
- 주택관련 총 구채무는 원리금 포함 590억 DM으로 주택에 평균적으로 분배하면 150 DM/㎡(구동독지역 형편상 매월 1DM/㎡ 정도만이 보수하면서 상환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인데, 이중 150 DM/㎡을 기준으로 계산한 총 310억 DM을 '95.7.1부터 탕감키로 하고, 지불유예 만료시점인 '94.1.1부터 탕감시점인 '95.6.30까지 구채무 310억 DM의 이자발생분(70억 DM 추정)을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분담키로 함.
 - 총 590억중 310억 DM을 제외한 280억 DM을 각 신설주 지방자치단체와 주택관리회사가 상환키로 함.
 - 아울러 주택관리회사는 관리주택의 15%까지 구채무 청산을 위한 보조금을 받는 대신에, 10년 이내에 관리주택을 모두 사유화할 책임을 지게됨.

라. 노후주택의 정비 및 현대화

- 연방정부는 동독지역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의 신축물량 증대도 중요하지만, 기존 불량주택의 질적수준 유지·개선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 신설5개주의 주택 700만호중 대부분이 정비를 필요로 하고 있음.
 - 모든 주택의 난방설비와 대부분 주택의 급·배수시설 및 배전설비 현대화 필요
 - 1961년 이후 신축된 주택은 대부분 조립식공법(Plattenbau)으로 건설되었으나, 사용자재의 질이 낮고 건축후 보수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
 - 질적개선을 위한 임대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그 인상속도는 동독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속도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동독주민의 서독지역 유입 지속시 독일전체의 주택문제 심화를 예상하여 동독지역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음.
- 연방정부의 각종 지원내역
 - 동독지역내 고건물 주택의 현대화·정비에 대한 이자 지원 (Zinsenbeihilfe)
 - 도심지 고건물을 현대화시킬 경우 금융비용중 2%를 국가에서 이자 차액보전(총 500억 DM을 연방재건은행에서 지원)
 - 조립식 공법으로 신축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3%의 이자차액 보전
 -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주택사업자들은 주택투자용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보증

- 민간주택건설촉진법(Foerderungsgeset fuer privat Wohnungbau-investitionen)상의 특별감가상각(5년대 50%) 조항을 '96까지 연장
- 학생기숙사 건립 4개년 계획에 따라 총 2.5억 DM의 연방지원금 투입 개시
- 동독지역내 주택소유자가 자기 이용목적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Eigenbedarfskuendigung)의 경우 '95말까지는 특별경우에만 인정
- 연방정부의 지원책에 따라 '93년 4월말까지 동독지역 주택의 25% 이상이 보수·정비(Sanierung) 되었고, 약 4.3만호의 주택이 재건축 되었음.

o 구동독지역 건축경기 현황

- 구동독의 건축산업은 구동독 전체 경기활성화와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 건설 수주총액

단위 : 백만 DM

년	도	주 택	경제건축물	공공건축물	총 계
1991		13,310	19,980	15,670	48,960
1992		19,280	29,830	23,140	72,250
전년대비 (%)		+44.9	+49.3	+47.7	+47.6

4-5. 환경분야

- 계획경제 실패의 유산으로서 그 체제가 안고 있던 여러가지 구조적 요인 때문에 구동독지역에 환경오염 잔재가 심각
 -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자기책임하에 무슨일을 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되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았음.
 - 반면 서독에서는 각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철저한 환경보호 의식을 가지고, 주위의 것부터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쓰레기 분리수거, 세제 안쓰기 등)
 - 계획경제체제는 단기적으로 성장위주의 할당량 달성만을 강요해, 생산수단 투자에 있어 환경보호적 장치마련과 환경보호적인 산업구조적 조정을 어렵게 만들.
 - 수급을 조절하는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분야의 자원 같은 경우 억제작용이 없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어 환경오염 가중
 - 국제적으로 폐쇄적인 자력갱생적 경제체제로 환경보호 기술과 경험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환경보호 분야의 국제적인 노동분업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됨.
 - 더구나 자립경제체제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더라도 사용 가능한 자국의 자원을 써야하므로 환경오염을 가중시킴.
 - 농업분야에서 생산기술이 열악하고, 환경을 해치는 화학비료·농약을 남용, 대지오염을 가중시킴.
- 구동독지역 환경오염 실태
 - 수질오염
 - 하천의 42%, 저수지의 24%가 오염 때문에 정수처리를 하여도 식수로 사용 불가능

- 환경기준으로 볼때 전체 수량의 3%만이 양호
 - 95% 이상의 산업폐수가 불량한 정화시설을 거쳐 하수처리
- 대기오염
 - 주민 1인당 먼지량과 아황산가스량은 서독의 8배
 - 구동독 인구중 430만이 먼지량이 서독기준치보다 높은 곳에서 거주하며, 600만은 아황산가스량이 서독기준치보다 높은 곳에서 거주
- 쓰레기 오염
 - 1인당 구동독주민의 쓰레기량은 175 kg, 구서독주민은 그것의 50% 수준임.
- 토지 황폐화
 - 전체 토지의 40%가 갈탄채취 및 적재, 휴경없는 농작물 경작, 관티소홀 등으로 황무지화
 - 전체 토지의 10% 가량을 동독 인민군과 소련군이 마구 사용하여 황폐화
- 0 동·서독 환경통합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 환경통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3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음.
 - 동독지역의 정확한 환경오염실태 파악
 - 동독지역의 환경수준을 구서독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환경정화에 소요되는 정치적, 경제적인 재수단의 강구
 - 서독지역에서 환경보호체계를 확립하기까지 겪었던 시행착오를 참고하여, 동독지역에는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환경정책을 추진
 - 동독에서 대변혁 이후 이미 동·서독 통일이전에 양독 정부간 공동성명을 통해 공동환경보호 위원회를 발족시키고, 환경통합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 바 있음.

- 동 위원회는 공동계획의 수립,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응급대책 마련, 관련법규 마련의 임무를 띠고 있었으며, 특히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의 13개 프로젝트를 선정, 우선 정화하기로 함.
- 통일조약 24조에는 1990.7.29자 동독환경법(Umweltrahmengesetz)에 따라 통독이후부터 서독의 환경법이 동독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예방의 원칙, 원인야기자 부담의 원칙하에 동독지역의 환경수준을 서독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음.
 - 통독이후 구동독지역에는 기존 환경정화시설에 대해서는 과도기적으로 서독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새로운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존 서독의 환경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연방환경성은 1990.11“ 신실주의 환경정화와 발전에 관한 기본지침”(Eckwerte der oekologischen Samierung und Entwicklung in den neuen Laendern)을 발표하면서, 2000년까지 동독의 환경수준을 현 서독수준으로 까지 개선한다고 약속한 바 있음.
 - 2000년까지 서독수준으로 동독지역의 환경정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2,000억 DM으로 추정(Ifo 경제연구소)
 - .. 폐수처리 시설 : 1,250억 DM
 - .. 공기정화 시설 : 230억 DM
 - .. 쓰레기처리 시설 : 340억 DM
 - .. 오염지대 정화 : 110억 DM
 - .. 식수문제 해결 : 170억 DM
 - 정부의 구동독지역 환경재건 프로그램
 - .. 심각한 환경오염 부담지역에 긴급 대응책을 마련, 환경정화와 아울러 실업감소 도모
 - ... 이미 조사된 12,250에 달하는 구오염 잔재 부담지역중 심각한 196개 지역에 우선 정화 실시

- ... 25만 ha에 이르는 구동독과 소련군 주둔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
- ... 강 유역에 27개 정수시설 긴급 건설
- ... 환경정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 ... 환경정화 국제전시회 개최, 초현대적 환경정화기술 도입
 - ... 특수폐기물 적치장 건립
- ... 투자재원 마련
 - ... 폐기물 특별부과금, 탄산가스 특별부과금 징수 예정
 - ... 사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정화회사 설립시 세제상 혜택 부여
- ... 구동독의 환경정화인력 자질 향상
 - ... 환경전문가를 파견, 자문·교육 훈련

· 통독 3년이 지난 현재 구동독의 환경오염 특히 수질과 공기는 눈에 띄게 그리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정화되었음.

- 이는 정부, 사기업, 각 개인의 노력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우선 구동독 기업의 구조 재편과정에서 특히 환경오염을 심하게 유발시키던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조업을 중단함에 따른 공짜효과(Gratiseffekt) 때문이기도 함.
- 정부는 동독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를 주목하고, 이 에너지 산업의 현대화에 중점을 두어 눈에 띄는 환경오염 정화의 효과를 노렸음.
 - ...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갈탄의 사용을 억제하고, 유황배출이 적은 석탄을 사용토록 구 발전시설을 교체함.
 - ... 각 가정과 기업에 에너지 절약형 기자재를 보급, 에너지 효율을 높여, 궁극적으로 에너지를 적게쓰도록 유도하고 있는 바, 1992년 말까지 구동독 전체의 에너지 사용은 30% 절약한 것으로 나타남.

- 식수의 경우 물론 구서독이나 EC가 요구하는 법정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통독 직전처럼 식수로서 불가능한 상수도원은 거의 없어지게 되었음.

- 쓰레기 처리장의 경우도 시설의 현대화로, 쓰레기 배출량은 늘어났지만 처리장 수를 7,700개에서 90개로 줄였음.

- 구동독 국유기업의 환경오염 잔재 때문에 투자자들이 기업인수를 꺼리고 있음을 감안, 연방정부는 신탁청을 통해 이들 기업의 환경오염 관련 구채무(Altlast)를 면제시켜 줌으로써 경제재건과 아울러 환경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음.

- 영업상 또는 경제활동 목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 과거 동독기업이나 대지를 인수하려는 자에게 '90.7.1(화폐·경제·사회통합 발효시점이자 동독지역에 서독의 법에 준하는 환경보호법 도입시점임) 이전에 원인 제공으로 발생한 환경오염 부문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의 책임을 면제함.

- .. 이러한 환경오염과 관련된 구채무(Altlast) 면제신청은 주정부 해당 관청에 '91.12.31까지 제출하여 처리되었음.

- 이러한 조치로 구동독 공유기업 매각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환경오염 잔재 문제(과거 서독의 법률적 기준으로 각종 환경정화와 시설을 마련하는데 막대한 자원 소요)는 신규투자자가 원인제공을 하지 않은 이상,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신탁청과 주정부가 각각 부담기로 함.

- .. 일반기업의 경우 신탁청과 주정부가 각각 60:40으로 재정부담을 하며, 갈탄지역 정화와 같은 대형프로젝트일 경우 각각 75:25로 부담하는데, 신탁청을 통한 연방정부 부담분은 5년동안 총 150억 DM에 이룸.

- 0 정부의 각계각층의 노력에 힘입어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독이후 다른분야 특히 경제·사회적 생활수준에 비해서 환경정화 수준에 있어서는 동·서독간 격차가 덜 좁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부가 약속한대로 2000년까지 동·서독간 환경수준 격차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 몇가지를 지적할 수 있음.
- 우선 경제와 환경간의 자원배분의 문제로서, 환경정화에는 막대한 돈이 소요되는 바, 현재 동독지역에서는 빠른 경제성장을 통한 경제재건과 실업자 구제가 환경정화 문제보다 우선시되고 있기 때문임.
 - 통독이후 독일에서는 과거 서독이 경제발전 단계에서 논의되던 경제 성장과 환경보호간의 우선순위 논쟁이 전개된 바 있음.
 - ... 경제계 대표들은 동독산업에 너무 엄격한 환경보호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동독지역의 산업입지로서의 매력을 약화시켜 새로운 투자에 장애를 조성하고, 아울러 실업문제가 심각한 이 지역의 기업들이 조업을 중단하게 되어, 결국 동독의 재건이 지연되고, 이 지역이 경제적·사회적 낙후지역화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당분간 이 지역에 서독과 다른 좀 완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 이에 대해 연방환경성은 전문가에게 위촉한 용역결과보고서인 “투자결정에 있어 환경문제가 산업입지 조건에 미치는 영향” (“Einfluss umweltbezogener Standortfaktoren auf Investitionsentscheidungen”)에서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엄격한 독일의 환경보호 기준이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비교적 적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 ... 오히려 환경보호산업 육성이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서독의 주요수출산업(전세계 환경보호 산업시장의 시장점유율중 독일이 21% 차지)으로서 연간 400억 DM의 매출액과 70만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함.

- 그러나 서독지역 또한 엄격한 환경보호 기준 적용이 더이상 경제발전장애가 되지 않고, 환경의 질적확보와 경제계간의 이해가 상충이 되지 않는 가운데, 상호 보완적으로 환경보호산업이 육성되는데 무려 20여년이 걸렸던 경험을 상기해보면, 경제적으로 낙후된 동독지역의 환경수준이 서독지역 수준으로 평준화 되고, 동독지역에도 “환경보호적 시장경제”(oekologischer Marktwirtschaft) 체제가 확립되는데는 적어도 1세대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임.
- 통독이후 3년동안 정부가 동독지역 재건을 위해, 환경보호문제보다 경제문제를 우선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음.
 - 조속한 동독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법”(Beschleunigungsgesetz)의 제정에 있어서, 교통망 확충을 위한 17개의 ‘독일통일 프로젝트’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참여배제와 서독지역에 적용하는 환경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삽입한 바 있음.
 - 통독이후 새로운 헌법제정이 진행중인 바, 일부에서 국가의 목표로서 ‘환경보호’를 명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제계의 반대로 확정되지 않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연방정부는 구동독지역 환경정화 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과 가계에 폐기물 특별부과금, 탄산가스 특별부과금 등 환경관련 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나, 기업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기업측이 반대에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다음은 동독지역 주민들의 소비욕구 증가와 동독지역의 뒤늦은 급속한 산업화로 환경오염이 새로운 형태로 가중되고 있기 때문임.
 - 동독주민들은 이제까지 억눌려왔던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생필품을 소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3년동안 쓰레기 배출량이 1인당 2배로 증가하였음.
 - 아울러 주민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서독지역 수준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 형편임.

4-6. 의료·보건분야

가. 통독 초기 취약분야에 대한 대동독 긴급지원

- 서독연방정부 예산(1990년 총 5억 2천만 DM)으로 열악한 동독 의료환경 개선 지원
 - 현대적인 의료기구 및 병원 소요물품, 약품 공급
 - 장애인용 의료보조기구 공급(5천 5백만 DM)
 - 양로원 소요물품 및 침대공급
 - 85대의 구급차량 공급
 - 동독 중환자 1,305명을 서독지역 병원에서 치료
 - 사회복지기관의 구호소 건립시 지원 등
- 동독 의료·보건 인력에 대한 자질향상교육 실시
 - 서독의 의료교육기관에서 장·단기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특정분야 인력을 중점적으로 교육시킴.
 - 중점분야
 - 공중보건, 정신병 치료, 예방의학, 식품위생, 수의학 행정, 식수정화, 습관성 질병 상담, 의약품 제조, 생체공학
- 병원, 양로원, 장애인시설 확충 등 투자지원
 - 연방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시설의 개축 및 정화 지원
- 식수원 정화 및 식수공급시설 개량
 - 식수의 질 향상과 식수원 보호를 위해 연방정부의 예산 투입

나. 법정의료보험체계 구축

○ 의료보험조합 기구 설치

- 1991.1.1부터 서독의 의료보험 체계가 동독지역에 도입, 전면 실시되었는 바, 동독 전지역과 직장에 법정의료보험체계 구축이 거의 완료되었음.

 - 구동독 13개 관구에 지역의료보험조합(AOK)가 설치되었음.
 - 사무원·노동자 의료보험조합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은 구동독지역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했으며, 61개의 새로운 직장의료보험조합과 30개의 동업자 의료보험조합이 신설되었음.
 - 광산의료보험조합, 농업의료보험조합, 선원의료보험조합은 각각 설치중임.

- 각 보험조합은 전지역에 보험회사망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전 종사인원의 80~90%가 구동독 출신인데, 초창기 직무교육과 자질향상교육을 서독의료보험기관이 담당하였음.

- 구동독지역 의료보험 가입자 수 및 종사자 수('92말 기준)

구 분	가입자수 (만명)	비 율 (%)	종사자수 (명)
지역의료보험조합	710	61.3	12,000
사무원·노동자 의료보험조합	290	24.8	6,200
직장의료보험조합	90	7.1	2,000
동업자의료보험조합	29.6	2.5	750
	약 1,170		

※ 가입자 수는 본인만을 말하며, 가입자의 가족은 280만명임.

※ 농업 및 선원의료보험조합 가입 현황은 아직 파악이 안됨.

- 1991.1.1부터 동독지역 주민도 서독주민과 같이 일정한 소득수준 이상인 경우 법정의무보험이 아닌 사실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바, 동독지역의 임금수준이 낮음을 감안, 과도경과기간동안 특별규정을 두었음.
 - 1991.1.1~1991.6.30까지는 법정의무보험 기준 소득액이 2,250 DM, 1991.12.30까지는 2,550 DM, 1992.1.1부터는 3,600 DM임.
- 보험료율은 1991.12.31까지 모든 의료보험조합이 동일하게 총소득액의 12.8%(피고용자 및 고용자 각각 6.4% 반반 분담)를 적용했음.
 - 1992.1.1부터는 각 의료보험조합이 각 조합 금고의 지출과 수입을 고려, 보험료율을 달리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보험료율 자유화 이후 일부 직장의료보험조합은 수입과 지출을 고려, 보험료율을 낮추기도해 '92 평균 구동독지역 의료보험료율은 12.7%로 나타남.
- 의료보험조합금고 운영현황을 보면, 당초 예상과는 달리 '91에 동독지역의 경우 26억 DM의 흑자(수입 254억 DM, 지출 228억 DM)를 기록했음.
 - 보험료율의 책정이 걱정했던 요인도 있지만, 주요인은 구동독지역의 경우 구서독지역에 비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부양가족의 수가 더 적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구서독의 경우 100명의 가입자당 46명의 부양가족이 있는데, 구동독의 경우는 24명으로 그 절반임.

다. 의료기관 구조조정

- o 기존 의료기관의 서독식 의료체제로 구조조정 및 의사들의 개업, 병원 사유화에 관한 규정은 화폐·경제·사회통합조약 제22조 및 통일조약 33조에 명시되어 있음.

- 동 규정에 의하면, 동독국민의 의료 및 간호를 위하여 현행 동독의 의료체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동시에 국영의료기관의 사유화를 추진하여, 서독식의 의료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였음.
- 동독정부는 통독이전에 개업의, 개업치과의, 양국 그리고 자영독립 의료기관과 민영공익병원의 개설에 관한 허가업무를 실시함.
- 통독이후에도 입법기관은 동독지역의 의료수준이 신속하고 꾸준히 개선되어 서독지역수준과 동일하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0 의사·치과의사들의 신설 개업

- 기존의 응급종합병원, 국영진료실, 직장내 보건의료실에서 활동중인 의사들을 기존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자지원을 받아 개업의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 노령 등 개인사정에 의해 개업이 곤란한 의사들도 각 의료기관에서 종래와 다른형태로 고용됨.
- 개업 현황
 - 의 사 : 총 20,000명중 15,434명('92.5월말 현재)
 - 치과의사 : 총 12,742명중 9,708명('91말 현재)
- 의료혜택 수준
 - 아직 일정주민당 의료보험조합과 계약한 개업의 숫자가 동·서독 지역간에 차이가 있어, 완전한 의료혜택수준 평준화에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91말 현재 구서독지역은 860명당 1개의 의료보험조합과 계약한 개업의가, 구동독지역은 1,090명당 있는 것으로 집계됨.
- '92 중반 기존 동독병원의 기본형태인 응급종합병원(Poliklinik)의 70%가 해체되었거나, 다른형태(건강센터, 공동일반의 등)로 구조변경 되었으나, 아직도 전 의료행위의 10% 정도는 잔류 동독 종합병원이 맡고 있음.

o 대형종합병원(Krankenhaus) 시설의 확충

- 동독지역의 대형종합병원은 건물이 노후화되고 의료장비 수준이 열악하여, 서독수준으로 개선하는데 약 300억 DM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짐.
- 각 대형종합병원의 보수와 신설은 각 주정부 소관임으로, 주정부에서 계획을 작성하되, 연방정부는 종합병원 재정지원법(Krankenhausfinanzierungsgesetz)에 의해 재정지원함.

o 정신병원 시설 및 의료체계 정비

- 동독 정신병원 시설 및 의료체계는 서독이 60년말 정신병원 개혁을 실시하기 이전의 수준으로 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전근대적인 것으로 나타남.
- 연방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용자를 통해 시설확충을 위한 부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산하 의료교육기관을 통해 간호 및 행정인력의 자질향상을 실시하고 있음.

o 보건소 등 공적 보건기관체계 구축

- 서독 보건기관체계에 따라 동독지역 각 지방에 226개의 보건소 신설
-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이 주민에 대한 보건·위생 상태 유지 및 건강 증진임.
 - 건강 계몽, 상담, 교육
 - 모자건강 상담, 학교 양호교육
 - 전염병 예방, 환경위생
 - 진단서 발급
 - 전염병 및 각종 질병 통계

라. 약국 사유화 및 의약품 공급 확대

o 약국 사유화

- 총 2,000개의 국영약국(통독전 인구 8,000명당 1개, 서독은 인구 3,500명당 1개)중 '92.3말 현재 1,660개 사유화(89%)
 - 약 250개 약국이 신설되었음.
- 민주적으로 선출된 약사회가 자율적으로 약국의 개업 및 활동에 대해 감독업무를 맡음.

o 제약회사의 생산시설 확충, 감독 강화

- 구동독 제약회사가 생산한 약품들의 효능 및 안정성은 비교적 서독 기준에 이르고 있지만, 몇몇 약품들도 WHO의 권고규정(GMP-Empfehlung)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생산시설의 개선이 요구되었음.
 - 모든 제약회사는 '92.12.31까지 제반규정에 상응한 생산시설 확충을 완료함.

o 약품공급 체계 정비 및 약품공급 확대

- 소매약국과 도매약국의 사유화를 추진하고, 약품 유통체계를 정비하여, 통독 이전에는 14일이 걸리던 약품전달체계를 1일로 단축함.
- 통독이전에는 2,000여종의 약품(그중 600종은 수입)이 유통되었으나, 통독과 더불어 70,000종으로 확대됨(그중 9,000종은 서독지역에서 공급)
- 동독주민들의 서독의약품 선호 및 의약품 가격의 등·서독 동일화로 인한 동독의료보험의 적자를 지원하기 위해, 서독제약회사, 도매상, 약국들이 '91.4.1부터 '93.12.31까지 22억 DM을 각 의료보험조합에 지원하였음.

마. 의료행위 종사자들의 면허·자격 인정 문제

○ 의사, 치과의사

- 구동독의 법에 의해 발급된 면허증은 서독의 연방의사규정(BAO)과 치과치료행위에 관한 법(ZHG)에 의해 발급된 면허증과 기본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되며, 이 면허증으로 독일전체에서 개업이 가능함.
 - 다만, 1988.6.30 이후에 구동독의 법에 의해 발급된 면허증을 소지한 자들은, 18개월동안 특정한 병원에서 의료행위(수련의 활동 포함)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새로운 면허증을 받을 수 있음.
- 과거 서독지역에 알려져 있지 않는 의학이론전문 분야에 관한 구동독 법에 의한 면허증도 독일전체에서 인정이 되어, “특수분야의사”라는 자격은 유지되나, 구체적인 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BAO 규정에 의거, 소정의 교육을 거쳐 의사로서 새로운 면허증을 신청해야 함.
- 구동독 법에 의해 인정된 전문의 또는 전문치과의 자격증은 단지 동독지역에서만 유효함.
 - 전문의, 전문치과의 자격인정을 위한 재교육 신청 및 그에 따른 자격부여는 각 주법령에 의거 규정됨.

○ 의대, 치의대생

- 1990.10.3에 구동독지역에서 의학 또는 치의학과를 졸업한 학생은 그때까지 동독에서 적용되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며, 이 구동독 졸업자격증은 구서독지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고시 합격율 하고 5~6년의 의대, 치의대를 졸업한 후 받는 졸업자격증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함.
- 구동독 의대, 치의대 졸업후에도 18개월간의 수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구서독에서와 같이 면허증이 발급됨.

o 의료시술사(Heilpraktiker)

- 독일통일과 함께 의료시술사법(Heilpraktikergesetz)이 동독지역에도 적용되며, 동독의 의료시술사 자격증은 독일전역에서 서독자격증과 똑같은 효력을 가짐.

o 약사, 수의사

- 구동독 법에 의해 발급된 개업면허증이 통일후 독일 전지역에서 약국 개설 하는데 유효함.

5. 내적·심리적 분야 통합

5-1. 교육 통합

가. 구동독 교육제도와 교육분야 통일준비 작업

0. 구동독지역 교육제도

- 다원주의와 복선형 학제에 기초한 서독의 교육과 달리 동독의 교육은 단일성, 국가성을 강조했는데, '전인격적으로 조화된 발전하는 사회주의적 인격을 개발·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통해 공산당이 규정한 전체적인 목적을 위해 '개인의 사회적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 이리하여 국가는 교육에 있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유치원에서 교육이 끝날때까지 국가계획 아래 사회주의적 가치관을 교육했음.
- 부모는 자녀교육에 대한 권리가 없었으며, 교사는 SED(동독 공산당)의 이념적 목적 달성을 위해 당을 대신하여 지도할 의무를 가져야 했음.
- 1965년부터 통독직전까지 유지된 동독의 단선형 학제에 의하면 보통 교육은 10년제 종합기술학교(POS : Polytechnische Oberschule)와 그후 2년간의 추가 종합고등기술학교(EOS : Erweiterte Allgemeine Polytechnische Oberschule)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 종합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입학자격을 가지는데, 2년제 종합고등기술학교의 입학은 동독국민경제 계획에 의한 소요 노동력 판단에 좌우되었음.
- 대학은 통독직전 54개교가 개설되어 있었고, 총 13만명이 등록되어 있었는데, 80년대말 동독에서 대학입학자격을 지닌 학생수는 그해 같은 학년의 13.5%로 서독의 절반 밖에 못미쳤음.
-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기준에 의거하여 모든 졸업생의 대학진학을 선별 심사하였음.

- 직업교육의 경우 서독은 직장과 학교에서 각기 이론과 실습을 가르치나, 동독은 견습공의 70% 정도가 산업체내 실습교육장에서 이론과 실습을 동시에 받았음.
 - 견습공의 42%는 제조업에, 16%는 농업에, 11%는 산림·식품산업 분야에서 교육을 받았음.
- 그 이외에 스포츠, 음악, 외국어, 특정자연과학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특수학교가 있었음.

o 통일과정에서 교육분야 통합작업

- 동독의 대변혁 이후부터 Modrow 집권시까지, 동독내에서 논란이 되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체교육 개혁이 있었음.
 - 군사교육 폐지('89.11.6)
 - 주5일 학습 실시('90.1.25)
 - 외국어 학습 중점 변경('90.2.6)
 - 대학입학 취득과정 개선('90.2.28)
- 동독의 자유총선이후 서독식 교육제도에 따른 동독교육제도의 개편 및 개혁작업에 대한 각종 단체들의 제안이 있었고, 새로 선출된 동독 민주정부는 서독식에 따라 통일의 기초작업을 해나감.
 - 연방-주 공동위원회의 동독교육제도 재편을 위한 기본원칙과 건의사항('90.4.23)
 - 학술자문회의의 학술분야와 연구분야의 변혁에 관한 건의사항('90.7.6)
 - 동·서독 교육 공동위원회('90.5.11~9.18간 활동)는 동·서독 교육제도의 공동성장과 일반학교제도의 개혁을 위한 기본원칙과 권고사항을 발표함('90.9.26).
 - 동독 인민의회는 서독의 직업교육법을 그대로 동독에 적용한다고 의결함('90.7.20).

- 학칙개정으로 부모와 학생과 교사의 공동결정 및 참여권 보장 ('90.9.18)
- 새로운 대학교육과 교사연수교육을 위한 법적인 여건 조성('90.9.18)
- 통일조약 37조에 교육분야 통합의 기본원칙을 정하였음.
 - 통일조약중 교육관련분야
 - .. 동독내에서 취득한 자격증, 졸업증의 동등가치 인정 및 절차
 - .. 교원시험에 교육장관회의(KMK)의 결정절차 적용
 - .. 학제변경은 각 지역 주들이 결정하되, 합부르크 협정과 교육장관회의 추가합의사항을 기초로 함.
 - .. 졸업이전 대학의 자유로운 왕래시 시험성적은 상호인정됨.
 - .. 대학입학자격의 인정은 교육장관회의의 결정에 따름.
 - 통일조약은 교육통합에 따라 발생하게될 자격·학위인정 및 전·입학 등 학생교육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경과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과도기적인 혼란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둠.
 - 학제 등 교육개혁 관련사항은 헌법상 보장된 바와 같이 다원주의에 입각, 각 주가 현실에 맞게 재량껏 처리하도록 함.

나. 보통교육(대학교육 이전까지) 제도 개편

o 학제의 변경

- 구동독지역 신설5개주(동베를린 지역은 서베를린 학교법을 그대로 수용)가 독자적으로 '91.6.30까지 학교제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하였는데, 각 주마다 약간 차이는 있으나, 서독 각 자매주의 지원과 조언을 바탕으로 서독제도를 기본으로 개편함.
 - 동독지역 각 주는 독자적인 법 제정 이전까지 과도기적으로 구동독의 법을 적용함.

- 구동독지역 각 주의 학교법은 교육이념과 내용에 있어 기본법이 명시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은 방향에서 제정됨.
 - 각 개인의 관심과 능력에 따른 고유권리 보장
 - 교육과정과 졸업시험의 다양성 보장
 - 교육내용 개혁(민주적인 가치 및 행동양식 교육, 다양한 분야에 걸쳐 유럽적 수준에 걸맞는 보통교육 전달)
 - 지방분권적 학교 경영
 - 교사, 학생, 학부모의 공동결정권 강화
 - 사설 교육기관 설치의 법적인 근거 마련
 - 종교 및 윤리교육의 도입
- 의무교육기간은 함부르크 협약에 따라 9년간으로 함.
 - 예외 : 브란덴부르크 주는 예외적으로 10년 규정
- 학교의 형태는 서독의 제반학교형태 이외에도 규정학교(Regelschule-
튜링엔) 중학교(Mittelschule-작센), 고등학교(Sekundarschule-
작센안할트) 등을 둘 수 있게 했음.
- 고등교육분야 I 은 주에 따라 다양하게 주학교(Hauptschule), 실업학교
(Realschule), 고등학교(Gymnasium) 등으로 간주하고, 고등교육분야
II 에는 고등학교적 단계(Gymnasiale Oberstufe)와 직업교육을 두고 있음.
- 고등학교는 8학년제를 기본으로 하고, 졸업과 동시에 일반적 대학입학
자격을 취득함.
 - 대학입학전 교육기간은 국민학교 4년을 합쳐 총 12학년에 걸치게
됨(비교 : 서독은 13학년임)
 - 이러한 서독학교 과정과의 차이는 현재에는 그대로 과도기적으로
인정하기로 함.
 - 1996년까지 교육장관회의는 여기에 상응하는 결정을 해야하며,
1994년까지 수상의 지시에 따라 기본안이 작성될 예정임.

o 기존 교사의 해고 및 재교육 문제

- 각 주별 공통적인 교사 해고기준
 - SED의 대중외곽 청소년 조직이었던 동독 자유청년연맹(FDJ)의 간부, SED 각 지부 지도위원, 국가보위부(Stasi) 및 동독인민군(NVA) 및 국가기관의 근무경력이 있는 직원
 - 후반기 모드로 정권하에서 해당 전공지식이 없이도 교직을 받은 자
 - 국가보위부(Stasi)에 비공식적으로 협력했던 자
 - 다른 전공 없이 국가 및 사회강좌(Staatsbuengerkunde)를 강의한 교사
 - 러시아어 교사
 - 동독 어린이단체인 “Pionier Gruppe”의 지도교사
- 각주별로 상기 기준에 의한 교사심사는 '91.5월까지 서면질의를 통해 마쳤으며, 현재는 각 주정부와 고용계약을 맺고 수업을 계속하고 있는 바, 공무원으로서 최종 채용여부는 제반 자격조건(헌법정신에 충실, 해당자격 소지)이 충족되어야 결정됨.
 - 각 주별로 Stasi 문서 보관소(Gauck-Behoerde)에 잔류교사들의 과거 경력을 조회중임.
 - 가장 빠르게 학교체계를 확립한 Brandenburg주는 34,500명의 교사중 6,500명을 해고했으며, 이중 1,000명이 정치적인 이유로 해고됨.
 - 구동독지역 교사들은 구서독지역에 비해 '93 현재 70%의 봉급을 받고 있음.
- 잔류교사 재교육문제
 - 구동독의 교사의 자질은 새로운 체제에 적합한 교육을 시키기에는 구서독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짐.
 - 교육학 기초학과(교육학, 교수방법론, 교육심리학) 지식의 보완 필요
 - 정치관련교과(역사, 철학, 사회, 정치 등)는 필수 재교육 필요

- 외국어에 대한 수요급증
 - 영어수요는 급증하고, 러시아어는 폐강되고 있으나, 러시아어 폐강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단견이라는 주장이 현재 대두되고 있음.
- 교육장관회의(KMK)는 '93.5 '구동독 교사들의 지금까지 경력과 이수 연수과정의 인정 및 재평가' 에 관한 규정을 의결하였음.
 - 이에 의하면 각 주가 교사연수 및 교원자격시험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때까지 현재의 연수과정과 경력을 인정키로 함.

o 교과서 배급

- 연방교육성은 '90년 겨울학기에 6천만 DM의 예산으로 구동독에 2천 5백만권의 교재 공급
 - 예산상 독일어, 역사, 지리학, 영어 등의 과목을 중심으로 8~12학년 학생에 제한하여 교재를 공급
- 구동독에는 학교교재 출판사(Volkundwissen Verlag)가 단 1개 밖에 없었으나, 통독이후 이 출판사도 구서독 출판사에 병합됨. 구동독 6,000개의 학교에서는 600종의 교재중 학교별로 선호하는 교재를 고를 수 있게 됨.
- Curriculum Reformskommission이 결성되어 현재 교과내용을 검토중
- 각 자매주와 연방정부는 직업학교에 컴퓨터, 복사기 등 '91 여름학기에 2억 8천만 DM 상당의 물적지원을 한.

o 학교시설 확충

- 연방정부는 '구동독 경기부양 공동대응책' 을 만들어 구동독 경제재건을 꾀하고 있는 바, 이중에 50억 DM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학교, 병원, 사회보호시설(Soziale Pflegeeinrichtung) 신·개축 비용으로 주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있음. 그중 학교시설비로 지급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발주하고 있음.

- 각 주별로 세급에 따라 할당되는 예산이 다르므로 주별 경제능력에 따름.
- 구동독지역의 학교는 대부분 규모가 작으므로 학교건물로 계속 쓰이는 경우엔 장기적인 증축계획 필요

0 보통교육(대학이전까지) 통합 현황('91년말 현재)

	구 동 독 지 역	구 서 독 지 역	전 체
- 일반학교			
· 학교수(개)	9,858	32,457	42,315
· 교사수(명)	.	.	611,338
· 학생수(명)	2,151,025	6,981,540	9,142,565
- 직업학교			
· 학교수(개)	1,159	6,824	7,983
· 교사수(명)	.	.	100,257
· 학생수(명)	326,846	2,121,419	2,448,283

※ 교사수는 구동독지역중 Brandenburg주와 Sachsen-anhalt 주가 미파악된 상태임.

출처 : 연방통계청 '93 연감, P.416~419

다. 고등교육(대학교 이상) 제도 개편

0 구동독 대학 잔재 청산

- 통일조약 13조에 의거 신설 5개주와 베를린 주정부는 '91.1.1부터 6개월 내지 9개월간의 경과기간을 설정하여 구체제와 관련된 학과와 연구기관을 철폐키로 하고, 해당연구종사자는 이 기간동안 기본봉급의 70%를 받으며 전직 또는 퇴직시키기로 결정함.
- 동 조약 13조에 의하면, 주정부는 주정부 업무 관할에 속하는 기존 동독의 학술·연구기관을 포함한 공공 행정기관에 대해서 그 존속 여부와 철폐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관련 학과는 이념문제와 관련된 인문·사회과학 학과로 해당자는 약 4,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짐.
- 주요 철폐학과
 -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관련된 법학, 경제학, 역사학, 철학, 교육학, 심리학, 경영학
 - 마르크스·레닌주의 관련 연구소
- 또한 SED 정권 붕괴이후 대학 내부적으로 구체제와 관련한 잔재 정화작업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 통독이후 동독지역 대학에도 서독지역과 마찬가지로 대학 자치권이 도입되고 대학교육기본법에 의해 주요정책결정위원회(Beschluss-gremien)의 교수들에게 자율권이 보장되었는 바, 과거 구체제와 관련 있는 교수들이나 무능력한 학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과거의 연교를 활용, 동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자리를 유지하려고 함.
 - 관련 학과의 경우도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사회이론’으로 ‘과학적 공산주의’를 ‘과학적 정치사회학’으로 학과이름만 바꾸는 정도에 그침.
- 한편, 이대올로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대학 학과 외에도 특수한 연구 기관과 같은 경우는 현재 주정부의 재정보조능력이 없어 철폐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대학개혁 사례 : 훔볼트대학
 - 교수자격 재심사를 통해 Stasi 협력교수(주로 법학,사학) 130명 추방
 - 신규교수 116명 채용
 - 구서독 대학교수를 약 50% 증원(‘식민지화’의 비난 때문에 50% 이내로 자체 제한)
 - 구동독 체제하에서 자유화 운동을 하다 제적된 학생들의 복학 허용

- 대학교육 개혁의 과제
 - 구동독 대학 교원은 임용기준이 엄격치 못하여 연구의 질적수준이 낮음.
 - 경제·재정, 행정·법률 등 주요 자유시장경제체제하의 사회과학 발전수준이 매우 낮음.
 - 서구의국대학교 교류가 적어 매우 폐쇄적임.
- o '91.7.11 연방과 각 주는 신설5개주의 대학과 연구를 위한 공동개혁안에 합의함.
 - 이 개혁안의 목표는 대학의 인사개혁, 유능한 학자들의 신설 5개주내 계속 근무 보장, 신진학자 육성, 대학생과 학자의 자질강화, 학술연구 단체와 개별연구인의 대학 흡수, 대학분야의 사회간접자본에 의한 하부구조 확충에 있음.
 - 동 계획은 '91~'95 5년간 수행되며, 총예산 소요액은 17억 6천만 DM으로 연방정부가 75%, 각 주가 25%를 부담
 - 강의실, 학생기숙사, 교수주택 등 대학시설의 개선을 위해 구동독지역 경기부양 공동대응책으로부터 '91, '92년도에 각각 2억 DM씩 지원
- o 대학교육 통합 현황('92.겨울학기 기준)

	전 체	종합 대학	종합 전문대	사범대	신학대	예술대	전문대	행정대
- 학교수(개)	318	85	7	11	19	43	125	28
· 구동독지역	67	21	-	3	3	11	25	4
· 구서독지역	251	64	7	8	16	32	100	24
- 학생수(천명)	1,827	1,214	135	24	3	29	372	47
· 구동독지역	142	110	-	4	0.3	5	20	3
· 구서독지역	1,685	1,104	135	20	2.7	24	352	44
- 신입생(천명)	243	140	19	3	0.4	3	59	16

출처 : 연방통계청, '93 연감, P.425

라. 동독에서 취득한 졸업증, 자격증 인정

○ 통일조약 제37조 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동독에서 취득한 일반교육, 직업교육, 대학교육의 졸업증 및 자격증은 구동독지역에서는 계속 유효하며, 구서독지역의 졸업증, 자격증 등과 취득 기준을 비교할 때 가치가 대등한 경우에는 구서독지역에서도 인정됨.

- 일반교육, 대학교육 졸업증, 자격증의 경우 구서독지역의 것과 대등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자가 주정부 문교성이나 그 업무 위임을 받은 산하기관에 졸업증 및 자격증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인가를 취득해야 함.
- 직업교육의 경우는 해당 시험실시와 자격증 교부의 관할권이 있는 상공회의소나 수공업자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인가를 취득해야 함.
- 자유업의 경우는 비교가능한 구서독지역의 협회에서 인가를 취득해야 함.

5-2. 문화 통합

- 0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통합작업은 기존 구동독 체제의 붕괴를 전제로한 구조개혁을 통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화분야의 통합작업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하며, 기존의 문화시설 및 문화적 하부구조(Kulturelle Infrastruktur)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안정화 측면에 좀더 중점이 두어지고 있음.
- 이는 문화가 몇백년의 전통에 기인한 삶의 표현양식이기 때문에, 법이나 경제체제처럼 일시에 붕괴될 수 없으므로, 좀더 장기적인 변화과정을 거쳐야 하며, 아울러 문화가 동·서독 분단시에 정치적인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유대를 유지하는데 기여를 해왔던 특수성에 기인하고 있음.
 - 그러나 문화분야에서도 변혁의 속도가 느리기는 하지만 기존 동독의 문화 예술 분야의 체계개혁을 전제로한 문화적 통합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 이유는 구동독의 문화·예술정책을 전적으로 SED가 이데올로기를 기준으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당노선에 충실한소위 '문화창조일꾼' 들만이 많은 재정적인 혜택과 사회적 지위를 누려왔기 때문에, 서독의 다원주의적이고 창의적인 문화를 기준으로 보면 자체 변화과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임.
 - 즉, 기존 문화유산의 보존과 유지라는 목표가 기존 문화·예술인들의 특권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개인의 창의성에 기초한 새로운 문화 풍토를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서는 안되기 때문임.
 - 여기서 보존해야할 문화유산으로서는 크게 두가지 범주를 지적할 수 있음.
 - 하나는 분단에도 불구하고 양독일 국가에서 사는 주민들이 공동의 독일인으로서 느끼고 생각하게 하는데 기여했던 독일 전통문화 유산임.

- .. 이러한 문화유산을 국가적·법적인 통합에도 불구하고, 대 변형 과정에서 형성된 내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성장을 지향한 내적인 통일완성 작업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
- 또 하나는 비록 동독정부가 계속 유지·발전시켜 왔지만,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던 독일의 문화·예술단과 그 작품들임.
- .. 예를들어 Leipzig의 Gewandhaus 오케스트라, Dresden의 국립오페라단, Dresden의 미술관 등임.
- 기존 문화기구의 형태와 문화시설들은 전통적인 독일문화체제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분단시 서로다른 국가체제만큼 그렇게 상호 이질성이 존재하고 있지 않아 비교적 통합이 용이하나, 다만 지방에 흩어져 있는 문화적 시설의 경우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어 이를 서독수준으로 현대화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 동·서독 문화시설들은 공히 국가에서 재정수단 지원을 통해 유지되어 왔음.
- 문화분야 통합에서 가장 난제는 국가가 가입할 수 없는 분야인 기존의 동독 문화·예술인들의 새로운 문화환경에 적응문제임.
- 중앙집권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문화풍토에서 국가에 길들여진 문화·예술인들이 다원적이고, 창의적인 새로운 문화풍토에서 자기의 작품을 형상화해 나가고, 국가의 후견에 익숙한 이들이 시장경제체제 하에서의 직업적인 문화인으로 정착해 나가는데는 많은 적응과정상의 문제가 있음.
- o 통독전 서독정부의 문화분야 통합 노력
- '89.12 동·서독 정상회담을 위해 서독 콜수상의 Dresden 방문시 양독간 문화협정에 의거한 향후 2년간의 문화공동사업 계획서가 서명되었는데, 이 계획서 발표시의 공동성명에서 동·서독은 문화공동위원회(Kulturkommission)를 구성하기로 함.

- 이 공동위원회 산하에 4개의 전문가 그룹을 두어 동독에서 정치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문화분야 협력을 해나가기로 함.
- 특히 곧이어 열린 문화장관(서독측은 내독성장관과 주문회장관 회의 대표 참석) 회의에서 동독의 문화유적을 공동으로 보존하는데 합의했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음.

- 통일조약 제35조에는 양독간 문화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

- 통일된 독일의 세계속에서의 위상과 이미지는 정치적인 비중과 경제력 능력 이외에도 문화국가로서의 역할에 좌우됨을 표명함.
- 동독의 문화적 유산들은 훼손되어서는 안되며, 문화적인 인프라스트럭처의 복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함.
- 지금까지 중앙집중적으로 운영되던 문화시설과 기관은 각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며, 동독의 각 주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보호와 진흥의 의무를 짐.
- 기존 동독의 문화기금(Kulturfond)을 동독지역에서 문화·예술 그리고 예술인의 지원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1994.12.31까지 계속 존치시키기로 함.
- 다만, 동·서독간의 문화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정부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도 과도기적으로 재정부담을 하기로 함.
(과거 서독이 동·서독 접경지역 지원법에 의해 낙후된 동독지역을 지원했던 방식에 의하기로 함)

0 통독이후 동·서독지역 문화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연방정부 노력

- 연방정부는 동독지역 문화유적 보전과 문화시설 및 문화적 인프라스트럭처의 개조를 위해 '93 예산에도 7억 1천만 DM을 계상했는데, 연방정부 지원은 과도기적으로 1994년 말까지만 할 예정임.

- 그 이후 부터는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데, 서독수준으로 문화시설이 확충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40년동안 매년 10억 DM씩 총 400억 DM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89년 기준으로 구동독에만 217개의 극장, 87개의 오케스트라, 190개의 음악학교, 719개의 박물관, 16,883개의 도서관(그중 6,000개는 직장내 도서관), 1,709개의 문화회관 등의 문화시설이 있음.
- 연방내무성(독일에는 중앙부처에 문화성이 없음)이 선정한 문화유산 보전의 중점분야는 다음과 같음.
 - 국제적, 유럽적 수준의 공연 시설물이나 공연작품
 - 그 지방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극장, 박물관, 오케스트라, 도서관
 - 전통문화행사로서 현재 리바이벌 되어도 가치가 있는 각종 공연, 전시행사
 -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영화
 - 역사적 의미가 있는 유적지, 기념비
- 연방내무성은 특히 분단의 결과로 인한 문화분야 잔재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 서독지역과 비교하여 특히 분단으로 불이익을 당했던 구동독지역의 문화행사 지원
 - 동·서독 문화단체나 기구들이 통합하거나 상호 협력관계를 긴밀히 할 수 있도록 지원
 - 구동독 문화단체나 국제적(특히 서구유럽과) 접촉을 강화하도록 지원
 - 유명 문필가, 각 지역 연구가 활동 지원
- 기존 문화시설 및 문화 인프라스트럭처의 보존, 신축, 현대화는 지역적 의미가 있는 것과 국가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구분되어 지원되고 있음.

- 지역적 의미가 있는 각 지방문화시설에 대해서는 11개 분야에 걸쳐 낙후지역에 집중적으로 연방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 회화, 조각, 음악, 문학, 영화, 도서관, 박물관(문서박물관 포함) 기념비, 청소년(성인) 교육장, 사회복지기관 문화시설, 향토예술(향토사)
- 국가적으로 의미가 있는 문화시설과 유적은 기본법 91조에 의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지원하고, 학술적인 연구를 하게 되어 있음.

0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현황

- 통독이후 집계된 바로는 구동독지역에 총 15,000명의 문화·예술인 (영화산업 종사자 2,000~3,000명 제외)이 자유업의 형태로 또는 고용인 형태로 일하고 있음.
 - 그중 6,000여명이 미술분야에, 7,500여명이 음악·오락분야에, 750명이 문필가로, 600명이 연극인(배우와 감독 포함), 100명이 작곡가와 음악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음.
- 이들 문화·예술인들은 과거 동독정부로부터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문화기금에서 무이자 융자와, 모든 사회보험의 50%가 보조되었음), 신분상의 특혜를 누려왔지만, 통독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
 - 많은 예술가들은 분단시대에 서로 다른 작품의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예술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동독의 작품과 예술행위들이 서독의 시장메카니즘의 기준으로 볼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동독에는 아직까지 문화·예술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고,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자유경쟁 체제하에서 위험부담을 수반한 직업으로서 예술과 문화활동을 하는데 익숙치 않아 새로운 문화 풍토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국가의 후견에 익숙해져 있는 중견이상의 문화·예술인들의 적응이 어려운 형편임.
 - 특히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유직업 문화·예술인의 경우, 당과 각종 외곽단체로부터의 지원금과 주문이 줄어든 가운데, 각종 사회보험료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임대료마저 인상되어 이들의 생활고 해결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과도기적으로 국가의 지원이 불가피한 바, 특히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이들 문화예술가에 대한 작품주문 위탁이 요청되고 있음.
 - 통일조약은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 문화기금을 '94.12말까지 존치시키기로 했는데, 현재의 문화·예술인들을 과거 동독에서처럼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매년 1억 5천만 DM을 증액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비교적 수준이 높았던 동독연극의 경우도, 입장료 인상과 사회적 변혁기의 불안으로 관객이 줄어들자, 많은 배우들과 감독들이 서독으로 이주하여 사양길에 있으나, 연극이 전통적으로 각 지역의 중요한 문화행사임을 감안,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책을 고려하고 있음.
 - 영화분야 또한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었는데, Babelsberg에는 유럽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영화촬영장이 있음.
 - 영화산업의 입지조건은 갖추어져 있으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영화종사자들이 국제적인 경험을 쌓아야 되며, 독창적인 영화제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동독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변혁기의 문화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이유로 서독주민들이 누리는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문화·예술의 공급자들이라 할 수 있는 동독 문화·예술인들은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문화환경에 맞는 문화·예술을 창출해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이들이 새로운 문화풍토에 적응하는데 문화·예술의 속성상 정치·경제체제의 변형과정보다 시간이 소요될 것임.
-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및 문화 인프라스트럭처 확충문제는 연방예산의 과도기적인 지원에 의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통독비용 증가에 대처한 연방예산 절감 조치와 취약한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 때문에 획기적인 진전은 기대하기 힘든 형편임.
 - 그러나 정책결정자들이 문화 또한 그 지역의 경제적인 산업입지 조건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 사회간접 자본 시설 구축에 있어 문화시설의 확충을 포기할 수 없는 요소로 간주하고 있음.
 - 즉, 동독지역에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많은 양질의 노동력(특히 지식인들)이 서독으로 이주해 버리고, 그에 따라 동독지역이 더욱 낙후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의 예산지원은 한계가 있는 바, 추가적인 자원마련을 위해 경제계의 도움이 요청되며, 개인 또는 사설 문화단체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음.
- 동독주민들 또한 이제까지 억눌려 왔던 물질적인 소비욕구를 충족 시키는데(예를들어 여행, 가전제품 구입, 차량구입 등) 많은 지출을 하고, 도서구입, 연극 및 음악회 관람 등 일상적인 문화생활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지출을 하고 있어, 동독지역의 문화·예술발전을 스스로 한계지우고 있는 실정임.

5-3. 체육 통합

- o '90.12.15 신설 5개주의 주립체육협회가 독일체육연맹(DSB)에 가입함으로써 45년이래 분단되었던 독일체육계가 통합됨.
- 최대의 회원을 자랑하는 체육분야 최고기관인 독일체육연맹은 구동독의 신입회원 200만과 더불어 회원수가 2,350만명이 되었으며, 총재에 Hans Hansen이 재선됨.
- 내무성이 연방의회에 제출한 제7차 연방체육 보고서에 의하면, 91년도 체육예산을 2억 4,800만 DM으로 책정되었는 바, 그중 1억 3,500만 DM이 신설 5개주를 위해 사용될 것임.
- 동·서독 스포츠의 기구적 통합은 일단 거의 완료되었으나, 도핑을 무릅쓰고서라도 스포츠를 이데올로기의 교련장으로 보던 SED 독재정권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공동성장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임.
- 유지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구동독 스포츠의 '업적'으로 지칭되는 초정상급 선수의 능력 잠재력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함.
- 35,000개의 구동독 사회체육시설중 10% 정도만이 보수가 필요없이 사용 가능하며, 15% 이상은 서독수준과 비교할때 도저히 사용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독일체육연맹은 소위 '황금계획 동독' ('Goldener Plan Ost')이라는 사회체육시설 보수 및 신설계획을 마련하여 앞으로 15년동안에 걸쳐 기존시설의 보수에 11억 DM, 새로운 시설구축에 137억 DM을 투자할 예정임.

0 정상급 스포츠는 연방정부의 국가지원으로 안정되어가고 있음.

- 스포츠의학, 트레이닝 진단법, 교육학적·심리학적 상담 등을 포함한 완벽한 서비스를 갖춘 15개의 올림픽 지원 기지에 구동독의 6대 스포츠 클럽이 합류하여 정상급 스포츠인 육성의 중심지가 됨.

- 동·서베를린의 스포츠 통합으로 Berlin을 독일의 최대 올림픽 지원 기지화 하였으며, 포츠담 소재 구동독군 스포츠클럽은 독일연방군 체육학교의 분교가 됨.

- 구동독의 스포츠 엘리트를 육성하던 24개의 구동독 청소년 스포츠 학교는 그중 '92년 현재 18개가 통독후에도 계속 유지 존속되어 체육 장려 김나지움이나 실습학교의 귀감이 되도록 함.

· 연방내무성은 재질있는 청소년 체육인들을 양성하기 위해 '93년에 5백만 DM을 투자할 예정

- 구동독에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던 6,200명의 정상급 운동선수들중 1,500명만이 독일체육 보조기금으로부터 총 2,000만 DM을 받으며 선수 생활을 계속하고 있음.

0 통합에 따라 동독체육 스포츠연맹 산하 직원 15,000명(그중 6,000명은 트레이너)의 감축문제가 대두됨.

- 특히 구동독에서 주업으로 종사하던 트레이너의 진로문제가 심각함.

· 그중 260명은 계속해서 주임 트레이너로, 300명은 명예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음.

· 이들의 인수 및 채용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나, 구서독 트레이너의 능력과 비교할때 구서독 트레이너의 직장에 위협이 되고 있음.

· 구동독 체육협회(DTSB)의 유명 트레이너들은 한국,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등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기도 함.

- 서독식 구조에 따라 서독 각 자매주와 지방자치단체의 물적·인적 연대 지원에 힘입어 각 주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체육단체가 조직되어 가고 있어, 과거 정치적인 경력이 없는 이상, 구동독 체육계 종사자들은 이 기구에 계속 종사할 수 있게 됨.
 - 실직자들은 임시적으로 ABM 조치에 의해 구제되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있음.

- o 구동독의 체육지도자들은 동독체육의 국제적 명성에 지대한 기여를 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정치적으로 완전히 도구화 되어 사회주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기여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 기관을 관장한 과거 체육 지도자들에 대한 처리문제가 대두됨.
 - 동·서독 NOC만이 유일한 통일(Vereinigung)을 달성했던 반면, 기타 체육단체는 구동독단체가 구서독단체에 가입(Beitritt)한 형식을 취했는데, 구동독 NOC의 총재였던 J. Weiskopf(라이프치히시 치과 의사)는 통일독일 NOC의 부총재가 됨.
 - 구동독 체육협회(DTSB)의 청산인으로서 de Maiziere 수상시 정무차관이었던 Horst Joke는 구동독 NOC의 Ewald 총재시 대변인이었으며, 구동독 FDJ의 '청소년 세계'라는 단체의 책임자였던 Volker Kluge와 함께 전독 NOC의 회원이 됨.
 - 과거 동독이 이룩했던 스포츠 신화를 배경으로, 또한 자질있는 인력 충원의 필요에 의해 구동독지역에 다시 과거 스포츠 지도자들이 체육 협회를 이끌어 가고 있으나, 능력위주의 원칙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인 체제가 종언을 고한 이후 요구되는 새로운 체육지도자의 양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o 구동독지역에서 체육은 국가체육 중심으로는 더 이상 아무런 특수역할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경제, 문화분야에서처럼 체육도 집단스포츠만이 장려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사고를 위한 각종 동호인 단체 성격을 갖도록 사회체육화 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
 - 각종 체육단체의 민주적 체육구조 구축은 구서독에 의한 출발금융 지원, 노우하우 이전 및 주 단위, 시·군단위, 협회 단위로 연대적 파트너쉽으로 실제적으로 지원될 예정임.
 - 구동독지역에는 현재 동호인 스포츠클럽에 가입해 있는 사람이 200만 정도 되는데, 클럽의 50% 정도만이 구서독지역 수준에 상응함.
 - 기초적 스포츠는 젊은이들이 많이 가입한 협회가 자생력이 있어야 하나, 인사 및 물질적, 재정적으로 공고한 기반은 아직도 조성되지 않아 존립문제가 매우 심각함.

- o 통독이후 처음으로 동·서독 팀이 단일팀으로 참가한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33개, 은메달 21개, 동메달 28개로 메달 순위 3위를 차지
 - 통합팀에는 196명의 구동독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하여, 독일의 메달 획득에 크게 기여했으나, 단순히과거 동·서독을 산출적으로 합한 성적을 낼 수도 있다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음.

- o 동·서독 체육계의 유기적인 공동성장을 방해하는 주요한 장애는 과거 공산독제체제하의 우월성 과시 위주 체육정책이 낳은 정상급 스포츠인들의 약물복용(Doping) 문제임.
 - 정상급 선수들은 국가기구가 개입한 가운데 구동독 스포츠 지도자들에 의해 강제로 약물복용을 한 경우가 많고, 심지어 그 과정이 Stasi에 의해 감시를 당해왔음.
 - 또한 트레이너들이 청소년들에 까지도 약물복용을 강요한 사례가 적지 않음.
 - 이들 약물복용 선수들중 세계정상급 선수들이 통독이후에도 습관을 버리지 못해(육상선수 Katrin Krabbe 경우) 자격박탈과 출전을 금지당하기도 했는데, 이들의 재활문제가 논의되고 있음.

5-4. 방송 · 언론분야 통합

가. 방송체제 개편

0. 구동독 방송체제 해체와 신규방송사 설립

- 동독에서 대변혁 이후 '90.2.5 동독의 인민의회는 '의사표현, 정보, 언론의 자유 보장'에 관한 의결을 통해 구동독 체제하에서 당의 진리규정의 독점과 정보독점권을 폐지하고, 언론자유의 기본원칙을 확립한 바 있음.
- 통일조약 제36조에는 구동독 방송체제를 해체하고, '91.12.31까지 각 주간 협정을 통해 연방주의적 구조에 상응한 공영방송체계를 확립할 것을 규정했음.
- '91.12.31 통일독일정부는 구동독에서 당과 국가의 시녀노릇을 하던 방송의 해체작업이 성공리에 완료되어 주정부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영 방송과 상업방송의 이중체제로 재편됨. 이 과정에서 과거 동독 국영 TV 및 라디오 방송에서 근무하던 14,000명의 인원중 11,000명이 해직되고, 주로 기술직원인 3,000여명만이 구동독지역에 신설된 공영 방송사에 취직이 됨.
- 구동독 방송의 해체작업과 함께 신규방송사 설립이 추진되었는 바, 신설 5개주 남부지역의 방송사 설립현황은 다음과 같음.
 - 독일 신설주(구동독)의 남쪽에 위치한 작센(Sachsen),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튀링겐(Thuringen) 등 3개주는 '중부 독일방송(Mitteldeutscher Rundfunk : MDR)'을 설립하였으며, 사장에 Udo Reiter를 임명
 - 중부독일방송(MDR)의 사장직은 드레스덴(Dresden), 에르푸르트(Erfurt), 마그데부르크(Magdeburg)에 소재하게 될 주 방송국의 장이 교대로 맡게 될 것이며, 본사의 소재지는 라이프찌히(Leipzig)로 함.

- 신설 5개주 북부지역의 방송사 설립현황

- 북부지역에 속한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주는 동부독일 방송(Ostdeutscher Rundfunk Brandenburg)을 설립하였으며, 메클렌부르크-포어퍼머른(Mecklenburg-Vorpommern) 주는 기존 서독의 방송인 북부독일 방송(Norddeutscher Rundfunk)에 가입함.

o 통독후의 공영방송체제 개편을 위한 제반조치

- 1991년 7월말 16개주의 수상및 시장들은 87년 4월 구서독 11개주들이 체결한 '방송구조 재편에 관한 협정(1987.4월)'을 통일후의 위상에 맞는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 그러나 동 회의는 ZDF의 방송협의회와 운영위원회에서의 정당간 구성비율 문제와 각 방송공사의 유럽 미디어와의 협력문제를 둘러싸고 일부주간에 이견을 보임으로써 성과없이 끝났음. 91.8.31 재차 회의를 개최, 각 주 수상들은 '신연방구조 재편에 관한 협정'에 합의했으며, 동 협정은 92.1.1 발효됨.
- 1994.12.31까지 구동독 지역에는 소득수준을 감안, 서독지역보다 낮은 시청료가 부과됨.
- 서독 각주 방송공사와 제2TV(ZDF)는 서독지역의 시청료 수입의 일정부분을 구동독지역 방송망 확충에 사용키로 합의함.
- 각 주 수상들과 연방정부는 1993.6.17 분단상황하에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서독의 국익홍보를 해왔던 라디오방송의 통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음.
- Deutsche Welle, Deutschlandfunk, Rias 방송이 "Deutschlandradio"라는 명칭의 하나의 방송공사(소재지는 Koeln과 Berlin)로 통합되어, 정보제공과 문화프로 제공의 2개의 채널로 '94.1.1부터 특히 해외홍보용 라디오 방송을 시작할 예정임.

- 현재 독일에서는 방송의 설립권이 주에게만 인정되고 있으므로 14개 주와 2개 자유시(Hamburg, Bremen)가 단독 또는 합동으로 11개의 방송공사를 설립하였음(라디오와 TV 겸영).
- o 통독이후 구동독지역에서 정보와 오락제공자로서 상업방송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음.
 - 통독이전에 이미 위성채널 수신기가 동독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고, 상업방송 프로그램은 공영방송보다 비교적 오락위주로 편성되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동독주민들에게 간편한 흥미거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시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시청률 통계에 의하면 공영방송인 ARD는 4%, ZDF는 5.5%가 구서독지역이 구동독지역보다 시청률이 높은 반면, SAT 1 나 RTL 등 상업방송 시청률은 구동독지역이 구서독지역보다 4%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나. 신문·잡지 개편

- o 동독에서 대변혁이후 통독이전에 이미 신문·잡지 언론의 당 및 국가 독점권이 폐기되기 시작했음.
 - 90.2.5 동독인민의회 결의를 통해 국가의 우편을 통한 신문보급의 독점권이 폐기되었고, 사설기관으로서의 신문·잡지사 창설이 허용되었으나, 완전한 서독방식의 신문·잡지분야 카르텔 방지 및 경쟁 체제는 도입되지 않았음.
 - 동독 공산당의 후신인 SED-PDS는 '90.2.15 소유 신문과 잡지사 간행물의 사전검열을 폐지하고, 당 기관지인 'Neues Deutschland' 를 제외한 각 지방신문의 편집에는 간여하지 않았음.

- 구동독시절에는 종이의 중앙공급을 통해 신문·잡지사를 통제했었는데, 동독의 대변혁 이후 민권운동단체들의 노력으로 종이의 공급은 어느정도 해소됐으나, 국가나 당이 운영하는 신문·잡지사 이외의 독립적인 언론기관들은 인쇄능력이 영세한데다 국가의 지원금마저 끊겨 서독의 신문·잡지사와 경쟁할만한 역량을 결여하고 있었음.

0 통독이후 구동독에 신문·잡지 시장은 서독의 출판사가 서독의 신문·잡지를 공급하는 첫째단계, 서독의 출판사가 지방에 맞는 부록으로 발행·공급하는 두번째 단계, 서독출판사들의 자본참여로 구동독지역에 새로운 출판사를 설립하는 세번째 단계를 거쳐 점차 형성되기 시작했음.

- 통독이후 공산당 소유 지방출판사들이 인민공유재산으로 신탁관리하에 놓이자, 법적인 소유권 문제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서독의 언론재벌들은 동독신문과 합작하여 편집, 인쇄, 배포업무 등을 떠맡아 동독 출판시장을 장악해 갔음.

- 구동독지역의 90개 일간지는 현재 서독의 언론그룹과 합작으로 운영되거나, 서독자본에 의해서 신규 설립되고 있으며, 전동독 SED의 지구당 소유 기관지(SED-Bezirkzeitung)들은 신탁청에 의해 신탁재산으로 관리되며, 매각되고 있음.

- 일간지를 기준으로 보면, 구동독지역에서는 '91년말 현재 750만 부가 판매되는데(서독지역은 2,000만부로 추정), 이중 SED의 기관지였던 신문사가 제작한 신문이 410만부, 과거 동독의 위성정당 산하 신문사가 40만부, 서독지역에서 제작된 신문이 220만부가 팔리는 것으로 집계됨.

- 일정지역에 한정하여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의 물량면에서 볼때 전체출판물의 90%를 아직도 SED 지역기관지 출판사가 장악하고 있으며, 3%는 구동독 위성정당 산하 출판사가, 2%는 새로 신설된 출판사가 5%는 서독의 출판사가 확보하고 있음.

- 잡지의 경우 자동차와 취미생활을 다루는 정기간행물과 가격이 저렴한 여성·청소년층을 겨냥한 잡지, 오락위주의 흥미거리를 확보형식으로 엮은 'Super-Illu', 'Super-TV' 등이 잘 팔리고 있음.
 - 'Der Spiegel' 이나 'Die Zeit', 'Stern' 등의 서독의 유명 시사주간지들은 잘 안팔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가격이 비교적 비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용과 스타일이 동독지역 주민들의 취향에 맞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 o 통독이후의 동·서독지역의 출판시장을 비교해 볼때 동독지역은 아직도 출판물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새로운 출판업체의 진출이 장애를 받고 있어 지역적인 출판 독점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 '90년말 기준 일간지 수로 볼때 구서독지역에 1,344종 구서독지역에 90종의 일간지가 있으며, 시·군당 일간지 출판사 수를 비교해 볼때 서독지역은 50% 정도가 1개 시·군에 1개의 출판사가 있으나, 동독지역은 80~90%가 되어, 지역적으로 출판물의 독점현상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음.

5-5. 청소년들의 공동성장

- 현재 독일 인구 약 8,000만명 중 13세로부터 29세에 이르는 청소년들은 1,800만명에 달하며 이들은 분단시 적대적이고 상이한 체제속에서 성장해 왔는 바, 이러한 상이한 경험때문에 미래의 주인공들인 이들이 통일후에도 새로운 공동성장과 정체성 모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구서독 시절 청소년들은 후기산업적 정보화 사회에서 사회화되었던 반면 구동독 시절 청소년들은 획일적 전체주의적 공핍사회를 경험한 바 있음.
- 더우기 통독과 더불어 구동독지역 청소년들의 총체적 생활조건은 구서독 청소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변화하였음.
- 정치적 대변력과 통독으로 인해 창출된 사회의 재조건 하에서 동·서독 청소년들은 방향 설정 능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정체성 모색 과정에서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 무감각 상태로 체제에 순응해가는 수동적인 형태가 있는가 하면,
 - 소수집단에 대해 정치적으로 과격한 폭력 행위를 행사하는 공격적인 형태를 취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가운데 외국인 소수집단이 속죄양으로 균욕을 치루기도 하고 있음.
- 향후 독일인들의 정신적·문화적 공동성장이라는 장기적 과정이 과연 성공할 것인지, 이와 같은 공동성장이 신속하게 달성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동·서독지역 청소년들의 동화 정도에 따라 좌우될 것임.
- 통일독일의 청소년에 관해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서독 지역 청소년들은 비교적 가치관, 목표 설정, 관심, 상상력 면에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동·서독지역 청소년들은 거의 비슷하게 자기 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가치들이 우선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음.
 - 세계의 평화
 - 우정유지와 자유의 창달
 - 가정적 안정과 내적인 조화
 - 지루하지 않은 다양한 생활 향유

- 동·서독 청소년들은 공히 가능한 한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자기 책임하에 꾸려 나가도록 교육을 받았으며, 자기 성취욕과 개체주의화 경향이 매우 강하나, 물질주의적인 가치편향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음.

- 동·서독지역 청소년들은 사회적 방향 설정에 있어서도 대부분은 적응을 거부하고 있지만, 기존 질서에 편입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관점을 갖고 있으며, 극소수만이 사회의 강제성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 결과 청소년들은 대부분 실용주의적 자세를 취하면서 자신들의 인생의 목표를 실현함에 있어 사회의 주어진 여건과 사회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어 살아갈 태세를 보이고 있음.

- 동·서독지역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낙관주의적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는 바,
 - 1985년도 Shell 연구에 따르면 구서독 시절 청소년들의 42%만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던 점에 비할때,
 - 1991년도 구서독지역 청소년들의 70%, 구동독지역 청소년중 76%가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음이 동 연구결과로 밝혀짐.

- 동·서독지역 청소년들은 정치적인 성향면에 있어서도 거의 차이가 없으나, 구동독지역 청소년들은 대변혁의 경험을 통해 구서독지역 청소년들보다는 더욱 정치적 성향을 띄고 있는 차이점은 있음.

- 동·서독지역 공히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사회적·정치적 요구와 그리고 실제적인 참여 사이에 어느정도 모순성을 느끼고 있음.
- 적극적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할 경우 약간의 소극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청소년들이 모두 ‘참여의식이 희박한 기회주의자’는 아니며, 다만 청소년들은 기존 정당이나 사회단체를 통하지 않는 다른 형태의 정치적 참여를 강력히 추구하고 있음.
- 직접민주주의 형태의 시민 이니셔티브와 같은 참여가 이미 청소년 세대의 정치적인 참여형태로 보편화되어 있음.
- 특히 청소년들은 정치적 사태에 관심이 많은 바, 통일후 주요관심 대상은 독일통일 후유증, 걸프전, 소련의 붕괴, 유고내전 등과 같은 것임.
- 이와 같은 동·서독 청소년들간의 관점상 유사점들은, 이미 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동독 청소년들의 끊임없는 가치관 변화의 결과에 기인한다고 연구결과는 밝히고 있음.
- 특히 동·서독 인적교류가 활발했던 Leipzig, Halle, 동Berlin 지역 청소년들은 서독식 문화, 모드, 생활방법, 행동양식을 점점 더 많이 받아들였는데, 그들은 이와 같은 것을 미디어를 통하거나, 서독인들의 잦은 방문을 통하거나, 청소년들간의 교류접촉을 통해 받아들였다고 보여짐.
- 그 결과 자기 행동영역의 확대, 개체중심적 생활방식과 같은 추세가 강해지게 되었는데, 공산당의 끊임없는 이념교육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치관의 내적인 변화는 정지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자기 자신에 의한 결정, 자기계발과 개체적 자유 추구하고 같은 경향이 동독이라는 정지된 사회에 내적으로 저항하면서 등장하기 시작하였던 것임.

- 0 위와 같은 동·서독 청소년들간의 관점상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국가적 통일과 경제·사회적인 대 변혁과정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각각의 관점과 방향설정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 아래와 같은 차이점들이 존재하고 있음.
- 동·서독 지역간의 교육기회와 노동시장 접근의 기회가 아직도 균등하지 않아, 출신지역이 아닌 구서독지역에서 미래를 모색하려는 청소년이 통독이후 변함없이 10% 정도에 이르고 있음.
 - 구동독지역에서 미래에 대한 낙관론이 지배하고 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아직도 미래의 안정된 생활 보장과 관련해서는 불안정한 상태이며, 게다가 통독으로 가속화된 높은 기대감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실망감을 유발하고 있음.
 - 구동독지역 청소년들은 경제사정이 좋지 못하고, 자기 방을 갖고 있는 사람도 적으며, 그들중 대부분이 '2등독일인' 이라고 느끼고 있음.
 - 구동독지역 청소년들은 시간활용에 있어서도 구서독지역 청소년들보다 주간 여가활용시간이 6시간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이유는 학습시간과 근무시간이 변함없이 길고, 교통망 연결이 부실, 통신 시설의 부실 등 전반적인 인프라스트럭처의 결핍으로 대기시간이 많기 때문임.
 - 직업관에 있어서도 구서독지역 청소년들은 이미 직장과 인생을 동일시하는 반면, 구동독지역 청소년들은 아직도 직장생활과 일상생활을 심하게 구분하고 있음.
 - 구동독지역 초·중고생들은 구서독지역의 초·중고생들과 비교할때, 소비욕구가 강하고 물질적 가치관이 지배적임.
 - 반면, 구서독지역 청소년들은 여가선용시 사회적 관계 진작과 청소년 문화참여를 강조하고 있음.

○ 극우적 성향과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 문제

- 동·서독지역 전체 청소년중 극우주의에 동조하는 청소년은 5% 내지 1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비울면에서 볼때 구동독지역 청소년이 더 많이 극우주의적 입장을 지지하고 있음.
- 적극적으로 정치목적 관철을 위해 폭력행위를 지지하는 비율은 비교적 낮는데(Shell 연구 1%), 독일전역에 걸쳐 폭력을 정치적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청소년은 거의 없음.
- 그러나 외국인 적대감에 관한한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내고 있음.
 - 구동독지역 청소년 약 50%에 달하는 청소년들은 외국인들이 '방해된다'(stoernd)고 느끼고 있는데(Shell 연구) 반해, 구서독지역에서는 13세 이상 27세 미만의 청소년중 25%만이 외국인들이 '방해된다'고 느끼고 있음.
 - 1992년도 IBM 연구결과에 따르면, 구서독지역 13세 이상 27세 미만 청소년중 1%가 적극성 극우성향, 13%가 공공연한 외국인 적대감, 15%가 극우성 구호에 감염되어 있고, 25%가 외국인 적대감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청소년층의 정치적 과격화, 극우화 성향은 국제정치적 변화로 인해 급격하게 가속화된 사회의 현대화에 따른 결과, 그리고 구동독지역의 경우는 대변혁에 따른 방향감각의 상실 등의 이유로 설명해 볼 수 있음.
 - 사회적 환경이 점점 더 다양화 됨에 따라 방향감각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이러한 불안정성을 청소년들은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청소년들은 정치기구나 국가기구와 같은 의사결정권자에게 그들의 방향제시에 있어서 높은 기대를 걸고 있으나, 그들이 만족감을 주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성취욕 상실은 서서히 과거의 패턴에 따른 방향설정과 폭력을 수반한 과거질서의 복원을 시도하려는 현상으로 나타남.

- 이러한 청소년들의 폭력을 수반한 극우성 대처방식은 민주체제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특히 통독이후 구동독지역의 민주주의 정착에 많은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
- 구동독지역 청소년의 경우 극우주의는 청소년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사회적 문제로서, 청소년들이 일단 자유는 쟁취해 놓았지만 그들이 동독이라는 국가로부터 체험한 국가와 기관에 대한 철저한 불신감을 아직도 불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동독지역 청소년의 대부분은 아직도 새로운 국가질서 속에서 안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함.
- 향후 동·서독 지역간 청소년들의 정치적 참여, 정치적인 관점은 상이하면서도 어느정도 공통성은 보이면서 아래와 같은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구동독지역 청소년들은 구서독 청소년들과 비교할때 재래식이 아닌 형태의 정치참여를 선호할 것이며, 각종 시위에 참여하면서 서명운동과 스트라이크와 같은 형태를 선호할 것임.
 - 전반적으로 보아 동·서독 공히 청소년들의 선거에의 참여는 저조할 것임.
 - 1990년도 연방의회 선거시 21세로부터 25세까지의 청소년 투표율은 14.5% 정도였음.
 - 독일 전역에 걸쳐 저조일로에 있는 청소년의 선거참여는 젊은 시민들이 정치에 불만족하며 소외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명한 경고인데, 동·서독지역 청소년의 80%는 주민들이 정치가들로부터 기만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
 - 청소년의 절대다수가 민주주의 사상을 선호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나 (독일 청소년 연구소의 연구결과 98%), 그에 반해 사회주의 사상자체는 구서독지역 청소년의 16%, 구동독지역 청소년의 40%가 아직도 지지하고 있음.
 - 그렇지만 동독시절의 국가사회주의 체제는 분명하게 거부되고 있음.
 - 전반적으로 볼때 독일전체 청소년들은 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내적인 구성요소는 사회의 정의와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볼때, 경제상황에 대한 불만족은 정치혐오 현상을 직접적으로 촉발시킬 것으로 보임.

5-6. 심리적인 이질성 극복을 위한 정치교육

- 국가적·제도적인 통일은 행정적·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미 2년전에 완료되었지만, 심리적인 장벽 극복을 통한 내적인 통일달성을 위해서는 1세대 정도의 많은 시일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 40여년에 걸친 구동독 공산정권의 구동독 주민에 대한 교조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교육의 결과이자, 통독에 따라 생활상의 변화가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나 동독주민들이 새로운 질서에 대한 적응압력에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임.
 - 20세 이하의 청소년층은 새로운 교육의 여지가 있고, 60세 이상의 노년층은 과거 분단이전의 민주주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체제전환에 따른 갈등이 덜하나,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양육되고 경력을 쌓아온 20~60세 사이의 청·장년층이 가장 심각함.
 - 이러한 구 동·서독간 상이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조건에 기인하는 경험 및 인식체계를 동등화시켜 양 지역 주민들간의 정신적·심리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그러나 이미 독재체제를 57년동안(히틀러 독재로부터 통독이 될때까지) 경험한 동독지역 주민들에게는 위로부터의 행정적인 지시에 의한 일방적인 강요형식의 교육은, 새로운 질서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또다른 독재라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독일정부는 신중을 기하고 있음.
- 동독주민들의 심리적 불안의 주요 원인들은 다음과 같음.
 - 과거 공산독재체제는 각 개인을 강요만 하였고, 자신의 불만이나 고민을 대외적으로 표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개개인의 인격을 극도로 변형시켰음.

- 개인의 자발성과 책임의식이 부족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하는 다원적인 민주주의사회에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
- 인간의 존재는 인간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제도와 구조속에서 규정되어 지는 바, 새로운 제도를 익히는데 동독지역 주민들은 너무 많은 시간과 신경을 써야 함.
- 실업으로 인하여 물질적인 생활기반과 자아실현의 토대를 상실하였음.
 - 구동독에서는 실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국가의 후견에 의해 완전교육과 직장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통독후 경쟁사회속에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것은 구서독인들에 비해 엄청난 심적부담임.
 - 디구나 물질적인 생활기반으로서 뿐만 아니라, 평생 자아실현의 장으로서 자기 직장을 잃게 됨으로써 자기 과거의 노동이 전혀 가치없는 곳에 투입이 되었다는 자기비하와 함께 생의 의미를 재확인 해 봐야 하는 정신적 고뇌를 겪고 있음.
- 미해결 재산권 문제가 많은 동독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음.
 - 국유(인민공유) 재산을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소유권을 각 지방 자치단체 등 공공목적으로 내어놓을 경우는 덜한데, 현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언제 서독지역으로부터 반환신청이 닥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불안해 하고 있음.
- 통독이후 과거 가해자들에 대한 과거 청산문제가 제기될 때 구동독주민들에게는 체제전환에 따른 심적 고통이 존재함.
 - 40년간의 사회주의는 각 개인에게는 기억속에 살아 있는 역사인데, 이러한 역사를 완전히 범죄집단의 역사로 단죄해야 하는 시점에서 공범자(Mittäter)로서의 감정을 갖지 않을 수 없음.
 - 자기가 직접 연루가 안됐다 하더라도 자기가 살고 있던 체제와의 단절은 자기 역사와의 단절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것은 각 개인에게나 집단에게나 고통스러운 불안을 수반함.

o 정치교육의 구체적인 방향

- 주민들의 의식속에 잠재된 SED 지배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점차 극소화 시켜나감.
 - 모든 주민의 생활영역내에서 ‘당의 진리규정의 독점성’ 잔재를 제거하고, 자유스럽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 과도하게 정치화되어 있는 일상생활을 탈정치화(Entpolitisierung) 해나감.
 - 국가의 후견에 익숙하여 늘 위로부터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던 ‘보호 문화’ (Nischenkultur)로부터 탈피
- 새로운 다원주의적 정치문화에 익숙해지도록 다양한 정보와 만남의 광장을 마련함.
 - 획일적인 정보가 아닌, 다양한 이해집단과 학술연구기관, 중립적인 교육기관에 의한 다양한 정보와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
 - 민주사회에 존재하는 갈등(Konflikt)속에서, 서로의 이해를 표출하고 관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되 궁극적으로는 타협을 해나가는 ‘민주적인 논쟁 문화’ (demokratische Streitkultur)가 정착되도록 함.
 - 특히 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치적 스펙트럼에 따라 결성된 다원적 정당구조에 익숙해지고, 기존의 정치제도에 대한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장려
- 구동독지역 청소년층에서 만연되고 있는 정치적 무관심(연방정치교육센터 추정에 의하면 청소년층의 1% 미만만이 정치에 관심)과 소비·향락 문화에 대한 심취 등의 문제 해결
- 새로운 제도를 소개하는 각종 교육·홍보자료를 작성 배포

o 현재 정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기관은 다음과 같음.

- 연방 수준에서는 연방내무성과 연방정치교육센터(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가 맡고 있음.
- 각 주정부 산하에 정치교육센터가 있음.
 - 현재 구동독지역 신설 5개주에는 주정부의 행정체계가 완전히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교육센터가 설립되지 않은 곳도 있어, 자매결연을 갖고 있는 구서독지역 주정치교육센터가 많은 지원과 직접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 각 정당의 학술재단도 중요한 정치교육기능을 맡고 있음.
- 각 대학의 연구기관과 종교·사회단체 등도 자체세미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방정치교육센터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정치교육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구서독지역·구동독 기관중에는 교회가 구동독 주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를 받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교육의 효과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있음.
-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자매결연을 이용하여 동·서독 지역간 친밀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남의 광장·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구동독 지역에 부족한 문화적인 사회간접자본(Kulturelle Infrastruktur)을 확충하는데 많은 행정지원을 하고 있음.
- 또한 각종 협회·단체 등 자발적인 이익단체와 동호인 클럽들도 구동독지역에 지부를 설치하고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바, 이들 또한 동·서독인들간의 이질감 해소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음.

6. 평가 및 전망

가. 개 관

- 독일정부와 국민은 동독 주민들의 조속한 통일에의 열망에 부응하여 신속한 법적·국가적 통일을 달성했으나, 통일후 3년이 지난 지금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이 요구되고 있어서 내적인 통일달성을 위한 과도기적인 진통이 계속되고 있음.

· 생활수준 평준화 예상시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단위 : %

연 도 별	5년 이내		5~10년		10년 이상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90	30	51	46	43	23	5
'91	30	39	50	49	18	10
'92	24	20	51	55	23	24
'93(1)		8		62		30

(1) '93 Die Zeit지가 통독 3주년을 기해 발표한 동독주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임.

출처 : 정치교육센터,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P.266
Die Zeit 1993.10.1일자 17~21면

- 통독당시 구동독 주민의 51%가 5년 이내 동·서독 생활수준의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낙관적인 기대를 했으나, '93에는 8%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동독주민들이 보다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93 현재 동독주민 대다수 뿐만 아니라, 서독주민의 대다수도 빨라야 2000년대 가서야 동·서독간의 불균형이 어느정도 해소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음.
- 아울러 이러한 동·서독 지역간 생활수준의 격차 해소는 매년 총 2000억 DM에 달하는 공공부문의 재정이전 지출과 사기업 부문의 투자가 거의 10년 이상 지속되어야만 달성 가능한 대업임이 명확해졌음.
-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지금은 동독지역의 산업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투자단계이며, 통일로 인한 이득을 차세대들이나 누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음.
 - 따라서 독일정부는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자원마련에 있어서도 세대간 부담배분 방식이라 할 수 있는, 적자재정 운영과 각종 국·공채 발행에 의존하고 있음.
- 0 그러나 통독이후 제기된 과도기적인 문제점들로 인한 후유증들은 동·서독 주민들이 통일 그 자체를 부정하고, 과거로 돌아가기를 희망할 정도로 심각한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보임.
 - 구동독 경제구조 재편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업문제가 언론에 극화되어 보도되면서, 동독지역에 사회불안이 계속되고 있으며, 동독주민 대다수가 과거에 향수를 느끼고 있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으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한 실증적인 자료를 보면 동독지역에서 정치적인 안정까지 해할 정도의 심각한 현상은 아니며, 서독지역에서도 불만이 증대하고는 있으나, 과거로 돌아가자는 정도는 아님을 알 수 있음.

· '92.3 Allensbach 여론조사 연구소가 실시한 '베를린장벽 붕괴 이전 (분단)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단위 : %

		전체 인구	연령별				정당 지지자별				
			16-29	30-44	45-59	60이상	기민/기사	자민	사민	녹색/B'90	PDS
서독 지역	동의한다	21	23	21	21	19	17	15	23	18	
	거부한다	66	64	59	66	73	70	67	63	72	
	모르겠다	13	13	20	13	8	13	18	14	10	
동독 지역	동의한다	9	7	8	9	16	6	5	10	9	32
	거부한다	73	77	77	69	67	85	75	74	66	20
	모르겠다	18	16	15	22	17	9	20	16	25	48

출처 : Allensbach 여론조사 연구소, Allensbach Jahrbuch der Demoskopie 1984~1992, P.454

- 동독지역 주민의 3/4 정도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함.
- 서독지역 주민이 동독지역 주민보다 더 통독이후 제기된 문제로 인해 불만을 표시하며 오히려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많음.
- 가장 통일반대자로 분류할 수 있는 층은 동독 공산당의 후신인 PDS 지지자로 통일전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PDS 지지자중 20% 밖에는 안되며, 반대로 PDS 지지자중 32%가 과거로 돌아가자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음.

- 최근 조사된 동독주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듯 동독의 서독으로의 편입은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가지 통일과정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동독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음.

	'92.5	'92.10	'93.7
서독체제에 의한 통일이 옳았다	68%	69%	71%
서독체제에 의한 통일이 틀렸다	31%	30%	28%

※ '93.7 Politbarometer 여론조사결과

연 도	주 요 동 향
'90.11. 5	서독 대학총장회는 구동독의 21개 대학을 회원으로 받아 들이고, 대학총장회(Hochschulekonferenz)로 개칭함.
'90.11. 6	신설주 기자협회가 주 단위로 독일 기자협회(Deutsche Journalisten Verband)에 가입함.
'90.11. 9	본에서 “독·소 친선 우호·협력 조약” 이서명됨.
'90.11.14	바르샤바에서 오데르-나이세 이동지역 포기를 골자로 한 독·폴간 국경조약이 서명됨.
'90.11.17	국가올림픽위원회(NOK)는 동·서독 위원회의 통합을 결의하고, 새로운 NOK 정관을 채택함.
'90.11.19	NATO 및 바르샤바조약기구 22개 회원국은 유럽 재래식 전력 감축에 관한 조약에 서명함.
'90.11.22	신설주 주지사들, 구동독 지역방송 구조개편에 합의함.
'90.11.23	통독이후 최초로 동·서독 각 주 환경장관 회의가 개최됨.
'90.11.26	로마 교황청은 동·서독 구교 사제회의 통합을 승인함.
'90.11.27	구동독 작가협회가 해산을 결의함.

- 현재 독일 통일 과정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층은 크게 구동독 지식인 그룹과 공산당을 위시한 구동독 기득권층으로 구성된 독일 통일의 반대파, 그리고 통일을 찬성하되 체제간 통합에 따른 부작용과 막대한 통일비용을 지적하면서 조기통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던 사민당·녹색당 등의 야당, 일부 언론 및 연구기관 등을 들 수 있음.
- 특히 현 통독과정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화폐통합시 화폐교환율을 실물경제에 맞지 않게 책정했고, 화폐통합을 너무 서둘러 추진, 동독경제가 일시에 붕괴되었다는 점, 신탁청의 사유화 전략이 실업 문제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 구동독의 재건비용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점, 반환원칙에 의한 미해결 재산권의 처리가 동독지역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 서독지역의 법과 제도를 너무 일방적으로 안이하게 적용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음.
- 지적되는 통독이후의 후유증과 부작용들은 인류보편의 가치를 좀 더 잘 실현할 수 있는 우월한 체제로의 편입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며,
- 40년간의 독재체제로부터 해방되어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인권과 자유를 향유하며, 군사적 긴장이 상존하는 분단상황이 아닌 평화가 보장된 사회복지국가에서 생을 영위할 수 있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득(intangible benefits)을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 일방적으로 독일통일의 후유증만이 강조되는 것은 자칫 우리통일문제와 관련, 통일 회피론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 통독 3주년을 즈음한 독일 언론의 논조도, 독일인이 통독 이후 문제에만 매달리며, 동독주민이 과거 공산독재체제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망각하고 있다고 상기시킨 바 있음.

0 다만 통일후 치루어야 할 국민 각자의 대가와 희생에 대해 골 수상을 위시한 서독의 정치인들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으며, 통일문제를 장기적으로 내적통일 달성까지 염두에 두고 국민들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하는 진실을 말하는 대신에, 정치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너무 장미빛 전망을 제시했다는 비판은 타당함.

- 40년간에 걸친 권위주의적 국가사회주의체제의 자유민주주의체제 및 사회복지적 시장경제체제로 구조전환이 마찰없이 진행될 수는 없으나, 체제전환으로 인해 발생될 문제의 해결전망에 대해서 서독의 위정자들은 비교적 낙관적으로 보았음.

- 그 낙관론의 근거는 첫째, 서독의 탄탄한 경제력과 정치·사회제도의 우수성에 대한 확신이었고,
- 둘째, 실제로 분단 이후부터 통독 직전까지 구동독 주민 400만(통독 직전 구동독인구 1,700만의 약 1/4)이 구서독지역으로 이주 또는 탈출해 왔음에도 이들이 서독에서 동화하고, 정착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동독에 서독의 법·제도를 이식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할 경우 동독지역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잘 작동될 것으로 낙관했음.

- 그러나 통일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동독경제는 훨씬 취약했으며, 동독주민들의 심리에 사회주의 억압체제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서독측의 물량공세나 지원에도 불구하고 구동독 경제재건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점차 판명되었음.

- 동구권에서 가장 선진국으로 간주되던 동독의 경제는 세계시장에 노출이 되자, 서방기업과 경쟁력 있는 업종이 거의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40년간 억압체제 아래서 왜곡된 동독주민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심리상태가 개방적이고 다원화된 사회에 적응하는 데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동독 경제재건의 견인차 역할을 할 서독의 경제가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고, 각계각층이 연대의식을 발휘하여 고통의 분담을 통해 통독 이후의 실질적인 분단상황을 극복해야 함에도, 집단적 이기주의 때문에 통일 비용 분담과 관련한 노·사간 갈등,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갈등이 노정되고 있는 실정임.

· Allensbach 여론조사에 의하면 '90년 통일당시 서독주민의 46%가 통일을 위해 희생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응답했으나, '92년 중반에 들어서부터는 통일이 기쁨(36%)보다 걱정(46%)을 가져다 준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더 많아지고 있어, 서독주민들의 희생과 연대의식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나타내 주고 있음.

나. 정치분야

0 기민한 외교역량을 발휘하여 통일을 조속히 실현했고, 동독주민들에게 통독이후 낙관적인 전망과 많은 공약을 하여 통독 총선에서 승리했던 보수 여당의 지지도가 구동독지역에서 통독 당시에 비해 떨어지고, 동·서독지역 할 것 없이 제도권 정당들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극우파들이 대두하고 있으나, 지난 40여년간 정착해 온 서독 의회 민주주의하의 정치적인 안정기조는 흔들리지 않고 있음.

· 통독이후 최초로 동독지역에서 치루어졌던 브란덴부르크주의 지방선거 결과가 현재 독일여당인 기민당의 참패, 공산당의 후신인 PDS의 제2당(사민당 다음) 부상으로 나타나자, 여·야 정치인들은 통독이후 동독 지역에서 민주주의 정착과 서독체제에 의한 급속한 통일에 반대하는 세력이 득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냈음.

· 우선 투표율 면에서 볼때 통일하던 해인 '90년의 투표율이 74.6%였음에 반해 이번에는 59.2%로 떨어져 주민들의 참여도가 극히 낮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정치적인 무관심과 대의민주주의에 기초한 기존 제도권 정치에 강한 불신을 표출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또한 과연 지방에서 지명도가 높은 공산주의자들이 동독지역에서도 폴란드와 같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음.
- .. 통독당시 선거에서 PDS는 브란덴부르크 주에서 각각 13.4%(주의회 선거), 16.5%(지방선거), 11%(전독총선)을 얻었으나, 이번 지방 선거에서는 21.2%를 얻었기 때문임.
- 이번 선거에서도 PDS의 주요 지지자는 대부분 60세 이상으로, 과거 동독체제에서 특권을 누렸거나, 새로운 체제에서는 적응하지 못하는 계층으로, 근본적으로 서독식 정치·경제·사회질서에 의한 통일을 반대하는 그룹이었음.
- 그러나 독일전체로 볼때 '94 연방의회 선거에서 PDS는 연방의회 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 향후 선거시는 동·서독 분리집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PDS가 의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전체 투표자의 5% 이상을 획득해야 하는 바, 서독지역에서 지지도가 과거 서독 공산당(DKP)의 지지수준인 2.5%를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임.
 - .. 아무리 동독지역에서 PDS의 지지도가 상승한다 해도, 독일전체 지지도 5%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독지역에서만 24% 이상의 지지를 획득해야 하는데, 현재 여론조사 결과로는 동독지역 전체에서 13% 내외를 얻고 있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 .. 다만 PDS의 지지계층이 많은 동베를린 지역과 브란덴부르크 주에서 직선의원 3명을 배출할 경우, 의회진출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음.

· 통독 3주년 현재 각 정당별 지지도와 '94 총선 예상

· 독일전체 주민들의 각 정당별 지지도(동·서독 전체)

단위 : %

	기민· 기사당	사민당	자민당	녹색당 /B'90	P D S (공산당후신)	공화당 (극우파)
'90.12 (전독총선)	43.8	33.5	11	5	2.4	2.1
'93. 4 (여론조사)	33.1	35.2	9.7	11.1	2.9	6.8

· 구동독 주민들의 각 정당별 지지도(구동독지역만)

단위 : %

	기민· 기사당	사민당	자민당	PDS(공산 당 후신)	녹색당 /B'90	공화당 (극우파)	기 타
'90.12.2 (전독총선)	42.8	24.3	12.9	11.1	6.2	1.3	1.4
'93. 9 (여론조사)	21	38	9	13	13	4	3

출처 : Die Zeit지 '93.10.1자

· 집권 기민·기사·자민 연정과 콜 수상에 대한 동독주민들의 불신이 증대하고 있어, 내년의 선거에서는 현 집권당의 승리가 의문시 되고 있음.

· 기민당은 '90 전독 총선시 구동독지역에서 낙관적인 정책을 제시 42.8%(DSU 득표율 포함)를 획득했으나, 동독주민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약속했고, 이를 집권임기동안 실현할 수 없게 되어 역설적으로 '94 선거에서는 스스로의 실책에 의해 지지를 잃을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사민당은 구동독지역에서 지지율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구서독 지역 부담의 증가를 야기하지 않는 가운데, 구동독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한 대안 제시는 부재한 것으로 보여짐.

- 통독이후 경제·사회적인 불안을 틈타, 특히 서독지역에서 극우파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
- '90 총선 당시 2.1%에 불과했으나, '94 총선에서는 5%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예상이 지배적임.
- 최초의 전독선거에서는 통독에 따른 민족적인 열광이나 정치가들의 구호로 인해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명확히 표출하지 못했으나, 내년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고려한 통독에 따른 '부담의 배분문제'가 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됨.
- 기민당이나 사민당 등 동·서독에서 공히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중도 대중정당들은 선거전략상 동독지역에서 인기있는 정책이, 서독지역에서는 서독지역 주민들 부담의 증가를 의미하여, 외면당할 수 밖에 없는 딜레마를 안고 있음.
- PDS만이 동독지역에서만 확고한 지지계층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전략상 현재 상황을 극적으로 선전하는데 다소 유리할 것으로 평가됨.
- 구동독지역의 행정·사법체계 확립은 아직도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은 있으나, 구서독지역으로부터 지원에 힘입어 2~3년이면 완전히 확립될 것으로 보임.
- 구동독지역 주민들의 민주주의체제로의 동화과정은 구동독지역의 경제·사회적인 문제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해결되어 가느냐에 달려 있음.

다. 경제분야

- 서독지역의 경기침체, 통독이후 재정적자 증대('93년 680억 DM 이상 예상), 실업자 증가, 물가상승 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탄탄한 서독지역 경제력을 감안할 때, 극복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니라고 평가됨.
 - 통독 직후에는 구서독 수준으로의 구동독지역의 경제재건이 3~4년 이내에 가능하다는 골 수상이 제시한 낙관론이 지배적이었으나, 세계 경기침체와 이에 따르는 서독경기부진, 동구수출시장 상실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경제재건에 필요한 각종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구축에 소요되는 기간, 구동독 노동자들의 낮은 생산성('92말 현재 구서독 수준의 39.4%), 구동독 체제재건에 필요한 자원조달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서독 수준으로의 경제재건은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구동독 주민들도 통일만 되면 곧 서독에서와 같은 생활수준을 누리게 된다는 통일당시에 벅찬 기대에서 다소 그 시간표를 늦추고 있음.
- 재정면에서는 통독 후 매년 연방예산의 1/4이상을 구동독지역 재건을 위해 이전한데다 동.서독지역의 실업자 증가로 인한 임금대체비용(실업수당 등) 증대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격감이 가중, 공공분야 재정적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으나, 정부가 각계 각층의 고통분담과 연대강화노력을 촉구하면서 긴축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사회보장분야 포함 '93년 전체공공분야 재정적자가 1,600억DM(GDP의 5%) 예상

- 경기부진을 이유로 긴축재정운용을 반대하는 주장도 있으나 공공재정에 대한 신뢰유지 및 이자지급 부담률(총지출 중 이자지급이 '89년 11%에서 '94년 16%, '97년 23%로 증가예상) 등을 고려, 최근 긴축재정 및 예산 절감조치를 단행
 - 세수증가 및 구채무청산에 중점을 둔 연방재정건실화 방안, 정부지출 삭감에 초점을 둔 긴축 및 예산절감 방안, '93-'97간 중장기 재정계획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재정적자를 상당수준으로 축소해 나가 80년대의 경우처럼 경제의 성장력을 강화하고자 함.
- '93년 들어 등독의 경제는 회복·성장추세에, 서독경제는 침체가 최저점에 도달함.
 - 통일후 1년간 50%에 가까운 생산량 감소를 보이던 등독경제는 '91년 하반기부터 침체를 벗어나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며, '92년에는 6.8% 성장, '93년에는 5.5%의 성장율이 예상됨.
 - .. 특히 통독후 구조전환 과정에서 가장 타격이 심했던 제조업분야의 '93년 2/4분기 수주와 생산이 전년대비 각각 13.5%, 9.5% 증가 함으로써 구등독경제가 자체성장 역동성을 보이기 시작함.
 - .. 이는 구등독기업들이 생산라인재건에 진척을 보여, 등독 소비자의 신설주 상품 소비가 늘어나고 서독기업들의 등독제품 주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85~'89년간 평균 2.7%의 경제성장을 기록했던 서독 경제는, 다른 선진국이 경기가 침체되었던 '90~'91년에도 등독 특수로 호황을 누렸음.

- '92년 중반이래는 서독지역 경제가 침체국면에 빠져 있으나, 전적으로 통일로 인한 후유증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서독경기침체는 통일특수 덕분에 여타 선진국보다 2년 정도 늦게 시작), 현재 모든 OECD국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깊은 관련이 있음.
- .. 통독 이후 동독지역에 대한 막대한 이전지출액(매년 평균 1,500억 DM으로 연방정부 예산의 1/4)에 해당 마련을 위해 서독지역에 긴축 재정 정책을 실시하고,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연방은행이 고금리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수요증가가 둔화된 것은 사실임.
- .. 그러나 서독경제의 침체는 오히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과('91~92년 호황에 따른 과도한 임금인상으로 인한 임금 비용 상승 및 독일 마르크화 강제로 인한 수출가격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있음.
- .. '93년 2/4분기 서독 GDP는 1/4분기대비 0.5%증가, 경기하향국면이 멈추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서독과 기타 선진국 경제성장 비교('93.3 현재)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서독 (GDP)	4.0	4.9	3.6	0.9	-0.5	2.0
프랑스 (GNP)	4.1	2.3	0.8	1.8	1.5	2.5
이태리 (GNP)	3.1	2.0	1.4	1.0	0.0	1.5
영국 (GNP)	2.1	0.6	-2.4	-1.0	1.0	2.5
미국 (GNP)	2.5	0.8	-1.2	2.1	3.3	3.0
일본 (GDP)	4.8	5.2	4.5	2.0	2.3	3.5

1992~1994년은 추정치임.

출처 :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Information Service,
German Brief(1993, 4. 8)

- 과거 구서독도 잘사는 주와 못사는 주간에 생활수준의 격차가 있었듯이 동·서독 지역간 과도기적인 상대적인 생활수준의 격차 상존은 불가피하나, 동독지역 경제는 러시아, 동구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호전국면에 있음.

· 독일내에서는 여타 동구국가와 비교해 보면 훨씬 나아진 동독의 생활수준을 서독수준과 비교함으로써 동독 후유증이 과장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여론이 대두

93년 예상치

	동 독	러 시 아	체 코	헝 가 리	루마니아
GNP성장율	5.5%	- 20%	- 8%	- 5%	- 10%
물 가	8.5%	1,300%	12%	25%	200%

- 내수시장의 수요가 증가한데다 1993년 임금협약수정으로 동독기업의 경쟁여건이 호전되었고, '94년쯤 서구제국이 현재의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동독 제조업체가 대체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동독경제는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구동독지역 실업문제도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기업폐쇄, 공공분야 과잉인력 감축 등으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그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직업교육 및 고용창출조치 해당자, 단축조업자 수가 현저히 감소, 실질적인 실업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음.

- 물가상승면에서도 여타 동구국가 보다는 훨씬 낮은데, 생계비가 전년대비 약 9%가 상승했으나, 이는 주로 연초의 임대료 인상 때문으로 이를 계상하지 않는 물가 상승률은 약 4%로 서독수준정도로 안정화되는 추세임.

- 동독주민들의 소득과 생활수준면에서도 통일후 크게 향상되었고, 40년간 거부당해 온 소비재 등 사고싶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됨.

- 통독이후 3년간 동독주민들의 소득은 약 2배로 증가하였고, 현재 서독지역 수준과 비교하면 70% 수준(각 연구소 통계에 따라 68%~72% 수준으로 추계)인데, 동 기간 동안의 약 35%의 물가상승을 감안하더라도 '90년 대비 약 50%의 실질임금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객관적인 통계상의 생활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통독이후 구동독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불만족한 원인은 동독주민들의 높은 기대감, 또는 서독주민들과의 비교심리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동독주민들은 구동독 전체적의 경제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자신들 개인의 가계경제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구동독 전체의 경제 상황

(%)

	'92.7	'92.10	'93.7	'93.9
나쁘다	61	61	63	59
그저그렇다	37	35	35	39
좋다	3	3	2	2

출처 : '93.7/9 Politbarometer 여론조사

※ 개인의 가계 경제 상황

(%)

	'92.7	'92.10	'93.7	'93.9
나쁘다	12	13	14	13
그저그렇다	56	49	56	50
좋다	31	37	36	37

출처 : '93.7/9 Politbarometer 여론조사

- 지난 3년동안 동독지역 주택신축 및 보수현황은 구동독시절의 20년간의 건설물량과 동일하며, 과거 동독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12년을 기다렸으나, 이제는 즉시 구입이 가능하고, 전화는 17년을 기다렸으나, 신청후 6개월이면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음.

라. 심리적·문화적 분야

○ 동·서독 주민간 심리적인 갈등과 격차 해소문제는 동독주민들의 경제·사회적 약자로서의 불안과 새로운 법과 제도에 대한 적응과정의 불안, 서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에 따른 불만과 우울감에 기인한 동독주민 비난 등의 요인들이 매우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한세대 정도가 지나야 치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0여년간의 활발한 교류협력과 인적왕래에도 불구하고 통독후 동·서독인들은 상대방의 체제와 주민들의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했다는 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음.
- 서독 주민들은 분단시 통일을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독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 관심이 적었고, 동독 주민들 또한 서독사회를 환상적인 과잉소비사회로만 보았지, 시장경제체제, 다원적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해서는 알아 볼 기회가 없었던 데 원인이 있음.
- 구동독지역 주민의 90% 이상은 민주주의 국가형태를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가운데, 새로운 다원화된 정치문화와 제도에 익숙해져야 하므로 아직도 심리적 압박을 받고있으나, 통독후 3년간 새로운 생활조건에 비교적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구동독주민의 새로운 생활조건 적응도

처음부터 어려움 없었음	35%
처음에는 어려웠으나 이제는 잘 적응	38%
아직 어려우나 앞으로 나아질 것임	21%
영원히 적응 못할 것임	6%

출처 : Die Zeit지 통독 3주년 여론조사, '93.10.1자

- 20대 이하의 구동독 청소년층은 새로운 제도에 적응과 교육의 습득 속도가 빠르고,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서독주민들과 동화되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Die Zeit지 통독 3주년 여론조사에 의하면, 70% 이상이 미래를 희망적으로 봄).
- 한편, 20대 이후 60대까지의 구동독 장년들은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양육되고 경력을 쌓으며, 그 체제내에서 직능을 인정받고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직능이 쓸모없게 된 가운데, 실직 상태에 처한 사람들의 경우 새로운 체제에의 동화에 애로가 있음.
- 통독 3주년 여론조사결과 아직 새로운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집단 (전체 주민의 약 27%)은 주로 노년층, 여성, 실업자 및 조기퇴직자, 저소득자들인 것으로 나타남.
- 동독지역 주민들은 동일로 획득한 새로운 자유의 향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혁기의 문화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이유로 문화생활 면에서 동·서독간에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동독주민들은 통독에 따른 이득으로서 여가 생활의 다양화를 들고 있는데, 세계를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다는 점, 다양한 정보와 출판물에 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음.
-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및 문화 인프라스트럭처 확충문제는 연방예산의과도기적인 지원에 의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통독비용 증가에 대처한 연방예산 절감조치와 취약한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 때문에 아직은 획기적인 진전은 기대하기 힘든 형편임.

- 그러나 정책결정자들이 문화 또한 그 지역의 경제적인 산업입지조건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 사회간접자본시설 구축에 있어 문화시설의 확충을 포기할 수 없는 요소로 간주하고 있어, 문화분야 격차해소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것으로 보임.
- 동독주민들 또한 이제까지 억눌려 왔던 물질적인 소비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예를들어 여행, 가전제품 구입, 차량구입 등) 많은 지출을 하고, 도서 구입, 연극 및 음악회 관람 등 일상적인 문화생활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지출을 하고 있어, 동독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스스로 한계지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함.

II. 연방공보처의 통독 3주년 보고서(번역)

본 자료는 통독 3주년을 맞아 연방공보처가 발표한 통독과정

중간결산 보고서 「Drei Jahre Politik fuer Die Einheit :

3. Oktober 1990~3. Oktober 1993, Eine Zwischenbilanz」를

전문 번역한 것임.

1. 서 론

3년전인 1990년 10월 3일, 40년 이상의 분단끝에 전후 독일 정책의 주안점인 자유 통일 이 실현될 수 있었다. 모든 주변국가들이 동의하는 가운데 독일은 유혈사태없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가 통일을 이룩하였는 바, 1989년 구동독 주민들이 거둔 평화적 혁명이 이의 발판이 되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주의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이들의 행동은 독일 역사의 자랑스런 장으로 길이 남을 것이다. 동시에 구동독 주민들은 수십년간에 걸쳐 부자유, 독재, 억압, 경제 실패로 얼룩지워진 중부 및 동유럽 국가들에서 자유와 자결의 물결을 불러 일으켰다.

통일독일은 무엇보다도 신설 지역 내의 경제, 사회복지, 사회 및 환경상의 재건을 정치현안으로 삼고 있다. 물론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적 장벽의 제거문제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바, 이는 내적 통일을 이루는데 있어 전체 독일인들간의 물질적 생활의 평등화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통일이 된 지 3년이 지난 현재, 다방면에 걸친 어려움과 문제들로 인해 형평성이 흔들리는 경우가 없지 않으며, 통일이 초래한 문제점들 역시 예상 외로 심각하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역시 해결 가능한 문제 임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내적 통일을 얼마나 신속히 달성할 수 있는가는 바로 독일인들 스스로에 달려 있는 것이다. 헬무트 콜 연방 수상은 이미 1990년 6월 경제·화폐 및 사회 통합 조약에 관한 정부성명서를 통해 다음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독일 전체의 통일, 자유, 복지 및 사회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힘겹도록 일을 해야 하며 심지어 희생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동독 동포들은 낯설기만한 새 생활 조건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인 바, 이는 결코 수월치 않은 과도기가 될 것이다.”

40년간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를 극복하는 데에는 3년 전 대부분의 주민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이에 따른 비용 또한 더 부담해야 할 것이다.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잔재해 있는 동독 공산당 (SED)의 유산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게다가 아직까지도 일부 불확실한 소유관계 그리고 종래의 동유럽 판매시장 상실이라는 문제까지 겹쳐 상황이 보다 어려워지고 있다. 전혀 낯설기만한 시장을 상대로 경쟁력 높은 제품을 개발하기란 - 그렇지 않아도 혁신적 변혁과정을 겪고 있는 전체 국민경제로서는 -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과거 중앙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졌던 구동독 “국영” 기업들은 최단 기간내에 우수한 제품과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는 초현대식 기업으로 탈바꿈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이 때 거칠기 짝이 없는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득이 과도기를 생각해야만 한다. 었친데 덮친 격으로 수년간 눈부신 경제 성장을 보이던 서부독일 경제마저 올해 들어 세계 전역에 걸친 경기 하락과 경제 불황의 늪에 빠져 버림에 따라 동부 독일 경제는 보다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는 공공 재정 분야의 여러가지 계획을 뒤죽 박죽으로 만든 원인 중의 하나인 바, 이로 인한 세수 격감과 연방 고용청의 적자는 표면상의 문제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앞으로 일시적 예산적자 증가를 각오하지 않을 수 없는 바, 독일의 경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적자 해소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조세 인상 외에도 연방 정부는 1990년부터 500억 DM에 달하는 대규모 절약 및 국가 보조금 감축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1994년도 예산, 연방 정부의 절약·긴축 및 성장 방안 그리고 내년도 재정 계획을 통해 이같은 긴축 노력은 보다 더 강화될 것인 바, 이를 통해 연방 예산 적자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키고자 한다.

안정 정책의 성공 여부는 앞으로의 신실주의 경제 재건에 좌우된다. 통일은 독일의 사회 및 경제적 조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동·서부 독일 간의 경제·사회적 격차를 계속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다년간 상당한 자금이 서부 독일에서 동부 독일로 이전되어야만 한다. 통일과 세계 경기

부진은, 경제지표가 입증하듯이, 독일인들, 특히 구 서독인들이 그간 분수에 넘친 생활을 해 왔다는 사실을 보다 분명히 해주었을 따름이다. 경제 성장력은 점점 높아지기만 하는 독일인들의 요구를 따라 잡지 못하고 있다. 호경기 시절에는 가능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 수정을 요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야만 동부 독일의 경제 구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리하여 전체 독일의 장래 경제 입지 또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올해 동부 독일 국내총생산 (GDP)은 서부 독일의 경기 침체라는 장애 요인에도 불구하고 약 5~6% 정도 증가할 것이다. 특히 건설업, 수공업 그리고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경기 활성화가 눈에 띈다. 이 밖에도 공공 사회 간접시설 그리고 행정·보건 그리고 환경정화사업 역시 현저한 진전 상태를 보이고 있다. 동부 독일의 임금, 봉급 그리고 연금 등은 서부 독일 수준을 목표로 계속 향상 중에 있다: 전 독일인들의 생활 수준 균등화 라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실질 임금과 봉급은 이미 1992년 말 서부 독일 임금 및 봉급 수준의 63%에 이르렀다: 특별 수당을 제외한 노사단체 협약상의 기본 임금 및 봉급은 1992년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부 독일 수준의 73%에 달하고 있다: 동부 독일 평균 소득자의 월 기준 연금은 올 중반부터 상승 서부 독일 연금 수준의 73%에 이르고 있다.

동부 독일 경제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순 공공 이전 자금은 올해 거의 1천 4백억 DM에 이르고 있는데, 연방 예산의 1/4 이상이 신설지역으로 투입되고 있다. 신설주의 연간 재정자금은 연대협약에서 합의된 재정 균형화 조치에 의해 1995년부터 2배 가까이 인상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독일 통일 기금에서 연간 3백억 DM이 신설 지역으로 지급되었으나 1995년부터는 신설지역 재정책충을 위해 매년 560억 DM의 재정 균형화 자금이 지급될 것이다).

신설지역에 대한 투자 활동은 구서독에서의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화되고 있다. 최근 Ifo - 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투자 계획 사업을

중단하거나 그 시기를 연장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 경우도 다른 부문에서의 추가 투자 활동으로 인해 투자 계획은 전반적으로 무리없이 진행 된다고 볼 수 있다. 1993년도 신설 지역 산업, 건설업, 상업 및 용역사업에 대한 투자는 약 360억 DM에 달하게 될 것인 바, 이로써 동부독일에서의 일인당 기업 투자는 올해 최초로 서부 독일보다 높아졌다.

올해 민간 및 공공 투자 총액은 약 1,350억 DM에 이르게 될 것인 바, 이는 전년보다 20%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건설업에 대한 투자가 계속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부 독일 주택건설업의 구체화 문제가 조정되고 전력 공급을 둘러싼 시비가 가려짐에 따라 건설 부문과 동력 부문에서의 투자활동 또한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하튼 신설지역의 국내총생산 대비 투자율은 서독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46% (1992년)라는 기록을 세웠다 (서부 독일 22%).

동부 독일의 경제와 노동시장은 현재 세계 전역에 걸친 경기 하락 현상으로 인해 1993년에도 계속 어려운 전환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연방 정부는 경제 및 재정정책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이에 강력히 맞서왔다. 현재 신설지역 실업자 수 (1993년 8월말 현재)는 117만 명으로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단축 근로자 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 감과 동시에 (1993년 8월말 현재 전년보다 14만 명 이상 줄어 듦) 신설지역 노동시장 역시 처음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연방 정부는 여러 개별 조치들을 통해 한편으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론 기존 일자리 감축시 근로자들이 입게 될 타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온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 한해 - 노동촉진법에 의거한 노동시장 정책상의 조치들을 통해 - 동부 독일에서만 연 평균 156만 명이 일자리를 갖게 되었다.

동부 독일의 경제는 1994년에도 계속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 활동은 앞으로도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산업체 부문에서도 현저한 생산성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부 독일 기업들은 연대협약의 일환으로서 동부 독일 경제구축을 위해 추가 지원을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와 관련, 기업들은 동부 독일로부터의 물품 구입량을 계속 증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1995년까지 물품구입액을 현재의 두 배인 500억 DM 까지 늘려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이 밖에도 다년간에 걸쳐 구서독은 물론 신설지역에도 충분한 직업연수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연방 정부 역시 통일 이후 매년 신설지역 내 직업연수자리 확보를 위해 상당한 자금을 지급하였는 바, 1993년에도 특별사업의 일환으로 1만 여개의 자리를 추가로 지원할 것이다.

연대협약을 통해 구채부 관계가 조정됨에 따라 주택건설부문에서의 광범위한 투자활동을 위한 선결조건이 마련되어질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주택건설업 부문에서의 투자가 200억 내지는 300억 DM 으로까지, 약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설주내 최대 개별 투자가인 독일 연방우편 - 텔레콤은 올 한 해에만 85만 신규 전화회선을 설치할 계획이다. 4년후 동부 독일의 전화 회선 설치율은 현 서부 독일 수준에 이를 것이다.

기타 다른 부문 역시 이 시기 이전에 이같은 평준화에 도달하게 될 것인 바, 돌풍같이 불어닥친 자가용 붐은 신설지역의 “주민 일인당 승용차 보급율”을 유럽 최고 수준에 가깝게 올려 놓았다. 비디오 레코더, 냉동기구, 세척기 및 전자 레인지 등의 개인 가전제품 구입 부문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보이고 있으며, 동부독일 시민들의 외국여행 사례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생활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전체 독일인들 모두가 사회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만 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격언은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독일의 통일은 민족적 차원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독일 통일은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및 러시아를 비롯한

기타 구소련 공화국 국민들에게 있어서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되고 있다.
이들 국가 국민들은 신설지역 독일인들보다 현저히 열악한 출발 조건에
처해 있다.

2. 출발 상태와 진전 상황

동·서독인들이 국가 통일을 달성한 지 이제 겨우 3년이 되었다. 또한 동독
공산당 수뇌가 동독 건국 40주년 행사를 치룬 것이 바로 4년 전 이었다.
고르바초프가 호네커와 만난 자리에서 “늦는 자는 인생의 벌을 받을 것이다”
(Wer zu spaet kommt, den bestrafte das Leben) 라는 명언을 한 이후로 유럽
전체의 전후 정세에 급격한 변화가 찾아 왔다. 동·서 갈등과 냉전시대는
종말을 고하였으며, 소련 연방공화국이라는 국가 체제는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공산주의 세계는 해체되었다. 구 바르샤바 조약 회원
국가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1989년 9월 중유럽에서 비롯된
민주주의, 자유 그리고 자결에 대한 열망은 동부유럽에서도 계속 승승장구
하고 있다.

이같은 평화혁명은 독일인들에게는 40년 이상 강압적으로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가져다 주었는 바, 이는 독일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행운이었다. 무엇보다 독일 통일이 평화,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자결이라는
토대하에 달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통일이 50년 전에만 해도 대부분
독일 전쟁 상대국들이었던 동·서방 우방과 이웃 국가들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뜻 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1990년 10월 3일 통일 이후 우리는 많은 업적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특히 물질적 평준화, 즉 가능한 신속하게
사회·경제적 생활조건을 평준화시키는 작업 외에도 내적 통일 달성을 위한
동·서부 독일인들 간의 정신적·문화적·사상적 동질성 모색이 중요시되어야
한다.

물론, 현 주안점은 40년 간의 사회주의체제가 남긴 환경 및 경제상의 피해를 제거하는 데 두고 있다. 우리는 이로 인한 동부 독일 주민들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한다. 실제 이 문제들은 발등에 불은 불과 같다. 그러나 동독 공산 정권 치하에서의 물질적 제한, 그리고 국민경제 자산과 환경에 대한 약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극심한 피해는 다름 아닌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억압, 독재 및 엽담 행위 그리고 사사건건의 간섭 등이 개개인의 창의성, 주도성 및 의욕 상실을 초래하였다는 점이다. 수 많은 주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의 여행 활동 또한 제한을 받았으며, 사각지대인 장벽과 철조망 또는 현실 사회주의 체제의 감옥소에서 생을 끝마쳐야 했던 수 많은 사람들의 개인적 운명은 더 이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일그러지고 파괴되었다.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갈망하던 것은 다름 아니라 개인적 자유의 보장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것이 유럽 전역에 걸쳐 독재, 간섭, 엽담 및 월권 행위를 제거시킨 원동력이 되었다. 오늘날 독일에서는 자유와 인권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하여 구동독 주민들의 과거 호네커 시절과 비교할 때 처음부터 물질적인 조건에만 시각을 제한하고 있는 바, 이로써 자유, 법치 국가, 자결 등의 문제는 아예 간과되고 있다.

사실 순수 물질적 조건 역시 현저히 개선되었다. 신설 지역 근로자 및 연금 수혜자 가계의 수입과 구매력에 대한 수치가 이를 잘 입증하고 있다. 다시 말해 동부 독일인들은 - 그야말로 진부한 표현을 빌려 쓰자면 - 통일의 대가를 “ 지불 받았다” (ausgezahlt), 그것도 마르크와 페니히로. 이같은 보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 바, 그 이유는 1990년 10월 3일 출발한 전체 독일의 생활 수준 평준화라는 목표를 향한 행진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3년 전 부터 연방 정부는 이를 목표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가끔 가다 시야를 밖으로 돌리는 것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거의 전 세계인들이 독일인들 자신보다 더 독일인들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사실을

알아 차리게 될 것이다. 외국에서는 독일인들이 내적 통일을 성공적으로 완수 하리라는 데 대해 전혀 의심치 않고 있다. - 구소련 공화국들은 차치하고서 라도 - 동유럽 및 남동유럽 국가들의 상태는 우리를 우려케 한다. 이들 국가들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정치·경제 상의 난관들은 국가 통일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하였을 경우, 1,700 만 명에 달하는 구동독 주민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3. 세 돌 맞이 중간 결산

연방 정부는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도전, 즉 완전히 상반된 두 개의 사회 및 경제체제를 다양하기 짝이 없는 방안과 조처를 통해 공동 국가라는 한 지붕 아래 결합시키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동부 독일 재건을 위한 자금이 대부분 연방 예산에서 충당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과 납세자들은 그들이 납부한 세금들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 지를 알 권리가 있다. 수 많은 조치가 실시되고 있는 관계로, 본 보고서에서는 요약·개괄의 형태로 1990년 10월 3일 통일 이후 통일 세 돌을 맞아 신설지역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중간 결산에 중요한 주요 자료와 사건들을 언급토록 하겠다.

연방 재정건실화방안 (FKPG: Foederaler Konsolidierungsprogramm) 실행법에 의거한 연방 재정 균형화 조치는 1995년부터의 연방과 주, 그리고 지자체 간의 공공 예산 분배를 새로이 조정하고 있다. 신설 5개 주 역시 1995년부터 이 제도에 완전히 편입됨으로써 연간 약 600억 DM 규모의 자금을 지원받게 되는 바, 이로써 신설주 및 신설지역 지방단체들의 예산은 서부 독일 수준의 105%에 달하게 된다. 신설주들과 신설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 내역 중 소비성 지출 부문에 대한 서부 독일 주 및 지방자치단체들에 비해 최소한 5%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서부 수준의 약 180% 정도를 투자 부문에 지출할 수 있게 된다.

1993년과 1994년 역시 연방 재정건실화방안에 의해 합의된 “독일통일기금” 증액 결정에 따라 신설주와 신설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금은 적정 수준에서 보장되게 된다. 1994년 연말까지 차입한 950억 DM 상단에 달하는 부채의 청산은 연방이 떠맡게 되는 바, 구서독 주들이 연간 21억 DM을 가산하여 절반을 부담하게 된다. “독일 통일” 기금의 부채는 약 20년 후에 완전히 청산될 것이다.

재정건실화방안에 따라 구채무변제기금 (Erblastentilgungsfonds)이 설립되었다. 이 기금에서 1994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채무청산기금과 신탁청의 채무, 그리고 동부 독일 주택건설업체의 일부 구채무를 인수, 이에 대한 부채 청산 업무를 실시하는데, 이 때 한 세대 안에 부채청산이 완결되도록 규정해 놓았다. 이 역시 연방이 담당하는 바, 이에 따라 연방은행 수익의 일부가 부채 청산에 투입된다.

독일 연방 철도와 독일 제국 철도를 3개의 주식회사와 1개의 특별자산 (Sondervermoege)이 인수토록 하는 철도 개혁 방안 역시 기본적 재정 구조 조정 사업의 일환에 속한다. 1994년부터는 특별 자산이 약 700억 DM 상당의 철도 부채를 인수할 예정이다. 이 채무 청산 역시 연방이 부담하게 되는 바, 향후 30년 동안에 걸쳐 부채를 청산할 예정이다.

1990년 중반부터 연방, 주 그리고 EC 위원회들은 기업 활성화 지원의 일환으로 광범위한 조치들을 마련, 이를 실시하고 있다. 투자보조금, 특별 신용 대부 방안 및 공공 사업 수주 등과 같은 주요 투자 조치 외에도 많은 보충 육성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이 투자 대책을 세분화시킴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음과 동시에 투자 육성 악용 사례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독일의 산업 입지 보장 조치로서 다음을 들 수 있다:

- o 기업 대상 조세법 개혁 (사업 입지법), 기업에 대한 조세율 인하
- o 신속한 동부 독일 경제부흥을 위해 계획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투자 간소화 및 주택건설부지법)
- o 철도 및 우편 민영화 관련 법
- o 과학·기술 연구의 촉진을 위한 유전공학법 수정 (허가절차 간소화 포함)
- o 장시간 공장가동을 가능케 하고 신축적인 근무시간 조정을 위한 근로시간법 개혁

추가로 신설주 지역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신탁청은 기업 사유화 및 기업 정비작업을 통해 새로운 경제 구조를 구축시키고 핵심 산업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지금까지 총 12,800 개의 기업/업체들과 약 17,000 부동산 그리고 약 15,000 여 상점, 음식점, 호텔 등이 사유화되었다. 기업/업체 사유화 사례 중 80%를 중소기업체들이 인수하였다. 약 20%는 Management-Buy-Out 방법을 통해 동부 독일인들이 구입하였다. 신탁청 기업 인수 사업자들은 총 145만 일자리와 1,810억 DM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하였다. 사유화의 일환인 투자 및 일자리 보장에 대한 기업들의 약속은 기간 산업 유지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그 예로서: 자동차 산업 (오펠, 폴크스바겐), 광학 산업 (Jenoptik, Carl Zeiss Jena) 등을 들 수 있다.

신탁청의 이같은 사유화정책은 계속될 것인 바, 현재 잔류 기업은 약 1,500 여 개에 달한다. 이 중 약 600여 기업들에 대해서만 경영상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바, 이 중 약 200이 채 못되는 기업들만이 2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다. 현재 신탁청 기업들의 전체 직원 수는 약 267,000 명에 달한다. 1992년도 신탁청의 손실은 매각수입의 20~30%에 이르렀다.

신탁청은 소속 기업의 정비를 위해서도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일 후 부터 1993년 말까지 기업들의 구채무, 재정보조, 부채 및 보증금 청산을 위해 1,700억 DM이 지출되었다.

연대협약의 주요 사안은 기간 산업의 유지 및 개혁인 바, 기존의 기업 정비 사업 대책에 특히 주력하고 있다. 이같은 기업 정비 및 환경오염 잔재 제거 목적을 위해 1993년, 1994년도 신탁청의 차입상한선이 현저히 높아졌다.

신탁청의 업무기간은 한시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1994년 말까지는 기업의 사유화 작업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1994년 말까지는 남은 과제를 처리할 간부 몇 명을 제외하고는 신탁청이 해체되기 때문에 남은 일은 가능한 한 분산 내지는 개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서부 독일 경제를 따라 잡기 위해서는 특히 교통 인프라스트럭처가 신속히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연방 정부는 2010년 까지의 투자 계획 및 재정 계획을 담고 있는 1992년도 연방 교통 도로 계획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통일독일 교통 사업”에 총 560억 DM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업은 주로 환경보호적 교통 수단인 선로(290억 DM)와 수로(40억) 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며, 도로개선을 위해서는 총 230억 DM을 투자할 예정이다.

1990년 후반에도 연방은 신설지역 교통개선을 위해 56억 DM을 지원하였다. 이같은 지원액은 1991년에는 약 96억 DM으로 증가하였으며, 1992년도에도 약 50%가 늘어난 137억 DM이 투입되었다. 올해 지원액은 약 132억 DM에 달한다. 이는 교통 예산 중 교통 부문 간접 시설 개선을 위해 마련된 전체 투자 사업 자금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1994년에서 1997년까지는 신설지역에 대한 중장기 사업계획으로서 총 580억 DM의 예산이 마련되어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전체 교통부문의 투자금 중 약 57%가 동부 독일로 투입됨을 의미한다. 1991년부터 1993년 말까지 독일 제국 철도에 대한 투자는 약 256억 DM에 달하게 될 것이다. 철도 개혁의 일환으로 독일 연방 철도가 주식회사로 민영화 됨에 따라 연방은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인 바,

구체적으로, 앞으로 10년간 약 100억 DM에 달하는 경비가 감축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필수적인 사항이었던 전화 가입은 구동독에서는 거의 특권과 다름없었다. 동독 대변혁 당시 동부 독일의 전화 회선수는 약 190만에 그쳤으나, 1992년말 전화 회선 수는 약 3백 만에 달하며, 올해 또 85만 전화 회선이 추가로 설치될 것이다. 만약 현재 진행 중인 연방 체신 텔레콤의 최신형 텔레커뮤니케이션 통신망 설치가 완결되는 1997년에는 총 9백만의 전화 회선 - 이는 동독 공산당이 40년 동안 이룩한 전화 회선 수의 5배에 달하는 수치임 - 이 설치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바, 1997년까지 Telecom의 신설지역 및 동베를린내 남은 통신망의 현대화 및 확장사업을 위해 약 600억 DM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최대의 개별 투자가인 Telecom은 1992년에만 40억 이상의 수주를 동부 독일 회사들에게 맡겼으며, 이로써 9만 이상의 일자리를 마련하거나 유지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연방 연구기술성은 1993년 한 해에만 신설지역의 (연구 및 기술개발연구소 구축, 시설 설치 및 과학자 흡수 계획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 사업을 위해 175억 DM, 그리고 1994년에는 177억 DM의 예산을 마련해 놓았다. 1994년에는 중립 학술위원회의의 건의와 연방, 주 정부, 학술 기관들의 상호 협의에 의해 2년 내에 약 12,500여 명에 달하는 동부 독일 학자들과 전문 기술인력들에게 새 과제와 전망을 부여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밖에도 또 3,000여에 달하는 고용창출조치에 따르는 연구직 일자리가 마련되었다.

1991년과 1992년 - 그리고 올해 역시 - 구주공동체는 구조기금 (Struktur-fonds)에서 신설지역을 위해 연간 20억 DM의 자금을 제공하였다. 연방 정부의 노력으로 신설 5개주들과 동베를린은 1994년 1월 1일부터 EC 구조기금 지원 지역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신설지역들은 1994년부터 1999년까지 EC로부터 연간 20억 DM을 훨씬 상회하는 액수를 지급받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기간동안 EC로부터 동부 독일의 지역 개발, 사회보장 부문 그리고 농업 부문의 구조 개선 조치로 지원되는 금액은 총 270억 DM에 달하게 된다.

이 밖에도 현재 유럽 의회에서 완전한 표결권없이 참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설주 출신의원 18명은 내년 선거 이후부터는 정식으로 의석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주택 및 임대 정책은 기존 건물의 폐허화, 신축 부진 등으로 인해 - 적어도 서부 독일의 시각에서 볼 때 - 이루 말할 수 없는 주거 환경 악화와 주택난을 불러 일으켰다. 전체 임대 수입의 약 4배 정도에 달하였던 국가 보조는 동독 시절의 주거비용을 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었으나, 주택시장에는 참혹한 잔재를 남기게 되었다. 사실 이같은 저렴한 임대료는 대규모 주택 정비 및 현대화, 수리 사업을 방치해 줌으로써 가능해 질 수 있었는데, 이로 인한 피해는 동독 대변혁 이후 복구되어야만 되었다. 1990년 이래 동부 독일 주택의 1/4이 연방 정부의 육성 방안에 의해 정비 또는 현대화 되었다. 약 45,000여 가구의 아파트들이 건설되었으며, 지방 자치단체 소속 19,000여 가구의 아파트들을 임차인에게 매각·사유화시켰다. 연대협약의 일환으로 실시된 부흥은행 용자 프로그램은 300억 DM에서 600억 DM으로 2배나 증가되었다. 이 밖에도 연방 정부는 대학생 기숙사 (연간 2억 5천만 DM), 서민 임대 주택 (연간 10억 DM) 그리고 도시 건설 (연간 6억 2천만 DM)을 위해 특별 촉진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신설지역 주택건설업체 구채무 해결방안 역시 연대협약 합의사항으로 처리 된다: 주택업체에 대한 이자 지원 (1994년 1월 1일부터)과 구채무 면제 (1995년 중반부터) 조치로 인해 이들의 부담은 상당히 감소되었다. 연방과 신설주들은 1994년부터 1995년 중반까지 발생될 70억 DM 이상의 이자 총액을 각각 절반씩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같은 구채무 면제조치로 인해 연방은 310억 DM의 부담을 안게 되는 바, 구채무 청산기금에서 이를 인수하게 된다. 이로써 연방은 정기 상환 조건으로 최소한 연간 28억 DM의 부담을 지게 된다.

연방 정부가 이같은 연대협약 합의사항에 동의한 까닭은 신설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킴과 동시에 적절한 가격의 주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동부 독일 농업 경제의 구조적 개혁 사업 - 이 역시 역사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작업임 - 은 1990년 이래 급진전을 보이고 있다. 지난 3년간 19,000여 개인업체와 3,000여 조합단체 또는 농업기업들이 형성되었다. 이는 신설지역 농업이 1990년 1월 1일부터 유럽 농업시장에 완전히 통합됨으로써 그리고 각종 대책을 통한 연방 정부의 지원에 의해 가능해 질 수 있었다.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이같은 동부 독일 농업의 적응 과정을 위해 농업 예산 중 약 130억 DM이 지급되었다.

신탁청은 아직 190만 헥타 (ha) 이상의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약 1/3은 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원소유권자에게로 반환되어야 한다. 1945년부터 1949년 사이에 토지개혁의 일환으로 국유화된 나머지 130만 헥타르 (ha)에 달하는 농경지는 사유화되어야 한다.

1992년 1월 1일부터 독일 전역에 동일한 연금법이 적용되게 되었다: 즉, 연금 수혜 연령, 유가족 후생복지 및 연금 평가기준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화폐 통합 이후 3년이라는 짧은 기간안에 (1990년 7월 1일부터 1993년 7월 1일 까지) 동부 독일의 월평균 기준연금은 서부 독일 연금 수준의 73%로 향상되었다. 특히 구동독시절 연금 수혜 연령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소액에 불과하였던 유가족 연금은 1992년 1월 1일자 과도연금법에 의해 현저히 개선되었다.

올해 신설지역 연금보험의 지급비는 542억 DM에 달하는 바, 연금보험을 위해 구서독 지역에서 신설지역으로 이전되는 자금은 190억 DM에 이른다.

구동독 지역 전쟁 피해자들도 이제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게 되었다. 1990년 봄까지만 해도 구동독 전쟁 피해 연금 수령자는 약 5,000 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38만 명의 구동독인들이 수혜 대상자에 속한다. 1991년 1월 1일부터

연방 부양법이 신설 5개주에까지 확대·적용됨에 따라 이미 33만여 건이 처리되었으며, 이 중 23만 5천여 명이 수혜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구동독 강제 노역자들 - 예를 들어 비스무트 지역의 우라늄 광산에서의 - 중에서 영구적 건강 피해를 입은 자들의 후생 복지는 1994년부터 법인 사고 보험이 맡게 된다. 연방은 이를 위해 1994년부터 총 4억 DM을 마련해 놓고 있다.

지난 2년간 고용창출조치 (ABM) 수혜자 수는 1991년 평균 18만 3천 명에서 1992년 38만 8천 명으로 현저히 증가하였다; 연방 정부의 고용창출조치 - 확보 방안에 따라 1993년 3월 추가 고용창출 조치를 위해 20억 DM의 추가 지원이 있었는데, 이 중 17억 6천만 DM이 신설지역에 투입되었다. 이로써 22만 5천 여 ABM 자리가 추가로 마련되어질 수 있었다. 8월에는 이미 3만여 명이 이 조치의 혜택을 받았다. 1993년 8월 말 현재 총 21만 명이 이 조치에 의해 취업 지원을 받고 있다.

통일 이후 2백 만 명 이상의 구동독인들이 새롭고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직업 전환 및 연수 교육을 받고 있다. 조기 퇴직 지원금과 퇴직 과도 지원금 역시 노동시장의 초과공급현상의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1993년 8월 말 현재, 동부 독일 지역내에서 64만 1천 명이 퇴직과도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19만 9천 명이 조기퇴직지원금을 받고 있다.

직업 훈련 자리와 관련하여서는 동·서부 독일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부 독일은 직업연수자리 과다 현상을 겪고 있는 반면, 신설지역에서는 공급보다 수요가 과다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연방 정부는 통일 이후 경제계, 노조단체, 연방, 주 정부, 연방 고용청 및 신탁청내 관련 책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개개 직업 연수 지망생들 모두에게 연수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리하여 1991년과 1992년에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는데, 1991년에는 동부 독일 직업 교육 육성을 위해 2억 5천 만 DM의 연방 자금을 지급하였으며, 1992년에는 약 1만 6천여 개의 초기업적 직업 연수

자리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였다. 올해의 경우 초기업적 직업 연수 자리가 대폭 감소한데 반해, 1993년도 학교 졸업생들의 증가로 인해 직업 연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긴장된 상태에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연방 수상의 개인적 노력으로 인해 이제 8월 말 현재 부족한 동부 독일내 직업 연수 자리를 올 가을 직업 연수 학기가 시작할 때까지 보충할 수 있게 되었다. 연방 수상이 주도한 특별 직업 연수 자리 마련 방안에 따라 1만여 초기업적 직업 연수 자리 확보를 위해 약 5억 DM 상당의 지원이 보장되었는 바, 이 중 절반은 EC 사회 기금으로부터,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연방과 신설주가 나누어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 자금은 각 지역적 특성과 수요에 따라 서비스 직종과 젊은 여성들의 직업 연수 알선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이 밖에도 최고 경제단체들은 연방 수상에게 동부 독일 내에 다년간의 직업 연수 자리를 유지하겠음을 재차 다짐하였다. 따라서 동부 독일의 학교 졸업생들은 올해 역시 별무리없이 직업 연수 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설지역의 학교 교육 및 자질 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자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

그간 신설 지역에서도 서부 독일에서 수 십년간 성공적으로 실시되어 온 지역·사업 및 직장별로 구분되는 의료보험제도 가 구축되었다. 보험가입자들은 서부 독일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의료 보험 단체, 의사, 치과 의사 등을 자의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동부 독일의 경우 주민 1인당 개업의 수는 서부 독일 수준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서부 독일에서의 일부 개업의 과다 현상을 감안할 때, 이를 꼭 추구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여하튼 신설주에서도 외래진료가 완전 보장되고 있는 바, 특히 현재 개업의와 종합 병원의 의료장비가 현저히 개선되었다. 또한 신설주에서의 의약품 공급 수준과 규모 역시 서부 독일 수준에 달하고 있다.

연방 정부가 의료 행위 개선을 위해 제공한 약 5억 2천 만 상당의 긴급 지원 대책에 힘입어 종합 병원들의 의료 시설들이 현저히 개선될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수 많은 병원 건물들의 정비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1993년과 1994년, 통일 기금이 이를 위한 투자기금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1995년부터 2004년까지는 신설지역 종합병원 투자 재정을 위한 공동 방안에 총 70억 DM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설지역들을 의료구조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올바른 결정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노동시장은 보험금 가입을 인상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이다. 동부 독일내 법인 의료 보험 회사들의 재정상태는 긍정적으로 진전되어 가고 있다. 1991년에만 해도 적자가 약 2억 DM에 달했으나 1993년 1/4분기 때에는 거의 3억 DM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40년 간의 사회주의적 계획 및 억압경제가 남긴 폐해 중 가장 심각한 곳은 환경 부문이다. 이 부문에 대한 환경상의 부담과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구동독 원자력 발전소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모두 가동이 중단되었다. 우리나라 채광에 따른 환경피해 파악 작업은 원활히 진전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은 1996년에야 가야 종결될 예정이다. 연방 정부는 구소련 동독 합작 Wismut 시설에 대한 보수와 재정비를 위해 향후 10~15년간 약 130억 DM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방은 1990년 이미 식수 공급과 하수 및 쓰레기 처리를 위해 약 53억 DM의 자금을 제공하였다. '구동독 경기부양 공동대응책'의 일환으로 1991년과 1992년 총 8억 2,900만 DM이 동부 독일의 환경보호 긴급대책을 위해 제공되었다. 이 밖에도 연방은 1992년 연말까지 환경부담 감소를 위한 시범 사업들을 위해 약 4억 DM을 마련해 놓았다. 이를 통해 고도의 환경정비사업이 실시될 수 있었다.

연방은 신설 5개주들에 대해, 1992년 말까지 1,850여 개 환경보호 사업을 위해 총 15억 DM 상당의 자금을 마련해 주었다. 이같은 연방의 대폭적인 지원은

신설지역의 환경 상황을 현저히 개선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대기 오염, 깨끗한 식수 공급, 하수 처리 부문 등에서도 이같은 개선이 있었는데, 이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선결 조건이 되고 있다. 동해안과 엘베강 정화 방안이 마련되어 광범위한 환경 피해 상황 조사를 토대로 환경 오염 잔재를 파악하고 있다.

대규모 환경피해 정화 사업 - 예를 들어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연간 15억 DM 규모의 재정 지원이 예정된) 갈탄 정비 사업과 대규모 화학 단지 정비 사업 (예상 비용 총 23억 DM) 등 - 의 재정을 신탁청과 주들이 75:25 비율로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고용창출대책 역시 대대적인 신설 5개주 환경정화사업에 일조를 하였다. 1991년과 1992년에만 신탁청 소속 기업들에서 매년 6만 여 명이 적극적 환경 보호 사업에 종사했었다. 지방자치단체 기관들까지 합한다면 한시적으로 10만 명 이상의 인원이 환경정화 사업에 종사한 셈이다. 고용촉진법에 명시된 고용창출대책의 후속조치 덕택으로 이미 성공리에 시작된 정화대책이 1993년에도 계속해서 실시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 10월 3일 통일 이후로 연방국방성은 내륙간 경계시설의 2/3 (약 800 km)를 철거시켰다. 나머지 400 km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철거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100 km에 걸쳐서는 지뢰 탐색 및 제거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바, 이는 1995년 3월경에 종결될 것이다.

연방 국방성 소속 2,300여 건의 부지 중 약 70%가 사유화되었다. 연방 국방성은 관련 지역 건축업체에 공사를 발주시킴으로써 신설 5개주 건축업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동부독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내적 통일 달성에 중요한 문화보존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1991년에서 1993년까지 신설지역 문화정책상의 과도재정 명목으로 총 26억 DM이 투입되었다. 이 밖에도 연방 정부가 범국가 차원에서 신설 5개주의 특정

문화기구를 육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바이마르 민족 연구 기념관, Buchenwald 유테인 수용소 기념관, Dessau 건축관, Sorben 종족 문화재단, 포츠담 시성(Sanssouci) 및 정원 재단, Leipzig 시 바하 자료 보관소 등을 들 수 있다.

이같은 방법을 통해 동부 독일의 주요 문화 유산들이 보존될 수 있었으며, 이로써 정신적·문화적 통일 달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도 주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정책상의 활동과제들을 앞으로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방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놓았다.

이 밖에도 연방 정부는 기타 영역의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해 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학 교육 및 제도 개혁; 어린이 보호 시설; 청소년 보호; 방위근무체제 구축; 체육 진흥; 가족 및 여성 정책 (특히 근경에 처한 임산부 지원 기금 - 모자 재단, 직장 복귀 시범 사업, 여성의 집 구축 사업, “여성 경영인 육성” 시범 사업); 노인정책 및 복지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연방 정부의 지원 하에 2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거의 960여 개의 사회복지기관이 구축되었는 바, 이로써 신설 지역에도 노약자들과 지체 부자유자들을 보살필 수 있는 효율적 사회복지망이 구축되었다.

끝으로, 행정체계와 사법체계 구축 역시 지난 3년간 현저한 발전을 보였다. 연방 정부는 다수의 인적·재정적·조직상의 조치를 통해 이 중요한 작업을 지원하였다. 1993년도 연방 예산 중 행정부문에서의 추가 인건비 내역으로 2억 5천만 DM이 마련되었다. 사법계에 대해서는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총 3억 3천만 DM의 재정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노동 및 사회보장법원 부문에 대해 추가로 약 6천만 DM이 지원될 것이다.

Ⅲ. 통독 3주년을 즈음한 여론조사 결과

○ 통독후 3년동안 소득은 약 2배 - 2,800 DM - 로 증가함.

- 이는 서부 독일 수준과 비교하여 약 70%에 해당됨.

- 동 기간 동안에 있었던 약 35%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해도 이 수치는 구동독 주민들에게 '90년 대비 약 50%의 실제 임금 상승을 의미함.

○ 물론 모든 가게들이 똑같은 소득 증대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님.

- 통일 전과는 달리 수입구조가 가게별로 세분화됨.

4. 주민 개개인의 가게 상태

	나아짐	전년과 마찬가지로	전년보다 나빠짐
1990년	16%	48%	36%
1991년	30%	39%	31%
1992년	39%	41%	20%
1993년	34%	47%	19%

○ 화폐통합 당시만 해도 - SED 치하에서처럼 - 동독 주민들간에는 수입 격차가 심하지 않았음.

- 전 가게의 약 70%가 1,000 마르크에서 2,500 마르크 사이의 수준을 유지함.

- '90년 7월 당시 약 20%의 가게가 1,000 마르크 미만의,
- 10% 만이 2,500 에서 최고 4,500 마르크까지의 수입을 누려왔던 것으로 알려짐.

3. 경제적 상황 (전반적 경제 상황, 자신의 경제 상황)

단위: %

		종 다	그저 그렇다	나쁘다
구서독지역	전반적 경제 상황	11	57	31
	자신의 경제 상황	57	36	7
구동독지역	전반적 경제 상황	1	34	65
	자신의 경제 상황	36	51	12

4. 향후 독일의 사회복지비용 감당 문제

단위: %

	앞으로도 가능하리라 본다	앞으로는 불가능하리라 본다
구서독지역	20	77
구동독지역	28	71

5. 사회체제의 건강도

- 독일 사회체제에 대한 평가

단위: %

	문제점이 없다	많은 문제점이 있다	중대한 위기상태이다	붕괴 직전이다
구서독지역	5	47	35	13
구동독지역	1	49	41	9

- 서유럽 인접국가들과 비교한 독일의 현 사회체제 건강도

단위 : %

	인접국보다 낫다	차이가 없다	인접국보다 나쁘다
구서독지역	59	30	6
구동독지역	45	38	15

6. 각종 사회제도에 대한 만족도

- 각 항목에 대해 독일의 제도가 좋다고 답변한 비율

단위 : %

	교육의 기회 균등	승진 가능성	법적 형평	범죄로부터 보호	고용의 기회 균등	사회 복지	자기 실현
구서독지역	83	75	57	24	42	68	82
구동독지역	60	51	34	4	8	26	58

7. 공동체의식과 이기주의 문제

- 독일인들의 공동체의식과 이기주의

단위 : %

	문제점이 많아지면 이기주의가 커진다	문제점이 많아지면 공동체의식이 커진다
구서독지역	67	28
구동독지역	84	16

- 서유럽 인접국의 공동체의식

단위 : %

	우리보다 강하다	그저 그렇다	우리보다 약하다
구서독지역	46	40	4
구동독지역	42	41	11

8. 내적 통일 달성

- 1990년 통독에 대한 평가

단위: %

	옳았다	잘못된 것이었다
구서독지역	81	16
구동독지역	82	17

각 개인에 대한 통독의 중요성

단위: %

연 령 (세)	18-24	25-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구서독지역 주민 중 중요하다고 답변한 비율	54	47	55	68	78	74

- 통독 달성을 위한 연방 정부와 경제계의 활동 평가

단위: %

		지나치다	잘하고 있다	모자란다
구서독지역 주민의 평가	연방 정부	15	49	28
	경제계	8	36	46

- 서독주민들의 동독주민 불만에 대한 평가

단위: %

	동독인들의 불만은 정당하다	동독인들의 불만은 부당하다	모르겠다
구서독지역	34	59	8

- 동독주민들의 동·서독 생활평준화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만족스럽다	불만스럽다
구동독지역	25	75

- 동독주민 대상 대변혁 (베를린장벽 붕괴) 이전과

오늘날의 개인적 만족도 비교

단위: %

	대변혁전보다 좋아졌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대변혁전보다 나빠졌다
구동독지역	55	28	17

- 동독주민이 본 대변혁 이후 악화된 사안

단위: %

	자신의 경제 사정	사회 복지	개인적 자유	이웃과의 관계	전반적 경제 현황
구동독지역	22	64	5	43	72

9. 독일인들의 민족적 정체성

- 미국인, 프랑스인, 영국인과 비교한 독일인들의 국가에 대한 긍지

단위: %

	그들과 똑같이 긍지를 느낀다	그렇지 않다
구서독지역	80	17
구동독지역	72	27

“ 전형적인 독일식 (typisch deutsch)” 이라는 표현에 대한 평가

단위: %

	좋다고 본다	나쁘다고 본다
구서독지역	45	44
구동독지역	57	41

서독인, 동독인, 독일인이라고 각각 느끼는 정도

단위: %

	서독인이라고 느낀다	독일인이라고 느낀다	동독인이라고 느낀다
구서독지역	80	15	
구동독지역		51	48

10. 통일독일의 외교 정책

유럽을 주도하는 강대국

단위: %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모르겠다
구서독지역	52	14	8	4	18
구동독지역	77	8	8	1	3

독일의 국제적 영향력

단위: %

	너무 크다	적당하다	너무 적다
구서독지역	13	65	16
구동독지역	26	63	10

- 통독으로 인한 독일의 국제적 영향력

단위: %

	커졌다	변함없다	적어졌다
구서독지역	40	49	7
구동독지역	48	46	5

-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독일의 책임

단위: %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함	더 많은 책임을 지지않아야 함
구서독지역	55	41
구동독지역	50	50

11. 중요한 문제에 관한 국내 정치적 논란

단위: %

	논란이 너무 많다	적당하다	논란이 너무 없다
구서독지역	58	11	25
구동독지역	66	11	21

B. 통독 3주년 구동독주민 여론조사

(Die Zeit 지 '93.10.1자, " Es waechst zusammen" 제공)

1. 개 관

- o 베를린에 소재하는 Infratest Burke 여론조사 연구소는 「Die Zeit」지의 위탁을 받아 1993년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14세 이상의 구동독 시민 1,023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 추출 검사 방법을 이용하여 통독 3주년에 즈음한 여론조사를 실시함. 동 여론조사는 185명의 조사인이 동원되었으며, 인터뷰 대상 구동독 시민들은 이를 지난 3년간의 자신을 조명해 보는 좋은 기회로 삼아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함.
- o 지난 3년 동안 구동독인들은 시장경제에 잘 적응하였음. 사회 전체의 경제상태는 여전히 열악하나, 주민 개개인들의 가계 경제는 향상된 것으로 밝혀짐. 그렇지만 구서독측의 사회적 냉담과 지원부족으로 인해 이들은 전체 독일에 대해 소원한 자세를 내 비치고 있음.
- o 동독의 서독으로의 편입은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가지 통일과정상의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음.
- "다시 합치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는 84%에 이르는 동독 주민들의 일관된 소감이 이를 반증함.
- o '90년 10월 3일 통일 직전에 실시되었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동독인들은 94%나 통일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밝혀짐.

- 반면 서독 주민들 사이에는 통일을 완수하기 까지에는 아직 머나먼 여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고통스런 인식이 팽배하고 있음.
- 다수의 동독인들은 통일만 되면 2년내로 곧 서독에서와 같은 생활 수준을 누리게 되리라는 벅찬 기대를 했음.

2. 생활 평준화 시기에 대한 예상

	1~4년	5~6년	7~10년	10년 이상
1991년도 여론조사결과	23%	45%	26%	6%
1993년도 여론조사결과	8%	25%	37%	30%

- 통일 1주년 여론조사까지에서는 68%의 구동독 주민들이 동·서간의 생활 수준 격차가 늦어도 '97년까지는 해소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함.
 - 그러나 '93년 9월 현재 이러한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33%에 지나지 않음.
 - 60% 이상의 신설주 주민들은, 반대로, 동·서간의 불균형이 아무리 빨라도 2,000년대까지 가서야 해소될 것으로 확신함.
-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 동·서를 통털어 - 통일로 인한 이득은 차세대들이나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임.
 - 다시 말해 약 50% 정도가 자신들에게는 통일이 너무나 늦게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밝힘. 이를 연령 분포별로 살펴보면,
 - 노년 연금계층에서는 80% 이상이,
 - 40대에서는 56%,
 - 30대에서는 41%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현 사회의 기둥 역할을 하는 30~40대 사회 계층의 수가 이렇게 높음은 다른 사회 계층과는 달리 이들 세대는 어쩔 수 없이 통일에 따른 모든 과제들을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0 전체 독일에서 살고 있는 느낌이 어떠한가에 대한 조사 역시 신설주 주민들 사이에서는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약 58%가 통일로 인해 개인의 생활이 좋아진 것으로 대답함.
 - 특히 직장인들 (62%)과
 - 청소년들 (14~19세 층에서는 심지어 89%)
 - 이 밖에도 - 통일과 더불어 보다 많은 연금을 받게 된 노년층들도 같은 답변을 함.
 - 이와는 달리 통일에 대해 실망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의 수는 약 40% 정도가 되는 것으로 밝혀짐.
 - 특히 통일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된 계층에서 그 수가 (66%) 높았음.
 - 조기 퇴직 대상자들에게서는 49%가 실망의 반응을 표함.
 - 차라리 통일이 되지 않았으면 나았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수는 신설 5개주 주민들 중에서 약 15%에 달함.
 - 이들의 대부분은 PDS당 (동독 공산당 후에 정당: 역주) 지지자들로서, 통일때문에 기득권을 상실하게 된 전 SED 당직자들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0 통일에 대한 원칙적인 동의와는 달리 그 진행방식과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서로 갈림.

- “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금과 같은 통합 방식 외에는 다른 수가 없지 않는가 ” 라는 견해에 대해 동부 독일인들의 53%가 동감을 표함.

- 거의 같은 수가 통일이 너무 빨리 진행되었다는 입장을 밝힘.

- 동시에 이들은 신설주의 문제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

- “ 구동독 시절에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들마저 모두 뿌리 뽑혀진 ” 사실에 대해 특히 82%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표함.

- 이러한 사실은 통일이 동부 독일인들의 기대와 구상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3. 동독 가구당 평균 가계 수입 (실수입)

1990년 7월	1991년 5월	1992년 5월	1993년 9월
1,400 DM	2,000 DM	2,450 DM	2,875 DM

0 시장경제체제로의 편입은 서독 마르크화의 도입으로 시작됨.

- 화폐통합 당시 동독 일 가구당 평균 가처분 소득은 약 1,400 마르크였음.

○ 통독후 3년동안 소득은 약 2배 - 2,800 DM - 로 증가함.

- 이는 서부 독일 수준과 비교하여 약 70%에 해당됨.

· 동 기간 동안에 있었던 약 35%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해도 이 수치는 구동독 주민들에게 '90년 대비 약 50%의 실제 임금 상승을 의미함.

○ 물론 모든 가게들이 똑같은 소득 증대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님.

- 통일 전과는 달리 수입구조가 가게별로 세분화됨.

4. 주민 개개인의 가게 상태

	나아짐	전년과 마찬가지로	전년보다 나빠짐
1990년	16%	48%	36%
1991년	30%	39%	31%
1992년	39%	41%	20%
1993년	34%	47%	19%

○ 화폐통합 당시만 해도 - SED 치하에서처럼 - 동독 주민들간에는 수입 격차가 심하지 않았음.

- 전 가게의 약 70%가 1,000 마르크에서 2,500 마르크 사이의 수준을 유지함.

· '90년 7월 당시 약 20%의 가게가 1,000 마르크 미만의,

· 10% 만이 2,500 에서 최고 4,500 마르크까지의 수입을

누려왔던 것으로 알려짐.

- 현재는 구동독 가게 전체에서 4% 정도만이 1,000 마르크 미만의 월 수입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으며,
 - 절반 이상의 가게가 2,500 마르크 이상 (실질 가게 수입)을,
 - 약 6% 정도는 5,000 마르크 이상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게수입이 1,000 마르크 이하인 경우는 주로 부부가 모두 실업 상태에 처해 있을 때에 그러하며,
 - 고소득층의 경우는 자유직 종사자나 자영업자 또는 전문직 사무원내지는 부부중 한 사람이 서부 독일에 직장을 갖고 있을 때에 특히 그러함.
- o 이러한 소득격차는 신설 5개주 주민들의 일상생활 태도에서 여실히 반영됨.
 - 소득 정도에 따른 생활상이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 2% 정도가 “ 누리고 싶은 것을 풍족하게 누리고 있다” 고,
 - 37%는 “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다” 고,
 - 50%는 “ 빠듯하게 생활을 꾸려 가고 있다” 라고 대답했으며,
 - 10% 정도는 “ 한 푼이라도 아끼지 않으면 살기가 어렵다” 고,
 - 1%는 “ 허리띠를 졸라 매어도 정말 살기가 힘들다” ,
 - 부부 모두, 또는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실업수당에만 의존해야 될 가게는 최저생활수준도 지켜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함.

5. 취업 상태

	취업자 (완전· 단축 취업)	실업자	과거에는 일을 하다 그만 둔 비취업자	한 번도 직장 생활을 하지 않은 자
1990년 동독 사회 (18세 이상)	68% 완전 취업 10% 단축 취업	1%	17%	4%
1993년 신설주 (18세 이상)	50% 완전 취업 5% 단축 취업	10%	31%	4%

- 직장 생활과 관련된 변화가 가장 충격적인 것으로 신설 5개주 주민들은 토로하고 있음.
 - '90년에는 18세 이상 주민의 78%가 취업 활동을 함.
 - 현재 이 수는 55% 정도로 그치고 있음.
 - 이 중 29%가 조만간 실업상태로 빠지게 될 것을 우려함.
 - 다른 한편, 많은 사람들이 전직을 하였거나, 종전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도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 직장 생활면에서 - 불만스럽다는 주민들의 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함.
 - 20%가 본의 아니게 실업에 처해 있다고,
 - 25%가 최소한 한 번 실업 경험을 겪었다고,
 - 20%가 직장을 옮겼어야만 했다고,
 - 10%는 심지어 직업을 바꾸어야만 했던 것으로 여론 조사 결과 밝혀짐.

-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정반대의 분위기가 관찰됨.
 - 이들은 소득 향상 외에도
 - 직장에서의 기자재 공급이 훨씬 나아졌으며,
 -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자율공간이 현저하게 넓어졌다는 사실을 통일의 긍정적 효과로 지적함.
 - 어려운 점으로는 경쟁 심화로 인해 직장 분위기가 악화되었다고 지적함.
 - 총 취업자 중 약 50% 정도만이 “ 등득 경제의 치명적 취약점이던 업무조직문제가 시장 경제의 도입으로 인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 라는 답변을 함.
 -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종전과 달라진 바 없는 직종으로서는 신탁청 산하 기업들과 공공 업무 분야가 지적됨.
 - 특히 두번째 사항과 관련하여 “ 공공 업무 분야는 통일전보다도 더욱 관료화되었다” 고 불평을 털어놓는 신설주 주민들이 많음.
 - 이러한 판단은 주로 물질적 풍요를 그 기준으로 함.
 - “ 만족하다” 는 사람들은 대부분 3,500 마르크 이상의 실질 소득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 2,500 마르크 이하 수입 계층보다도 약 2배를 넘어가는 수를 내 보이고 있음.
 - 다른 한편으로, 취업자 계층에서는 77%가, 실업자 중에서는 30%가 생활상에 만족한다는 답변을 함.
 - 세대별로는, 중년층이 특히 현재의 생활조건에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내 보임.

6. 새로운 생활 조건에의 적응도

처음부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음	35%
처음에는 어려웠으나 이제 잘 적응하고 있음	38%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앞으로 나아질 것임	21%
영원히 새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것임	6%

- o 통일과 더불어 모든 것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에 걸쳐 신설 5개주 주민들은 새로운 생활조건에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민중 35%가 - 특히 14~29세의 연령층이 - 달라진 생활양상에 적응해 가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 38%는 적어도 이제는 초반의 어려움은 극복을 하였다고 답변함.
 - 27% 정도가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 이 중 6%는 심지어 영원히 새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것 같다는 비관적 심정을 털어 놓았음.
 - 이들 마지막 30%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해 볼 것 같으면,
 - 상당수가 40대 이상인 자들이었으며,
 - 학력이 낮거나
 - 실업자 내지는
 - 조기 퇴직자 및 연금수혜자로 밝혀짐.

- 동부독일 주민중 69%가 현재의 생활상에 “만족한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그 중 5%는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한 반면,
 - 30%는 “그저 그렇다” 내지는 “불만족스럽다”라는 답변을 함.
 - 이들의 평가기준은 물질적 풍요인 바, 만족한다는 자들 중 실질소득이 3,500 DM 이상 고소득층에 속한 자의 수가 2,500 DM 이하 저소득층에서보다 두배 이상이 많으며
 - 취업여부도 관련이 있어서, 취업자의 77%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실업자 중에는 30%에 그침.
 - 세대별로는 주로 중년층이 그들의 생활여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7. 미래에 대한 전망

	불투명함	비관적임	낙관적임
1990년 5월	9%	22%	69%
1991년 5월	8%	23%	69%
1992년 9월	7%	30%	63%
1993년 5월	9%	35%	56%
1993년 9월	10%	33%	57%

0 사회적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동독인들의 자신감은 초반의 경제 붕괴 사태에도 불구하고, 예측과는 달리 '92년 초까지 흔들림없이 유지됨.

·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불신이 증대되고 있음.

· '91년까지 23%의 주민들이 미래를 비관적으로 내다 보았던 것이,

· '93년 9월에는 이 수치가 33%로 늘어남.

· 그러나 약 56%에 달하는 반 이상의 주민들은 계속해서 처음의 낙관론을 견지함.

· 이들 낙관론자들 중에서 나이가 어릴수록 미래를 특히 밝게 내다 보고 있는 것이 특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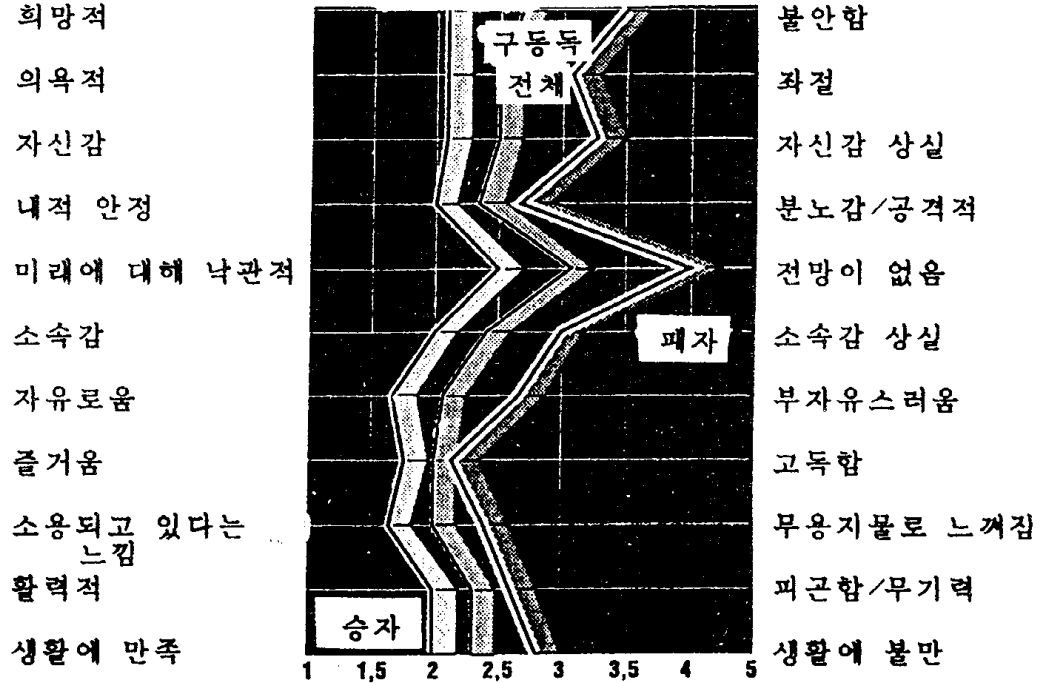
· 14세에서 29세에 이르는 층들의 72%가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는 반면,

· 40에서 45세에 이르는 층들에서는 54%

· 50세 이상에서는 44% 미만이 미래에 희망을 걸고 있음.

0 일반적으로 말해서 현재 동부 독일인들의 사회적 시장 경제에 대한 기대감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8. 신실주 사회 분위기



0 많은 사람들이 새 사회속으로 잘 동화해 가고 있으며, 교제 범위도 넓고,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고 답변함.

- 이계는 자유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언급이 또한 주를 이루었음.

- 내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 자신감에 차 있고,
- 의욕에 충만해 있다는 소감들이 그 뒤를 이었음.

- 이와는 달리 아직까지 내적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수는 주민의 약 25%를 차지함.
- 이들의 구체적 느낌은
 - 실생활과 직결된 염려,
 - 사회적 불안,
 - 적극성의 결여,
 - 좌절 등으로 표현됨.
- 이러한 부정적 시각은 특히 노년층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관찰됨.
- 이러한 내적 불안정이 통일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은, 이들의 대부분이
 - 여성,
 - 실업자,
 - 조기 퇴직자 및
 - 저소득자들이라는 사실에서 분명히 밝혀지고 있음.

9. 사회적 지위

- 구동독은 무계급 사회로 특징지워짐.
- 이는 물질적으로는 맞는 말인지는 모르나,
 - 사회심리적으로나 권력과 관계되어서는 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남.

- 과거를 돌이켜 보는 시점에서, 신설 5개주 주민들은
 - 7%가 동독 사회에서 최상위 계층에,
 - 29%가 중상위 계층에,
 - 50%가 중산층으로,
 - 나머지 17%는 하층계급으로,
 - 이 중 4%만이 최하층으로 자신들을 분류함.

- o 통일과 더불어 새로운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고, 전통적 위계 질서는 해체되며, 새로운 사회 질서가 형성됨.
 - 이로 인해 동부 독일인들의 사회적 지위 문제 역시 새로이 평가되지 않을 수 없음.
 - 약 50%가 예나 마찬가지로 지금도 중산층으로 자신들을 분류함.
 - 25%는 하층 계급으로,
 - 7%가 최하층으로 보고 있음.
 - 반면, 상위 계층으로의 분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중상위 계급으로의 분류 조차도 16% 정도에 그침.
 - 이는 다시 말해, 동부 독일에서는 자신을 지도계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됨.
 - 사회·정치·경제 문제에 대한 참여권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신설주 주민들의 불만을 언급한 통계 결과와도 그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o 구동독 사회에서의 사회적 지위와 현재의 상태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추출할 수 있었음.
 - 35%가 사회적 지위 하락을 겪었어야만 했던 것으로 답변함.
 - 이들은 주로 여성,
 - 중년층,
 - 과거 당 관료,
 - 전문 사무직 및
 - 실업자 등으로 구성됨.
 - 13%가 지위 상층 계층으로 분류함.
 - 이들은 주로 남자들로서,
 - 미혼자,
 - 학력이 높은 젊은층,
 - 자영업자,
 - 자유업 종사자들로 특징지워짐.
 - 52%가 종전과 달라진 바가 없다고 답변함.
- o 흥미로운 사실은 서부 독일 주민들을 포함하여 이러한 질문을 제기했을 때는, 이에 대한 신설주 주민들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점임.
 - 이 경우, 동부 독일인들의 대부분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한 단계 낮추어 보고 있음.
 - 각 사회 단위별로 본 중산층의 분류 기준은
 - 구동독 사회에서는 5.9 였던 것이,
 - 통독후 신설주내에서 만든 5.0으로 떨어졌으며,
 - 전체 독일 사회에서는 4.1로 더욱 떨어짐.

- 이러한 변화는 통일로 인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가 예전보다 낮아졌다는 느낌을 대변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사실로부터 현재 동부 독일에 팽배해있는 고뇌와 좌절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음.

10. 통일의 패자와 승자

승자	패자	승자도 패자도 아님
33%	24%	43%

o 신설주 주민들의 33%가 통일과정에서의 “승자”로, 24%가 “패자”로, 나머지 43%는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함.

- “승자”로의 분류로는 주로

- 남자,
- 청소년,
- 사회 초년생,
- 취업인 및 월 3,500 마르크 이상의 소득자 등이 해당됨.

- 이들은 개인의 경제 생활 상태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함.

- 동시에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서독식 사회 체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 보임.
- 특기 사항으로, 작센 주와 베를린 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주 주민들보다 더욱 많이 자신들을 이러한 계층으로 분류하고 있음.

11. 경제 상태에 대한 평가

	매우 좋다	좋다	그저 그렇다	나쁘다
개인의 경제 상태	5%	57%	31%	7%
동부 독일 사회 전체의 경제 상태	0%	7%	48%	46%

- 구동독 주민들은 서독을 경제 강국으로 여겼음.
 - 그러나 이제 3명 중의 한 명만이 독일의 경제 상태를 좋다고 여길 뿐
 - 59%는 그저 그렇다
 - 8%는 심지어 나쁘다고 보고 있음.
 - 이같은 결과는 직업과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사회 전 계층에서 예외없이 발견됨.
- 신설주들의 경제 상태를 묻자, 대부분의 구동독 주민들은 서부 독일 보다 나쁘다고 평가하고 있음.
 - 7%만이 동부 독일 경제 상태를 양호하다고 여기고 있을 뿐
 - 매우 좋다고 대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음.
 - 48%가 그저 그렇다,
 - 46%가 나쁘다고 응답함.
 - 각 개인의 정치성향에 따라서는,
 - 낙관적 (여당 지지자)
 - 비관적 (PDS 지지자) 입장으로 갈라짐.

- 그러나 동부 독일인들은 개개인의 경제 생활 상태는 결코 나쁘게 여기고 있지 않음.
 - 개인과 일반 경제 상태를 비교해 보면, 이들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이 밝혀짐.
 - 62%가 개인적 상황을 좋다고 하였으며,
 - 5%는 심지어 매우 좋다고 대답한 반면,
 - 31%가 그저 그렇다,
 - 7%만이 나쁘다고 대답함.
 - 일반 경제 상태와 개인의 가계 상태에 대한 평가에 이같은 큰 차이가 발견되는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임.
 - 이는, 현재의 생활 수준을 자체경제력으로 이룩한 것이 아니라
 - 남의 돈으로 사온 것임을 동부 독일인들이 분명히 자각하고 있음을 나타냄.
- 동부 독일인들은 경제 개혁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나타날 것을 처음부터 예상하고 있었음.
 - 1990년 가을,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질문했을 때,
 - 서부 기업인들의 투자 (96%가 이에 동의함)
 - 동부 독일 기업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 (92%)
 - 신설주 주민들의 생산력 향상 (94%) 등이 있어야 한다고 대답함.

- 3년이 지난 현재 동부 독일인들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음.

- 서부 독일 기업과 연방 정부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데에는 예전과 같이 동의하고 있는 반면,
- 지금까지 실시한 방안이 실효를 거둘 것이라고 여기는 자는 줄어들고 있음.
- 예를 들어, 1990년에만 해도 비 생산적 업체는 파산시켜야 한다는 데 대해 82%가 이를 찬성한 반면,
- 현재는 44%만이 이를 지지함.
- 동부 독일 기업을 서부 독일 경영자들에게 맡기는데 대해 1990년에는 82%가 이를 긍정적으로 본 반면,
- 현재는 15%만이 이를 찬성하고 있음.

- 동부 독일인들이 경제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현재 극소수임.

- 생산력 향상이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약 40%에 불과하나,
- 경제 부흥을 위해서는 주민 모두 절약해야만 한다는 데 대해서는 76%가 동의하고 있음.
- 그러나 임금을 억제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35% ('90년에는 62%)만이 찬성함.
- 86%가 신설지역 주민들에게까지도 확대·적용되는 조세 인상을 반대함.

- 반면 구서독 주민들로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구동독주민의 58%가 서부 독일인들로부터 추가 연대보조금을 기대하고 있음 (1990년, 52%).

- 통일에 따른 큰 이득으로서 동부 독일인들은 여가활동의 다양성을 들고 있음.
 - 특히 세계 곳곳으로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다는 점 (97%), 그리고 다양한 출판물의 제공(81%)을 크게 환영하고 있음.
 - 그 이유는, 과거 동독에서는 쓸만한 서적들이라고는 음성적으로만 구입할 수 있었으며,
 - 전문 서적·취미·여가 도서들은 아예 구입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임.

- 과거 구동독에서는 연극 및 기타 문화 공연들이 성행하였으며, 대부분이 국가로부터 보조받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
 - 그러나 현재 여러 극단 및 문화시설들이 문을 닫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 동부 독일인들 50%가 문화방면에서는 상황이 나빠진 것으로 보고 있음.

- 현재 제공되고 있는 문화 행사의 양과 질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내려지고 있음.
 - 일반적으로 1/3 정도가 문화시설이 개선되었다고 보는가 하면,
 - 또 다른 1/3은 오히려 나빠졌다고 여기고 있음.
 - 대도시에 비해 지방이나 소도시에서의 문화 행사는 현저히 위축됨.
 - 따라서 대도시 주민들보다는 지방주민들이 문화 활동으로부터 제외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

- 소득수준별로 보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문화 행사를 누릴 수 있다고 여김.
 - 월 가계 수입이 2,500 DM 이하인 사람들, 특히 이 중에서도 실업자, 조기 퇴직자들은 취업인들이나 고소득자들과는 달리 문화 생활로부터 제외되고 있다고 여기고 있음.
 - 반면 후자들은 문화 행사의 양과 질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o 정치, 문화, 사회 분야에 대한 정보 취득은 일반적으로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보고 있음.
- 54%가 이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음.
 -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45%가 아무런 개선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점임.
 - 이에 대한 이유로는 구동독 주민들이 이미 통일 전부터 서독 방송을 많이 청취하고 있었으며
 - 동독 방송보다 오히려 서독 방송을 정확한 정보 출처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음.
 - 이같은 반응은 신설지역 주민들이 언론 매체로부터 충분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
- o 서독 사회에서는 개인주의가 우세하며, 자율성이 큰 덕목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동부 독일인들은 새로 깨닫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생활화하고 있지 못함.
- 대다수의 주민들 (86%)이 현 상황에서는 개인의 이해 관계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사고 방식을 체득했다고 밝힘.

- 이들은, 자신들이 갑자기 연대감과 복지대책이 걸여된 ‘냉혹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
 - 또한 주민들의 91%가 새 사회의 높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로부터 소외된다고 믿고 있음.
- 주민들 대부분 (95%)은 현 사회에서 돈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이 밖에, 취업인의 70%가 일에 쫓겨 자신의 생활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함.
- 그렇다고 이들 주민들이 개인주의 사회의 장점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님.
- 78%가 개인에 대한 요구가 높긴 하지만 그만큼 자의식 역시 높아졌다고 대답함.
 - 주민들의 약 2/3가 시장 경제 사회에서는 노력한 만큼 응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으며,
 - 개인들이 자기 실현의 가능성과 창조력 및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율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을 지적함.
- 신설주 주민들은, 서부 독일 사회의 분위기가 부분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다고 느낌 (86%).
- 이와 관련, 서독식의 개인주의 사회와 법치국가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힘.
- 신설주 주민들은 ‘사회 정의’를 국가목표 정도로만 여기고 있음.
- 이들은 서독 사회에서와 같이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생활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익숙해 있지 못함.

0 많은 사람들 (64%)이 새 사회를 구축하는데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

· 서독 사회와는 반대로 구동독 시절에는 거의 모든 사회 활동들이 집단적으로 조직·실시되었음.

· 따라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동독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특정한 사회적 역할을 떠맡고 있었음.

· 그러나 현 사회는 개개인으로부터 자발적인 정치 참여를 요구하고 있음.

· 아직까지 정치 구조 및 결정과정에 대한 정보가 결핍되어 있는 데다,

· 정당에 대한 신뢰 및 개개인들의 참여도 또한 부족한 상태라

· 현재 각 정당들이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책임지고 떠맡아 보겠다는 후보자들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12. 동·서독 사회체제 비교

(응답자 %)

	서독의 강점	구동독의 강점
소비생활	91	2
경제	89	1
환경보호	82	2
개인의 자유	78	5
생활수준	78	5
국가의 독단방지	50	7
정치제도	42	8
사회발전에 대한 개인의 영향력	28	26
취업 가능성	31	47
사회 정의	7	56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복지대책	6	63
교육제도	11	69
체육	7	72
인간관계	5	76
남녀평등	4	77
청소년교육	7	80
사회보장	7	83
범죄예방	2	86
탁아시설	2	94
취업보장	1	96

- o 통일 당시 동부 독일인들은 서독이 동독보다 경제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정치분야에서도 우월하다고 생각하였음.

통일후 3년이 된 현재 78%의 동부 독일인들은 개인의 자유 보장을 서독 사회의 장점으로 보고 있음.

· 1990년에만 해도 63%가 서독의 정치체제를 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였으나,

· 현재는 42%만이 이에 동조하고 있으며, 8%가 구동독 정치체제가 낫다고 생각함.

· 심지어 현재 2명 중의 1명은 동·서독 정치체제가 서로 마찬가지로 보고 있음.

· 취업가능성에 있어서 31%만 (1990년: 54%)이 서독사회가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느낄 뿐,

· 47%는 (1990년: 38%) 구동독 체제가 보다 유리한 취업가능성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음.

· 이같은 견해는 주로 취업가능성이 전혀 배제된 계층, 즉 여성, 실업자, 조기 퇴직자, 저학력 소지자, 저소득층에서 두드러지게 발견됨.

· 취업인 중에서도 41%가 취업가능성을 구동독 체제의 장점으로 지적하고 있음.

○ 현재 동부독일지역 주민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감안할 때, 구동독시절을 이상화하는 경향이 잘못된 것은 아님.

· 대부분의 동부 독일 주민들은 구 체제에서는 사회 보장 및 사회 정의가 보다 잘 구현되었다고 회상하고 있음.

· 특히 구동독의 강점으로서 다음을 손꼽고 있음:

일자리 보장, 범죄 행위 방지, 탁아 시설, 사회 보장, 청소년 교육 및 남녀 평등, 교육 제도 및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복지 대책

- 구동독 시절의 인간 관계 또한 현재보다 좋았다고 보고 있음.
- 그러나 신설주 지역에서 사회적 냉대가 팽배하고 있다는 주장은 반드시 사실과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짐.
- 가족, 친지 또는 이웃간의 관계가 나빠졌다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 과거에는 경험치 못했던 일자리에 대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취업인들의 1/4만이 동료와의 협력관계가 나빠졌다고 보고 있으며, 약 1/3이 대변혁 이전보다 직장분위기가 나빠졌다고 생각하고 있음.

13. 서독의 정치사회체제에 대한 개인적 입장

(%)

	서독체제에 대한 입장		동독체제에 대한 입장
	1990년 가을	1993년 가을	
체제의 올바름에 대해 확신함	7	1	6
일부 비판적 태도도 없진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동의함	66	51	37
뚜렷한 확신이 없었으나 어쩔 수 없이 사회정치체제를 받아들임	19	34	35
사회정치체제를 거부함	1	3	6
사회정치체제와 정치에 무관심	6	10	16

- o 서독에 대한 동부독일인들의 환상은 깨어짐. 이들은 현재 서독 사회 체제에 대해서도 보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음.
- 1990년에만 해도 구동독 주민들의 3/4이 새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 현재 이같은 견해를 보이는 사람들은 52%로 줄어듦.
 - 서독 체제를 거부하는 입장은 3%에 지나지 않으나,
 - 주민들의 절반 가량이 서독 체제에 어쩔 수 없이 적응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 이 중 34%의 주민들은 서독식의 체제가 옳다라는 확신이 전혀 없으며,
 - 10%는 사회체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반응을 보임.
- o 서독 사회 체제에 대한 동부 독일인들의 태도는 과거 동독에 대해 가졌던 태도와 거의 비슷함.
- 41%의 동독 주민들은 구동독 체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에 있었으나
 - 당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회상함.
 - 반면 동독 체제에 대해 일부 비판적 입장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이를 지지했었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43%에 달하고 있으며
 - 16%는 당시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고 응답함.
 - 그러나 동독 공산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실제 이같은 광범위한 지지를 받지 못했는 바, 최소한 80년대 전반에 걸쳐 동독 체제의 반대자가 지지자들보다 더 많았었음이 동독 대변혁 전과 후에 실시되었던 여론조사 결과에서 밝혀짐.
 - 현재 동부독일에서는 동독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바, '통일의 패자' 측에서 선전하고 있는 동독상이 많은 주민들의 동조를 사고 있음.

- 동독 주민들이 모두 통일을 원하였다는데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음.
 - 이로써 서독의 경제 및 정치 체제가 그대로 동독으로 도입될 수 있었음.
 - 그러나 서독의 경제와 정치 체제는 현재 - 통일과 상관없이 - 위기에 처해 있음.
 - 현재 서부독일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정치 염증’은 투표 포기 및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율 증가로 표현되고 있음.
 - 구조적 위기상태에 처해 있는 서부독일의 경제는 동부독일 경제 부흥 사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함.
 - 이 모든 것들은 동부독일인들로 하여금 서독 사회질서 수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 결국 남는 것은 방향성 상실 밖에 없는 바, 이는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동부 독일인들의 견해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음.
 - 즉, 동부독일인들의 3/4이 사회주의 이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 이 중 17%만이 사회주의 이념을 투쟁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 60%는 사회주의란 이론상으로는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유토피아로 여기고 있음.

14. 각 정당별 정치적 지지도

(%)

일 시	기민· 기사당	사민당	자민당	민사당 (공산당 후예)	녹색당 B'90	공화당 (극우파)	기타
'93.9	21	38	9	13	13	4	3
'90.12 총선	42.8	24.3	12.9	11.1	6.2	1.3	1.4

- 집권당인 기민당과 자민당은 '동부독일의 부흥' 이란 정치 슬로건 하에 '90년에 있었던 연방하원선거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음.
 - 이러한 정치적 장담이 계획된 시간표대로 실현되지 못함에 따라 현재의 정치성향을 묻는 여론 조사는 당시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 (상기 여론 조사 결과는 오늘 현재의 양상만을 포착하고 있는 것으로, '94년에야 실제 있게 될 연방선거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 주지는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

- 만약 오늘 연방선거를 실시한다면,
 - 집권당쪽으로는
 - 기민당이 21%
 - 자민당이 9%를 획득할 것으로 밝혀짐.
 - '90년 선거전에서는 모두 합쳐 54%의 유권자 지지를 받았음.
 - 이탈 유권자들의 절반은 기존 정치풍토에 반대하여 선거에 참석하지 않는 계층 (Nichtwaehler)으로 흡수되었거나, 또는
 - 아무쪽으로도 결정을 못내리고 모색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 나머지 절반은 다른 정당으로 시각을 - 적어도 현재로서는 - 옮겨간 것으로 밝혀짐.

15. 유권자들의 거취

※ '93. 9 현재 총선이 있을 시, 투표할 정당

(%)

정 당	'90년 총선시 유권자들이 표를 던진 정당					
	기민당/기사당 (43)	사민당 (24)	자민당 (13)	녹색당/ B'90(6)	민사당 (11)	투표 포기자 (26)
기민당	39	3	5	4	-	5
사민당	17	69	26	25	9	16
자민당	7	1	35	1	-	1
녹색당 B'90	5	7	12	46	2	11
민사당	1	3	5	11	68	12
공화당	4	1	-	-	2	1
기 타	3	1	-	5	1	2
투표 안함	6	3	3	-	4	37
아직 모름	17	11	15	9	13	14

○ 이로 인해 제일 큰 득을 보고 있는 정당은 사민당으로서, '90년도 선거전에서의 24.3%에서 지금은 38%로 제일 다수당의 자리를 굳히고 있음.

- 다음으로는 동맹 '90/녹색당을 들 수 있는데, 6.2%에서 13%로 꺾충 뛰어 이번 선거에서 보다는 약 2배의 득표를 할 것으로 전망됨.

· PDS 역시 마찬가지로 동부독일 주민들로부터 약 13%나 되는 큰 지지를 받고 있음.

· 극우 공화당의 경우는 약 4%가 될 것으로 분석됨.

통일과정에서의 ‘승자’로 자처하는 유권자들의 상당수 (45%)가 집권당을 옹호하고 있는가 하면,

- ‘패자’ 측에서는 10%도 안 되는 지지만을 보내고 있음.
- PDS의 경우도 ‘패자’들로부터 32%의 지지를 사던 것이, 현재는 14% 정도로 그치고 있음.

따라서 신설 5개주에서 성공을 거둘 정치세력이 있다면, 이는

- ‘승자’도 ‘패자’도 아닌 유권자 계층에게 물질적·심리적 안정과 - 특히 무엇보다 - 미래에의 비전을 열어 보여 줄 수 있는 정당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 볼 수 있음.

16. 동·서독 지역 주민간의 관계

(%)

동·서독인들 간의 관계	그렇다	그렇지 않다
동·서독인들 간에는 남·북 독일인들 간에서과 같은 커다란 의사소통의 문제는 없음	39	59
오랫동안 상이한 체제에서 생활하였음이 드러나나,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음	66	32
아직 의사소통 상의 문제가 있으나,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극복될 수 있음	88	11
동·서독간의 생활수준격차가 동·서독인들 간의 의사소통의 근본적 장애요인임	77	22
동·서독인들 간의 융화는 불가능함	9	89

- SED 치하에서도 청취를 할 수 있었던 서독의 방송 매체 외에도 친지 및 가족 방문이 동독 주민들에겐 서독과 끈을 이어나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서독 방문을 통하여 정보를 현지에서 직접 입수할 수 있었을뿐만 아니라, DM과 같은 선물을 받을 수도 있었음.
 - 이처럼 어렵게 쌓아진 동·서 간의 가교가 장벽개방과 더불어 혹시 해를 입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통합전까지 왕왕 표현되었음.
-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부 관계는 실제로 장벽이 없어짐으로써 오히려 예전보다 더 나빠졌다는 답변이 관찰되고 있음.
 - 대변혁 이전까지 서독에 사는 가족·친지들과 왕래를 하고 있었던 동독인들 (전체 인구 중 55%) 가운데 장벽개방 이후 이 관계가 나빠졌다고 대답을 한 사람들이 무려 11%나 됨.
 - 약 2%는 이 관계마저 장벽개방과 함께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답변을 함.
 - 나머지 25%도 이제까지의 교류상태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답변을 했으나, 이들은 다른 새로운 관계를 확대해 나갈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음.
 - 그러나 대부분의 동·서관계는 대변혁 이전과 달라진 바가 없었다는 것이 중론 (40%) 임.
 - 더욱 좋아졌다는 답변은 20%나 되었음.

- 저소득층에서는 관계 악화를, 고소득층에서는 관계 향상을 지적하고 있음은 동·서 독일간에 상존하는 상이한 생활수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이를테면, 동·서독 주민들이 물질적으로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만나게 될 경우에는 의사소통 관계가 훨씬 수월하다는 말로 풀이됨.
- 한편, 많은 신설주 주민들이 구서독 주민들과 인간관계를 넓혀 나가고 있음.
- 이들의 경험은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짐.
 - 주민의 33%가 전환 이후, 서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새로운 친구나 지인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밝힘.
 - 취업자들간에는 28%가 서독 출신 직장동료를, 29%는 서독 출신 직장상관을 두고 있다고 함.
 - 동료간에는 이러한 새로움이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반면, 수직적 인간관계에서는 찬·반이 반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동베를린 주민들의 경우 다른 신설주 출신 직장동료나 상관에 대해서보다는 서독출신 직장동료나 상관에 대해 보다 두드러진 반감을 내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 배경으로서 베를린에서는 임금관계가 상에서 하까지 매우 차이가 극심하다는 사실이 자주 지적됨.
- 비취업 주민들의 구서독인들과의 관계는 여행에서 우연히 알게 되거나, 아니면 사업상의 교제에 국한되는 바,

- 후자의 경우에 전반적인 인상은 - 일부 언론 보도의 주장과는 달리 -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서독인과의 관계를 계속 맺고 있는 주민에게서는 심리적인 장벽을 찾아볼 수가 없음.
- 동·서독 주민들간의 일반적 관계는 오히려 남·북독일 주민들간의 관계보다는 오히려 문제가 없다는 것이 중론임 (60% 정도).
- 이와 관련하여 88%의 주민들이 ‘아직 상존하는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극복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 보임.
 - 한 가지 중요한 선결조건으로서 동·서독간의 생활수준 격차해소 문제가 지적되었음.
- 단지 9% 정도만 동·서독 주민들간의 융화가 불가능하다는 부정적 진단을 내리고 있음.
- 이러한 견해는 주로 통일의 ‘패자들’과 정치적으로 극좌 내지는 극우 계열에 의해 대변됨.
 - 이들은 처음부터 서독식의 민주주의 체제를 완강히 거부 거부하였음.
- 총체적으로 결론지어 말하자면,
- 새 체제 및 사회로의 적응 문제와 관련하여 구동독 주민들이 밝히고 있는 어려움들은
 - 인간들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 서독식의 정치·경제 체제와 주로 관련지워져 있는 것으로 나타남.

IV. 통독 이후 3년간 주요 약사

통독 이후 3년간 주요 약사

연 도	주 요 동 향
'90.10. 4	<p>통독 이후 최초로 전독의회 개원. 144 명의 구 동독 인민의회 의원이 전독 총선시까지 잠정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함.</p> <p>서독 출신 전문 경영인이 15개 신탁청 지부를 인수함.</p>
'90.10. 5	<p>연방하원은 “ 2+4 조약” 을 비준하고, 구동독 군소정당의 의회진출이 가능토록 5% 차단조항을 등·서독을 분리하여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독총선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결의함.</p> <p>연방통계청은 각 지역에 지청을 개설함.</p>
'90.10. 6	<p>서독 신교연합회(EKD)는 동독 신교연합회측과 최초의 합동회의를 개최함.</p> <p>동독적십자사는 해체후 독일적십자사(DRK)에 가입을 결의하여 등·서독 적십자사가 통합됨.</p>
'90.10. 8	<p>연방상원은 “ 2+4 조약” 을 비준하고 선거법개정안을 통과시킴.</p>
'90.10.11	<p>미국상원은 “ 2+4 조약” 을 비준함.</p>
'90.10.12	<p>본에서 '94년까지 소련군 철수에 관한 구체사항을 규정한 “ 소련군 기한부 주둔 및 철군에 관한 조약” 이 서명됨.</p>

연 도	주 요 동 향
'90.10.13	동독우편노조가 해산되고, 서독우편노조에 가입을 결의함.
'90.10.14	구동독지역 신설 5개주 주의회 선거가 실시됨.
'90.10.17	<p>동·서독 신교연합회(EKD)는 합동 총회에서 통합을 결의함.</p> <p>구동독의 주요 문화재 및 유적 35개가 UNESCO에 등록됨.</p> <p>구서독지역 주는 500명의 판·검사를 신설주에 지원키로 결정함.</p>
'90.10.19	베를린 법무성은 구동독 지도층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정권적 범죄행위(Regierungskriminalitaet)” 조사단을 구성함.
'90.10.21	동독 연극협회가 서독 연극협회에 가입함.
'90.10.25	동독 철도노조가 서독 철도노조에 가입함.
'90.10.26	PDS(구동독 공산당 후신)의 부당수 겸 경리담당 총괄인 Wolfgang Pohl이 당 재산의 불법 해외유출 혐의로 구속됨.
'90.10.28	루프트한자가 베를린 운항을 재개함.
'90.10.30	PDS는 당 재산이 40억 DM 정도라고 공개함.
'90.10.31	CDU는 구동독 CDU 당 재산 공개함(1,300만 DM).
'90.11. 3	동독 건축가협회가 해체되고, 서독 건축가협회에 가입을 결의함.

연 도	주 요 동 향
'90.11. 5	서독 대학총장회는 구동독의 21개 대학을 회원으로 받아 들이고, 대학총장회(Hochschulekonferenz)로 개칭함.
'90.11. 6	신설주 기자협회가 주 단위로 독일 기자협회(Deutsche Journalisten Verband)에 가입함.
'90.11. 9	본에서 “독·소 친선 우호·협력 조약” 이서명됨.
'90.11.14	바르샤바에서 오데르-나이세 이동지역 포기를 골자로 한 독·폴간 국경조약이 서명됨.
'90.11.17	국가올림픽위원회(NOK)는 동·서독 위원회의 통합을 결의하고, 새로운 NOK 정관을 채택함.
'90.11.19	NATO 및 바르샤바조약기구 22개 회원국은 유럽 재래식 전력 감축에 관한 조약에 서명함.
'90.11.22	신설주 주지사들, 구동독 지역방송 구조개편에 합의함.
'90.11.23	통독이후 최초로 동·서독 각 주 환경장관 회의가 개최됨.
'90.11.26	로마 교황청은 동·서독 구교 사제회의 통합을 승인함.
'90.11.27	구동독 작가협회가 해산을 결의함.

연 도	주 요 동 향
'90.11.29	연방내무성, 구동독 공산당의 중앙문서보관소, 구 마르크스-레닌주의 연구소 도서관 등을 국가의 감독하에 둔다고 발표함.
'90.12. 2	최초의 전독 총선이 실시됨.
'90.12.06	구동독 체조·체육 연맹(DTSB)의 해산이 결의됨.
'90.12.07	통독이후 최초의 각 주 문화장관 회의가 개최됨.
'90.12.13	프랑스 의회는 "2+4 조약"을 비준함.
'90.12.14	통독이후 최초의 각 주 내무장관 회의가 개최됨.
'90.12.15	신설주 주 단위 체육회가 독일체육협회(DSB)에 가입함.
'90.12.18	훔볼트 대학 대학생들이 구체제 관련학과 철폐에 반대 시위함.
'90.12.20	전독 총선에 의거 연방하원이 구성됨.
'90.12.28	연방환경성장관은 구동독 환경오염 잔재 제거를 위한 35개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서기 2,000년까지 환경 통합 달성을 위한 정책 목표를 천명함.
'91. 1. 1	구동독지역 연금생활자에 대해 15% 연금 인상 신설 주정부 대표들이 연방-주 위원회(Bund-Laender-kommission)에 가입

연 도	주 요 동 향
'91. 1. 2	<p>구동독지역에서 첫 의무병을 모집함.</p> <p>통일조약 가격 동결 규정에 반대하여 구동독 약국들이 파업에 들어감.</p>
'91. 1. 4	<p>연방농림수산성은 구동독 농업구조 조정 지원을 위해 6억 6천만 DM을 책정했다고 발표함.</p>
'91. 1. 7	<p>라이프찌히 대학 학생들이 구체제 관련 학과 청산에 항의하여 시위함.</p>
'91. 1.10	<p>베를린주 법무장관 Limbach는 구동독 권력 핵심인사에 대한 260건의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힘. 이 중에서 175건은 장벽에서의 총격 사살 행위와 관련돼 있다고 발표함.</p>
'91. 1.11	<p>구동독지역 마그데부르그에서 수천명의 경찰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함.</p>
'91. 1.14	<p>대학 총장회의에서 겨울학기 중 4,200 명의 구동독지역 학생이 구서독지역으로, 250명의 학생이 구서독지역에서 구동독지역으로 왔다고 발표함.</p>
'91. 1.15	<p>민권운동 단체들(Neues Forum 주축)이 Stasi 자료 처리와 관련 집회를 개최함.</p>
'91. 1.16	<p>폴 수상은 새로운 내각 명단(18명)을 발표함. 3명의 구동독 출신 (Krause 교통성, Merkel 여성·청소년성, Ortleb 교육성장관)이 입각함.</p>

연 도	주 요 동 향
'91. 1.17	콜 수상 취임
'91. 1.22	<p>헌법재판소는 1945~1949년 소련 점령하 몰수된 재산권 반환 문제에 대한 구두 심리를 시작함.</p> <p>베를린 주정부와 의회는 훔볼트 대학의 구체제 관련 학과를 철폐키로 결정함.</p>
'91. 1.24	33명의 차관급 중 4명의 동독출신이 차관으로 임명됨.
'91. 1.25	연방국방성은 '91년에 10만명의 소련군과, 1,000대의 탱크, 3,000대의 장갑차, 100대의 전투기가 철수될 것이라고 발표함.
'91. 1.29	<p>연방정부는 신설주 재건을 위한 내각 소위원회를 구성함.</p> <p>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된 구동독 노총(FDGB)위원장 Harry Tisch의 재판이 시작됨.</p>
'91. 1.30	Salzgitter 소재 구동독 폭력행위 기록보존소는 구동독 판사 중 10%가 구체제에서 체제수호를 위해 정치적인 판결을 내려왔다고 발표함.
'91. 1.31	4,000명의 작센주 경찰이 치우개선을 위해 시위함.
'91. 2. 4	<p>2,500여명의 교사들이 구동독지역 Halle에서 기존 자격증 인정과 구서독지역의 65% 수준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경고 파업을 시작함.</p> <p>연방교육성장관은 '91 예산중 3억 DM을 구동독지역 대학 시설 현대화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함.</p>

연 도	주 요 동 향
'91. 2. 5	연방국방성은 '90년 초부터 '91년 1월까지 철수에정인 소련군 110명이 병영을 이탈, 독일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고 발표함.
'91. 2. 7	연방교통성장관은 '91년 연방 교통분야 예산 84억 DM 중 25억 DM이 구동독지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발표함.
'91. 2.14	작센 주지사 Biedenkopf는 매년 통독 비용이 800억~1,000억 DM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며, 세금 인상없이 이러한 자원조달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함.
'91. 2.15	Stasi 해체를 위한 시민위원회(Buergerkomittes zur Aufloesung der Stasi)는 Stasi 청산작업을 위한 기본입장을 발표함.
'91. 2.17	PDS 대변인은 당 재산 중 과거 공산당(SED)이 획득한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신설주 재건을 위한 공공목적에 쓰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함.
'91. 2.20	구동독 3만 5천명의 금속노조 노동자들은 Chemnitz에서 일자리 보존을 주장하며 시위함. 연방법무장관은 " Sueddeutsche Zeitung" 과의 인터뷰에서 구동독 스파이들의 사면을 주장했다가 구동독 신설주 법무장관들의 항의에 부딪혀 이를 철회함.

연 도	주 요 동 향
'91. 2. 21	<p>베를린주 행정 법원은 베를린주정부와 훔볼트 대학 간의 구체제 관련학과 폐지와 관련한 재판에서 훔볼트 대학은 기존의 특히 이데올로기에 오염된 5개 학과를 폐지하고, 새로이 3개 학과 (행정학과, 철학 및 심리학과, 교육학과)를 신설하라고 판시함.</p> <p>연방하원은 B '90/녹색당(8명의 의원), PDS(17 명의 의원)에게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함.</p>
'91. 2. 22	<p>연방내무장관은 구동독 수상 Lothar de Maiziere가 Stasi의 비공식 정탐요원(IM) 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함.</p> <p>구동독지역의 중·소 도시에서 실업에 직면한 수천명이 실업대책을 요구하며 항의 시위를 벌임.</p>
'91. 2. 27	<p>작센주와 튀링겐주에서 만명 가량이 대량 실업과 신탁청의 사유화 정책에 반대하고, 서독과의 조속한 생활 조건의 동등화를 주장하며 시위함.</p>
'91. 2. 28	<p>폴 수상은 16개 주지사들과의 회동에서 구동독지역 재건 추가 지원책을 발표함.</p>
'91. 3. 1	<p>통일조약에 따른 기본법 개정·보완을 위한 헌법 개혁 위원회가 연방 상원에 설치됨.</p> <p>베를린의 한 범죄연구기관은, 구동독의 범죄 건 수는 과거 통계 연감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건 수보다 실제 더 많았다고 발표함.</p>

연 도	주 요 동 향
'91. 3. 2	<p>소련 최고인민의회는 “ 2+4 조약” 과 “ 독·소 우호협력조약” 을 비준함.</p> <p>베를린 검찰은 구동독 정치국원 Hermann Axen과 Werner Krolikowski를 개인주택 건축을 위한 국고 유용 혐의로 기소함.</p>
'91. 3. 5	<p>구동독지역 공공노조와 사용자측은 구동독지역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7월 1일부터 구서독지역 공공기관 종사자 임금의 60%를 받으며, 1993년 말까지 100% 수준까지 끌어 올리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함.</p> <p>연방내무성은 1990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111,000명의 구동독 주민들이 구서독지역으로 이주했다고 발표함.</p> <p>신설주 자민당(FDP) 지구당 위원장들은 신탁청의 해체와, 신탁관리 기업의 각 주정부 이관을 주장함.</p>
'91. 3. 6	<p>구동독 정당 및 대중 의과 기구 재산 조사위원회는 공산당의 후신인 PDS가 그의 당 재산 80%를 국가에 헌납하고 20%만 당 재산으로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제안을 기각. 통일조약에 의하면 해당재산이 법치국가적인 기본원칙에 의거 획득되었다는 증명을 해야만 계속 당 재산으로 보유할 수 있는데, PDS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함.</p>
'91. 3. 7	<p>110만에 달하는 구동독지역 금속-전자 노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그들의 임금수준을 1994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서독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으로 인상키로 하며, '91.4.1부터 구서독지역 임금수준의 62.5%에 합의함.</p>

연 도	주 요 동 향
'91. 3. 8	연방정부는 1991~1992년에 걸쳐 매년 120억 DM을 투자하는 구동독 경기 부양 공동대응책(Gemeinschaftswerk Aufschwung Ost)을 통과시킴.
'91. 3.15	제2차대전 전승 4대국 중 가장 마지막으로 소련이 "2+4 조약" 비준 문서를 전달함으로써, 국제법상으로 독일은 완전한 주권국가가 됨.
'91. 3.16	작가협회 베를린주지부는 모든 구동독 출신 작가에게 회원 가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으나, 작가협회 연방 회장단 측은 23명의 구체제 관련 문제 작가들의 회원가입 신청을 불허하라고 요구함.
'91. 3.19	연방정부는 각의에서 구동독 스파이에 대한 사면에 반대하는 결정을 함. 연방교육성장관은 구동독지역에 직업교육을 위한 일자리가 53,000개 부족한 반면, 구서독지역에는 50,000개 일자리가 남아 든다고 발표 연방정부는 1991년 8월 1일부터 주택임대료를 노후한 주택은 평균 1평방 미터 당 2.6 DM, 신설주택은 평균 3.6 DM으로 인상키로 결정함.
'91. 3.20	연방경제성장관과 16개주 경제장관들은 Hamburg에서 연방정부, 주정부, 신탁청간의 공동노력을 위한 10개항 실천방안에 합의함.
'91. 3.22	연방상원은 "기업사유화의 장애 제거와 투자 촉진에 관한 법"을 통과시킴. 이 법은 미해결 재산권 처리와 관련 "보상보다 반환 우선"이란 원칙은 유지하되, 투자촉진을 위해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함.

연 도	주 요 동 향
'91. 3.25	Leipzig에 80,000명의 구동독 주민들이 “ 월요 데모 ” 를 재현하며, 대량실업과 이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점 발생에 항의 시위함. 이 시위에는 사민당 당수와 금속노조위원장도 참석함.
'91. 3.26	연방대검은 전 Stasi 부장 Mielke와 5명의 Stasi 간부에 대해 RAF 테러 방조혐의로 연방대법원에 구속 영장을 신청함.
'91. 3.27	연방환경성장관은 구동독지역 하수 처리 시설 정화에 550~600 억 DM이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함.
'91. 3.28	연방여성·청소년성과 신탁청은 과거 동독 청소년단(FDJ)의 위탁시설 100여개를 구동독지역 청소년들의 여가 선용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의함. PDS는 헌법재판소에 구동독 공산당 재산의 20%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함.
'91. 3.29	구동독 항공사 Interflug는 4개월 안에 조업을 정지키로 결정함.
'91. 3.31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됨.
'91. 4. 1	신탁청장 Rohwedder가 RAF에 의해 암살됨.
'91. 4. 2	연방정부, 신탁청, 노조측은 해당 기업이 정비되거나 조업이 중단됨으로 해서, 실직되는 자들에 대한 사회 복지적 보장 계획 (Sozialplaene)에 합의함.

연 도	주 요 동 향
'91. 4. 3	베를린주 행정법원은 신탁청이 몰수된 기업을 매각할 때 이전 소유주들이 그 기업을 계속 경영하는데 대한 합리적인 경영방안을 제시할 경우 이전 소유주들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결정함.
'91. 4. 4	1991년 8월 1일부터 인상 예정이던 구동독 임대료를 1991년 10월 1일부터 인상키로 결정함.
'91. 4. 7	폴 수상은 연정 지도자 회의 직후 1991년 7월 1일부터 구동독지역 연금 수령자 연금을 15% 인상하며, 평균 수령액이 820 DM이 되도록 합의했다고 발표함.
'91. 4. 9	연방대검은 Stasi와 테러 단체인 RAF가 80년대 후반이후부터 공동으로 협력해 왔음을 확인함.
'91. 4.11	연방건설성장관은 구동독지역에 20억 DM을 투자하여 사회복지 주택을 짓는다고 발표함.
'91. 4.12	연방헌법보호청장 Eckart Werthebach은 구동독 Stasi가 서독 내의 극우단체 활동을 지원했으며, 아랍 테러리스트들을 교육시켰다고 발표함. 연방통계청장 Egon Hoelder은 연방통계청이 그간 연구한 바에 의하면 구동독의 통계 담당자들은 비교적 정직하게 통계를 잡았으나,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왜곡해 왔다고 밝힘.

연 도	주 요 동 향
'91. 4.13	<p>Brigit Breuel이 새로운 신탁청장으로 부임함.</p> <p>신탁청은 1991년 1/4분기 동안 850개 기업이 매각되었다고 발표함.</p>
'91. 4.15	<p>경제정책 자문 위원회는 특별 보고서를 통해 구동독 경제재건을 위해 과도한 국가 개입을 피하고, 다소 혼란이 있더라도 시장경제적인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함.</p> <p>신탁청은 구동독 신문사 10개를 구서독 출판사에게 매각하는 것을 허용함.</p>
'91. 4.16	<p>기민당 사무총장 Ruehe는 통독 당시 130,000이던 기민당원수가 80,000 내지 100,000만으로 줄어들었다고 발표함.</p>
'91. 4.17	<p>35,000 명의 노동자들이 베를린에서 시위함.</p> <p>금속노조 위원장 Steinkuehler는 국가적통일 달성 이후 현재 당면 과제는 사회적통일 이라고 강조함.</p>
'91. 4.18	<p>연방하원 본회의에서 PDS를 제외한 각 정당은 모두 과거 공산당 및 재휴정당, 대중외곽기구 문서를 국가 보호하에 관리하고 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법추진을 촉구함.</p> <p>베를린 검찰 발표에 의하면 Stasi는 베를린 프랑크 문화원에 대한 테러공격시 외국 테러단체를 지원했다고 함.</p>

연 도	주 요 동 향
'91. 4. 20	구동독지역의 대도시 지역에서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극우파들이 외국인 숙소를 공격함에 따라, 신설주 외국인문제 전담관들은 외국인에 대한 경찰의 보호를 요청함.
'91. 4. 23	연방헌법재판소는 통일조약 중 구동독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일정 기간 대기 후 실직 처리 규정(Warteschleife, 통독이후 이전 봉급의 70%를 받으며 고용 계약 관계를 일단 종료시키되, 6개월~9개월 경과후 자리를 얻지 못하면 자동 실직됨)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림. 이러한 결정으로 6월 30일까지 약 60만의 공공기관 종사자가 실업에 당면하게 되었는데, 헌법재판소측은 이러한 감축이 구동독 행정체제가 과도한 잉여인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능률적인 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힘. 그러나 현재 임신중인 사람을 해고하는 것은 부녀보호법에 의거 위헌이라고 판시함.
'91. 4. 26	구동독 국철(DR) 노·사 양측은 1991년 7월 1일부터 서독 연방 철도 종사자 임금의 60%를 받기로 합의함. 베를린 검찰은 구동독 대변혁기 동안 1989년 10월 7일과 8일 베를린에서 열렸던 대규모 평화시위를 폭력을 사용하여 진압한 구동독 경찰 51명을 소환·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함.
'91. 5. 1	60만명의 노동자들이 노동절에 구동독지역의 경제·사회적 문제점 해결을 촉구하며 시위함.
'91. 5. 2	신탁청은 구동독지역 신설 농가들이 3,000 건의 구 동독 농가 부채 경감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히고, 신탁청은 14억 DM을 들어 이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연 도	주 요 동 향
'91. 5. 6	<p>소련군 철수에 관한 조약의 비준동의서가 교환되고 발효됨.</p> <p>연방경제성은 구동독지역에서만 적용되는 단축 노동에 관한 특별 규정이 199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된다고 밝힘.</p>
'91. 5. 7	<p>연방내무장관 Schaeuble는 PDS를 헌법보호청이 특별히 감시해야 한다는 바이에른 주지사 Streibl 의 제안을 거절함.</p>
'91. 5.12	<p>Berliner Morgenpost 지는 Stasi 부장 Mielke가 구동독 체제 위기의 순간에 모든 동독내 반체제 인사를 구금하고 베를린과 서독간의 통과 교통로의 이용을 차단하도록 하는 비밀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폭로함.</p>
'91. 5.13	<p>연방고용청은 아직도 매달 10,000명 내지 20,000명의 구동독인들이 서독으로 이주하고 있다고 발표함.</p>
'91. 5.14	<p>연방하원은 구동독지역 노동시장의 부담 경감을 위해 조기 은퇴 가능자의 연령 상한선을 1991년 7월 1일부터 57세에서 55세로 낮추기로 결정함.</p>
'91. 5.16	<p>Stoltenberg 연방국방장관은 구동독 인민군들의 병영을 정비하는데 165억 DM이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함.</p> <p>PDS는 현재 당원이 250,000명이라고 발표함.</p>
'91. 5.17	<p>연방법무성은 구동독의 “정권적 범죄 행위”를 조속히 조사하기 위해 60여명의 전담 검사를 추가로 구서독지역에서 파견키로 결정함.</p>

연 도	주 요 동 향
'91. 5.21	구동독 수상 Willi Stoph를 비롯한 4명의 당·정 고위층이 내독간 장벽에서의 총격 살해 사건과 관련 구속됨.
'91. 5.22	1990년 7월이후 업무상 직권 남용, 배임, 법률 적용시 권리 남용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 있던 Mielke Stasi 부장에게도 내독간 장벽에서 총격 살해와 관련 죄목이 추가됨.
'91. 5.23	<p>베를린 주법무성은 동독의 교육성(호네커의 부인이 장관으로 있을 당시)이 정치적으로 반체제 운동을 하는 인사들로부터 자녀 양육권을 박탈하고, 자녀들을 강제 입양시켰던 수건의 사례에 관한 문서를 발견했다고 발표함.</p> <p>소련 외무성 대변인은 장벽에서 총격 사용 명령과 관련하여, 구동독 정치인들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데 대해 독일 정부에 항의함.</p>
'91. 6. 2	구동독지역에 대한 부자 촉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EC 외무장관 회의가 개최됨.
'91. 6. 4	연방 Stasi 자료 관리전권위임자인 Gauck은 구동독 판·검사 중 거의 1/3 정도가 Stasi와 협력했거나 반 법치국가적인 활동을 해 왔다고 발표함.
'91. 6. 6	<p>연방하원은 구동독 대외 무역성 차관이자 외환 관리 총책이었던 Alexander Schalk - Golodkowski 조사 소위원회(Koko 위원회)를 구성함.</p> <p>구동독 정치국원이자 노총위원장인 Harry Tisch는 베를린 주 법원에서 배임 혐의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음.</p>

연 도	주 요 동 향
'91. 6. 7	연방상원은 “ 농업구조 조정법 ” 을 통과시킴 .
'91. 6. 10	베를린주 고등 행정 법원은 훔볼트 대학 구체제 관련 학과 청산 항소심에서 청산 조치의 일부가 위법이라고 판시하며, 최종 판결시까지 해당 학과인 역사학, 법학, 경제학, 교육학과는 폐지하지 말고 철학 연구소도 계속 운영하라고 판시함.
'91. 6. 11	연방경제협력성 장관은 구동독의 제3세계 지원 프로그램 중 50% 정도를 폐지하지 않고 존속시킨다고 발표함. 연방채신성장관은 구동독지역에 통신분야 사회간접자본 구축 사업 추진으로 100,000명의 고용이 추가적으로 창출된다고 발표함. 베를린 범죄수사국장은 구동독지역에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극우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이 10,000~15,000명에 이르며, 이 중 1,500~2,000 정도는 극렬분자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함.
'91. 6. 13	소련 의무장관은 구동독지역에 아직도 몇 개의 핵 무기가 있다고 밝히고, 조속한 철수 입장을 밝힘.
'91. 6. 15	4명의 구동독 국경 수비대 병사가 국경에서 총격 사살 행위로 기소됨.
'91. 6. 17	독·폴간 우호·협력 조약이 서명됨.
'91. 6. 18	드레스덴 검찰은 구동독 드레스덴 시장이었던 Wolfgang Berghofer를 1989년 5월 7일 지방선거 조작 혐의로 기소함.

연 도	주 요 동 향
'91. 6.20	<p>연방하원은 338:320으로 의회와 행정부 소재지를 베를린으로 결정함.</p> <p>구동독지역 우편노조는 구서독지역 임금의 60% 선에서 임금 협상에 합의함.</p>
'91. 6.21	<p>연방하원은 1992년부터 서독의 연금법이 구동독지역에 전면 도입되는 것을 골자로 한 연금도입법을 통과시킴.</p>
'91. 6.24	<p>구동독 체제 희생자 복권·보상법 입법 청문회에서 희생자 대표측은 구금기간 1개월 당 1,000 DM의 보상을 요구함.</p>
'91. 6.25	<p>신설주 경제장관들은 신탁청장에게 신탁청이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자질향상 회사, 고용 창출 회사 설립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함.</p> <p>신탁청은 PDS의 모든 부동산과 대지를 특별재산으로 인수하며 앞으로 신탁청이 관리를 맡는다고 발표함으로써, PDS는 더 이상 소유 부동산 수입으로 당비를 조달할 수 없게 됨.</p>
'91. 6.27	<p>Poehl 연방은행장은 화폐·경제·사회통합 1주년을 맞아 구동독지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함.</p> <p>베를린에서는 구동독 기민당 (Ost-CDU) 당수 Gerald Goetting에 대해 배임 혐의로 재판이 열림.</p> <p>코메본은 부다페스트에서 마지막 총회를 열고 공식적으로 해체함.</p>

연 도	주 요 동 향
'91. 7. 1	구동독지역의 병력을 인수하기 위한 동부 군단사령부 (Bundeswehrkommando Ost)가 해체되고, 구동독지역 각 군은 기존 구서독 편제에 따라 재편됨.
'91. 7. 2	PDS는 장벽 총격 살해 재판과 관련, 당시 권력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며, 구동독 국경 수비대 병사들에 대한 형사 소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함.
'91. 7. 3	연방정부는 PDS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잔류 소련군들이 동독의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발표하고, 연방군 소속 직원들이 소련군 병영을 감시하고 있다고 함.
'91. 7. 5	튀링겐 주의회는 구동독 시절 Stasi 직원과 SED 정식 간부였던 자들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요지의 법을 통과시킴.
'91. 7. 6	구동독지역에 디지털식 전화 회선이 도입되어, 구 동·서독 지역간에는 26,000 회선이, 구동독지역에서만 10,000 회선이 증설되었다고 텔레콤이 발표함.
'91. 7. 7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겐주가 가입하여, 중부 독일 방송(MDR, Mitteldeutsche Rundfunk)이 설립됨.
'91. 7. 8	<p>작센주 교육·문화성은 1991년 말까지 60,200~70,000명의 교사가 정치적인 과거 전력을 이유로 해고될 것이라고 발표함.</p> <p>연방 고용청은 구동독지역에 주거지를 두고, 구서독지역으로 출·퇴근하는 Pendler의 수가 300,000명에 이른다고 발표함.</p>

연 도	주 요 동 향
'91. 7. 9	연방법무장관 주최로 열린 “ 40년 간의 SED 불법행위 청산 - 법치국가 특히 형법 분야에서 커다란 해결 과제”란 제하의 세미나에서, 정치인·학자·법조인들은 행위시의 법에 의해 재판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동독 불법행위를 청산하는 데는 형법이 적합하지 않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봄.
'91. 7.11	학술원은 구동독지역 대학 교육 개혁안을 제시함.
'91. 7.13	연방법무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구동독 지도부에 대한 형사 소추는 필요한 경우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계속할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범죄에는 소멸 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할 방침이라고 말함.
'91. 7.15	동베를린 공공노조는 병원 종사자, 버스기사, 기술직 행정 요원들의 과거 근무경력을 봉급 산정시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이들이 서베를린 지역이나 서독지역에서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어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경고함.
'91. 7.16	신탁청은 구동독 공산당 기관지 “ Neues Deutschland” 의 재산을 신탁청 관리하에 둔다고 PDS에 통보함.
'91. 7.18	베를린 검찰은 구동독 공산당 부당수이자 경계담당 정치국원이었던 Guenter Mittag을 업무상 배임 교사 (Anstiftung zur Untreue) 혐의로 기소함.

연 도	주 요 동 향
'91. 7.19	<p>공공노조는 현제도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동독지역 공공기관 종사자 140만에 대해 과거 경력 산정을 요구하며 사용주측과 협상을 요구함.</p> <p>연방대검은 구동독 마지막 간첩활동 총책이던 Werner Grossmann과 4명의 동료들을 서독에 대한 간첩 활동 혐의로 기소함.</p> <p>구속중인 Stasi 부장 Erich Mielke에게도 간첩혐의가 추가 적용됨.</p>
'91. 7.22	<p>Der Spiegel지 여론조사에 의하면 구동독 주민의 50% , 구서독 주민의 56%가 아직도 상호 이질감을 느끼고 있으며, 구동독 주민의 69% , 구서독 주민의 70%가 통일이 너무 빨리 진행되었다는데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p>
'91. 7.23	<p>연방대법원은 구동독 간첩활동을 지휘했던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서독(통일독일)의 법을 적용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함.</p>
'91. 7.24	<p>구동독 피해자 복권 및 보상법 초안이 내각을 통과함.</p> <p>구동독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 5개월 동안 전년 대비 55 % 상승함.</p>
'91. 7.28	<p>연방내무성은 1991년에 구동독지역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9억 3천만 DM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함.</p>

연 도	주 요 동 향
'91. 7.29	<p>구동독 공산당 당수였던 Egon Krenz는 서독에 대한 간첩 방조 혐의로 기소된 Stasi 경찰총국 소속 국장 Harry Schuett의 재판(뮌헨에서 열림)에 증인으로 참석해, Schuett는 구동독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또한 구동독의 법률을 준수하며 그러한 활동을 했다고 증언함. 베를린 지방법원은 구동독 경찰총국 국장 Grossmann과 그의 동료 4명에 대한 재판을 - 연방대법원의 입장과 달리 - 구서독의 간첩을 동시에 처벌하지 않는 것은 헌법조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을 중지시킴.</p>
'91. 7.31	<p>Breuel 신탁청장은 지금까지 1,400명의 구동독기업 사장이 해고됐다고 발표함. 이 중에서 400명은 과거 Stasi와 연루됐거나 SED의 중앙위원이었던 자들이고, 1,000명은 무능력의 이유로 해고됨.</p> <p>신탁청은 구동독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약 20,000명의 새로운 경영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함.</p>
'91. 8. 1	<p>Kinkel 연방법무장관은 정치적으로 구체제와 관련된 구동독지역 변호사들의 개업을 금지시킬 것을 요구함.</p> <p>신탁청은 PDS가 새로이 취득하는 당 재산은 스스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과거 재산 중 중앙당건물 등 일부 건물을 PDS에게 되돌려 줌.</p>
'91. 8. 4	<p>Zachert 연방법죄수사국장은 한 인터뷰에서 구동독지역의 극우파들이 20,000~30,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p>
'91. 8. 6	<p>연금보험연합회는 두 번에 걸친 연금인상으로 구동독지역 연금 생활자들의 연금이 통독 이전에 비해 75%가 상승했다고 발표함.</p>

연 도	주 요 동 향
'91. 8. 7	연방정부는 PDS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1990년 7월부터 1991년 6월까지 구동독지역의 생활비가 16.4% 증가했다고 발표함.
'91. 8. 8	<p>Breuel 신탁청장은 구동독지역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의 최하한선에 도달했으며, 건축과 식료품 공업 부문에서는 이미 회복세에 있다고 발표함.</p> <p>연방경제성 경제자문위원회는 특별보고서에서 구동독지역의 총 임금이 1년 사이에 30%가 상승한 반면, 전체 생산량은 30%가 감소했다고 밝히고, 생산성 향상에 기준하지 않는 임금상승에 대해 우려를 표시함.</p> <p>베를린 주정부는 베를린장벽 매각 대금이 2,100만 DM에 이르며, 이 수입은 보건 의료 시설과 유적 보존에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함.</p>
'91. 8.11	신탁청장은 한 인터뷰에서 과거 PDS 소유 기업에 완전히 새로운 경영자를 임명할 예정이며, 모든 신탁청 관리 기업 경영진에 대해서 자질과 과거 전력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힘.
'91. 8.13	<p>베를린장벽 구축 30 주년을 맞아 베를린 주정부는 200 m의 장벽을 후손들에게 역사적 교훈을 주기 위하여 남겨 놓기로 결정</p> <p>튀링겐주 내무장관은 신설주에서 KGB의 간첩활동이 강화되고 있다고 경고함.</p>
'91. 8.15	Schaeuble 연방내무장관은 헌법보호청 1990년도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아직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400여명의 과거 구동독의 첩자들이 아직도 구서독지역의 중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함.

연 도	주 요 동 향
'91. 8.17	프로이센 왕(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 프리드리히 2세) 유해가 포츠담에 안장됨.
'91. 8.19	<p>소련에서 구태타가 발생함.</p> <p>노총 발표에 의하면 20만의 구동독 주민이 사회 부조금을 받고 있으며, 80만이 노동청과 연금기관으로부터 사회복지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함.</p>
'91. 8.20	<p>신탁청 자매회사인 H0(구동독 국영 유통업체) 사유화 회사는 H0 산하 30,000개의 상점, 음식점, 호텔 중 22,300개가 개인 투자자에게 매각되어 H0의 사유화가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발표함.</p>
'91. 8.21	<p>연방고용청은 Magdeburg에 구동독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직업 안내 정보 센터를 개설함.</p> <p>소련 주둔군 사령부는 지금까지 80,000명의 군인과 25,000명의 군속이 철수했다고 발표함.</p>
'91. 8.22	<p>연방내무성이 ipos 여론조사 연구소에 용역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구동독 주민의 70%, 구서독 주민의 65%는 독일민족임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는 구동독 지역에서는 환경 문제 임이 지적됨. 또한 응답자의 2/3가 과거 공산당의 간부가 아직도 구동독지역의 재 분야의 요직에 활동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나타냄.</p>
'91. 8.24	<p>연방대통령과 연방수상의 서신 교환을 통해, 기존 서독의 국가인 Hoffmann von Fallersleben의 시 Deutschlandlied의 제3절을 통일 독일의 국가로 결정키로 함.</p>

연 도	주 요 동 향
'91. 8. 28	구동독 국경수비대 장성 4명은 연방하원에 보낸 서신을 통해, 장벽과 국경에서의 총격 살해 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함.
'91. 8. 31	16개주 주지사들은 본에서 첫 통독 방송조약(Rundfunk-Staatsvertrag)에 서명함.
'91. 9. 3	연방정부는 4,225억 6천만 DM 규모의 1992 년 예산안을 제출함.
'91. 9. 5	연정 파트너(기민/기사/자민당) 들은 구동독 체제 하에서 강제 입양된 자녀들의 입양 관계 취소 기한을 1993 년 10 월 2 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함. 통일 조약에는 이 기한이 1991년 10월 2일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관계 부모들에게 충분한 법적인 보호를 제공키 위해 2년이 연장됨.
'91. 9. 6	PDS는 신탁청의 활동을 재조정하고, 구동독 인민 공유 재산을 구동독 주민을 위해 처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했으나, 다른 원내 교섭 단체들의 지지를 받지 못함. 사민당은 신탁청 소위원회에서 구동독 인민 공유 주택을 지방 행정 기관에 이전하고, 주택조합과 구동독 지방 행정 기관이 지고 있던 500억 DM에 달하는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함.
'91. 9. 7	각 주 문교·문화 장관 회의(KMK)는 통일조약 제37조에 규정된 구동독에서 취득한 졸업 증명 및 자격의 구서독지역과 동등 취급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함.

연 도	주 요 동 향
'91. 9.18	<p>Kinkel 연방법무장관은 1,000명의 법관과 500여명의 법률 집행인을 구동독지역에 '91년 말까지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힘.</p> <p>연방 국경 수비대(BGS)는 구동독 국경 근무자 중 특히 여권 검사 업무에 종사했던 자들이 Stasi와 연루되어 많이 해고되는 바람에 폴란드와 체코의 국경 감시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발표함.</p>
'91. 9.19	<p>연방 국방성은 병력 감축 계획의 일환으로 1995년까지 구서독지역의 직업 군인 수를 70,600명에서 60,600명으로 10,000명을 줄인 계획이라고 발표함.</p>
'91. 9.25	<p>연방 내무성은 이전 Stasi 요원들이 구동독지역의 극우세력 확산을 조종하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함.</p> <p>KoKo 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KoKo의 총책임자였던 Schalck-Golodkowski는 KoKo가 구동독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외환을 벌어들이는 임무를 수행해 왔으며, 1976년부터 경제담당 정치국원 Mittag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았다고 진술함. 아울러 Stasi 내에 KoKo를 관장하는 담당부서가 설립되었으나, 이는 KoKo에 대한 서방측 정보기관의 공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지, KoKo의 활동과 Stasi의 활동은 무관했었다고 진술함.</p>
'91. 9.26	<p>연방교육성은 구동독지역 대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생활비 지원금(Bafog)이 690 DM으로 구서독지역 대학생들에게 지급되는 890 DM의 80% 수준이라고 발표하고, 동·서독 학생들의 생활수준은 다른 직장인들의 생활수준 평균 격차보다 적다고 밝힘.</p>

연 도	주 요 동 향
'91. 9. 28	<p>통일조약에 1992년 9월 30일까지 낙태 분제에 관해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바, 각 원내 교섭 단체는 6개의 낙태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함.</p> <p>학술원은 16개의 연구소와 종사 인력 4,300명을 거느리던 구동독 건설 아카데미를 해체하고, 600여명 규모의 새로운 건설 분야 연구소를 신설키로 함.</p>
'91.10. 1	<p>연방 상원은 구동독에서 Stasi나 헌법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 및 사회 단체에서 근무했던 자들에 대한 총기 소지를 불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기 소지법 및 수렵법 개정안을 제출함.</p>
'91.10. 9	<p>Stasi 자료 처리 연방 전권 위임자인 Gauck 은 Stasi 자료법 (Stasi-Unterlagengesetz)이 통과되면, 이 문서의 처리와 관계인들의 열람을 위해 현재 978명의 직원을 3,500여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함.</p>
'91.10.14	<p>연방노동성은 145,600명의 구동독지역 청소년들이 직업 교육을 신청하여, 이 중 2,421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직업 교육을 받고 있다고 발표함.</p>
'91.10.15	<p>연방건설성은 통독후 첫 국토개발계획(Raumordnungsbericht)을 발표함.</p>

연 도	주 요 동 향
'91.10.16	<p>연방농림수산성은 구동독 농경지 중 EC의 농업 정책에 호응하여 총 60만 ha(전체 농경지 중 12.8%)에 해당하는 농경지가 농가의 신청에 따라 휴경지화 되었다고 발표함.</p> <p>연방하원 외무위 대외문화정책 소위원회는 구동독의 기존 대외문화 사업중 각국으로부터 7천명의 장학생과 2개의 대외문화기관 지원관련 사업을 인수키로 했다고 밝히고, 아울러 구동독지역과 외국과의 문화 교류를 기존 서독의 계획에 맞게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함.</p>
'91.10.17	<p>신탁청은 1991년 말까지 100개의 구동독지역 호텔을 사유화하며, 이에 따라 11,000개의 호텔 방이 관광객에게 제공될 예정인데, 신탁청 추산으로는 “철의 장막” 하의 구동독지역 실상을 보기 위해 여행하려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60,000개 가량의 호텔 방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발표함.</p> <p>기민/기사당, 사민당, 자민당은 모든 국회의원에 대해 그 활동과 관련하여 Stasi와의 연부 여부를 서면으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 의원법 개정안을 제출함.</p>
'91.10.22	<p>연방노동성은 구동독지역 노동성 지방 사무소 인수 인력 736명의 과거 전력과 자격을 심사한 결과, 21명은 해고하고, 117명은 현직급보다 낮게, 565명은 현직급대로 임명했으며, 총 38명의 지방 사무소장 중 20명을 해고했다고 발표함.</p>

연 도	주 요 동 향
'91.10.29	<p>사민당은 연방정부에 연방문서관리청(Bundesarchiv) 산하에 구동독의 노동운동 관련 자료 및 도서, 구동독 노총의 자료 및 문서, 재휴 정당과 대중 외곽 기구들의 자료 및 문서 등을 관리·보호하는 3개의 재단을 설립하자는 제안을 함.</p>
'91.10.30	<p>Kinkel 연방법무장관은 소련측에게 호네커의 조속한 송환을 요구함.</p> <p>연방의회는 연방내무성이 1991년 말까지 통독이후 “정치교육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보고하도록 결의함.</p> <p>연방하원 교통분과위원회는 조속한 구동독지역 교통 분야 사회 간접 자본 시설 확충을 위해 교통 분야 공공 사업 발주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 법안을 통과시킴.</p>
'91.10.31	<p>연방내무성은 구동독의 체육 시설의 지방 자치 단체로 이관과 관련 1988년 구동독 공식통계를 기준으로 23,400개 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용 가능한 시설이 그보다 훨씬 더 적다고 발표함. 이 시설의 관리와 이양을 책임지고 있는 신탁청에는 1991년 8월 현재 142 건의 지방 자치 단체의 이관 신청이 접수되어 있다고 함.</p>
'91.11.5	<p>헌법보호청은 국회 답변에서 독일내에 69개의 정당 및 사회 단체, 71개의 언론 및 출판사, 14개의 신문·시사 잡지사 등이 극우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발표함.</p>

연 도	주 요 동 향
'91.11. 6	<p>연방내무성은 연방의회에 제출한 헌법 보호청 보고서에서 구서독을 대상으로 활동한 구동독 Stasi 간첩은 5,000~6,000 명으로 잠정 추정하며, 이 중에서 1,700 명의 행적을 정확히 밝혀 냈고, 그중 600여명은 형사 소추했다고 발표함. 그러나 구동독 Stasi 간첩활동에 협력했던 구서독인 중 400여명의 고정 간첩이 각계에서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으나,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또한 독일 공산당(DKP)의 당원 수는 통독 이후 계속 줄어들어 10,000~12,000명 정도로 추정함.</p>
'91.11. 7	<p>사민당은 구서독에서와 달리, 구동독에서는 해주지 않았던 2차대전 중 피해를 입은 전쟁 포로에 대한 보상을 해 주기로하는 법안을 제출 하였음. 이 법안에서는 다만 나치 시대 또는 그 이후에 인권 침해나 반법치국가적 활동을 통해 폭력 지배를 정당화하는데 봉사했던 자는 제외되었음.</p> <p>연방하원은 Stasi 에서 활동하던 자들이 연금이외에 다른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 도입법 개정안을 통과시킴.</p>
'91.11 8	<p>연방정부는 연방하원 신탁청 소위원회에서 신탁청 활동 감독기관으로 연방 재무성, 하원 소위원회, 연방 감사원 그리고 신탁청내 감사기관, 행정위원회 등이 있어, 그 활동이 법적으로 통제되고 있다고 발표 했으나, 소위원회 위원들은 신탁청 활동이 좀더 투명해질 수 있도록 활동내용을 더 많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함.</p> <p>연방하원은 1993년부터 부가가치세를 14% 에서 15%로 인상키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킴.</p>

연 도	주 요 등 향
'91.11.10	독일 관광협회는 독일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외국인 적대감 때문에 관광객이 줄고 있다고 발표함.
'91.11.12	연방정부는 1990년 7월 1일 설립된 구동독 사회 보험 기관의 통합 기금을 각 보험 기관별로 배분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함.
'91.11.13	연방정부는 연방의회 답변에서 사유화가 아직 안 된 신탁청 관리 기업 중 약 70%가 자금 투입과 새로운 경영 방안 채택에 따라 매각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으로 추정하며, 이 기업들의 정비를 위해 1992년에 약 100억 DM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91.11.14	연방하원은 기민/기사당, 자민당, 사민당의 지지로 Stasi 자료법 (Stasi-Unterlagen-Gesetz)을 통과시킴.
'91.11.15	<p>연방하원은 연방법무성이 제출한 1997년 말까지 4,862명의 연방 국방성 소속 민간인 군속을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연방군 소속 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킴.</p> <p>연방 정부는 1994년까지 연방군 병력을 37만으로 줄여야 함에 따라 1992~1994 동안 직업 군인들이 자유 의사에 따라 조기 정년퇴직 시킬 방침이라고 발표함. 이 경우 퇴직자들은 최종 급여의 75%를 받을 수 있는데 하사관과 기술직 장교는 48세, 일반 장교 및 의무병들은 50세부터 전역할 수 있음. 이러한 계획에 따라 연방정부는 향후 7년동안 약 9,300만 DM의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p>

연 도	주 요 동 향
'91.11.16	<p>신탁청은 1991년에 구동독지역의 산림 전체 면적 중 2/3에 달하는 신탁청 관리 산지의 산림 조성을 위해 2억 5천만 DM을 지출했다고 발표함.</p>
'91.11.19	<p>연방국방성은 통일조약에 규정된 대로, 구동독 지역은 아직 NATO의 군사편제에 통합되지 않았으며, 소련군이 완전히 철수한 이후 정치적인 결정에 따라 군대를 NATO 지휘하에 두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함.</p>
'91.11.27	<p>연방하원 청원 심사 위원회에서 연방 정부 대표는 구동독 공산 정권 치하에서 저질러진 형사 소추 대상 행위의 소멸 시효 적용은 동일 조약에 의거, 고려될 수 없다고 밝힘. 그러나 만약 소멸 시효를 적용하게 된다면 SED 정권이 붕괴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 시효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p> <p>연방의회는 헌법개정 문제를 토의하게 될 하원 의원 32명, 상원의원 32명으로 구성된 헌법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동의함.</p> <p>연방정부는 구동독 체제 피해자 복권·보상을 위한 SED 불법 행위 청산법(SED - Unrechtsbereinigungsgesetz)을 연방의회에 제출함. 보상에 소요될 약 15억 DM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반반씩 부담할 예정임.</p>
'91.11.28	<p>연방국방성은 구동독지역에 존재하는 60개의 군사 연습장 중 39개를 폐기 처분했다고 발표함.</p> <p>연방하원 내무위 Stasi 소위원회에서 Stasi 자료 관리 연방 전권 위임자인 Gauck은 2명의 Stasi 전 요원이 3년간 한시적으로 Stasi 문서 정리를 위해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함.</p>

연 도	주 요 동 향
	<p>연방건설성은 두 번에 걸친 주택 임대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평균 구서독 주택 임대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구동독 지역의 임대료는 시장 경제적인 주택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에서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연방 의회에서 밝힘.</p>
'91.11.29	<p>연방의회는 세입·세출 예산 4,221억 DM, 연방정부의 차입액 453억 DM 규모의 1992년 연방 예산안을 통과시킴.</p>
'91.12. 4	<p>연방정부 장애인 문제 전권 위임자는 구동독 지역에서 장애자들의 실업이 심각하고,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열악하여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발표함.</p> <p>Telekom은 199년부터야 구동독지역의 전화 사정이 구서독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발표함.</p> <p>연방과학기술성은 구동독 과학기술 분야 연구원들 중 많은 수가 구서독지역이나 서유럽으로 이주하였고, 약 1/3 가량이 실업상태에 있기 때문에 연구 잠재력이 크게 위축되었다고 발표하고, 특히 산업체 연구소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여 기업체의 기술 혁신이 장애를 받고 있다고 함.</p>
'91.12. 6	<p>연방 농림 수산성은 구동독 지역 농지와 산지의 신속한 사유화 및 농업 종사자의 고용 창출을 위한 추가정책을 발표함.</p>

연 도	주 요 동 향
'91.12.11	연방하원 법사위는 구동독 주민들에게만 특별히 적용되어 왔던 보험 계약 체결시의 특혜 조건을 1년 연장하여 1992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함. 이러한 특혜는 아직도 시장경제체제를 불신하여 이에 적용하지 못하는 구동독 주민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위해 부여되었는데, 보험 가입자는 보험금 인상시에 무제한으로 보험을 해약할 권한과, 보험계약 체결후 10일 이내에 무제한으로 그 보험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91.12.12	연방의회에서는 1991년 말까지 구동독 농업협동조합(LPG)의 새로운 법인체로의 전환이 지연됨에 따라, 이를 규정하고 있는 농업구조 조정법을 개정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함.
'92. 1.15	연방경제성 장관은 생산성 향상을 능가하는 임금 인상을 허용하는 현재의 임금정책이 계속되는 한, 구동독지역의 경제조건이 어려워 것이라고 밝힘.
'92. 1.17	유럽 의회는 동유럽에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동유럽과 서유럽을 연결시키는 전력망을 구축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함.
'92. 1.19	연방국방성은 통독 이전 구동독의 무기 해외 수출로 인한 채권액이 1990년 통독 당시 15 개국에 1억 8천만 DM 이었으나, 그간 대금을 회수하여 1991년 9월 30일 현재 8천만 DM 이라고 밝힘.

연 도	주 요 동 향
'92. 1.22	<p>연방노동성은 구동독지역을 위한 적극적인 실업 대책을 위해 1992년에 약 360억 DM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함.</p> <p>연방내무성과 법무성은 연방의회 내무위에서 화폐 통합 당시 화폐 교환 비율의 차등 적용으로 인한 외환 차익을 불법으로 착복한 약 140,000 건에 달하는 동일 관련 경제 범죄에 대해 대형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구동독 정권의 정권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최소한 340여명의 수사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발표함.</p> <p>연방통신성은 통독 이후 잠정적으로 기존 4자리의 우편 번호 앞에 구동독지역은 "0", 구서독지역은 "W" 를 사용하여 구분하고 있는 방식에서 1993년부터 새로운 다섯자리 수의 우편 번호로 전국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우편번호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힘.</p>
'92. 1.23	<p>연방의회는 구동독 공산당, 제후 정당, 대중 의곽 단체의 자료와 문서들을 집중 관리하며 과거 청산을 위한 기초 연구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연방 문서 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함. 이에 따라 연방 문서 관리청(Bundesarchiv) 산하에 " Archiv der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 der DDR" 이라는 이름의 재단이 설립됨.</p> <p>Breuel 신탁청장은 국회 예결위에서 구동독 기업으로부터 인수한 구채무가 1,040 억 DM 에 달하며, 기업 사유화와 폐쇄시 해고되는 인력에 대한 사회 복지 비용 지급 및 환경 오염 분담분 인수 비용 등으로 사유화 대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적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힘. 연방 재무성은 1994년 말까지 약 2,000억 DM의 적자가 예상되며, 이 부담은 연방 정부와 신설주정부(구동독 지역)가 반반씩 부담할 것이라고 발표함.</p>

연 도	주 요 동 향
'92. 2. 20	<p>Hoffmann 구동독 문화장관은 동독이 외환 확보를 위해 대외 무역 회사인 KoKo를 통해 비사회주의 국가에 대해 문화재를 매각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함.</p> <p>Gauck Stasi 자료 관리 전권 위임자는 국회 의원들이 과거 Stasi를 위해 활동했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 업무를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국회에서 답변함.</p>
'92. 2. 21	<p>구동독 대학 개혁을 위한 공청회에서 Weiss Leipzig 대학 총장은 40년 간의 공산당 독재와 12년 간의 히틀러 독재가 남긴 유산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정신적·도덕적 혁신과 아울러 새로운 교수 층원 및 대학 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함.</p>
'92. 3. 3	<p>연방법무성은 구동독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와 감정사들이 과거 Stasi 를 위해 활동했는지를 심사하여, 이들의 전력이 밝혀지면 이들에 대해 기업활동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함.</p>
'92. 3. 9	<p>연방농림수산성은 1991년 3월 말까지 시한을 선정하여 총 3,210 건에 달하는 농가 부채 경감 신청을 받아, 이중 1,544 건에 대해 총 14억 DM의 농가 부채를 탕감해 주었다고 발표함.</p> <p>현재 구동독지역에서 전업으로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215,000명으로 집계됨.</p>

연 도	주 요 동 향
'92. 3.10	연방법무성은 이제까지 과도기적으로 구동독의 법원 조직을 그대로 활용하며 소송 사건을 처리해 왔으나, 1992년 중반부터 구서독의 법원 조직과 동일한 법원 체계를 신설주에 세우기 위해 재판 구조 조정법 (Rechtspflege-Anpassungsgesetz)을 제출함.
'92. 3.11	Mielke 전 Stasi 부장은 연방의회 조사 소위원회에서 본인은 노동자 계급과 국가에 봉사하기 위하여 모든 활동을 했다고 진술함.
'92. 3.12	Stasi 자료 관리청은 Stasi 자료법이 통과된 후 자료 열람 신청이 매달 300,000 건 접수되었다고 발표함. 연방하원은 16명의 의원과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 SED 독재체제 잔재 청산 특별 위원회s” (Enquete-Kommission Aufarbeitung der Geschichte und der Folgen der SED-Diktatur)를 설치하기로 의결함.
'92. 3.13	연방재무성은 화폐통합 당시 기회를 놓쳐 동독 마르크를 서독 DM으로 교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은행 계좌액이 최소 500 동독마르크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993년 6월 30일까지 이 돈을 교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함.
'92. 3.19	SED 불법행위 청산법(부권·보상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피해자측은 보상액이 적다고 논란을 벌임.

연 도	주 요 동 향
'92. 3.20	연방내무성은 1992년 2월 현재 3,700여명의 구동독 Stasi 근무자들이 계속 연방정부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국회 내무위에서 보고함. 이중 철도분야에 2,082명, 내무성 산하에 652명, 우편·통신성 산하에 686명, 관세청 등 재무성 산하에 274명이 계속 근무하고 있음. 각 위원들은 한시적인 고용 계약 관계에 있는 이들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않도록 요구했으며, 각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이들의 심사와 재임용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음.
'92. 3.27	연방의회는 나치시대에 박해를 받았던 구동독 주민들에게 이제까지 동독에서 받던 명예 연금 대신에 서독 주민들이 받았던 보상 연금으로 대체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이 보상 연금은 매월 1,400 DM이 지급됨.
'92. 4.13	베를린 검찰청 정권적 범죄 행위 전담반은 동·서독 간에 이루어진 정치범 석방을 위한 지불 거래시 동독측 실무 협상 주역이었던 Wolfgang Vogel 변호사를 공갈취재(Erpressung) 혐의로 기소함.
'92. 4.28	연방국방성은 과거 내독간 국경의 차단 시설 및 지뢰 제거 작업을 개인 기업에게 1992년 말까지 용역을 의뢰했으나, 작업이 완료되기 어렵게 됨에 따라 새로운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발표함. 야당인 사민당측은 구동독 인민군 중 실업 상태에 있는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에서 이 분야에 대한 고용 창출 조치를 강구, 이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촉구함.

연 도	주 요 등 향
'92. 4. 29	<p>연방의회 보건 위원회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구동독 지역의 정신 병원 시설이 열악하고, 정신 질환 전담 간호 인력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함. 전문가들은 전문 인력 부족은 우선 구서독지역에서 인력 파견으로 메꾸어 나가고 기존 국영 종합 병원 시설의 사유화를 적극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권고함.</p> <p>신탁청은 1992년에 300억 DM의 부채를 추가로 지게 되어, 1992년 말까지 총 부채액은 1,475억 DM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함.</p>
'92. 4. 30	<p>연방의회에서는 구동독지역 농산물 유통 구조를 서독 수준으로 현대화하는 시장구조조정법 (Marktstrukturgesetz)이 통과됨.</p> <p>이에 따라 예초 통일 조약에서는 1994년부터 동독지역에 새로운 유통구조가 확립될 예정이었으나, 18개월 앞당겨져서 1992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농산물 유통 체계가 확립되게 됨.</p>
'92. 5. 6	<p>연방노동성은 1992년 3월 현재 구동독지역 실업자 중 62.3%가 여성으로서 실업으로 여성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힘.</p>
'92. 5. 7	<p>사민당은 구동독지역의 상하수도 환경 개선과 수질 오염 제거를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는데, 사민당은 이 분야에 소요되는 예산을 1,000 억 DM으로 추정함.</p> <p>연방 의회 KoKo 조사위원회에서 구동독 재무 차관이었던 Dr. Koenig는 동독 경제는 이미 1981년부터 주민들에게 물자를 충분히 공급하고 외국의 부채를 갚기 위한 외환을 확보하지 못해 채무지불 불능상태가 지속되어 왔다고 증언함.</p>

연 도	주 요 동 향
'92. 5. 8	연방하원 “ SED 독재체제 잔재청산 특별위원회” 는 첫 회의를 열고, 업무추진 방향을 논의함. 동 위원회는 SED 독재의 구조, 지배 도구, 정책 결정 과정, 이데올로기의 역할, 교육·학문·문학 등의 정치적 이용 과정, SED 독재 하의 교회의 역할들을 밝히는 일에 업무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함.
'92. 5.20	연방하원 “ SED 독재체제 잔재 청산 특별 위원회” 는 베를린에서 회의를 열고 업무 추진 기본 지침을 확정 의결함. 동 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활동 목표를 과거의 역사를 조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각계 각층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민주적인 자의식과 공동의 통일된 정치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데 둘 것이라고 발표함.
'92. 5.26	연방보건성은 구동독 정부가 통독 이전 기록해 놓은 동독 주민들의 암 환자 실태에 관한 조사서가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임상 치료적인 측면에서 매우 가치가 있다고 보고, 통일 조약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이를 활용하지 못했으나, 이를 1993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제출함.
'92. 6. 3	연방의회는 1992년 6월 17일 구동독 공산 통치로 인한 희생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개인적인 희생이 분단 극복과 통일에 기여했다는 요지의 명예부여선언(Ehrenerklaerung)을 결의하기로 함. Rehlinger 전 내독성 차관과 Neumann 신교 구호 기관 Diakonie 회장은 연방의회 KoKo 조사 소위원회에서 1963년부터 1989년까지 서독정부는 34억 DM을 지불하여 33,755명의 정치범을 구동독으로부터 석방해 왔으며, 250,000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하도록 하였다고 증언함.

연 도	주 요 동 향
'92. 6.24	<p>연방정부는 구동독 인민군들이 거주하던 64,000개의 주택을 인수했으며, 이를 구동독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거나 새로운 투자자에게 매각할 예정이라고 발표함.</p>
'92. 6.25	<p>연방하원 신탁청 소위원회에서 국회 의원들은 신탁청과 산하 기업에 아직도 구동독 Stasi 요원들과 당·정 고위 관료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들 경제분야 노멘클라투라들을 척결하라고 촉구함.</p> <p>신탁청은 지금까지 6,000여명의 근무자를 심사하여 800여명을 과거 전력을 이유로 해고시킨 바 있다고 발표함.</p>
'92. 7.11	<p>베를린에서는 동독에서 “평화 혁명”이 일어난지 2년 반 만에, 동독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장외 운동 조직체 (ausserparlamentarische Opposition) 성격을 갖는 단체인 “정의 구현 위원회” (Komitee fuer Gerechtigkeit)의 결성식이 열리고, 69명의 지식인, 작가, 예술인, 정치인들이 선언문에 서명함.</p>
'92. 7.14	<p>연방은행은 통독이 독일과 교역국들의 경제 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최근 6월 월간 보고서에서 분석함.</p> <p>통독 특수이 고금리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압도하여 EC의 경우 1990년에는 EC 전체 추가 경제성장의 30%가 통독에 기인했으며, 1991년에는 추가 경제성장의 10%는 독일측이 교역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인해 달성했다고 분석함.</p> <p>EC 국가 중 벨기에가 통독으로 가장 큰 경제성장을 기록했는데, 실질 경제 성장률 중 22%가 통독 특수에 기인하며, 에이레, 덴마크, 네덜란드도 통독으로 매년 1%의 추가 경제성장을 기록했다고 함.</p>

연 도	주 요 동 향
'92. 7.15	<p>연방정부는 내각에서 통독 이후 첫 통합 연방 교통망 계획 (Bundesverkehrswegeplan)과 구 동·서독 철도 개혁안을 의결함.</p> <p>이 계획에 의하면 2,010년까지 총 4,930억 DM을 교통 분야에 투자하게 되는데, 이 중에는 동·서독간 교통망 개선을 위한 통일 독일 교통망 개선 프로젝트(Verkehrsprojekte Deutsche Einheit) 570억 DM도 포함되어 있음.</p>
'92. 7.17	<p>Limbach 베를린주 법무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4만 내지 5만 건의 복권·판결 무효화 신청이 구동독 지역 신설주에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으나, 지지부진하며, 보상은 아직도 연방정부가 제출한 SED 불법 행위 청산법(SED - Unrechtsbereinigungsgesetz)이 통과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복권·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함.</p> <p>베를린주 법원의 경우 6,776건의 신청서가 접수(이 중 5,914건은 복권, 862건은 판결 무효화 신청임) 되었으나, 이 중 1,677건의 신청서만이 법원에 의해 처리됨(1,017건의 복권, 660건의 판결 무효화).</p>
'92. 7.20	<p>Dormann 기민당 사회정책분과위 위원장은 통일비용 분담의 문제로 정부 정책을 비판함. 통일비용 조달을 위해 7월 1일부로 그간 1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인상되었던 소득세 추가 과세(연대 기여금)가 폐지됨에 따라, 석유세, 보험세, 실업 보험 기여금 등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나, 이러한 과세는 사회 형평의 원칙에서 볼 때, 저소득자에게 불리하여 통일비용 분담에서 불공평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함.</p>

연 도	주 요 동 향
'92. 7.21	<p>구동독에서 대변혁 이후 많은 기업들은 비용 때문에 산하 연구소를 줄이거나, 없애버렸는데, 신탁청은 이러한 연구소를 모아 독립적인 연구 용역 회사(Forschungs-GmbH) 형식으로 신탁 관리하여 두고, 이 회사를 사유화·매각하여 왔음. 현재 117개의 용역 연구 회사 중 36개가 사유화되고 45개가 남아있는데, 나머지는 지방 행정 기관에 이양되거나 해체되었음.</p> <p>구동독 판사들에 대한 첫 공판이 개최되었음. 현재 베를린 검찰에는 과거 구동독 판사들의 판결에 의해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법률 남용(Rechtsbeugung) 죄를 적용하여 구동독 판사들을 상대로 재판을 신청하고 있는 건이 3,200 건에 이르고 있음. 이러한 구동독 판사들에 대한 첫 재판은, 과거 노조 지도자가 정치적인 이유로 해고된 이후에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으나, 기소된 판사가 이를 기각한 바 있어, 이 판사를 상대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임.</p>
'92. 7.24	<p>러시아 외무성 대변인은 호네커의 러시아 출국 예정을 확인함. 독일정부 대변인 Vogel도 성명을 통해 호네커는 귀환되는대로 베를린 주 법무성이 인도할 것이라고 발표함. Silva 칠레 외상도 호네커 문제가 곧 해결될 것이라고 말함.</p>
'92. 7.27	<p>베를린 행정 재판소는 1961년 베를린장벽 구축시 국유화된 대지에 대해 당시 충분한 보상을 받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반환될 수 없다고 판결함. 다만, 재산 문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유화 당시 전연 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보상액이 미진했을 경우에만 예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결정함.</p>

연 도	주 요 동 향
	<p>독일 연방문서관리청(Bundesarchiv)은 라이프찌히 소재 구 제국 대법원(Reichsgericht : 1879 - 1945) 건물 내에 “ 독일통일 문서 보관소” (“ Archiv der deutschen Einheit”)를 설립할 계획임. 이곳에는 1953년 6월 17일 동독 인민 봉기로부터 1989년 가을 월요 시위에 따른 정치적 대변혁 시점까지의 동·서독 관계 역사와 관련된 자료 원본을 보관할 예정임. 이를 위해 1993년 중에 준비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임. 동 문서 보관소가 설립될 경우 현재 연방 문서 관리청 산하로 되어 있는 과거 전독문제연구소 베를린 지소의 소장 자료가 모두 보관될 것임. 현재 베를린 지소에는 구동독 공산 정권 치하의 역사에 관한 1,300만 건의 신문 스크랩과 75,000여 개의 신문철이 보관되어 있음.</p>
'92. 7.29	<p>칠레정부는 마지막까지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상 호네커를 추방하기 전에 러시아 법정에서 증언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엘친 러시아 대통령은 호네커의 러시아 영토내 입국 및 체류 자체가 불법이므로 상기 국제 협약의 적용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독일정부는 호네커를 살인죄('61년 베를린장벽 구축 이후 49 건 총 200명 이상의 사상자 발생)를 적용, 정치적 재판이 아닌 “ 법률에 의거한 공정한 재판” 에 회부할 예정임.</p>
'92. 7.30	<p>호네커가 독일로 송환됨. 호네커 송환 문제는 6월 리오데자네이로 환경 정상회의시 Kohl - Aylwin 칠레 대통령간에 합의된 것으로 밝혀짐. 호네커의 변호사 Friedrich Wolf 는 호네커가 러시아 보안 요원에 의해 강압적으로 추방되었으며, 이는 국제법의 위반이라고 주장한 반면, 칠레 대사 Holger 는 호네커와 두 시간 동안의 면담을 통해 “ 자발적으로” 떠나기로 설득에 성공했다고 주장함. 러시아 외무성도 “ 자발적”, 베를린 법무성 측도 “ 다소간 자발적” 이었다고 주장함.</p>

연 도	주 요 동 향
'92. 8. 1	<p>Merkel 구동독 출신 기민당 부당수는 호내커 귀환 이후 호내커 사건과 관련, 사법적 처리를 넘어 선 도덕적인 과거 청산 작업을 요구함. Merkel은 이러한 등독의 과거 역사에 대한 철저한 도덕적인 과거청산(moralische Aufarbeitung)을 위해 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이는 형법으로서는 결코 역사적인 청산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함.</p>
'92. 9. 10	<p>연방의회는 4,356억 DM 규모의 정부 재출 1993년도 세출 예산안을 심의함. 동 예산안에 의하면 연방 정부의 차입액은 380억 DM에 달함.</p> <p>서독에 대한 간첩 활동을 총괄했던 Markus Wolf 구동독 Stasi 정찰 총국(HVA) 국장은 KoKo 조사 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했으나, 자기의 활동과 관련한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함.</p>
'92. 9. 11	<p>“ SED 독재 잔재 청산 특별 위원회 ” 는 구동독 체제의 법적인 청산 문제에 대해 논의함. 기민당 측은 법적인 청산에 정치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동 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 법제화된 불법 행위 ” 가 저질러질 수 밖에 없었던 정치적·이데올로기적인 배경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사민당 측은 나찌 청산시 기본법상 규정된 형사 소추 불소급의 원칙을 국제적인 동의 하에 수정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며, 동독 주민들을 위해 좀더 광범위한 법적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p>

연 도	주 요 동 향
'92. 9.24	<p>연방 검찰청은 전 Stasi 대의 경찰 총국장 Markus Wolf를 국가 모반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함. Wolf는 33년간 Stasi 대의 경찰 총국장을 맡으면서 서독에 대한 간첩활동을 담당해 왔고, 서독 내에 500~600여 명의 정보원을 지휘해 왔는데, 이 중 정체가 밝혀진 12명을 통한 간첩 활동 혐의로 기소됨. Wolf는 1991년 9월 24일 자수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서독정계를 뒤흔들 수 있는 섹스 스캔들 정보와, 정부를 곤경에 빠뜨릴 만한 구서독 중요 정책에 대한 기밀때문에 유죄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음.</p>
'92. 9.25	<p>동·서독지역간 전화 통화는 “더 이상 문제없다”고 Helmut Rieke 연방 전화 국장이 밝힘.</p> <p>독일 Telekom은 1992년에 1991년의 두 배에 해당하는 110억 DM을 구동독지역에 투자, 최대의 구동독지역 투자가가 됨.</p> <p>신설주의 전화 가설은 신속히 추진되어 1991년 55만 가계에 전화가 가설되었으며, 이로써 동·서독간의 전화 통화가 지장이 없다고 주장함.</p>
'92. 9.28	<p>Moellemann 경제성 장관은 신설주 재건의 목표는 서독이 40년 만에 이룬 경제 성장을 10년 만에 재현하는 일이라고 말함.</p> <p>신탁청은 약 12,000개 국영기업 중 9,000개가 사유화 되었으며, 구동독지역 산업 생산량은 1989년의 1/3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생산성도 서독의 1/3 정도라고 밝힘.</p> <p>브란덴부르크주 법무성은 구동독지역 출신 판사 242명 중 131명의 판사를 재임용함. 86명은 신청 취소, 17명은 탈락, 8건은 재심사 중임. 검사의 경우, Stasi와 협력한 자, 공산당 지구당원 등으로 밝혀진 자, 지구 검찰 청장 등은 재임용에서 탈락됨.</p>

연 도	주 요 동 향
'92.10. 7	연방정부는 구동독지역 행정체계 구축에 참여하고 있는 구서독 출신 공무원에 대한 일괄보조금을 '93년에도 계속 지급키로 결정함.
'92.10. 9	신설주 재무장관들은 연방재무장관에게 120억 DM 이상의 추가재정 이전을 요구함.
'92.10.12	기민·기사 연정 소속의원 및 경제단체 대표·전문가 세미나 (주제: 신설주 경제현황)에서 구동독지역에 대한 투자 장애 요소로 너무 성급한 서독수준으로의 임금형평 개선, 미해결 재산권 문제, 지지부진한 행정업무개선, 환경오염 잔재 처리문제, 투자촉진계획의 불명확성 등이 지적됨.
'92.10.14	바이겔 연방재무장관은 구동독지역 경제재건을 위해 향후 수년간 GNP ('91년말 현재 약 2조 8,000 억 DM)의 5%에 달하는 재정이전이 필요 하다고 주장함.
'92.10.15	<p>'90년 7월 1일자 신탁청 개시 대차대조표는 자산부 3,110억 DM, 부채부 5,206억 DM으로 2,093억 DM의 손실을 기록함.</p> <p>베를린 지방법원은 PDS (구동독 공산당 후신 정당)가 동독이라는 국가가 저지른 불법판결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질 필요는 없으며,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서 해당 재판에 대한 SED의 영향력 행사가 입증될 경우에 한해서만 PDS가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p>
'92.10.20	Bohl 수상실 장관은 연방각의에서 「신설주재건 실무기획단 활동 중간 보고 및 결의안」을 발표함.

연 도	주 요 동 향
	<p>연방헌법재판소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구동독 법관들이 재소한 소송은 행정재판소 소관이라고 판결함. 따라서 동 소송에 대해 3심 제도가 유효함.</p>
'92.10.21	<p>기민·기사·자민 연정은 과거물수재산에 대한 보상재원 마련 방안의 일환으로 반환받는 재산에 대한 재산부과금 도입에 합의함.</p> <p>폴 수상은 구동독으로부터 승계한 재정부담은 신탁청 인수부채 2,500억 DM, 채무청산기금 부채 1,400억 DM로 총 4,000억 DM이며, 이에 대해 매년 약 400억 DM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고 발표함.</p>
'92.10.27	<p>독일 5대 경제연구소는 “ '92년 추계 경기전망보고서”를 발표하고, '93년도 동·서독 지역 경제성장율을 각각 7%, 0.5%로, 전체 독일의 경제성장율을 1.0%로 전망함.</p> <p>구동독 지역 우체국은 '91년 10억 DM의 적자를 기록함.</p>
'92.10.28	<p>기민당은 전당대회에서 1995년후 세금인상을 당론으로 결정함.</p>
'92.11. 3	<p>연방대법원은 '92.2 베를린 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2명의 구동독 국경수비대원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장벽탈출자 사살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며, 또한 강요성 명령수행이라는 긴급상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함.</p>
'92.11. 4	<p>연방 및 주 심계원장 회의에서 1990~1995년간 공공분야 부채가 약 1조 DM으로 증가하고 이에 대한 이자로 1990년에 800억 DM을 지불했으며, 1995년까지 매년 1,700억 DM을 지불해야 한다고 발표함.</p>

연 도	주 요 등 향
'92.11.10	<p>독일 금속산업노조는 구동독지역 임금율 11.2 사용자연맹의 단계적 임금 조정협약 수정요구를 거부하고, '94년까지 서독 수준으로의 균등화를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함.</p>
'92.11.11	<p>연방하원 법사위는 신설주지역 법조인의 업무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민사, 형사, 사회, 행정, 재정법원의 재판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Amtsgericht)의 관할영역을 확대시키는 조치법안을 의결함.</p> <p>연방하원 법사위는 구동독 불법행위 시효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함.</p>
'92.11.12	<p>연방하원은 구동독 인민군이 통독후 2년간의 시보과정을 거친 후 퇴역할 경우, 2,500 DM의 퇴직과도기 수당을 지급하는 법률안을 의결함.</p> <p>연방정부는 통독으로 인한 세금인상 및 지출증대의 3/4을 소득기준 상위 50%에게 부과함으로써 부담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힘. 아울러 통독으로 인한 지출을 “비용”으로 규정하지 않고 “평화와 자유 속에 통일된 독일에 대한 투자”로 간주할 것이라고 발표함.</p>
'92.11.26	<p>연방하원은 1993년도 유럽부흥계획 (ERP)에 의한 지원금 약 140억 DM 중 100억 DM을 구동독지역의 기업창업지원, 사기업의 고용창출·유지 지원 등을 위해 사용토록 의결함.</p>
'92.11.27	<p>연방하원은 4,356억 DM의 1993 회계년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킴. 순재정차입 규모는 430억 DM 임.</p>

연 도	주 요 동 향
'92.12. 7	연방하원 법사위는 소추되지 아니한 구동독의 불법행위의 시효가 1949.10.11 부터 1990.10.2일까지 정지된 것으로 의결함.
'92.12. 9	가옥 Stasi 문서담당청은 개인신상확인을 위해 구동독 중앙주민등록처 자료를 1992.12.31 이후에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함.
'92.12.10	연방하원 Koko 조사위원회 (위원장 Friedrich Vogel)는 샬크-골토드롭스키의 구동독 대외무역주식회사 (Koko)가 세계 각처에 (서독,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태리 등) 최소한 148개의 회사를 운영, 외화벌이에 종사해 왔다고 발표함.
'93. 1. 1	'93.1.1 부터 신설주 연금은 '45년 보험가입자 기준으로 월평균 1,188 DM으로 서독 수준의 66%에 달함.
'93. 1. 4	마그데부르그 지방법원은 전 Stasi 요원 4명에 대해 전화 도청 및 우편물 절취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함.
'93. 1. 5	호네커 재판의 Braeutigam 수석 판사가 구 동베를린 지도에 호네커의 사인을 받아 달라는 그의 보좌관의 요청을 호네커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어 재판장직에서 물러 남.
'93. 1. 9	Waigel 재무장관은 사민당 집권 4개주 재무장관과 경제문제에 관해 협의하고, 통독경비조달을 위해 연대부과금을 제도입하기로 합의함.

연 도	주 요 동 향
'93. 1. 12	베를린 주 헌법재판소는 호네커 변호인단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80세의 고령과 간암으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호네커를 구속상태로 재판할 것을 계속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함. 이에 따라 베를린 주 법원은 등 재판을 중지하고 구속명령을 해제, 호네커를 석방키로 결정함.
'93. 1. 13	호네커는 칠레로 망명함. Wickert 여론조사에 의하면 서독인의 79%, 동독인의 86%가 호네커재판 중단결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93. 1. 15	베를린 검찰은 전 국가보위부장 Mielke (85세)에 대해 1931년 두 명의 경찰관을 사살한 죄목으로 종신형을 구형함.
'93. 1. 19	기민·기사·자민 집권 연정은 통독비용조달을 위한 「연방재정건실화 방안」(일명: 연대협약)에 합의함.
'93. 1. 25	신탁청장, 독일 전경련 등 경제계 지도자들은 1995년까지 서부 독일 산업계가 구동독지역제품 구매량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해 구동독제품 구매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발표함.
'93. 1. 27	연방하원 신탁청 감독 특별위원회는 위원수를 13명에서 24명으로 늘리고, 재무부와 신탁청의 신설주 내 업무를 감독하고, 1994년 신탁청 해체 후에는 투자자들의 계약조건 이행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힘.
'93. 2. 1	사민당은 연대협약의 일환으로 1995년부터 고소득자에 대한 “보전 부과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함.

연 도	주 요 동 향
'93. 2. 2	Bluem 노동사회성장관은 통독 이후 늘어난 노동자 및 계약직 사무원들의 사회보장 및 노동시장 관련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자영업자, 국회의원 등 고소득자에 대해 “노동시장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함.
'93. 2. 5	정권적 범죄 및 통일범죄 중앙수사본부 (ZERV)는 과거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무역거래 결제수단이던 트랜스퍼루블화에 의한 범죄피해액 80억 DM을 포함한 통일 관련 범죄 피해액이 200억 DM을 넘는다고 발표함.
'93. 2.10	연방각의는 구동독 치하에서 장벽 및 국경지역으로 강제 이주된 자들과 직업상 정치적 박해 또는 차별을 받은 자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제2차 구동독 공산당 불법행위 청산법”을 의결함. 연방재무장관은 “구동독 경기부양을 위한 공동대응책 결산보고서”를 연방각의에 제출함. 재무장관은 공동대응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고 동 계획의 종료후에도 동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해당 부서 예산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밝힘.
'93. 2.15	사민당은 '93.7.1 부터 일정소득 이상 (기혼자: 연 12만 DM, 독신자: 연 6만 DM)에 10%의 추가소득세를 부과하는 보전부과금 (Ergaenzungsabgabe)과 공무원, 자영업자, 정치인들에 대한 소득의 2%에 해당하는 노동시장 부과금 등을 포함하는 연대협약(안)을 확정함.

연 도	주 요 동 향
'93. 2.16	콜 수상은 경제계 및 노조 지도자들과의 “ 신설주 경제문제에 관한 회의” 에서 변화된 경제적 여건을 감안, 임금협상 당사자들이 '94년까지 서독수준으로 동독지역 임금을 균형화하는 임금조정협약 내용을 재고할 것을 권유함.
'93. 2.17	연방각의는 '93~'94년 공무원 봉급인상을 4개월간 유보하는 대신 야당이 주장하는 노동시장 부과금은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함. 따라서 공무원 봉급은 4월까지 동결되고, 5월부터 3% 인상됨.
'93. 2.18	작센주 금속·전자산업 사용자연맹은 '91년 4월에 체결한 서독 수준으로의 단계별 임금조정협약을 파기한다고 발표함.
'93. 3. 9	금속노조위원장은 사용자연맹회장으로 부터의 임금조정협약 파기 관련 회담 제의를 거부하고 4.1 부터 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발표함.
'93. 3.10	100명 이상의 연방하원 의원들이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베를린으로의 수도 이전을 2,000년 이후로 연기하자는 동의안에 서명함.
'93. 3.13	연방·주 정부 및 여야 정당 대표들은 3.11~13간 협상을 갖고, 10개 항의 연대협약 합의문을 발표함: '95.1.1 부터 연대부과금 제도입, 주 정부간 재정균형원칙 적용을 위해 연방과 서독지역 주로부터 동독지역 주로 매년 558억 DM 이전, 독일통일기금 증액, 주택분야 구채탕감 지원 등.

연 도	주 요 동 향
'93. 3. 25	<p>폴 수상은 연방하원에서 행한 “연방재정건실화법안”(연대협약)에 관한 정부보고를 통해 독일은 갈수록 젊은 연금수령자가 늘어나고, 학생연령이 높아지고, 근로시간은 짧아지는 반면, 휴가는 길어져서 경쟁력을 위태롭게 하고 있어서 “새로운 개혁정신”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함.</p>
93. 3. 25	<p>연방대법원은 내륙간 경계 총격살해 관련 구동독 국경수비대원에 대한 베를린 지방법원의 '92.1.20 판결을 수정함.</p> <p>피고인 Ingo Heinrich (징역 3년 6개월)와 Mike Schmidt (무죄)에 대해서는 재심토록 했으며, Kuehpast (징역 2년)는 무죄를 선고함.</p>
'93. 3. 26	<p>연방재무성은 1994년 말까지 신탁청과 채무청산기금이 진 구동독 승계 부채를 4,000억 DM으로 추산함. 이 중 신탁청 부담 부채는 2,500억 DM, 채무청산기금 부채는 1,400억 DM 임.</p>
'93. 3. 31	<p>연방각의는 약 2년간 검토해 온 “구동독지역 과거물수재산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함.</p>
'93. 4. 1	<p>구동독지역 철강, 금속, 전자산업 노동자 10만 명이 사용자측의 임금 조정협약 파기에 항의하는 경고파업에 들어 감.</p>
'93. 4. 2	<p>연방헌법재판소는 호네키 석방에 대한 제3차 헌법소원을 기각함.</p>
'93. 4. 6	<p>독일 금속노조위원장은 4.19 이후 노조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동독지역 금속노조는 전면 파업에 돌입하며, 서독지역 노조는 지원 시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함.</p>

연 도	주 요 동 향
'93. 4.19	독일 금속산업노조는 프랑크푸르트에서 특별이사회를 열고 4.26~28일간 작센주를 시작으로 파업찬반투표에 들어 가기로 결정함.
'93. 4.20	1989년 동독 마지막 지방선거 조작 혐의로 모드로 구동독 총리 (당시 드레스덴 지구 공산당 서기장) 등 3명에 대한 재판이 개시됨.
'93. 4.26	동독지역 금속노조원은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감. 콜 수상은 임금협상 당사자들에게 바람직한 해결을 위한 의지를 갖고 협상테이블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함.
'93. 4.29	<p>금속산업노조 이사회는 5.3 부터 우선 50개 기업체 38,000명이 파업에 들어 갈 예정이라고 발표함.</p> <p>연방상원의 과거물수재산 보상법안 심의에서 집권 연정 의원들은 동 법안의 근본적 수정을 요구함.</p>
'93. 5. 3	동독지역 금속산업노조는 60년 만에 처음으로 순차적 파업에 들어감.
'93. 5. 4	Markus Wolf 전 국가보위부 대외정찰총국장의 대서독 국가모반 및 간첩활동 혐의에 대한 재판이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에서 개시됨.
'93. 5.10	Bohl 수상실장관은 “신설주를 위한 연방정부지원 결산 보고서”를 발표함.

연 도	주 요 동 향
'93. 5.14	<p>작센주 금속노조와 사용자 대표는 비덴코프 작센주지사의 중재로 열린 마라톤 협상끝에 임금을 '93.12.1 까지 서독 수준의 80%, '96.7.1 부터 ('91년 임금협약에는 '94.4.1 부터) 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한편, 사용자측은 지난 2월의 임금협약 해지를 철회하기로 합의함. 또한 대량해고 등이 불가피한 어려운 사정에 처한 업체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노사간 합의를 통하여 동 임금타결안의 임금인상 수준 이하의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Haerte-Klausel)을 삽입하기로 합의함.</p>
'93. 5.16	<p>구동독 시민운동단체 모임이었던 Buendnis '90와 녹색당은 " Buendnis '90/ Die Gruenen" 이란 당명으로 합당키로 합의함.</p>
'93. 5.18	<p>작센주 금속산업 노조원의 77.66%가 새로운 임금협약에 찬성함으로써 약 2주간의 파업이 종료됨. 여타 주 금속산업 노사간에도 작센주 임금타결안 수용 여부를 긍정적으로 협의해 나감.</p>
'93. 5.22	<p>구동독 철강노조원의 77.9%가 새로운 임금협약에 찬성함으로써 약 3주간의 파업이 종료됨.</p>
'93. 5.27	<p>연방하원은 제2,3차 독회를 가진 후 연방재정건실화 법률안 (연대협약)을 가결함. 민사당과 Buendnis '90/ Die Gruenen은 반대함.</p>
'93. 6. 3	<p>구동독 주둔 소련군인 및 군속 총 545,000명 중 35만 명이 이상이 철수하였고, '94년 말까지 철수를 완료할 계획임.</p>

연 도	주 요 동 향
'93. 6.10	베를린 주 사회법원은 호네커의 파시즘 저항자를 위한 유공연금 지급신청에 대해, '92년 4.30까지 기존 유공연금을 받아 온 자에 대해서만 보상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당시 모스크바에 체류한 호네커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고 판결함.
'93. 6.14	사민당 연방의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들은 호네커 부인 Margot Honecker를 구동독 교육부장 재직시 작센주 Torgau 청소년 보호소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고발함.
'93. 6.15	연방헌법재판소는 구동독 주택소유주가 기존 주택신용대부 (총 80억 DM)에 대해 '90.10.3 까지 소급해서 서독이자율을 적용,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함.
'93. 6.18	기민/기사 및 자민당 의원 약 100명은 4,000 DM을 일시 지급하는 과거 구동독 거주 실향민에 대한 보상금을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인 "과거 몰수재산 보상에 관한 법률" 과 분리; 단독 법안으로 처리함으로써 연로한 수혜자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정부안보다 4년 빠른 '94년부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집단청원서를 제출함.
'93. 6.23	연방재무성은 베를린의 수도 및 정부 부처 건설사업기간을 3~4년 더 연장하고 공사를 2,001년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힘. 1991.6.20 연방하원은 4년 이내, 즉 1995년까지 수도 이전을 완료하기로 의결함.
'93. 6.30	전 빌리브란트 서독 수상 보좌관으로 간첩활동을 했던 권터 기움 (70세)이 마르쿠스 볼프 전 Stasi 대외정찰총국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함. 당시 내무성 국장이던 Kinkel 외무장관도 증인으로 출두함.

연 도	주 요 동 향
'93. 7. 1	가옥 Stasi 자료담당관리청은 수치, 해설, 그림 등 158 페이지로 된 최초의 사업실적보고서를 연방하원에 제출함.
'93. 7. 3	EC 집행이사회는 구동독지역 경제재건을 위해 1994~1999년간 약 280억 DM을 지원키로 결정함.
'93. 7.12	연방헌법보호청은 러시아 비밀 경찰로부터 KGB가 보유하고 있던 2,000건의 Stasi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Stasi 협력자 및 스파이를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함.
'93.7.13	연방각의는 1994년도 세출규모 4,784억 DM의 연방예산안과 1993~1997 중장기 재정계획을 가결함. 또한 연방각의는 원칙적으로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근무제를 유지하되 1일 근무시간과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에 신축성을 확대하기 위한 근로시간법 개정안을 가결함.
'93. 7.19	베를린 검찰청은 과거 내독간 정치범 거래시 동독측 비밀협상가였던 Wolfgang Vogel 변호사를 탈세 및 위증혐의로 구속함.
'93. 7.21	연방각의는 구동독시절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자기 주택을 건축한 경우 주택부지를 시가의 절반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권 청산법(안)" 을 가결함.
'93. 7.29	연방경제성은 EC 집행이사회가 지원키로 결정한 약 28'억 DM을 각 주별로 배분함.

연 도	주 요 등 향
'93. 8.11	연방각의는 “ 정부지출삭감법(안) (Einspargesetzentwuerfe)” 을 가결함. 동 법안은 '94년부터 실업수당, 실업부조금 등을 3% 삭감하고 유류세를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93. 8.14	연방고용청장은 1994년 독일평균실업자를 서독지역 230~260만 명, 동독지역 120만 명으로 전망함.
'93. 8.18	독일연방은행은 1991년 이래로 높은 수준으로의 임금타결과 수출부진이 오늘날의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를 초래했다고 분석함.
'93. 8.23	베를린 검찰은 내독간 경계 총격살해 관련 구동독지도자들에 대해 높은 형량을 구형함. 케슬러 전 국방장관에 12년, 스트레랫츠 전 국방차관에 10년, 알브레히트 공산당 술러 지구당 서기장에 8년을 구형함.
'93. 8.25	<p>구동독 정당 및 단체재산 심사위원회는 “ 동독노총 (FDGB)” 을 해체하고, 약 8억 8천만 DM 상당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 독일노총, 독일 사무원노조 및 공무원연맹에 분배하고, 일부는 신탁청 및 납품 업체에 대한 채무정산에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함.</p> <p>연방건설성은 1998년 수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정부 부처 이전비용과 연방공무원주택 마련 비용을 각각 10억 DM과 20억 DM으로 추정함. 베를린 이전 부처는 수상실, 외무성, 내무성, 재무성, 경제성, 법무성이며 Bonn 잔류 부처는 농림성, 보건성, 환경성, 연구기술성, 교육학술성, 경제협력성임.</p>

연 도	주 요 동 향
	<p>폴 수상은 라이프찌히 박람회장 기공식에서 모든 긍정적인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신설주의 자립적인 경제조건은 아직 어렵다면서 서독지역으로부터 막대한 재정이전을 통한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함.</p>
'93. 8. 27	<p>신설주 재무장관들은 신설주 공공분야의 '94년 봉급을 동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음.</p>
'93. 9. 2	<p>연방각의는 구동독 공산당 치하에서 소추되지 않았던 구동독 공산당 불법행위에 대한 시효불 연장키로 한 "시효연장법률(안)"을 가결함.</p>
'93. 9. 3	<p>폴 수상은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독일의 산업입지 강화 대책 보고서"를 발표함.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대 GNP 국가지출비율을 금세기 말까지 45.8%로 하향 조정, 공무원 봉급동결 및 근무시간연장, 법률 및 행정절차 간소화, 폐점시간법 재검토 등임.</p>
'93. 9. 9	<p>연방노동·사회성 장관은 연방하원의 '94년 예산심의에서 1990~1996년간 사회보장명목으로 총 2,550억 DM이 동독지역으로 이전되는 셈이라고 밝힘.</p>
'93. 9. 10	<p>독일금속노조 위원장은 사용자측의 '94년도 임금동결요구를 거부하면서 인플레이션과 생산성 향상률 정도의 임금인상을 보장해 줄 것을 사용자측에게 촉구함.</p>

연 도	주 요 동 향
'93. 9.14	연방통계청은 '93년도 상반기 신설주 GDP가 전년 동기 대비 6.2% 성장을 보였으며 GDP는 총 1,242억 DM으로 전체 독일의 8.2%를 차지했다고 발표함.
'93. 9.15	연방하원 재무위원회는 과거물수재산 보상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함.
'93. 9.16	베를린 주 지방법원 형사 제27부는 베를린 장벽 및 내독간 국경에서의 탈출자 사살명령 관련 구동독 지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함. 이들의 형량은 케슬러 국방장관 징역 7년 6개월, 스트레렛츠 국방차관 징역 5년 6개월, 알브레히트 지구당 서기장 징역 4년 6개월임. 그러나 이들 3명은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Verschoenung)로 풀려났음.
'93. 9.24	동독지역 1993년도 상반기 범죄건수가 1992년에 동기 대비 30% 증가함. 서독지역 범죄율은 3.4%, 독일 전체 범죄율은 7% 증가함.
'93. 9.26	베를린 주 검찰청은 Guenter Mittag 구동독 경제담당 정치국원 (66세)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고 압수한 약 30만 마르크를 되돌려 주기로 함. 이는 '93년 5월 심한 당뇨병으로 재판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에 따라 베를린 지방법원이 Mittag에 대한 다음 두 가지 관련 재판을 중지한 데 따른 결정임. 1978년 Mittag은 법적 근거없이 당시 건설장관으로 하여금 호네커를 비롯한 고위층 인사에게 건설 아카데미 명예회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총 120만 마르크의 재정부담을 초래함. 또한 법적 근거없이 가족들을 위한 3채의 단독 주택을 국가예산으로 건설 발주함. 이를 위해 Koko에서 100만 마르크와 50만 마르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짐.

연 도	주 요 동 향
'93. 9.27	Sony, IBM, Daimler-Benz 등 세계 대기업 31개사는 총 400억 DM을 베를린에 투자할 계획 (175,000개 고용 창출)으로 수도 이전 일정을 제시하여 그들의 투자 계획이 확실해지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함.
'93. 9.28	금속산업사용자연맹은 서독지역 금속산업의 임금, 급료 및 휴가 수당에 관한 임금협약에 대해 '93년 연말부로 해약 통보를 함. 이는 서독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사용자연맹 Gottschol 회장은 금속산업이 전후 최악의 불황에 처한 만큼, 비용감축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함.
'93. 9.29	연방하원은 통독전 구동독지역에서 범하여진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시효기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동 법률 개정으로 징역 1~5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시효는 1997.12.31 까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소한 범죄의 공소시효는 1995.12.31 까지 연장됨.

통독관련자료집 목록 안내

- 91 - I 독일통일비용 (p108, 통권 제1호)
- 91 - II 독일분단으로부터 통일까지 약사 (p193, 통권 제2호)
- 91 - III 독일통일관련자료집 I (p272, 통권 제3호)
- 91 - IV 독일통일관련자료집 II (p225, 통권 제4호)
- 92 - I 독일통일 소사전 (p550, 통권 제5호)
- 92 - II 독일통일실태자료집 - 비경제분야 - (p593, 통권 제6호)
- 92 - III 독일통일실태자료집 - 경제분야 - (p204, 통권 제7호)
- 92 - IV 독일통일 실태연구 (1차 통일대비 정책연수단 연수결과 보고서, p350, 통권 제8호)
- 92 - V 동서독 관계발전에 관한 보고 및 문서 (p220, 통권 제9호)
- 92 - VI 10년간의 독일정책 (p500, 통권 제10호)
- 92 - VII 독일통일과 체제전환 (p420, 통권 제11호)
- 92 - VIII 통독 2주년 보고서 (p126, 통권 제12호)
- 92 - IX 숫자로 본 독일통일 (p292, 통권 제13호)

- 93 - I 독일통일 실태자료집 - 정치·외교분야 -
(p385, 통권 제14호)
- 93 - II 독일통일 실태자료집 - 경제·사회분야 -
(p421, 통권 제15호)
- 93 - III 독일통일 1,000일 보고서 (p65, 통권 제16호)
- 93 - IV 동서독 통일과정과 통합실태 (2차 통일대비 정책연수단
연수결과 보고서, p441, 통권 제17호)
- 93 - V 통독 3주년 현황과 평가 (p106, 통권 제18호)
- 93 - VI 동서독 조약·협정자료집 (p479, 통권 제19호)
- 93 - VII 동서독 교류협력사례집 (p771, 통권 제20호)
- 93 - VIII 동서독 화폐통합 (p216, 통권 제21호)
- 94 - I 독일통일 3년 현황과 전망 (p367, 통권 제22호)

~~동서독 화폐 통합~~

인 쇠 : 1994. 1. 12

발 행 : 1994. 1. 15

발행처 : 통일원 통일정책실

제 2 정책관실

TEL : 720-2148

725-0762

<비매품>